

기본연구

2023-19

민간기업의 해양환경분야 ESG 활성화 방안 연구

A Study on Participation of Private Corporates
in Sustainable Marine Environment Management Using ESG

김지윤 · 좌미라



한국해양수산개발원
KOREA MARITIME INSTITUTE

민간기업의 해양환경분야 ESG 활성화 방안 연구

A Study on Participation of Private Corporates
in Sustainable Marine Environment Management Using ESG

김지윤 · 좌미라



한국해양수산개발원
KOREA MARITIME INSTITUTE

저자	김지윤, 좌미라
내부연구진	연구책임자 김지윤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해양연구본부 전문연구원 공동연구원 좌미라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해양연구본부 전문연구원

연구기간	2023. 1. 1. ~ 2023. 10. 31.
-------------	-----------------------------

보고서 집필내역

연구책임자	김지윤 연구총괄, 제1장, 제2장, 제3장 제1절, 제2절 일부, 제3절, 제4장 제1절 일부, 제3절, 제5장, 제6장
내부연구진	좌미라 제3장 제2절 일부, 제4장 제1절 일부, 제2절

산·학·연·정 연구자문위원	김영규 한국기업평가(주) 실장 김평중 한국석유화학협회 본부장 정주철 부산대학교 교수 김영남 해양환경공단 차장 김경미 한국여촌어항공단 과장 양지영 해양수산부 해양환경정책과 사무관
---------------------------	---

※ 순서는 산·학·연·정 순임

발간사

기후변화로 인한 해양환경 변화, 해양생물다양성 손실, 해양생태계 훼손 등 해양환경 이슈는 국제사회에서 아주 오래전부터 논의되어 왔다. 그동안 이러한 위기의 대응주체는 국제기구, 정부, 비정부기구가 중심이었는데 오늘날에는 기업들도 참여하고 있다. 본래 기업의 경영목표는 이윤창출이 최우선이지만, 급변하는 경영 환경 속에서 지속가능성까지 고려하여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것 또한 기업 운영과 브랜드 이미지에 영향을 미치게 되면서 기업 경영에 중요하게 작용하기 시작하였다. 특히 최근 ESG가 기업의 가치를 평가하는 새로운 기준이자 경영 패러다임으로 자리매김하게 되면서 전 세계 글로벌 기업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도 대기업을 중심으로 ESG 경영을 도입하는 기업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 기업들이 ESG 경영을 도입하고 추진함에 따라 이들의 환경에 대한 책임 의식이 더욱 높아지고 있음을 알 수 있었는데, 여러 언론보도와 기업인 대상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기업인들은 ESG 요소 중에서도 환경(E) 분야를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이슈로 인식하고 있었으며, 해양환경 문제 해결에 대한 중요성, 필요성, 시급성에 대한 인식도 높은 편으로 나타났다. 또한, 환경문제 해결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주체로서 기업 스스로가 변화해야 할 때라고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사실 기업들은 이미 육상 환경 보전 및 관리에 참여하고 있었는데, ESG 경영 도입 확산을 계기로 더 많은 기업들의 참여가 이루어지게 된 것이다. 뿐만 아니라 기업들은 육상 분야를 넘어 블루오션인 해양 분야에 주목하기 시작하였고, ESG 관점에서 해양환경 보전을 위한 활동에 참여하고 있다. 특히 민간기업의 경우 자본과 기술, 인력 등을 보유하고 있어 새로운 해양환경 관리 주체로 잠재력이 매우 크다. 그러나, 현재 ESG 관점에서 해양환경 문제 해결을 위해 참여하고 있는 기업의 수, 활동 분야, 역할 등을 고려해볼 때 아직까지 우리나라 민간기업의 해양환경 분야 ESG 활동 추진은 초기 단계에 있다. 우리 정부는 전 세계적으로 ESG에 대한 관심과 투자가 빠르게 확산되기 시작하자, 국내 기업들의 ESG 대응을 돕기 위해 2021년을 ESG 경영 원년으로 선포하였고, 이후 각 정부 부처들은 기업의 ESG 지원정책을 속속감 있게 마련하였다. 그러나 해양환경 분야에서의 민간기업의 ESG 추진을 위한 정책은 구체적으로 마련된 바 없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ESG 관점에서 민간기업이 해양환경 분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이들의 참여를 더욱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여, 국내에 소재한 민간기업의 해양환경 분야 ESG 추진 현황을 살펴보고, 이를

확대 및 저해하는 요인이 무엇인지 심층적으로 진단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해양환경 문제 해결의 새로운 정책적 파트너로서 민간기업의 참여 유도과 확대를 위한 정부의 정책 수립 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 연구의 책임을 맡은 우리 원 해양연구본부의 김지윤 전문연구원과 연구에 참여한 좌미라 전문연구원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표한다. 그리고 이 연구에 자문과 조언을 아끼지 않은 한국어촌어항공단 김경미 과장, 한국기업평가(주) 김영규 실장, 한국석유화학협회 김평중 본부장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또한, 설문조사와 심층인터뷰 등의 과정에서 진실하게 응해주시고 아낌없는 자문과 조언을 해주신 민간기업, 연구소, 시민사회단체 관계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 아울러, 내부 전문가로서 이 연구에 관심을 가지고 조언을 아끼지 않은 육근형 실장, 정지호 실장, 박수진 연구위원, 김경신 부연구위원, 이윤정 부연구위원에게도 감사를 표한다.

마지막으로 이 보고서의 심사와 감리를 맡아 연구의 완성도를 높여준 우리 원의 최상희 연구부원장과 최지연 해양연구본부장, 목진용 명예연구위원, 그리고 외부에서 심사를 맡아주신 해양수산부 양지영 사무관, 부산대학교 정주철 교수, 해양환경공단 김영남 차장께도 감사드린다. 그 외 이 보고서가 출판되기까지 도움을 주신 모든 분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를 표하고자 한다.

2024년 1월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원장 김 종 덕

목차

정책제안 _ i

요약 _ iii

Executive Summary _ xi

01

서론 _1

제1절 연구의 배경과 목적	1
1. 연구의 배경과 필요성	1
2. 연구의 목적	5
제2절 연구의 내용과 방법	6
1. 연구 내용	6
2. 연구 방법	8
제3절 선행연구와 본 연구의 차별성	11
1. 선행연구 현황	11
2.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12

02

ESG 동향과 국내 ESG 정책 현황 _15

제1절 ESG 개념과 동향	15
1. ESG 등장 배경과 개념의 발전	15
2. ESG 주요 동향	25
제2절 국내 ESG 정책 현황	29
1. 기획재정부	30
2. 환경부	34
3. 산업통상자원부	44
4. 중소벤처기업부	49
5. 산림청	53

6. 지방자치단체	63
제3절 종합 시사점	66

03 민간기업의 해양환경 분야 ESG 활성화 필요성 및 정책 현황_71

제1절 해양환경 분야에 민간기업 ESG 활성화 필요성	71
1. 해양환경에 관한 인식 조사	71
2. 해양환경 분야에서 민간기업의 역할 변화 요구	77
제2절 ESG 관련 해양환경 분야 정책 현황	84
1. 해양환경 관련 정책의 범위	84
2. 주요 ESG 지표 내 해양환경 관련 항목	86
3. ESG 관련 해양환경 분야 주요 계획 및 사업	93
4. 정부의 민간참여형 해양환경 분야 ESG 정책 현황	99
제3절 종합 및 시사점	105

04 민간기업의 해양환경 분야 ESG 사례 및 현안_107

제1절 민간기업의 해양환경 분야 ESG 현황 및 사례	107
1. 주요 기업의 해양환경 분야 ESG 현황	108
2. 해양환경 분야 ESG 주요 사례 분석	111
3. 종합 및 시사점	129
제2절 해양환경 분야 ESG 관련 주요 현안	131
1. 심층인터뷰 대상 및 방법	132
2. 심층인터뷰 주요 결과	134
제3절 해양환경 분야 ESG 관련 정부의 지원 수요	156
1. 설문조사 대상 및 방법	157
2. 설문조사 주요 결과	158

05	민간기업의 해양환경 분야 ESG 활성화 정책방안 _173	
	제1절 해양환경 분야 ESG 활성화 기본방향	173
	1. 민간기업의 해양환경 분야 ESG 추진 여건분석 종합	173
	2. 민간기업의 해양환경 분야 ESG 활성화 방향 도출	177
	제2절 해양환경 분야 ESG 활성화를 위한 추진과제	179
	1. 현장 수요 맞춤형 ESG 활동 지원	179
	2. 민·관 소통형 ESG 협력체계 구축	186
	3. 지속가능형 ESG 기반 조성	191

06	결론 및 정책제언 _207	
	제1절 연구결과의 요약	207
	제2절 정책제언 및 후속연구	210
	1. 정책제언	210
	2. 연구의 한계와 향후 연구 과제	214

	참고문헌 _217
--	------------------

	부록 _233
--	----------------

표 목차

〈표 1-1〉 선행연구와 본 연구의 차별성	12
〈표 2-1〉 기업의 행동을 요구하는 UNGC 10대 원칙	18
〈표 2-2〉 ESG 관점에서 투자자의 행동을 요구하는 PRI	19
〈표 2-3〉 기업의 주요 이해관계자	20
〈표 2-4〉 녹색경제활동 목록	35
〈표 2-5〉 환경부의 2023년 환경 분야 ESG 지원사업	39
〈표 2-6〉 환경부-기업-한국환경산업기술원 간 업무협약의 주요 내용	41
〈표 2-7〉 녹색소비-ESG 얼라이언스 참여기관 및 역할	41
〈표 2-8〉 한국환경산업기술원 ESG인프라지원단 직무 내용	42
〈표 2-9〉 K-ESG 가이드라인 기본 진단항목 체계	45
〈표 2-10〉 한국형 REDD+ 사업 참여 기관별 역할	54
〈표 2-11〉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중 기업 참여 관련 조항	55
〈표 2-12〉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상쇄제도 법적 근거	59
〈표 2-13〉 산림부문 외부사업 방법론 등록 현황('23.8월 기준)	60
〈표 2-14〉 각 지자체의 기업 ESG 경영 지원 관련 조례 제정 현황	63
〈표 2-15〉 각 지자체의 기업 ESG 경영 지원 관련 조례의 주요 조문	66
〈표 2-16〉 부처별 민간기업 ESG 지원정책 종합	69
〈표 3-1〉 설문조사 응답 기업의 특성	74
〈표 3-2〉 해양환경정책과 관련된 주요 법률 현황	86
〈표 3-3〉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중 해양환경 관련 경제활동	88
〈표 3-4〉 K-ESG 진단항목 중 해양환경 분야와 연계 가능한 항목	90
〈표 3-5〉 해양환경 분야 사업 중 민간기업의 ESG와 연계 가능한 사업(안)	97
〈표 3-6〉 국가 바다숲 조성 사업 추진 절차	103
〈표 3-7〉 전남·전북 연안 탄소흡수원 관리 및 활용 촉진 조례 주요 내용	105
〈표 4-1〉 매출액 상위 50대 기업의 해양환경 관련 주요 ESG 활동 유형	110
〈표 4-2〉 심층인터뷰 대상자 목록	133
〈표 4-3〉 심층인터뷰 절차	134
〈표 4-4〉 해양환경 분야 ESG 관련 주요 현안	154
〈표 4-5〉 설문조사 참여 기업	157
〈표 4-6〉 해양환경 분야 ESG 추진 및 미추진 배경	162

〈표 4-7〉 주요 해양환경 분야 ESG 활동 및 세부 설명	163
〈표 4-8〉 해양환경 분야 ESG 활동 유형별 중요도, 시급성, 관심도	165
〈표 4-9〉 해양환경 분야 ESG 추진의 장애요인	167
〈표 4-10〉 민간기업의 해양환경 분야 ESG 확대를 위한 개선 필요사항	170
〈표 4-11〉 민간기업의 해양환경 분야 ESG 확대를 위한 정부 지원 사항	171
〈표 5-1〉 민간기업의 해양환경 ESG 참여 한계 요인 분석	176
〈표 5-2〉 민간기업 수요 기반 해양환경 ESG 가이드라인 제공	180
〈표 5-3〉 외부사업 관련 기관별 역할	183
〈표 5-4〉 해양수산부 외부사업 방법론 등록 현황('23.8월 기준)	184
〈표 5-5〉 해양수산부-민간기업 ESG 협력 사례	193
〈표 5-6〉 해양환경 분야 ESG 담당 조직 체계 및 기능(안)	195
〈표 5-7〉 갯벌복원사업 추진체계 비교 개선방안	197
〈표 5-8〉 바다숲 조성 사업 추진체계 개선방안	200
〈표 5-9〉 「해양수산발전 기본법」에 해양환경 분야 ESG에 관한 조항 신설(안)	203
〈표 5-10〉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 업무에 관한 조항 신설	205

그림 목차

〈그림 1-1〉 국정과제와 본 연구의 관련성	6
〈그림 1-2〉 본 연구의 흐름도	10
〈그림 2-1〉 지속가능발전목표(UN SDGs)	24
〈그림 2-2〉 연도별 ESG 관련 기사 빈도	25
〈그림 2-3〉 ESG 관련 국내외 논문 발표 수(2007~2022.4)	26
〈그림 2-4〉 「ESG 인프라 확충 방안」 기본 추진방향 및 추진과제	31
〈그림 2-5〉 「ESG 인프라 고도화 방안」 정책추진 기본방향	33
〈그림 2-6〉 환경책임투자 종합플랫폼 구성도	43
〈그림 2-7〉 산업통상자원부 지속가능경영지원센터 메인 화면	49
〈그림 2-8〉 중소기업 ESG 추진방안 기본방향	51
〈그림 2-9〉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ESG 통합플랫폼 메인 화면	52
〈그림 2-10〉 산림르네상스 추진전략	53
〈그림 2-11〉 K-ESG 가이드라인의 추가 진단항목: '산림탄소흡수량'	57
〈그림 2-12〉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상쇄제도	58
〈그림 2-13〉 한국임업진흥원 메인 화면	62
〈그림 3-1〉 해양환경 분야에 대한 민간기업 ESG 담당자 인식 정도	77
〈그림 3-2〉 오염된 마산만 모습	81
〈그림 3-3〉 마산만 화학적 산소 요구량 변화 추이	82
〈그림 3-4〉 '전략적 사회공헌' 11개 항목 중 해양환경 연계 가능 항목	91
〈그림 3-5〉 갯벌복원사업 추진 절차	101
〈그림 4-1〉 국내 반려해변 현황(2023년 3월 기준)	113
〈그림 4-2〉 주요 기업의 반려해변 활동 모습	113
〈그림 4-3〉 해양수산부-기아 '블루카본 협력사업' 업무협약 체결식	115
〈그림 4-4〉 KB Net Zero S.T.A.R. 블루카본 바다숲 조성 사업	117
〈그림 4-5〉 포스코 트리톤 바다숲 조성 과정	119
〈그림 4-6〉 전남 여수시 거문도 어장에 트리톤 설치 후 모습	119
〈그림 4-7〉 울릉군 남양리 바다숲 조성 사업	120
〈그림 4-8〉 파타고니아의 지원을 받은 주요 해양환경단체	121
〈그림 4-9〉 러쉬코리아의 지원을 받은 주요 해양환경단체	122
〈그림 4-10〉 KT&G의 해양환경단체 지원 사례	124

〈그림 4-11〉 페로프 자원순환 프로젝트 운영 프로세스	126
〈그림 4-12〉 해양환경 분야 ESG 관련 주요 현안 도출 방안	132
〈그림 4-13〉 「갯벌법」에 따른 갯벌복원사업 추진 절차	144
〈그림 4-14〉 해양환경 분야 ESG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지원 수요 파악	156
〈그림 4-15〉 ESG 경영 도입 현황	159
〈그림 4-16〉 해양환경 분야 ESG 추진 현황	161
〈그림 4-17〉 해양환경 분야 ESG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지원 수준 및 역할 필요성	168
〈그림 5-1〉 민간기업의 해양환경 분야 ESG 활성화 방향 도출 과정	178
〈그림 5-2〉 민간기업의 해양환경 분야 ESG 활성화 추진과제	179
〈그림 5-3〉 해양환경정보포털, 바다가꾸기 메인 화면	188
〈그림 5-4〉 (가칭) 오션 얼라이언스 구성 체계(안)	191
〈그림 5-5〉 해양수산부 조직 체계	192
〈그림 5-6〉 해양폐기물 재활용 체계	201
〈그림 6-1〉 해양환경 분야 ESG 활성화 정책화 단계	210

약어 목록

- CBAM(탄소국경조정제도): 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
- CSR(기업의 사회적 책임):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 CSV(공유가치창출): Creating Shared Value
- ESG(환경·사회·지배구조): Environmental, Social, Governance
- GSIA(세계지속가능투자연합): Global Sustainable Investment Alliance
- IFRS(국제재무보고기준): International Financial Reporting Standards
- IPCC(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 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
- IR(투자자 관계): Investor Relations
- ISSB(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 International Sustainability Standards Board
- KCU(상쇄배출권): Korean Credit Units
- KOC(외부사업 인증실적): Korea Offset Credit
- NDC(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
- PRI(책임투자원칙): Principles of Responsible Investment
- SD(지속가능발전): Sustainable Development
- SDGs(지속가능발전목표):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 SEC(미국 증권거래위원회): 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
- UNGC(유엔글로벌콤팩트): UN Global Compact
- WBCSD(세계지속가능발전기업협의회): World Business Council for Sustainable Development
- WCED(세계환경개발위원회): World Commission on Environment and Development
- WEF(세계경제포럼): World Economic Forum

정책제안

■ 분석 내용 및 방법

1. ESG의 등장 배경과 개념, 해양환경 분야에 민간기업의 ESG 추진 활성화 필요성에 대해 문헌 조사 실시
2. 주요 정부 부처의 기업 ESG 지원정책과 ESG 관련 해양환경 분야의 정책 현황을 분석하고 시사점 도출
3. 기업 발간 자료, 웹사이트, 언론보도, 정책자료 등을 기초로 민간기업의 해양환경 분야 ESG 활동 사례를 분석하고 유형 분류 및 추진체계 도출
4. 기업의 해양환경 분야 ESG 추진 과정에서의 주요 문제점 및 한계를 파악하기 위해 해양환경 ESG 활동에 참여 경험이 있는 이해관계자 25명을 대상으로 심층인터뷰를 실시하고 현안 도출
5. 국내 기업 ESG 업무 담당자 1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ESG 경영 도입 현황, 해양환경 분야 ESG에 대한 인식, 해양환경 분야 ESG 추진 실태, 정책적 지원 수요를 파악
6. 정부 부처 담당자, 공공기관, 연구기관, 산업계 등 전문가와의 자문회의를 통해 민간기업의 해양환경 분야 ESG 활성화를 위한 정책방안 도출

■ 정책제안

1. (현장 수요 맞춤형 ESG 활동 지원) 해양환경 ESG 아이템 발굴·제시·활용 등에 관한 민간참여 가이드라인 제공, 해양환경 분야 ESG 평가지표 개발 및 해양환경 부문 외부사업 방법론 개발을 통한 기업의 ESG 활동 실적 인증, 중소기업의 해양환경 분야 ESG 지원 프로그램 개발을 제시
2. (민·관 소통형 ESG 협력체계 구축) 해양환경 ESG 포럼 및 간담회 등 기업 임직원의 해양환경 인식 제고를 위한 네트워킹 운영, 해양환경 ESG 통합 서비스 제공 플랫폼 운영, (가칭) Ocean Alliance 다자간 협의체 운영 제시
3. (지속가능형 ESG 기반 조성) 해양환경 ESG 담당부서 일원화 및 외부지원조직 운영, 민간참여 확대를 위한 국가사업 제도 정비, 해양환경 분야 ESG 추진 활성화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 방안을 제시

요 약

민간기업의 해양환경분야 ESG 활성화 방안 연구

김지윤 · 좌미라

1. 연구 배경 및 목적

1) 연구의 배경

- 전 세계적으로 ESG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면서 기업의 가치를 평가하는 새로운 기준이자 경영 패러다임으로 자리매김
 - 글로벌 기업들은 ESG 경영을 선언하고 조직을 재정비하는 한편 관련 투자와 대책들을 적극 추진 중, 국내 기업들도 ESG 경영 도입 점차 증가 추세
- 국내 주요 기업은 ESG 중에서도 특히 ‘환경’ 분야를 최우선 과제로 인식하고 있으며 관련 투자를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
 - 기업은 환경 분야 중에서도 최우선 과제로 탄소배출량 감축, 신재생에너지 활용, 친환경 기술개발 등을 지목
- 한편, 우리 사회는 다양하고 복잡하며 심각한 해양환경 문제에 직면하고 있으며, 더 이상 정부의 노력만으로는 해결에 한계
 - 우리 국민은 해양수산 분야 중에서 ‘해양환경’ 문제를 가장 시급하게 해결

해야 할 문제이자 국가발전에 가장 중요한 분야로 인식

- 또한, 관련 분야 전문가 역시 ‘해양환경’ 문제가 해양수산 분야에서 가장 심각한 사회문제라고 지목하였으며, 특히 기후변화로 인한 해양환경 변화와 해양쓰레기 문제 해결이 시급하다고 인식
- 그러나 연안·해양은 공간적으로 광범위하고 접근성이 낮아 공공부문에서 해양환경 관리를 전적으로 수행하기는 어려움
- 최근 정부의 정책적 대응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시민사회의 자발적인 참여가 점차 증가하고 있으나 활동 범위, 지속가능성 등에 한계
- 해양환경 문제 해결을 위해 시민의 참여가 점차 증가하고 있으나, 시민사회단체가 활동 가능한 범위와 영역에 제약
- 또한 외부로부터 재정적인 지원이 수반되어야 지속가능하게 활동할 수 있다는 현실적인 문제에 봉착
- 한편, 정부와 시민사회단체의 한계를 보완하면서 해양환경 문제 해결에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새로운 핵심주체로 민간기업이 부상
- 기업은 자본, 기술 및 인력 등을 보유하고 있어 해양환경 문제 해결에 기여할 수 있는 잠재력이 매우 큼
- 그러나 국내 기업의 해양환경 ESG 경영은 아직까지는 초기 단계이며, 일부 대기업 사례에 국한하는 등 사회 전반적인 확산은 미약한 수준
- 해외 글로벌 기업은 주로 벤처기업, 스타트업 등에 대규모로 투자해 이들을 육성하는 고도화된 방식으로 해양환경 분야 ESG 경영을 실천
- 반면 국내 기업들은 해양환경 문제 해결을 위해 참여하고 있으나 전반적으로 아직은 초기 단계
- 이에, 기업이 사회문제 해결 주체로서 해양환경 문제를 해결하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ESG 경영 활성화 방안 필요

2) 국정과제 연계성

- 성장지향형 산업전략 추진(17번)
 - ESG 등 기업의 성장과 사회적 가치 연계모델을 확산하고, 민·관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기업의 지속가능성장뿐만 아니라 해양환경의 지속가능한 관리에 기여
- 해양영토 수호 및 지속가능한 해양 관리(41번)
 - 민간재원을 활용하여 갯벌·바다숲 사업 추진으로 탄소흡수원을 확대 조성하고, 해양폐기물 자원순환 체계 구축에 참여하여 해양폐기물 관리 강화에 기여
- 풍요로운 어촌, 활기찬 해양(73번)
 - 해양환경 문제 해결을 위한 스타트업, 벤처기업 육성에 투자를 통해 새로운 성장동력 창출에 기여

3) 연구의 목적

- 본 연구는 해양환경 분야에서 민간기업의 ESG 활동 현황을 진단하고, 이를 더욱 활성화 및 확대하기 위한 정책방안을 제시하는 것이 목적
- 해양환경 분야에서의 민간기업의 ESG 추진 현황을 분석하고, 이해관계자의 경험에 기반한 애로사항과 정책적 지원 수요를 파악하여 민간기업의 해양환경 분야 ESG 활성화 방안을 제시

2. 연구의 방법

1) 학술적 방법

- 문헌분석, 사례분석, 심층인터뷰, 설문조사 등 다양한 방법으로 연구 수행
 - (문헌분석) 정부 부처 정책자료, 해양 분야 법률, 국가계획, 정책연구보고서 등을 활용하여 민간기업의 ESG 지원정책을 비교 및 분석하고 시사점 도출
 - (사례분석) 지속가능경영보고서, ESG경영보고서 등 기업 발간 자료, 웹사이트, 언론보도, 정책자료 등을 기초로 하여 민간기업의 해양환경 분야 ESG 경영 사례를 분석하고 활동 유형 및 추진 체계 등 도출
 - (심층인터뷰) 해양환경 분야 ESG경영 실천에 참여한 국내 기업과 이들과 협력관계에 있는 이해관계자 25명을 대상으로 현장 기반의 심층인터뷰를 실시하고 주요 현안을 도출
 - (설문조사) 국내 민간기업 ESG 담당자 100명을 대상으로 ‘민간기업의 해양환경 분야 ESG경영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추진 현황, 주요 애로사항, 개선사항, 정책적 지원 수요 등을 파악

2) 정책화 방법

- 이해관계자 심층인터뷰, 기업인 설문조사, 전문가 자문회의, 정책협의회 등을 통해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고 정책방안에 적극 반영
 - 현재 해양환경 분야 ESG에 참여 중인 기업의 ESG 담당자, NGO, 공공기관, 연구기관 소속 전문가를 대상으로 심층인터뷰를 진행하여 정책 수요자의 의견을 직접 청취하고 개선방안에 대해 논의

- 국내 민간기업의 ESG 담당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정책 수요를 진단하고 이를 정책방안 도출에 활용
- 해양수산부 담당 공무원과의 정책협의회를 통해 정책방안의 실현가능성 검토 및 수정·보완

3. 연구 결과

1) 연구 결과 요약

- 정부는 국내 기업의 ESG 경영 도입 및 추진을 지원하기 위해 각 부처별로 지원 정책을 발표하였는데, 현재 해양환경 관련 ESG 정책은 미수립
- 기획재정부, 환경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산림청 등은 국내 기업의 ESG 대응을 지원하는 정책과, 기업의 ESG를 활용하여 환경, 산림 등을 보전하고 복원하는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을 마련하였으며, 기업들은 이를 적극 활용하는 중
- 각 부처는 ESG 업무 전담기관을 별도로 지정하여 ESG 업무를 지원하도록 하였고, 이 기관에서 국민에게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온라인 플랫폼을 운영 중
- 한편 해양환경 분야는 민간기업의 ESG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뿐만 아니라 조직, 정보제공 채널 등 여건이 아직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황
- 국내 민간기업의 해양환경 관련 ESG 활동을 분석한 결과, 주로 일부 대기업 중심으로 참여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특정 분야에 집중
- 2022년 매출액 기준으로 국내 상위 50대 민간기업의 해양환경 관련 ESG 활동 참여 여부를 분석한 결과, 13개 기업이 참여 중인 것으로 파악
- 기업이 참여 중인 활동 유형을 분석하면, 해변정화, 해양오염 방제, 항만대기

오염 저감, 해양생태계 보전 및 복원, 해안 복원, 자원순환, 해양플라스틱 쓰레기 발생 저감, 시민단체 파트너십, 스타트업 지원, 해양환경 교육 등 총 10가지로 구분 가능

- 주로 해변정화활동, 생물다양성 보전 및 해양생태계복원과 해양폐기물 자원순환 체계 구축 등의 활동에 기업들의 참여가 집중되는 경향
- 그리고 이 활동들은 해양환경 관련이지만, ESG 평가 관점에서 볼 때, 환경(E)이 아닌 사회(S) 분야 특히, ‘지역사회 공헌’ 항목으로 분류
- 현황을 좀 더 면밀하게 파악하고자 해양환경 분야 ESG 활동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이해관계자를 심층인터뷰 하였으며, 6가지 현안을 도출
 - 본 연구에서 분석한 사례는 대부분 대기업 중심이었고 이중 유형, 추진체계 및 특성 등을 고려하여 심층인터뷰 대상 사례를 선정
 - 각 사례별로 기업 ESG 업무 담당자, 이들과 협력관계에 있는 공공기관, 연구기관, NGO 등 실무 담당자의 관점에서 본 해양환경 분야 ESG 추진 경험을 심층적으로 진단 및 분석
 - 그 결과, 인력 및 정보 부족으로 인한 ESG 사업 기획의 한계, 기업별 수요를 고려한 ESG 아이тем 부족, 기업 간 아이тем ‘선점’ 경쟁, 민간 참여형 국가사업 추진체계 미비, 해양폐기물 자원순환 생태계 열악, 기업 참여 유인수단으로서 외부사업 방법론 개발 부족 등이 추진 한계로 도출
- 국내 민간기업 전반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해양환경에 대한 인식, ESG 추진 실태, 애로사항 및 정책적 지원 수요 등을 진단
 - 설문조사에 응한 국내 민간기업 100곳의 응답 결과에 따르면, 기업 ESG 업무 담당자의 해양환경에 대한 인식은 높은 편으로 나타났으나 실제 추진 중인 기업은 14%로 소수에 불과
 - 이 역시, 해변 정화활동, 해양폐기물 자원순환 촉진, 해양생태계 및 생물다양성 보전 활동에 주로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

- 민간기업의 해양환경 분야 참여를 저해하는 한계 요인으로는 기업의 내부적인 여건과 현재 외부의 정책적 환경 모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
- 해양환경 분야에서 민간기업의 ESG 추진 확대를 유도하고 활성화하기 위해 3대 부문별 9가지 추진과제를 제시
- 본 연구는 정부의 국내 기업 ESG경영 정책방향을 규제가 아닌 ‘지원’의 성격으로 설정한 것과, 정책적 지원방안의 실현가능성을 고려
- 이에, 민간기업의 해양환경 분야 ESG 활성화를 위한 기본방향으로 ① 현장 수요 반영, ② 정부와 기업 간의 소통을 통한 협력, ③ 일회성이 아닌 지속가능한 활동 추진을 제시
- 1. 현장 수요 맞춤형 ESG 활동 지원 : 해양환경 ESG 아이템 및 민간참여 가이드라인 제공, 해양환경 ESG 활동 실적 인증 체계 구축, 중소기업 해양환경 분야 ESG 지원 프로그램 개발
- 2. 민·관 소통형 ESG 협력체계 구축 : 기업 임직원의 해양환경 인식제고 및 네트워킹 강화, 해양환경 ESG 통합 서비스 제공 플랫폼 운영, 다자간 협의체(가칭. Ocean Alliance) 운영
- 3. 지속가능형 ESG 기반 조성 : 해양환경 ESG 담당부서 일원화 및 외부지원조직 운영, 민간참여 확대를 위한 국가사업 제도 정비, 해양환경 분야 ESG 추진 활성화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

2) 정책화 방안

- 민간기업의 ESG를 통한 해양환경 분야로의 참여 확대 및 촉진을 위한 법·제도 기반 조성
- 법률 개정: 국내 민간기업의 해양환경 ESG 활동의 참여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해양수산부 직제 개정으로 담당부서 지정, 외부 전담기관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적 근거 마련, 민·관협력 유지를 위한 위원회 설치

-
- 제도 개선: 현행 국가주도형 사업 또는 정책에 민간기업 참여 활성화를 위한 참여주체 위상, 추진 절차 등 정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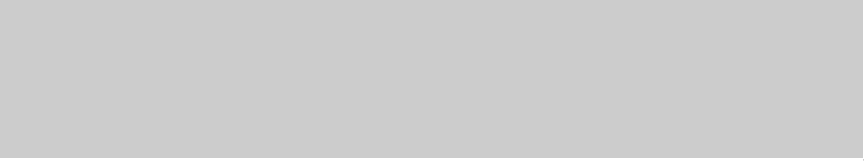
4. 기대효과

1) 정책적 기대효과

- 해양환경 분야 사업에 민간참여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으로 탄소중립, 해양폐기물 제로화 등 정부목표 달성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
- 민·관 공동협력 체계 구축을 통한 해양환경의 관리방식으로 패러다임 전환을 기대
- 민간기업의 ESG경영과 해양환경 분야를 접목한 국내 최초의 연구이므로, 향후 학술분야에서 유사분야 연구에 기초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

2) 사회·경제적 기대효과

- 해양환경 분야에 정부-기업-공공기관-연구소-소셜벤처-시민사회단체 등 간의 협력관계 구축으로 지속가능한 해양환경 보전·관리 활동 실천을 기대
- 해양환경 문제 해결을 위한 벤처기업, 스타트업의 육성에 기여하고 중소·중견기업의 ESG 도입을 통한 성장을 견인할 것으로 기대



EXECUTIVE SUMMARY

A Study on Participation of Private Corporates in Sustainable Marine Environment Management Using ESG

Jiyeon Kim · Mee-Rha Choa

1. Background and Purpose

1) Background

- Amidst a global surge in interest in ESG (Environmental, Social, Governance), ESG has become a new paradigm in business valuations.
- Global companies have adopted ESG and pursued related investments and initiatives. This trend is gradually gaining momentum among domestic companies as well.
- Among ESG factors, major domestic companies particularly prioritize the 'Environment', intending to steadily increase investments in this area.

-
- Within the environmental sector, companies make carbon emission reduction, utilization of renewable energy, and development of eco-friendly technologies as top priorities.
 - Meanwhile, our society is facing diverse, complex, and serious marine environmental issues, where governmental efforts alone are no longer sufficient.
 - Citizens view 'marine environment' issues within the marine fisheries sector as the most urgent and crucial for national development.
 - Moreover, experts in related fields pinpoint 'marine environment' issues as the most serious societal problem within the marine fisheries sector, particularly stressing the urgency of addressing marine environmental changes caused by climate change and marine debris issues.
 - However, the vast expanse and limited accessibility of coastal and marine areas present challenges to the full effectiveness of marine environmental management when undertaken solely by the public sector.
 - In recent years, voluntary participation from civil society has been increasing to complement the limitations of government policies. However, challenges remain in terms of scope of activities and sustainability.
 - Although citizen participation in solving marine environmental issues is increasing, civil society organizations face restrictions on their scope and areas of activity.

- Additionally, these organizations encounter practical challenges such as the need for financial support from external sources to sustain their activities.
- On the other hand, private companies are emerging as a new key actor in solving marine environmental issues by complementing the limitations of the government and civil society.
- With their capital, technology, and human resources, corporations hold significant potential to contribute to solving marine environmental problems.
- However, ESG management related to marine environmental issues among domestic companies is still in its infancy, with its wider societal adoption being relatively low.
- Overseas global companies primarily practice ESG management in the marine environmental sector through advanced ways, such as heavily investing in venture and startup companies to nurture them.
- On the other hand, domestic firms are still at the initial stages when it comes to engagement in addressing marine environmental issues.
- Therefore, there is a need for measures to activate ESG management to enable companies to play key roles in solving marine environmental problems.

2) Relevance to the National Agenda

- Pursuing Growth-oriented Industrial Strategies (Goal No. 17)
 - Contributing not only to the sustainable growth of businesses but also to the sustainable management of the marine environment by promoting models that link corporate growth with social value, such as ESG, and establishing a public-private cooperation system.
- Protecting Maritime Territory and Promoting Sustainable Ocean Management (Goal No. 41)
 - Expanding carbon absorption sources through the implementation of tidal flat restoration and marine afforestation projects utilizing private funds and participating in the establishment of a recycling system to enhance marine waste management.
- Prosperous Coastal Villages, Vibrant Oceans (Goal No. 73)
 - Contributing to the creation of new growth drivers by investing in startups and venture companies to solve marine environmental issues.

3) Purpose

-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current status of private companies' ESG activities in the marine environment sector and propose policy recommendations to further activate and expand them.
- This involves analyzing the current status of private companies'

ESG initiatives in the marine environment sector, identifying challenges based on stakeholders' experiences, and assessing the demand for policy support. Subsequently, policy recommendations will be provided to enhance private sector engagement in ESG activities related to the marine environment.

2. Methodology

1) Academic methodology

- Literature review, case study, in-depth interviews, surveys, and various other methods are utilized to conduct the study.
- (Literature Review) Utilizing government policy documents, laws related to the marine sector, national plans, policy study reports, etc., to compare and analyze policies to support private enterprises' ESG adoption and promotion and derive implications.
- (Case Study) Reviewing corporate publications, such as sustainability reports and ESG management reports, websites, media coverage, and policy documents to analyze cases of corporate ESG management in the marine environment sector, deriving activity types and implementation systems.
- (In-depth Interviews) Conducting field-based in-depth interviews with 25 domestic companies and their stakeholders involved in marine environmental ESG management to identify key issues.
- (Surveys) Surveying 100 domestic private companies that

adopted ESG to assess the current status, major challenges, improvement areas, demand for policy support, etc., in the field of marine environmental ESG management.

2) Policy-making methods

- Through in-depth interviews with stakeholders, surveys of domestic corporates, expert advisory meetings, and policy forums, the opinions from the field are gathered and actively reflected into policy recommendations.
- In-depth interviews are conducted with ESG team members of companies currently involved in marine environmental ESG, as well as with experts from NGOs, government agencies, and research institutions, to directly listen to the opinions of policy demanders and discuss improvement measures.
- A survey is conducted targeting ESG team members of domestic private companies to figure out policy demands and utilize them in deriving policy recommendations.
- Policy forums with officials from the 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 are held to review and refine policy recommendations and assess their feasibility.

3. Result

1) Summary

- The central government has announced policies to support the adoption and implementation of ESG management of domestic companies, but marine environmental-related ESG policies have not yet been established.
- The Ministry of Economy and Finance, Ministry of Environment, Ministry of Trade, Industry, and Energy, Ministry of SMEs and Startups, and Korea Forest Service have formulated policies to support domestic companies' ESG initiatives and encourage their participation in activities aimed at preserving and restoring the environment and forests through the utilization of ESG. Companies are actively utilizing these policies.
- Each ministry has designated a dedicated agency for ESG tasks to support ESG-related works, and these agencies operate online platforms to provide information to the public.
- However, in the marine environmental sector, conditions for supporting ESG activities of private companies, such as organizational structures and information channels, are not yet fully established.
- Analysis of ESG activities related to the marine environment among domestic private enterprises presents predominant participation centering around a few major corporations, with a cluster in specific areas.

-
- Upon analyzing the participation of the top 50 domestic private enterprises in marine environment-related ESG activities based on 2022 revenue data, it was found that just 13 companies are involved.
 - A further analysis of the types of activities in which companies participate reveals a classification into 10 categories, including beach cleaning, marine pollution control, reduction of port air pollution, conservation and restoration of marine ecosystems, coastal restoration, resource recycling, reduction of marine plastic waste, partnerships with NGOs, support for startups, and marine environmental education.
 - There is a tendency for companies to primarily focus their participation on activities such as beach cleaning, conservation of marine biodiversity and restoration of marine ecosystems, and the establishment of systems for the recycling of marine waste materials.
 - While these activities are related to the marine environment, from the perspective of ESG evaluation, they fall under the social (S) category, particularly classified under the category of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 To gain a more detailed understanding of the current situation, in-depth interviews were conducted with stakeholders who have experience in ESG activities in the marine environment sector, resulting in the identification of six key issues.
 - The cases analyzed in this study were mostly centered around large enterprises, and among them, candidates for the in-depth

interview were selected considering their types, implementation systems, and characteristics.

- Through in-depth interviews with practitioners such as corporate ESG managers, and those from public institutions, research institutes, NGOs, etc., experiences in promoting ESG activities in the marine environment sector were thoroughly examined and analyzed.
- The result of the analysis identified some constraints including limitations in project planning due to insufficient manpower and information, lack of ESG items considering individual company demands, competitive "preemption" among companies for items, lack of national project implementation system based on public-private cooperation, poor marine waste recycling system, and lack of carbon offset project development as an incentive for corporate participation.
- A survey targeting overall domestic private companies was conducted to figure out perceptions of the marine environment, the status of ESG initiatives, challenges, and demands for policy support.
- According to the responses from 100 domestic private companies, whereas the awareness of the marine environment among corporate ESG team managers is relatively high, those pushing ahead with relevant initiatives just remain 14%.
- It was also observed that these initiatives primarily focus on activities such as beach cleaning, promoting marine waste recycling, and conserving marine ecosystems and biodiversity.

-
- The factors hindering private companies' involvement in the marine environment were found to be internal and external conditions of companies.
 - To encourage and activate private companies' ESG initiatives in the marine environment sector, nine key tasks were proposed.
 - This study set the direction of the government's domestic corporate ESG management policy as "support" rather than regulation while considering the feasibility of policy measures.
 - Accordingly, the basic directions suggested were ① reflecting on-site demands, ② promoting collaboration between the government and companies through communication, and ③ ensuring sustainability rather than one-off actions.
 - 1. Tailored Support for On-site ESG Activities: Providing marine environment ESG items and guidelines for private sector participation, establishing a certification system for marine environment ESG activities, and developing support programs for ESG initiatives in the marine environment sector for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s.
 - 2. Establishment of a Communication-Oriented ESG Collaboration System: Enhancing networking to improve marine environmental awareness among corporate employees, operating an integrated service platform for marine environment ESG, and operating a multilateral consultation body (tentatively named Ocean Alliance).

- 3. Building up the Sustainable ESG Foundation: Designating marine environment ESG-related departments and operating external support organizations, refining national project systems to expand private sector participation, and establishing legal foundations to promote ESG initiatives in the marine environment sector.

2) Policy recommendations

- A legal and institutional framework is established to promote and facilitate private sector engagement in the marine environment sector using ESG.
- Legal revision: Designating a dedicated department in charge of supporting the participation of domestic private companies in marine environment ESG activities by revamping the organizational structure of the 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 establishing a legal basis for the installation and operation of an external dedicated organization, and setting up a committee to maintain public-private partnerships.
- Institutional improvement: Establishing the status of participating actors and procedures for invigorating private company participation in current government-led projects or policies.

4. Expected Outcomes

1) Policy effects

- It is anticipated that institutional improvements to promote private sector participation in marine environmental projects will contribute to achieving government goals such as carbon neutrality and zero marine waste.
- The establishment of a collaborative framework between the public and private sectors is expected to transition the paradigm of sustainable management in the marine environment.
- Being the first study in South Korea to graft private sector ESG management onto the marine environment field, this study will serve as a basis for further academic research.

2) Social and economic effects

- Collaboration among various stakeholders including the government, businesses, public agencies, research institutes, social ventures, and civil society organizations is expected to drive practical efforts for sustainable marine environmental conservation and management.
- The nurturing of venture companies and startups dedicated to resolving marine environmental issues is anticipated to

drive growth through the adoption of ESG practices by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s (SMEs).

01

서론

제1절 연구의 배경과 목적

1. 연구의 배경과 필요성

최근 몇 년 전부터 전 세계적으로 환경·사회·지배구조(ESG: Environmental, Social, Governance)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면서, 이는 기업의 가치를 평가하는 새로운 기준이자 경영 패러다임으로 자리매김하게 되었다.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인 블랙록(Blackrock)의 래리 핑크(Larry Fink) 회장이 연례 서한을 통해 기후와 환경문제를 집중적으로 강조하며 기후변화에 제대로 대응하지 않는 기업에는 투자하지 않겠다는 선언이 있는 후로 ESG가 본격 논의되기 시작한 것이다. 기업은 본래 이윤추구를 가장 우선시하는 것으로 알려져 왔다. 그러나 이제는 재무적 요소뿐 아니라 비재무적 요소인 환경보호(E), 사회적 책임(S), 지배구조(G)까지 잘 챙기는 기업이 투자자들로부터 투자를 잘 받을 수 있는 시대에 접어들게 되었다. 이에, 글로벌 기업들은 ESG 경영을 선언하고 조직을 재정비하였으며, 관련 투자와 대책들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기 시작하였다.

국내에서도 주요 대기업이 우선적으로 ESG 경영을 빠르게 도입하고 나섰다. 기업들은 자사의 ESG 경영전략 수립은 물론이고, 전담부서를 설치하는 등 적극 대응에 나서고 있다. 이에 우리 정부는 2021년을 ESG 경영 확산의 원년으로 선포하고, 본격적으로 ESG 정책을 수립하였다. 중앙부처를 중심으로 각 부처별 성격에 맞는 기업 ESG 지원 정책을 발표하였으며, ESG 경영 도입에 큰 부담을 안고 있는 중소·중견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들도 대폭 마련하였다.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도 해당 지역에 소재한 기업들의 ESG 경영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한 조례를 제정하고, 관련 정책을 추진해왔다.

다시 기업으로 시선을 돌려보면, ESG라는 기업의 새로운 경영전략 등장으로 기업의 경영 방향에도 다소 변화가 감지되었다. 국내 주요 300대 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ESG 인식조사 결과를 보면, 기업의 ESG 담당자 중 67.4%가 ‘환경’ 분야를 최우선과제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환경 분야 중에서도 ‘탄소배출량 감축’이 37.1%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또한, 조사에 응답한 기업의 81%가 당해년도 ESG 사업 투자 규모를 증대할 계획이라고 밝힌 것과 같이 기업은 그 어느 때보다도 환경에 이목을 집중하게 된 것이다.¹⁾

사실 우리 사회는 오래 전부터 환경은 물론이고, 해양오염, 해양생태계 훼손, 자원고갈, 자연재해 등 다양하고 복잡하며 심각한 해양환경 문제에 직면해왔다. 우리 국민들의 인식에서도 심각성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많은 국민들이 해양수산 분야 중에서 ‘해양환경’ 문제를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문제이자 국가발전에 가장 중요한 분야라고 언급하였으며²⁾ 해양수산 분야 전문가 관점에서 볼 때도 ‘해양환경’ 문제가 해양수산 분야에서 가장 심각한 사회문제로 인식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중에서도 특히 ‘기

1) 한국경제(2022.3.27.)(검색일: 2022.6.20.)

2) 한국해양수산개발원(2018.4.30; 2019.4.17; 2020.6.3; 2021.6.7.)(모든 자료 검색일: 2023.6.20.)

후변화로 인한 해양환경 변화'와 '해양(플라스틱) 쓰레기' 문제 해결이 시급하다고 인식하고 있었다.³⁾ 이렇게 국민들이 심각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해양환경 문제가 일어나고 있는 해양은 수산, 해운, 항만, 관광, 에너지원 등 다양한 경제활동이 이루어지는 공간이자 삶의 터전이기도 하다. 또한, 생물학적 기능과 대기 및 기후 조절 기능 등 중요한 역할도 담당한다.⁴⁾ 이처럼 해양은 인류에게 매우 중요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누구나 대가 없이 한정된 자원을 경쟁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 해주는 공유재이다. 그렇다 보니 관리에 대한 책임의식과 주인의식을 지닌 주체가 특정되어 있지 않아 자칫 남용하게 되면 일명 '공유지의 비극(The Tragedy of the Commons)'을 맞이할 수도 있다. 사실 그동안 해양을 주로 이용해온 자들은 이들이 하는 개발행위가 해양환경에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점은 고려하지 않았다. 특히 해양 공간 또는 자원을 이용하거나, 연안에 사업장을 둔 기업들은 이들의 기업 활동이 주변 생태계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에 대해, 이러한 기업들이 해양을 직·간접적으로 이용해왔기 때문에 책임감 있는 자세로 관리에 참여해야 한다는 관점으로 이들에게 적극적인 역할을 요구할 수도 있다. 하지만 그만큼 중요한 것은 이 기업들이 사업을 지속적으로 영위하기 위해서는 해양이 지속가능하게 이용할 수 있는 상태여야 한다는 점이다. 즉 공유재는 모든 이해관계자가 협력하여 책임의식을 가지고 관리해야지만 지속가능할 수 때문에 누구보다도 더욱 적극적인 자세로 해양환경 공동관리 주체로 참여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⁵⁾

지금까지는 정부가 주도하여 해양환경을 관리해 왔다. 하지만 이제는 너무도 다양한 문제가 복합적으로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정부의 노력만으로 해결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것은 모두가 다 아는 사실이다. 정부의 정책적 사각지대를 보완하기 위해 시민사회단체가 등장했지만 해양은 공간이 광범

3) 좌미라·한기원·박희망(2020), p. 150.

4) 해양수산부(2021d), p. 4.

5) 김수암 외(2021), pp. 164-165.

위하고 접근성이 낮아 한계가 있다. 한편 정부와 시민사회단체의 한계를 보완하고 이들과 협력하여 해양환경 문제를 해결하는 데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새로운 주체로 민간기업이 주목받기 시작하였다. 기업은 자본, 기술 및 인력을 보유하고 있어 해양환경 문제 해결에 기여할 수 있는 잠재력이 매우 크기 때문이다. 특히 공공부문에 비해 급격한 외부환경 변화에 신속하고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으며, 시민사회단체에 비해 동원할 수 있는 자원이 풍부하므로 혁신적인 방법을 실제로 구현하여 창의적인 솔루션을 도출하는 데도 강점을 지닌다. 최근에는 이러한 기업들이 국제사회로부터 환경 관리에 참여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받기 시작하였다. 2022년 12월, 제15차 생물다양성 당사국 총회에서 채택된 ‘쿤밍-몬트리올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GBF)’에 따르면,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해 민관으로부터 연간 2,000억 달러를 동원하고, 민간기업의 경영활동이 생물다양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 및 보고할 것을 의무화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처럼 국제사회가 민간기업의 참여를 요구하고, 기업이 자발적으로 ESG 경영을 도입하는 분위기 속에서 오늘날 민간기업의 위상은 과거의 해양 이용자가 아닌 공동관리자로 변화하게 되었다.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해양 환경 문제는 더 이상 정부만의 문제도 아니고, 정부 혼자만의 힘으로 해결하기도 어렵다. 그러므로 민간기업도 해양환경 문제 해결의 새로운 관리 주체로 동참할 때이다. 기업이 ESG 관점에서 해양환경 분야에 관심을 가지고 접근하는 것과 동시에 정부도 새로운 정책적 파트너로서 민간기업이 해양환경 문제 해결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하다.

2. 연구의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재원, 기술, 인력 등을 보유한 민간기업이 ESG 경영을 실천하는 차원에서 해양환경 보전 및 관리에 관심을 가지고 동참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궁극적으로는 해양환경 분야에서 ESG 추진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정부의 정책적 지원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이번 연구를 통해 민·관 공동협력 체계 구축을 통한 해양환경의 관리방식으로 패러다임이 전환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해양환경 분야 사업에 민간참여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으로 탄소중립, 해양폐기물 제로화 등 정부목표 달성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기업의 성장과 사회적 가치 연계 모델을 확산하고, 탄소흡수원을 확대 조성 및 해양폐기물 관리를 강화에 기여하며, 해양환경 문제 해결을 위한 스타트업, 벤처기업 육성에 투자하여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하는데 기여하는 국정과제와 연관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의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문헌 연구를 통해 ESG의 개념과 최근 논의 동향에 대해 분석하고, 해양환경 분야에 민간기업의 ESG 활성화가 필요한 배경을 검토한다. 그리고 현재 국내 주요 부처에서 발표한 기업 ESG 지원 정책 현황과, ESG 관련 해양환경 분야 정책 현황을 종합 분석하여 해양환경 분야 ESG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한다.

둘째, 해양환경 분야에 참여한 경험이 있거나, 참여 중인 민간기업의 현황과 사례를 분석하고, 각 사례의 실제 이해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심층인터뷰를 실시하여 해양환경 분야의 ESG 관련 주요 현안을 도출한다. 또한 심층인터뷰에서 파악한 정보를 토대로 설문조사 문항을 설계하고, 국내 민간기업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하여 해양환경 분야 ESG 관련 애로사항과 정부 지원수요를 진단한다.

셋째, 국내 기업 ESG 지원 정책 현황, 심층인터뷰, 설문조사 실시 결과를 토대로 하여 해양환경 분야 ESG 활성화를 위한 기본방향을 도출하고, 추진과제를 제시한다.

〈그림 1-1〉 국정과제와 본 연구의 관련성



자료: 저자 작성

제2절 연구의 내용과 방법

1. 연구 내용

이 연구는 크게 서론(제1장), 국내 부처별 기업 ESG 정책 현황 분석(제2장·제3장), 민간기업의 해양환경 분야 ESG 현황 분석 및 현안 도출(제4

장), 해양환경 분야 ESG 활성화 방향 및 방안 제시(제5장), 결론 및 정책제언(제6장)으로 구성된다.

제2장에서는 기업의 경영전략으로서 ESG 개념의 등장과 국내 기업 ESG 지원정책에 대해 비교·분석한다. 또한 ESG 관련 해양환경 분야 정책 현황을 분석하여 타 분야의 정책 중 해양환경 분야에 적용 가능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한다.

제3장에서는 해양환경 분야에 대한 일반 국민과 기업인들의 인식조사 결과를 분석하고, 해양환경 분야에 민간기업의 ESG 활성화 필요성을 검토한다. 그리고 앞에서 분석한 ESG 관련 국가 정책 중에서 특히 해양환경과 관련된 정책 현황을 발췌하여 심도있게 분석한다. 향후 정부 차원에서 기업의 ESG와 연계 가능한 사업을 발굴해 기업이 참여할 수 있는 분야를 확대시킬 필요가 있음을 제시한다.

제4장에서는 민간기업 관점에서 해양환경 분야에 참여 현황과 사례를 발굴하여 국내 기업의 주요 추진 분야 및 특성을 분석한다. 또한, 해양수산부 주최 간담회를 통해 확보한 민간기업 ESG 담당자를 중심으로 심층인터뷰를 실시하여 해양환경 분야에서 ESG 추진 과정에서 경험한 한계를 진단하고 주요 현안을 도출한다. 인터뷰를 통해 확인된 정보들을 바탕으로 설문조사를 설계하여, 국내 민간기업 ESG 담당자를 대상으로 전반적인 해양환경에 대한 인식 정도, 해양환경 분야 ESG 추진 배경 및 현황, 추진 과정에서의 애로사항, 정책적 지원 수요 등에 대해 조사한다.

제5장에서는 앞에서 실시한 조사 결과를 토대로 해양환경 분야 ESG를 추진하는 과정에서의 주요 장애요인을 종합하고, 민간기업의 참여를 유도 및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향을 도출한다. 또한 이 방향에 따른 추진과제를 구체적으로 제시한다.

2. 연구 방법

이 연구는 문헌분석, 국가 정책 분석, 사례 분석, 심층인터뷰, 설문조사 등 다양한 연구 방법을 적용하였으며, 연구 결과를 통해 얻은 정책적 시사점은 민간기업의 해양환경 분야 ESG 활성화 기본방향과 추진과제를 도출하는데 종합적으로 활용하였다.

첫째, 이 연구에서는 ESG와 관련된 이론과 논의 동향을 검토하고자 학술연구논문, 정책보고서 등 문헌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를 통해 ESG의 등장 배경부터 개념의 발전 등을 전반적으로 이해할 수 있었으며, 언론·학술 연구, 공공 제도, 금융투자 등 각 분야에서의 활용 동향을 파악하였다. 또한, 해양환경에 대한 국민의 인식과 정부와 기업의 역할 변화를 확인하기 위해 선행사례를 다룬 문헌자료를 활용하였다.

둘째, 기업의 ESG 지원을 위한 국가 ESG 정책을 분석하였다. 우리나라 민간기업의 ESG 경영 지원에 관한 정부의 정책방향과 핵심과제 등을 살펴 보기 위해 기획재정부, 환경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산림청, 해양수산부 등 각 중앙부처에서 발표 및 추진 중인 ESG 관련 정책과 사업 등을 분석하였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 제정을 통한 지원 방식도 확인하였다. 이를 통해 기업의 ESG 경영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적 접근 방식에 차이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해양환경 분야에서 민간기업의 ESG 추진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한 방향 설정과 방안 마련에 적용하기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셋째, 국내 민간기업의 해양환경 분야 ESG 추진 현황과 사례를 분석하였다. 국내에 소재한 민간기업이 자사의 ESG 전략과 비즈니스 차원에서 해양환경 분야를 접목해 추진하고 있는 사례를 분석하기 위해 개별 기업이 공개한 웹사이트 자료, 언론기사 및 이해관계자 인터뷰 등을 활용하였다.

먼저 2022년 기준으로 국내 매출액 상위 50대 기업의 지속가능경영보고서, ESG 보고서, 기업 보도자료를 기초로 해양환경 분야 ESG 참여 현황을 분석하고, 활동 유형을 구분하였다. 이 중 대표적인 사례는 언론기사와 인터뷰 결과를 추가로 활용해 분석하였으며, 필요한 경우 50대 기업에 포함되지 않은 기업의 사례도 일부 포함하였다.

넷째, 민간기업의 ESG 담당자 및 관련 분야 전문가를 대상으로 심층인터뷰를 실시하였다. 우선 심층인터뷰의 대상을 선정하기 위하여, 문헌조사를 통해 검토한 사례를 면밀히 검토하였다. 또한, 해양수산부에서 주관한 기업간담회를 통해 실제로 해양환경 분야에서 ESG 활동을 추진했거나 추진 중인 기업을 우선적으로 검토하였으며, 이들과 협력관계에 있는 이해관계자까지 포괄하여 대상자를 선정하였다. 심층인터뷰에 응한 기업 담당자와 이해관계자를 중심으로 하여 민간기업이 ESG 차원에서 해양환경 분야와 관련하여 참여 중인 사업 또는 활동의 추진 현황, 한계 및 문제점 등 실태를 파악하고, 정책적 지원 수요 등에 관한 의견을 청취하였다. 민간기업 ESG 업무 담당자, 해양수산 관련 공공기관, 연구소, NGO 등 19개 기관에 소속된 25명을 직접 방문하여 반구조화된 질문지를 이용해 진행하였다. 심층인터뷰 결과는 해양환경 분야 ESG 활성화에 관한 현안을 분석하는 데 활용하였으며, 본 연구의 정책방안 도출에 참고하였다.

다섯째, 국내 소재 민간기업의 ESG 담당자를 대상으로 해양환경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 기업인 관점에서 정부와 기업의 해양환경 관리 및 보전 노력 정도, 기업의 ESG 관점에서 해양환경 분야에 참여 정도, 추진 현황, 애로사항 등 실태를 진단하고, 기업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적 지원 수요에 대해 의견을 듣기 위해 설문조사를 진행하였다. 2023년 8월 11일부터 9월 7일까지 구조화된 설문지를 통해 온라인 조사로 실시하였으며, 민간기업 100곳의 ESG 담당자가 응답하였다. 설문조사 결과는 사례조사, 심층인터뷰 등 다른 연구 방법을 통해 얻은 연구 결과와 종합하여 해양환

경 분야 ESG 활성화 정책방안을 마련하는 데 활용하였다.

마지막으로 ESG와 관련된 살아있는 현장 정보를 활용하였다. 2023년 4월 5일 해양수산부 해양환경정책관 주관으로 개최된 해양환경 분야 ESG 활성화를 위한 기업 간담회에 참석하여 기업의 애로사항, 정책적 지원 수요 등을 청취하였다. 또한 해양수산부 담당자와의 정책협의회, 관련 분야 전문가와의 자문회의 등을 통해 본 연구에서 도출한 정책방안의 실현가능성을 검토하였다.

〈그림 1-2〉 본 연구의 흐름도

구분	주요 연구내용	연구 방법
제1장	- 연구의 개요 - 선행연구 검토	문헌조사
↓		
제2장	- ESG 개념 및 동향 분석 - 국내 부처별 ESG 정책 현황 분석	문헌조사
↓		
제3장	- 해양환경 분야에 민간기업 ESG 활성화 필요성 검토 - 해양환경 분야에 대한 국민, 기업인 인식조사 결과 분석 - ESG 관련 해양환경 분야 정책 현황 분석	- 문헌조사 - 설문조사
↓		
제4장	- 민간기업의 해양환경 분야 ESG 현황 및 사례 분석 - 심층인터뷰를 활용한 해양환경 분야 ESG 관련 주요 현안 도출 - 설문조사를 통한 해양환경 분야 ESG 관련 정부 지원 수요 진단	- 사례조사 - 심층인터뷰 - 설문조사
↓		
제5장	- 해양환경 분야 ESG 활성화 기본방향 도출 - 해양환경 분야 ESG 활성화를 위한 추진과제 제시	- 전문가 자문 - 정책협의회 개최
↓		
제6장	- 연구의 요약 및 결론 - 정책 제언 및 후속연구	전문가 자문

자료: 저자 작성

제3절 선행연구와 본 연구의 차별성

1. 선행연구 현황

전 세계적으로 기업의 ESG 경영이 화두가 됨에 따라 국내외 ESG 동향을 분석하고 국내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연구가 단기간 내에 여럿 발표되었다. 한상범 외(2021)는 ESG에 대한 투자, 기업경영에 더해 국가정책 및 제도에 대한 글로벌 ESG 동향을 파악하고, 효율성, 공정성, 지속가능성 측면에서 ESG 국가전략을 통합적으로 설계 및 실행하는 방안을 모색했다. 조대형(2021)은 글로벌 ESG 추진 현황과 주요 해외기업의 ESG 경영사례 분석을 통해 ESG가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성장과 기업의 수익 창출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확인하였고, 글로벌 ESG 기준 강화에 대비하여 국내 대응체계에 대한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ESG 관련하여 정부 차원의 정책방안을 도출한 선행연구가 있다. 남정현(2022)은 국내 기업의 ESG 경영 제도 정착을 위해 발전 단계별 정부의 역할을 분석 및 제시하였으며, 한기원 외(2021)는 해양환경산업 육성을 위한 기초연구로서 정부의 정책방향 마련, 주요 추진과제 등을 제시하였다. 지역적 차원에서는 장찬민(2022)이 부산지역 기업 대상으로 ESG 경영 도입 시 애로사항을 파악하고 정부의 ESG 관련 개선사항과 정책지원에 대한 수요를 파악했으며, 충북연구원(2021)은 충북에 위치한 기업의 ESG 경영 실천을 위한 지원정책 방안을 발굴하는 데 초점을 두었다. 중소기업 차원의 ESG경영 활성화를 위한 연구도 수행된 바 있는데, 임영철 외(2021)는 국내 중소기업의 신규 시장진입과 현 공급사슬 유지를 위한 ESG 경영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였다. 임형철 외(2021)는 국내외 ESG 사례를 통해 본 중소기업 ESG 경영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였다.

2.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기존의 ESG 관련 선행연구는 기업의 ESG 경영 관련 이론과 동향에 대한 개념을 다룬 연구이거나 특정 개별 기업의 ESG 경영 실천 사례를 중심으로 한 연구가 대부분이다. 또한, 중소기업 또는 해양환경이 아닌 다른 분야에서의 기업 ESG 경영 활성화를 위해 정부 정책지원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목적인 연구도 존재한다. 한편 연구의 대상 및 범위를 해양환경 분야로 설정한 연구는 아직 진행된 것이 없는 것으로 확인하였다. 더 나아가 해양환경 문제의 해결 주체로서 민간기업의 참여를 유도하여 ESG 경영을 활성화하기 위한 정부의 정책적 지원방안을 제시한 연구는 전무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본 연구는 민간기업의 ESG 경영 실천의 관점에서 해양환경 분야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또한, 해양환경 분야에서 ESG 경영을 추진 중인 기업의 ESG 담당자를 심층인터뷰 하여 추진 현황, 한계 및 애로사항, 정책적 지원 수요 등 현장에 기반한 의견을 청취하였다. 이어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국내 민간기업의 해양환경 분야 ESG 추진 실태를 파악하였다. 이 결과를 종합 정리하여 국내 최초로 민간기업의 해양환경 분야 ESG 활성화를 위한 정책방안을 제시하였다. 이는 향후 학술분야에서 유사분야 연구에 기초자료로 활용될 것으로도 기대된다.

〈표 1-1〉 선행연구와 본 연구의 차별성

구분	선행연구		본 연구
	요약	참고문헌	
연구 목표	• 부산지역 중소기업 ESG 실태분석 및 활성화를 위한 정책지원 수요 진단 • 해양환경산업 육성을 위한 정부 정책 방향 마련 • 원양산업 ESG 구성요소 분석 및 도입 확산을 위한 정책적 지원 방안 제시	• 장창민(2022) • 한기원 외 (2021) • 윤미경 외 (2021)	• 민간기업의 해양환경 분야에서의 ESG경영 활성화를 위한 정부 정책방안 제시

구분	선행연구		본 연구
	요약	참고문헌	
연구 대상	• 원양산업의 ESG경영 도입 확산을 위한 정책적 지원 방안 제시 • 국내 중소기업의 신규 시장진입과 현 공급사슬 유지를 위한 ESG 경영 활성화 방안 제시 • 사회혁신기업의 혁신성과와 역량 파악을 통해 ESG 활성화 시사점 도출 • 충북 지역 내 기업의 ESG 경영 실천을 위한 지원정책 방안 발굴 • 부산 지역 중소기업 대상 기업의 ESG 경영 도입 시 애로사항 파악하여 정부의 ESG 개선사항 및 정책지원 수요 파악	• 윤미경 외 (2021) • 임형철 외 (2021) • 장석인(2022) • 충북연구원 (2021) • 장찬민(2022)	• 우리나라 전 분야의 민간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 • 특정 분야, 지역 또는 기업 규모를 한정하지 않음 (연안지역에 위치한 해양 환경 관련 기업도 대상)
연구 범위	• ESG 경영제도 정착을 위해 정부의 역할 고찰 • 사전 예방적 전략 차원에서 정부-기업 간 규제보다 자발적 협력 중요 • 해양환경 거버넌스 영향 요인별 정책 개선 방안 제시 • 환경거버넌스 행위 주체별 역할 및 각각의 발전 방안 도출 • 해양 분야 문제 해결 및 기업지원을 위한 리빙랩 활성화 방안 제시 • 민-관-정 협력 거버넌스 구축으로 환경문제 해결	• 남정현(2022) • Buysse et al.(2003) • 성은혜 외 (2015) • 정우현 외 (2012) • 좌미라 외 (2021) • 고희경 외 (2021)	• 해양환경 분야 문제 해결의 주체로서 민간기업의 참여를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 마련 연구 • 해양환경 관리에서의 주요 이해관계자의 역할 변화 분석 및 정리
연구 방법	• SWOT 분석으로 중소기업 활성화 방안 도출 • 설문조사 분석을 통한 ESG 확산 및 정착방안 의견 조사 • 부산 내 기업 대상 설문조사 실시하여 정부의 정책지원 방안 도출 • 문헌분석을 통해 충북 내 기업의 ESG 경영 지원정책 방향 제시	• 임형철 외 (2021) • 대한상공회의소(2021) • 장찬민(2022) • 충북연구원 (2021)	• 심층인터뷰와 설문조사 등을 통해 기업의 정책수요를 진단 및 분석하고, 해양환경 분야 ESG 경영 활성화를 위한 정부 정책 방안 도출

자료: 저자 작성

02

ESG 동향과 국내 ESG 정책 현황

제1절 ESG 개념과 동향

1. ESG 등장 배경과 개념의 발전

ESG는 과거 유사 개념에서 출발해 점차 발전되어 온 개념으로, 최근에 들어서 기업의 새로운 경영전략으로 회자되기 시작했다. 이에, 제1절에서는 ESG가 기업의 지속가능경영을 달성하기 위한 핵심 지표로 부상하게 된 과정을 통시적으로 살펴보고, 최근 언론·학술, 공공 제도, 금융·투자 분야에서 ESG 동향을 파악해보았다.

1) ESG 개념의 등장

ESG는 환경(Environmental), 사회(Social), 지배구조(Governance)의 앞 글자를 따서 만든 용어로, 기업의 재무적 가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비재무적 요소다. 이 개념은 2000년 이후부터 본격 사용되기 시작해 현재는 투자자가 기업 투자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중요하게 고려하는 요소가 되었다.

전통적으로 기업에게 가장 중요한 이해관계자는 ‘주주’라고 말할 수 있다. 과거에 기업의 경영 목표는 이윤창출과 주주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주주자본주의(shareholder capitalism)였다. 그런데 점차 시대가 변하면서 구성원 모두의 이익을 고려하는 이해관계자 자본주의(stakeholder capitalism)로 발전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ESG 개념도 싹 트기 시작한 것이다.⁶⁾

이 과정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기 위해 1970년대로 거슬러 올라가 보기로 하자. 당시 시카고대학 경제학자 밀턴 프리드먼(Milton Friedman)의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은 이익을 증대하는 데 있다고 주장하는 논설이 뉴욕타임스에 기고되었다.⁷⁾ 이때부터 기업은 주주를 위해 존재하고 주주들에게만 책임을 다한다는 주주자본주의 이론이 정착된 것으로 보인다.⁸⁾

이후 1972년, 로마클럽⁹⁾은 보고서 ‘성장의 한계(The Limits to Growth)’를 펴내어 급속한 공업화, 환경오염, 인구급증, 자원고갈, 식량부족 등의 문제로 전 세계 경제성장이 100년 안에 멈추게 될 것이라고 지적하였다. 이는 기업의 경영활동이 전 세계의 경제발전에 기여하고 있지만,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인식을 확산시키게 된 계기가 되었고, 실제로 국제사회에서부터 인식의 전환이 이루어졌다. 1987년 UN 세계환경개발위원회(WCED)는 브룬트란트 보고서(Brundtland Report)로 알려진 「우리 공동의 미래(Our Common Future)」를 공개했는데, 오늘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지속가능발전(SD: Sustainable Development)’이 여기에서 처음으로 등장하였다. 이 보고서는 지속가능발전의 개념을 “현재 세대가 미래 세대를 해치지 않고 현재 세대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것”

6) 중소벤처기업부·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2021), pp. 24~27.

7) The New York Times(1970.9.13.)(검색일: 2023.4.23.)

8) 프레시안(2020.1.10.)(검색일: 2023.4.23.)

9) 1970년 3월, 전 세계 25개국의 경제학자, 과학자, 교육자, 기업가, 정치인 등이 참여해 인류와 지구의 미래에 대해 연구하는 비영리기관

이라고 정의하고 있으며,¹⁰⁾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장기적인 환경정책이 필요하고, 정부와 개인을 넘어 기업도 환경(E) 문제 해결에 적극 동참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한편, 투자자들의 관점에도 변화가 일어났다. 1997년까지만 해도 미국의 가장 영향력 있는 기업 대표들의 모임인 비즈니스라운드테이블(BRT: Business Round Table)에서 기업경영의 목적은 주주이익 극대화라는 논의가 일반적이었다. 그런데 점차 사회적 분위기가 변화하면서 논의의 방향도 기업의 사회적 책임 이행을 요구하는 쪽으로 전환되기 시작한 것이다.

1999년, 코피 아난(Kofi Annan) 당시 UN사무총장은 세계경제포럼(WEF)에서 기업이 글로벌 문제 해결과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노력에 참여하여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리고 이를 실천할 수 있도록 UN 산하 글로벌컴팩트(UNGC: UN Global Compact)를 설립하였으며, 기업에게 실질적인 행동을 요구하기 위해 환경(E), 인권 및 노동(S), 반부패(G)와 관련된 열 가지 원칙을 제시하였다. 앞서 언급한 「우리 공동의 미래」 보고서에서는 주로 환경(E) 분야에 기업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보았는데 반해, UNGC의 10대 원칙에서는 사회(S), 거버넌스(G) 분야까지도 포괄하고 있어 이전보다 기업의 역할 범위를 확대해서 보았다는 점에 차이가 있다. UNGC는 회원 기업에게 아래 표에서 열거한 10대 원칙을 준수하고 연차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였으나, 이는 의무사항은 아니고 기업의 자발적 참여에 기반하여 이행되었다.¹¹⁾

10) AND(2021.9.29.)(검색일: 2023.4.23.)

11) 한상범·권세훈·임상균(2021), pp. 27-31.

〈표 2-1〉 기업의 행동을 요구하는 UNGC 10대 원칙

구분	원칙	내용
인권	1	• 기업은 국제적으로 선언된 인권 보호를 지지하고 존중해야 하고, • Business should support and respect the protection of internationally proclaimed human rights;
	2	• 기업은 인권 침해에 연루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한다. • Make sure that they are not complicit in human rights abuses.
노동	3	• 기업은 결사의 자유와 단체교섭권의 실질적인 인정을 지지하고, • Businesses should uphold the freedom of association and the effective recognition of the right to collective bargaining;
	4	• 모든 형태의 강제노동을 배제하며, • the elimination of all forms of forced and compulsory labour;
	5	• 아동노동을 효율적으로 철폐하고, • the effective abolition of child labour; and
	6	• 고용 및 업무에서 차별을 철폐한다. • the elimination of discrimination in respect of employment and occupation.
환경	7	• 기업은 환경문제에 대한 예방적 접근을 지지하고, • Businesses should support a precautionary approach to environmental challenges;
	8	• 환경적 책임을 증진하는 조치를 수행하며, • undertake initiatives to promote greater environmental responsibility;
	9	• 환경친화적 기술의 개발과 확산을 촉진한다. • encourage the development and diffusion of environmentally friendly technologies.
반부패	10	• 기업은 부당취득 및 뇌물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부패에 반대한다. • Businesses should work against corruption in all its forms, including extortion and bribery.

자료: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검색일: 2023.4.23.)

이후 2004년에 접어들어 ESG 용어가 처음 등장하였는데, UNGC가 발표한 「Who Cares Wins」 보고서에 이 용어가 공식적으로 사용된 것이다. 2005년에는 코피 아난 사무총장이 여섯 가지 책임투자원칙(PRI: Principles

of Responsible Investment)을 만들어 2006년 뉴욕주식거래소에서 이를 발표하였다. 이 원칙은 투자자가 기업에 투자를 결정할 때, 비재무적 요소인 ESG 활동을 고려할 것을 제시하고 있다. 당시 UN은 ESG를 고려한 사회책임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투자자들에게 PRI를 적극 활용할 것을 장려하였고, 이에 동참하겠다는 투자자도 늘었다. 하지만 이 역시 앞에서 언급한 UNGC 10대 원칙과 마찬가지로 강제성이 없어 투자자들의 대대적인 참여를 기대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표 2-2〉 ESG 관점에서 투자자의 행동을 요구하는 PRI

원칙	내용
원칙1	• ESG 이슈를 투자 분석 및 의사결정 과정에 반영
원칙2	• 능동적인 오너(owner)가 되어, ESG 이슈를 오너십(ownership) 정책 및 실천에 적용
원칙3	• 투자하는 주체가 ESG 이슈에 대해 적절하게 공개하도록 요구
원칙4	• 투자 산업 내에서 원칙의 수용과 실행을 촉진
원칙5	• 원칙 이행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협력
원칙6	• 원칙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활동과 진행 상황에 대해 보고

자료: 손예령(2022), p. 131의 자료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이때까지만 해도 국제사회와 투자자들 사이에서만 기업의 이해관계자를 고려한 사회적 책임을 중시해야 한다는 논의가 이루어졌는데, 점차 기업인들 사이에서도 인식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였다. 2019년 BRT에서 기업인들은 주주 우선주의 원칙을 폐지하고, 이해관계자 중심 경영방식인 ‘기업의 목적(Purpose of a Corporation)’을 선언하였다. 이 선언은 기업이 이해관계자 자본주의 관점에서 고객(Customer), 직원(Employees), 공급자(Suppliers), 지역사회(Communities), 주주(Shareholders)를 고려한 기업경영 방식을 채택하겠다는 내용이다.¹²⁾ 50년 전에는 기업의 전통적인

12) 위의 책, pp. 30-31.

경영목적이 주주자본주의였다면, 이제는 정부 및 지역사회(S), 협력사 등 기업(P), 투자자(I), 고객(C), 직원(E)까지 전부 고려한 이해관계자 자본주의로 기업경영의 패러다임이 본격 전환되기 시작한 것이다.¹³⁾ 이를 반영하듯, 세계경제포럼(WEF: World Economic Forum)에서도 2020년 다보스포럼의 핵심의제를 ‘화합하고 지속가능한 세계를 위한 이해관계자’로 설정하였으며, ‘이해관계자 자본주의 측정’ 가이드라인을 발간하는 등 이해관계자 자본주의로의 전환을 알렸다.¹⁴⁾

〈표 2-3〉 기업의 주요 이해관계자

NO.	2019 BRT(Business Round Table) 선언의 주요 내용	SPICE 모델
1	 1. 우리의 고객에게 가치를 전달한다. (Delivering value to our CUSTOMERS .)	고객 (Customer)
2	 2. 우리의 직원에게 투자한다.(Investing in our EMPLOYEES .)	직원 (Employee)
3	 3. 공급자를 공정하게 윤리적으로 대한다. (Dealing fairly and ethically with our SUPPLIERS .)	협력사 등 기업 (Partner)
4	 4. 우리가 속한 지역사회를 지원한다. (Supporting the COMMUNITIES in which we work.)	정부 및 지역사회 (Society)
5	 5. 주주를 위한 장기적 가치를 창출한다. (Generating long-term value for SHAREHOLDERS .)	투자자 (Investor)

자료: 삼성 KPMG(2021), p. 4; AND(2021.9.29.)(검색일: 2023.4.23.)

지금까지의 내용을 정리하면, ESG 개념은 1987년 「우리 공동의 미래」 보고서에 언급된 지속가능발전에서 시작되어, 2006년 UNPRI에서 한층 구체화 되었다. 이후 2019년 BRT에서 기업인들은 이해관계자 중심 경영

13) AND(2021.9.29.)(검색일: 2023.4.23.)

14) 중소벤처기업부·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앞의 책, pp. 24-27.

을 선언하였으며, 2020년 개최된 WEF에서 이해관계자를 고려한 기업경영 및 자본주의에 대해 논의가 이루어지면서 ESG 개념이 더욱 주목받게 된 것이다.¹⁵⁾ 여기에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인 블랙록의 래리 핑크 회장의 연이은 연례 서한 발표가 있는 후로 ESG 확산은 더욱 촉발되었다. 2020년 서한에서는 “앞으로 기업의 지속가능성을 투자 결정의 기준으로 삼겠다”고 천명하였으며¹⁶⁾, 2021년에는 기업에게 “2050년 넷제로 달성 목표에 부합하는 사업계획을 공개할 것을 요구”하였다.¹⁷⁾ 그 외 글로벌 자산운용사들도 마찬가지로 ESG 이슈를 고려하지 않거나 탄소배출을 많이 하는 기업에는 더 이상 투자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는 그동안 투자자가 주주 중심 경영을 강조해왔던 것에서 이제는 이해관계자 중심 경영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전환된 것을 보여주고 있으며, 기업이 ‘얼마나’ 벌었는가보다는 ‘어떻게’ 벌었는지를 기업평가 기준에서 중요하게 고려하겠다는 의미로 볼 수 있다.¹⁸⁾

2) 기업 경영전략의 변화

최근 기업들은 자사의 경영전략으로 ESG를 도입하고, 이를 내재화하기 위해 전담조직을 신설하는 등 ESG 경영을 강화하기 위해 재정비에 나섰다. 위에서 설명한 것처럼, ESG는 최근에 새로 도입된 것이 아니라 과거 유사개념에서 발전된 개념이고, 기업은 이전부터 유사개념을 기업경영에 접목해왔다. 아래에서는 ESG의 유사개념으로 언급되고 있는 경영전략인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 공유가치창출(CSV), 기업시민의 개념을 등장시기에 따라 순서대로 살펴보기로 하자.

15) 월간 인재경영(2021.11.24.)(검색일: 2023.4.23.)

16) KDI 경제정보센터 홈페이지(2021.7.)(검색일: 2023.4.23.)

17) IMPACT ON(2021.1.28.)(검색일: 2023.4.23.)

18) 손예령(2022), pp. 130-131.

먼저,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부터 살펴보겠다. CSR은 한 번은 들어봤을 만큼 사람들에게 익숙한 용어이고, 최근 회자되고 있는 CSV, ESG, 지속가능성 등 개념의 원조라고 할 수 있다. 1953년 미국의 경제학자 리처드 보언이 처음으로 제시한 CSR은 말 그대로 기업이 사회적으로 책임져야 하는 일로서 기업의 원칙이나 신념, 일종의 경영철학이라고 볼 수 있다.¹⁹⁾ 즉, 기업이 자사의 이익과 더불어 사회 전체의 이익을 위해 책임 있는 경영 활동을 하고, 궁극적으로는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데 의미를 두고 있다. 여기에는 우리 사회가 기업에게 기대하는 법적, 경제적, 윤리적인 측면이 모두 포함되어 있는데, 예를 들면 기업의 윤리적 가치, 기업 활동의 투명성, 종업원 간의 관계, 준법 경영, 지역사회 또는 국제사회에서의 봉사활동 등이 해당된다.²⁰⁾ 리처드 보언은 기업이 자사의 재원을 활용하여 사회에 적극 공헌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나, 당시 밀턴 프리드먼의 ‘기업의 사회적 책임은 이익 극대화’라는 주장이 팽배했던 시기라 기업들은 선택적으로 CSR을 기업의 경영철학에 적용하는 분위기였다. 하지만 21세기에 들어서면서 국제기구는 글로벌 대기업에 윤리경영과 사회적 책임을 다할 것을 요구하기 시작하였고,²¹⁾ 이때부터 CSR은 기업 사이에서 유행처럼 번져 CSR 도입이 마치 필수인 것처럼 사회적 분위기가 형성되었다. 그러나 CSR은 기업이 일방적으로 사회에 무언가를 베푼다는 인상이 강하며, 우리 사회의 문제 해결에 있어서는 실질적인 기여를 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었다.²²⁾

이러한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공유가치창출(CSV) 개념이 등장하였다. 이 개념은 미국 하버드 비즈니스 스쿨의 마이클 포터와 비영리 컨설팅업체인 FSG의 공동창업자 마크 크레이머가 2006년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에서 “전략과 사회: 경쟁 우위와 CSR 간의 연결”이라는 기사를 통해 처음으

19) 이명신의 명신보감(2022.5.23.)(검색일: 2023.4.24.)

20) 중앙일보(2015.9.2.)(검색일: 2023.4.24.)

21) 매일경제(2021.7.9.)(검색일: 2023.4.13.)

22) 브런치스토리(2022.1.27.)(검색일: 2023.4.24.)

로 제시하였다.²³⁾ CSV는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이며, 기업이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사회적 가치와 경제적 가치를 동시에 추구하고 공동의 가치를 도모하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 이는 기업이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NGO에 기부금을 전달하는 자선 활동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직접 사회문제를 찾아서 해결하려는 움직임이라는 점이 앞서 언급한 CSR과 다른 점이다.²⁴⁾

다음으로, 2015년 UN 총회에서 채택한 지속가능발전목표(SDGs)는 전 세계가 직면한 다양한 문제를 공동으로 대응하고 인류의 행복과 번영을 위해 국제사회가 2030년까지 달성하기로 합의한 공동의 목표다. SDGs는 인간, 지구, 번영, 평화, 파트너십 다섯 개 영역에서 17개의 목표(Goal)와 169개의 세부목표(Target)를 제시하고 있다.²⁵⁾ 특히 SDGs는 ESG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유사개념으로 볼 수 있는데, 그 이유는 투자자가 기업을 평가할 때 적용하는 기준으로 활용된다는 점, 그리고 ESG 기준으로 분류가 가능하다는 특징이 있기 때문이다. 지속가능발전목표 12번부터 15번은 ESG 중에서 환경(E) 분야로 구분할 수 있고, 1번부터 11번까지는 사회(S) 분야, 16번과 17번은 지배구조(G) 분야로 볼 수 있다.²⁶⁾ 기업의 ESG 경영 추진 과정을 진단하는 방법 중 하나로, 기업의 목표가 SDGs의 세부목표와 연계성을 가지는지 여부로 판단할 수 있어서, 기업은 오히려 SDGs 달성을 위한 과정에서 ESG를 수단으로 삼기도 한다. 그러한 측면으로 본다면, ESG 경영을 도입한 기업은 관련 사업을 발굴할 때, 17개의 지속가능발전목표를 참고한다면 다양한 방안을 찾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²⁷⁾

23) 변영조·우승환(2022), p. 195.

24) 브런치스토리(2022.1.27.)(검색일: 2023.4.24.)

25) 지속가능발전포털 홈페이지(검색일: 2023.4.24.)

26) 브런치스토리(2022.1.27.)(검색일: 2023.4.24.)

27) KDI 경제정보센터 홈페이지(2022.10.)(검색일: 2023.4.13.)

〈그림 2-1〉 지속가능발전목표(UN SDGs)



자료: (사)경상북도지속가능발전협의회(검색일: 2023.4.24.)

마지막으로 기업시민(Corporate Citizenship)은 1957년 윌리엄 고셋(William Gossett)이 펴낸 「기업시민(Corporate Citizenship)」이란 책에서 처음 언급되었다. 기업시민은 ESG, 사회적 가치, 지속가능경영 등을 아우르는 개념이며, 기업의 이윤을 추구하는 경제 주체로서의 역할은 물론이고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역할과 책임을 다하는 기업 즉, ‘시민처럼 생각하고 행동하는 기업’을 의미한다. 이 개념은 1990년대 말부터 주요 글로벌 기업들이 자사의 비전이나 미션 등 경영이념에 사용하기 시작하면서 알려지게 되었다. 초기에는 기업시민의 활동이 CSR에 집중되어 있었으나, 최근에는 환경보존, 탄소중립 분야로도 확대되어 ESG는 기업시민을 실천하는 수단으로 볼 수 있다.²⁸⁾

28) 손예령, 앞의 책, p. 13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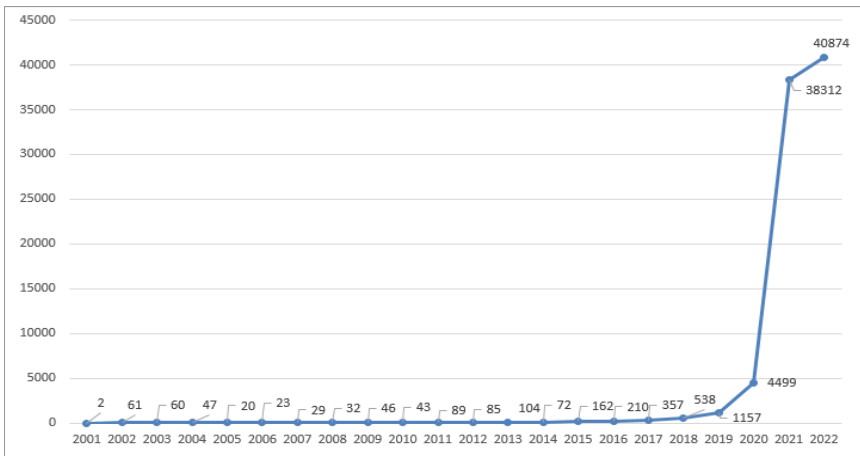
2. ESG 주요 동향

1) 언론·학술연구 분야

우리 사회는 언제부터 ESG에 주목하기 시작했을까? 이를 파악하기 위해 국내 뉴스 빅데이터 분석시스템인 빅카인즈(BIG KINDS)를 통해 ESG가 언론에 언급된 빈도를 확인해 보았다. 2001년부터 2022년까지 게재된 기사 중에서 'ESG'를 키워드로 검색한 결과, 2001년에 처음으로 ESG가 두 번 언급되었고, 이후 2013년에는 100번, 2019년에는 1,157번이나 등장했다. 특히, 2021년은 ESG가 전 세계적인 화두가 되고, 우리 정부도 ESG 경영 확산의 원년으로 선포한 해인만큼 3만 8,312번이나 등장해 이전과는 다른 폭발적인 증가세를 보였다.²⁹⁾

〈그림 2-2〉 연도별 ESG 관련 기사 빈도

단위: 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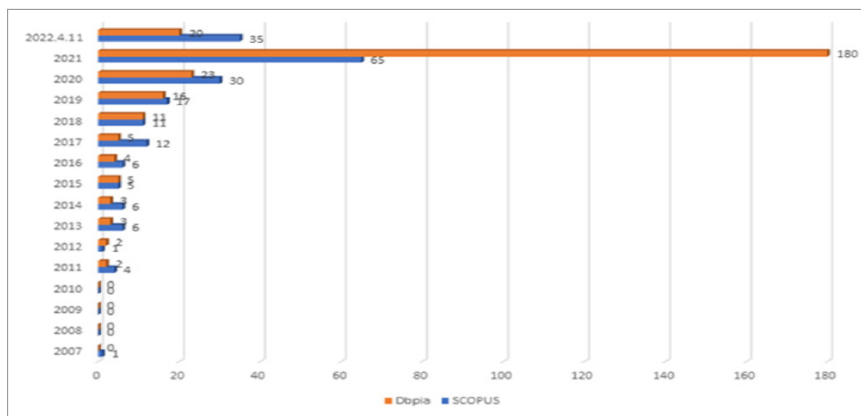
주: 2001년부터 2022년까지 키워드 'ESG'를 검색한 결과의 자료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자료: 빅카인즈 홈페이지(검색일: 2023.4.24.)의 자료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29) 빅카인즈 홈페이지(검색일: 2023.4.24.)의 자료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언론 분야뿐만 아니라, 학술연구 분야에서도 최근 ESG에 주목하기 시작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변영조·우승한(2022)은 기업의 ESG 경영을 주제로 다룬 국내의 논문을 조사했는데, 2021년부터 논문 수가 급증한 것을 알 수 있었다. 저자는 해외저널 SCOPUS의 DB에서 'ESG, Environment, Social, Governance'를 키워드로 검색하여, 2022년 4월을 기준으로 과거부터 발표된 해외논문 수를 파악하였다. 그 결과, 2007년에 1편, 2016년에는 6편, 2019년에는 17편, 2021년에는 65편이 게재되었다. 2007년 ESG 관련 해외논문이 처음 발표된 이후로 약 15년 동안 총 199편이 등재되었고, 이중 대다수는 2021년에 발표되었다. 국내논문은 DBpia의 DB에서 'ESG, ESG경영'을 키워드로 검색해 조사했는데, 2011년 논문 2편이 게재된 것을 시작으로 2022년 4월까지 총 274편의 논문이 검색되었으며, 2021년에만 180편이 출판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처럼 국내외 학계 역시 2021년부터 ESG를 매우 중요한 주제로 주목하고 있었다.³⁰⁾

〈그림 2-3〉 ESG 관련 국내외 논문 발표 수(2007~2022.4)



자료: 변영조·우승한(2022), p. 196.

30) 변영조·우승한, 앞의 책, p. 196.

2) 공공 제도 분야

지난 10여 년간, 전 세계 각 국가는 ESG 관련하여 규정을 마련해 왔다. 2013년에는 36개의 규정이 만들어졌고, 2020년에는 206개가 새로 도입되는 등³¹⁾, 전반적으로 ESG가 제도화되는 분위기이다. 2020년에 ESG 정보공개제도를 도입한 국가는 84개국에 이르렀고, ESG경영 도입을 선언한 글로벌 주요 대기업은 지속가능보고서를 발간하기 시작하였다.

국제사회 차원에서는 국제재무보고기준(IFRS) 재단이 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ISSB: International Sustainability Standards Board)를 설립했으며, ESG 공시기준 국제 표준화 작업을 진행 중으로, 2023년 6월에 최종기준을 공표하기로 했다. EU와 미국 등 주요 국가도 ESG 공시 의무화를 추진하고 공시기준을 제정해 나가는 등 ESG 공시 규율을 강화하는 추세이다.

한편, 우리나라는 현재 기업의 지속가능경영보고서 공시를 자율로 하고 있으나, 2030년부터는 모든 코스피 상장기업이 의무적으로 공시해야 한다.³²⁾ 유럽연합은 ESG 공급망 실사 제도 도입을 준비 중인데, 제도가 시행되면 글로벌 기업뿐만 아니라 국내 대기업도 협력사의 ESG 리스크를 적극 관리하고 평가해야 하는 부담을 갖게 된다. 이에, 우리 정부는 K-ESG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관련 컨설팅을 통해 국내 기업이 EU의 ESG 공급망 실사에 잘 대응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³³⁾

31) 김도관 외(2022), p. 5.

32) 금융위원회 보도자료(2022.12.15.)(검색일: 2023.4.24.)

33) 산업통상자원부 보도자료(2022.12.7.)(검색일: 2023.4.24.)

3) 금융투자 분야

금융투자 분야에서는 ESG를 고려한 책임투자 규모가 계속해서 늘고 있다. 세계지속가능투자연합(GSIA: Global Sustainable Investment Alliance)은 전 세계의 ESG 투자 규모가 2016년 22.8조 달러에서 2018년 30.7조 달러로 꾸준히 증가한 것을 보여주었다. 2020년 투자 금액은 35조 3,010억 달러로 더 증가했는데, 국가별로 보면 미국은 17조 810억 달러(48.4%), 유럽은 12조 170억 달러(34%)로 이 국가들이 ESG 투자에 적극 앞장서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³⁴⁾ 이 추세가 지속된다면 앞으로 2030년에 전 세계 ESG 투자 자산 규모는 130조 달러에 달할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³⁵⁾

국내에서는 국민연금, 사학연금, 공무원연금 등 3대 연금기금이 책임투자를 확대해 나가고 있다. 이들의 ESG 투자 규모는 2020년 102.6조 원에서 2021년 138.3조 원으로 35% 증가했으며, 이 중 국민연금의 투자 비율이 94%로 가장 많았다. 펀드시장에도 ESG 펀드가 운용되고 있다. 2020년 하반기부터 펀드 규모가 크게 증가하기 시작했으며, 2021년에는 56개가 추가되었고, 2022년 6월 말 기준으로 총 127개가 운용되었다. 녹색채권은 2020년 9,600억 원이 발행되었고, 2021년에는 12.5조 원으로 크게 증가했으나 2022년에는 5.9조 원으로 다시 감소하였다. 녹색채권 발행기관은 2022년 12월 환경부가 발표한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가이드라인(K-Taxonomy)을 참고하여 친환경 프로젝트를 선정할 수 있게 되었다. 이를 통해 기업의 그린워싱(Green washing)에 대한 투자자들의 우려가 완화되고, 녹색채권 발행기관과 투자자의 시장 참여는 더욱 활발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³⁶⁾

34) 서스틴베스트(2023), p. 2.

35) 이코노미스트(2021.8.22.)<검색일: 2023.4.24.>

36) 서스틴베스트(2023), pp. 4-6.

제2절 국내 ESG 정책 현황

ESG 개념은 앞의 제1절에서 다룬 바와 같이, 광의적으로 해석하면 현재의 ESG 라고 명명하기 전 과거부터 존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렇듯 우리 정부 정책 중에도 이미 ESG와 관련 있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³⁷⁾ 예를 들어, 정부가 2020년 7월에 발표한 저탄소(E), 포용(S), 공정(G)에 기반하여 경제 대전환을 추진하는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 그리고 같은 해 12월에 발표한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 등이 대표적이다.³⁸⁾ 그렇다면 언제부터 국내 기업의 ESG 경영 도입 및 이행을 지원하기 위한 ESG 정책이 마련되기 시작한 것일까? 2020년 초, 세계 최대의 자산운용사인 블랙록의 래리 핑크 회장은 투자를 결정할 때 기업의 환경 지속가능성을 목표로 삼겠다고 선언하였으며, 이 시점 이후로 글로벌 기업뿐만 아니라 국내 기업 사이에서도 ESG 열풍이 불기 시작했다. 이에, 우리 정부는 2021년을 ESG 경영 확산의 원년으로 선포하고, 본격적으로 ESG 정책 수립에 나섰다.³⁹⁾

이하에서는 기획재정부 중심의 범부처 합동으로 수립한 국내 기업 ESG 경영 도입 및 이행 지원을 위한 정책 로드맵과, 이를 토대로 주요 중앙부처에서 발표한 ESG 정책을 분석하였다. 또한, 지방정부 차원에서의 지역 기업의 ESG 경영 지원 및 활성화를 위한 정책 현황도 살펴보았다.

37) 한상범·권세훈·임상균(2021), 앞의 책, p. 146.

38) 관계부처 합동(2021.8.26.)(검색일: 2023.4.24.)

39) 대한민국 정책브리핑(2021.3.31.)(검색일: 2023.3.31.)

1. 기획재정부

1) ESG 정책 인프라 제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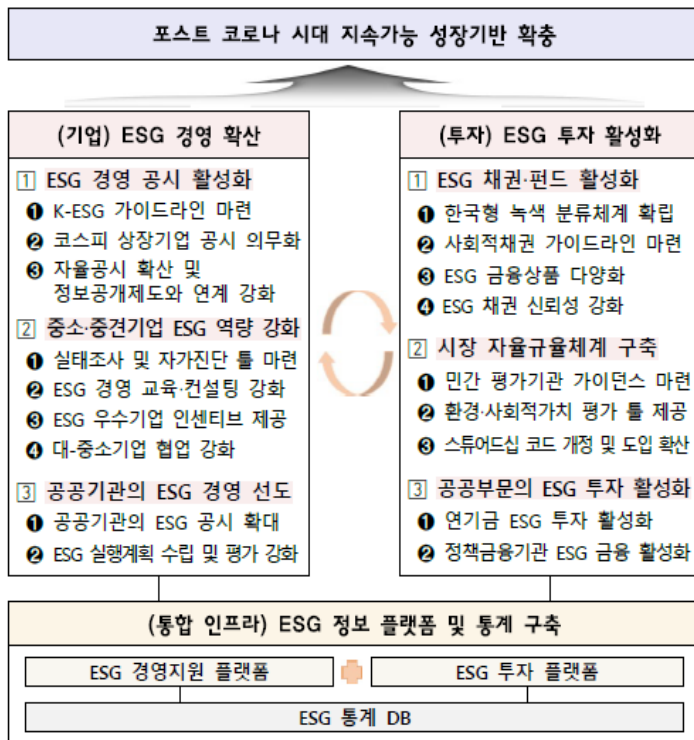
정부의 ESG 정책 기본방향이 설정되기 전에는 각 부처별로 해당 분야에서 추진할 수 있는 ESG 정책을 각각 발표했다. 이로 인해, 정책 간의 연계가 미흡한 것은 물론이고 ESG에 대한 정보도 산재될 수밖에 없었다. 이 정책의 대상이 되는 국내 기업은 ESG 관련 규제 강화 조치가 도입되는 것을 우려했는데, 이에 대해 우리 정부는 국가 ESG 정책의 기본방향은 규제가 아닌 지원이라는 점을 명확하게 밝혔다. 이에 따라, 2021년 8월 기획재정부가 중심이 되어 관계부처 합동으로 「친환경(E)·포용(S)·공정(G) 경제로의 대전환을 위한 ESG 인프라 확충 방안」을 공식 발표하였다. 이 계획은 2030년까지 추진할 ESG 중기 정책 로드맵이고, 각 부처는 이를 기반으로 하여 제도 정비에 나섰다.⁴⁰⁾

이 로드맵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지속가능성장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큰 틀에서 ESG 경영을 확산하고 투자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하고 있다. 대상은 국내 민간기업, 중소·중견기업, 공공기관이며, ① ESG 경영 확산, ② ESG 투자 활성화, ③ ESG 정보 플랫폼 및 통계 구축 등 세 가지 부문에서 추진할 과제가 담겨있다. 첫째, ESG 경영 확산을 위한 중점 과제로는 K-ESG 가이드라인 마련, 코스피 상장기업 대상으로 공시 의무화, 중소·중견기업에 교육 및 컨설팅 제공, 대·중소기업 협업 강화, 공공기관의 ESG 공시 확대, ESG 실행계획 수립 및 평가 강화 지원이 해당된다. 둘째, ESG 투자 활성화 부문에는 한국형 녹색분류체계(K-Taxonomy) 마련, 민간 평가기관의 가이던스, 환경·사회적 가치 평가 틀 제공, 정책금융기관과 연기금 등 공공부문의 ESG 투

40) 대한민국 정책브리핑(2021.3.31.)(검색일: 2023.3.31.)

자 활성화 지원이 포함되어 있다. 셋째, ESG 경영 및 투자 플랫폼 구축 부문은 시장 참여자에게 ESG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ESG 통계 DB를 구축하여 국내 기업별 ESG 대응 수준 진단을 지원하기 위함이다. 특히, ESG 공시 및 투자 활성화를 위해 정부에서 가이드라인을 제공할 계획이고, 평가와 관련해서는 정부의 개입을 최소화하여 민간부문 중심으로 ESG 생태계가 조성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또한, ESG 확산을 촉진하기 위해 인프라 구축과 인센티브 설계 등에 집중하고, ESG를 공공부문으로 확산하는 것을 지원한다.⁴¹⁾

〈그림 2-4〉 「ESG 인프라 확충 방안」 기본 추진방향 및 추진과제



자료: 법률신문(2021.11.11.)(검색일: 2023.3.20.)

41) 관계부처 합동(2021.8.26.)(검색일: 2023.4.24.)

2) ESG 정책 인프라 고도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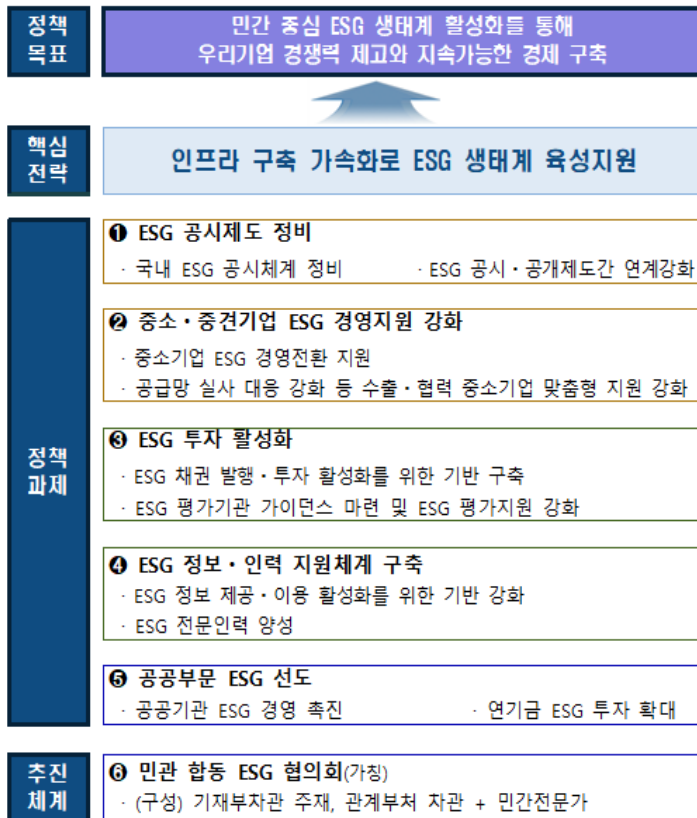
앞에서 기술한 ‘ESG 인프라 확충방안’이 발표된 이후, 국제사회의 분위기는 더욱 빠르게 변화하였다. 2022년 4월, 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가 ESG 공시 글로벌 표준안을 발표하였고, 2023년 4월에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서 자국 내 기업과 상장사에 적용되는 기후공시 규칙을 최종 발표하기로 하였다.⁴²⁾ 또한, 유럽연합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공급망 ESG 실사법 도입 등으로 글로벌 ESG 제도화 움직임이 가속화되었다. 이에, 정부는 우리 기업의 신속한 ESG 대응과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기 위해 기존의 추진전략을 보다 구체화하여 2022년 12월 「ESG 인프라 고도화 방안」을 발표하였다.

이 고도화 방안의 정책목표는 민간영역을 중심으로 ESG 생태계를 활성화하여 우리 기업의 경쟁력을 제고 하고, 지속가능한 경제를 구축하는 것이다. 그리고 관련 정책은 6개 부문으로 세분화되었으며, 부문별 주요 정책 과제와 방향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국제기준과 국내산업 여건 등을 고려하여 국내 ESG 공시제도를 정비하고, 부처별 정보공개제도 간 중복된 항목은 명칭을 통일시키는 등 연계해서 기업의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지원한다. ② 중소·중견기업의 ESG경영 확산을 위해 교육과 컨설팅을 확대 제공하는 등 인센티브를 강화하고, 수출기업과 글로벌 기업의 협력기업에는 EU 공급망 실사에 대비할 수 있도록 맞춤형 지원을 추진한다. 셋째, 민간의 ESG 채권과 투자 활성화를 위해 기존 K-Taxonomy를 개정하여 녹색채권 가이드라인에 반영하고, 사회적 채권 가이드라인도 마련한다. 또한 ESG 평가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 정보공개, 내부통제 등 최소한의 자율준수 기준으로 ESG 평가기관 가이드선도 제공한다. 넷째, ESG 정보플랫폼을 구축해 산재되어 있는 ESG 관련 정보를 통합 제공하고, 민간

42) IMPACT ON(2023.1.16.)(검색일: 2023.4.21.)

부문으로 ESG를 확산하기 위해 전문인력을 양성한다. 다섯째, 공공기관과 연기금 등 공공부문에서 ESG 경영과 투자를 선도해 민간부문까지 자발적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유도한다. 마지막으로, 정부와 민간의 소통 창구로서 민관합동 컨트롤타워 성격의 ESG 협의회를 설치하여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ESG 인프라 고도화 방안 추진성과 점검을 통한 ESG 정책을 추진한다.⁴³⁾

〈그림 2-5〉 「ESG 인프라 고도화 방안」 정책추진 기본방향



자료: 관계부처 합동(2022.12.27.)(검색일: 2023.4.24.), p. 7.

43) 기획재정부 보도자료(2022.12.28.)(검색일: 2023.4.21.)

2. 환경부

1)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시행

택소노미(Taxonomy)는 그리스어 '분류하다(taxis)'와 '법, 과학(nomos)'의 합성어인 분류체계를 의미하며,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경제활동을 정의하고 판별하는 수단이다. 이전에는 기업의 재무정보로 기업을 평가하는 게 일반적이었으나, 이제는 투자자가 투자를 결정할 때 지속가능경영 등 비재무적인 요소가 중요해지자 택소노미가 등장하였다. 전 세계 최초의 녹색활동(Green Activities)을 규정하는 환경분야의 투자 지침은 2021년 6월 유럽연합이 발표한 EU 그린 택소노미다,⁴⁴⁾ 뒤이어 한국, 러시아, 남아프리카공화국 등도 자국의 녹색분류체계 기준을 제시하였다.

우리나라는 2021년 12월 환경부에서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에 근거하여 한국형 녹색분류체계(K-Taxonomy)를 마련하고, 이에 대한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가이드라인’을 발표해,⁴⁵⁾ 2023년 1월 1일부터 전면 시행하였다.⁴⁶⁾ 한국형 녹색분류체계의 개념은 온실가스 감축, 기후변화 적응, 물의 지속가능한 보전, 순환경제로의 전환, 오염 방지 및 관리, 생물다양성 보전 등 6대 환경목표에 기여하는 녹색경제활동을 분류한 것이다.

이 가이드라인은 ‘친환경’ 경제활동에 해당하는 세 가지 원칙으로, 6대 환경목표 중 하나 이상을 달성하는 데 기여해야 하며, 환경목표를 달성하는 과정에서 다른 환경목표에 심각한 피해를 주어서는 안 되고, 노동, 인권, 안전, 반부패, 문화재 파괴 등 최소한의 사회적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고 정의하였다.⁴⁷⁾ 이 기준에 따라 선정된 경제활동은 총 74개인데, 이중

44) 국민권익위원회(2022), p. 2.

45) 환경부(2022), p. 7.

46) 환경부(2022.12.27.)(검색일: 2023.4.21.)

47) 환경부(2022), p. 10.

67개 활동은 탄소중립과 환경개선에 기여하는 녹색부문에 해당되고, 그 외 7개 활동은 진정한 녹색경제활동은 아니지만 탄소중립으로 전환을 위한 과도기적 성격을 가지고 있어 한시적으로 인정해 주는 항목이다.⁴⁸⁾

〈표 2-4〉 녹색경제활동 목록

구분	부문	분야	경제활동
녹색 부문	공통	산업(2)	• 혁신품목 제조 • 혁신품목 소재·부품·장비 제조
		연구개발(1)	• 연구·개발·실증
	온실가스 감축	산업(6)	• 온실가스 감축 핵심기술 활용을 위한 제조 • 온실가스 감축 핵심기술 활용을 위한 소재·부품·장비 제조 • 배출원단위가 상대적으로 낮은 철강 제조 • 배출원단위가 상대적으로 낮은 시멘트 제조 • 배출원단위가 상대적으로 낮은 유기화학물질 제조 • 온실가스 감축 설비 구축·운영
		발전·에너지(19)	• 재생에너지 생산: 태양광, 태양열, 풍력, 수력, 해양에너지, 지열에너지, 수열에너지 • 재생에너지 생산: 바이오매스 • 재생에너지 생산: 바이오가스 • 재생에너지 생산: 바이오중유 • 수소·암모니아 기반 에너지 생산 • 혼합가스 기반 에너지 생산 • 폐열·냉열·감압(폐압) 기반 에너지 생산 • 바이오매스 제조 • 바이오가스 제조 • 바이오에탄올·바이오디젤·바이오중유 제조 • 수소 제조 • 암모니아 제조 • 전기 에너지 저장·전환 • 열에너지 저장

48) 환경부(2022.12.27.)(검색일: 2023.4.21.)

구분	부문	분야	경제활동
			• 수소·암모니아 에너지 저장 • 재생에너지 관련 송배전 인프라 구축·운영 • 바이오가스·수소·암모니아 이송 인프라 구축·개조·운영 • 폐열·냉열 공급 인프라 구축·개조·운영 • ICT 기반 에너지 관리 솔루션 개발 및 시스템 구축·운영
		수송(3)	• 무공해 차량·철도차량·건설기계·농업기계·선박·항공기·자전거 제조 • 무공해 차량·철도차량·건설기계·농업기계·선박·항공기·자전거 도입 • 무공해 운송 인프라 구축·운영
		도시·건물(4)	• 제로에너지 특화 도시 개발·운영 • 제로에너지 건축물 또는 녹색건축물 신규 건설·리모델링 및 취득 • 건축물 관련 온실가스 감축 설비·인프라 구축·운영 • 저탄소 인터넷 데이터 센터 구축·운영
		농업(2)	• 저탄소 농업 • 저탄소 사료 및 대체가공식품 제조
		이산화탄소 포집(4)	• 배출되는 이산화탄소 포집 • 이산화탄소 운송 네트워크 인프라 구축·운영 • 포집된 이산화탄소 처리 및 영구격리 • 바이오차(Biochar) 제조 및 토양 살포
	기후변화 적응	기후변화 적응(5)	• 기후변화 적응 핵심기술 활용을 위한 소재·부품·장비 제조 • 재난 방지 및 기후 예측시설·시스템 구축·운영 • 기후변화 적응 관련 조사·연구 • 기후변화 적응 관련 교육·문화·예술 활동 • 공정한 노동전환 지원
	물의 지속가능한 보전	물(7)	• 하·폐수 관리 • 저영향 개발(LID) • 물 공급 • 대체 수자원 활용 • 물 수요 관리 • 물 재이용 • 지하수 정화

구분	부문	분야	경제활동
	순환경제로의 전환	자원순환 (5)	- 폐기물 발생 억제 - 폐기물 수거·회수·선별·분리 - 폐기물 재활용(재사용·재제조·재생이용)·재활용 - 폐기물 열분해 - 폐기물 에너지 회수
		메탄가스 활용(2)	- 혐기성 소화의 메탄가스 포집 및 처리·활용 - 매립가스 포집 및 처리·활용
	오염 방지 및 관리	대기오염 방지 및 처리(2)	- 대기오염 방지 및 처리 - 악취 방지 및 저감
		해양오염 방지 및 처리(1)	해양오염 방지 및 처리
	생물다양성 보전	생물다양성 (4)	- 육상 및 해양생태계 보호·복원 - 산림 생태계 복원 - 도시 내 탄소흡수원 조성 - 생물종 보호·보전
	전환 부문	산업(1)	중소기업 사업장 온실가스 감축
		발전·에너지(4)	- 액화천연가스(LNG) 및 혼합가스 기반 에너지 생산 - 원자력 기반 에너지 생산(신규건설) - 원자력 기반 에너지 생산(계속운전) - 액화천연가스(LNG) 기반 수소(블루수소) 제조
		수송(2)	- 친환경 선박 건조 - 친환경 선박 도입

자료: 환경부(2022), pp. 20~27.

비록 이 가이드라인은 법적 구속력이 없지만 이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 되면 친환경 산업으로 더 많은 투자를 유치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환경부는 그린워싱 기업은 걸러내고 녹색경제활동을 하는 기업들이 더 많은 자금을 조달받아 경영활동을 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제도, 인증 등 인센티브 성격의 정책을 마련 중이다.⁴⁹⁾

49) 환경부(2022.12.27.)(검색일: 2023.4.21.)

2) 환경분야 ESG 지원사업 추진⁵⁰⁾

환경부는 국내 기업의 환경분야 ESG 경영을 재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2022년부터 컨설팅, 자금지원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⁵¹⁾

이 사업은 직접지원과 융자지원으로 나뉘는데, 직접지원 사업은 친환경 경영(ESG) 컨설팅, 스마트 생태공장 구축지원, 상생협력 실증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다. 먼저, ‘친환경경영(ESG) 컨설팅 사업’은 수출 비중이 높은 주요 공급망 중소·중견기업 100여 곳을 선정해, 이들의 현재 환경경영 수준과 환경 배출 현황을 진단하고, 목표를 수립하는 데 자문을 제공한다. 둘째, ‘스마트 생태공장 구축사업’은 저탄소·친환경 설비 교체 및 기술 적용으로 제조공장의 환경개선을 돕기 위해 총 90여 곳의 기업에게 각각 최대 10억 원 규모의 예산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만약, 친환경경영 컨설팅 사업에 선정된 기업이 이 사업에도 신청할 경우 가점을 받는다. 셋째, ‘상생협력 실증 프로그램 사업’은 녹색혁신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과 이러한 기술에 수요가 있는 기업을 매칭해 주고 실증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은 2023년에 신규로 추가되었으며, 총 13개의 기업을 선정해 지원한다. 2023년 직접지원사업의 총예산은 1,067억 원으로 2022년 대비 70%(438억 원) 증가했고, 이중에서도 ‘스마트 생태공장 구축지원’ 사업 예산은 전년보다 303억 원 대폭 늘었다.

다음으로, 융자지원 사업에는 친환경 설비 투자, 녹색정책금융 활성화, 미래환경산업육성 융자 사업이 있다. ‘친환경 설비 투자’는 국내외 사업장을 두고 있는 중소·중견기업에게 온실가스 감축, 순환경제 설비 시설 및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낮은 금리로 장기간 빌려주는 사업이다. 다음으로 ‘녹색정책금융 활성화’는 온실가스 배출량이 많은 할당대상업체 또는 목표관

50) 환경부(2023), p. 2.

51) 지원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환경부(2023) 참고

리업체가 기업 규모와 관계없이 온실가스 감축과 순환경제 설비 도입 등에 필요한 예산을 저금리로 빌릴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마지막으로, ‘미래환경산업육성 융자 사업’은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하며, 사업장의 녹색전환에 필요한 자금을 장기간 저리로 융자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올해 융자지원 사업의 총예산은 600억 원으로 작년보다 37% 증가했으며, 특히, ‘친환경 설비 투자’ 사업 예산이 두 배로 늘었다.

〈표 2-5〉 환경부의 2023년 환경 분야 ESG 지원사업

단위: 원

구분	사업명	주요 내용	'23 예산	비고
직접 지원	친환경경영 (ESG) 컨설팅 지원사업	• 수출 비중이 높은 주요 공급망 중소·중견기업 • 환경경영 수준 진단, 환경배출 현황 진단 목표 수립 컨설팅 진행 등	22.5억	전년 동
	스마트 생태 공장*	• 중소·중견기업(최대 10억, 중소 60%, 중견 50%) • 온실가스 감축을 포함한 종합 환경개선 지원	909억	'22년 대비 303억 증가
	상생협력 프로그램	• 모든 기업 가능(최대 10억, 중소 70%) • 수요기업의 환경개선에 혁신 녹색기술 적용 시 기술 공급 기업의 비용 보전	135억	신규 사업
	총 계		1,066.5억	-
융자 지원	친환경 설비 투자*	• 중소·중견기업(최소 1,000만~최대 100억) • 온실가스 감축 설비 시설·운영 비용 지원	1,000억	'22년 대비 500억 증가
	녹색정책금융 활성화	• 할당대상업체·목표관리업체 등(은행별 상이) • 온실가스 감축 공정·플랜트 등 시설·운영 비용	243억 (*융자금 3.5조)	'22년 대비 100억 증가
	미래환경 산업융자	• 중소·중견기업(최소 1,000만~최대 100억) • 기업의 녹색전환 자금 시설 비용)	1,000억	전년 동
	총 계		3조 7,243억	-

자료: 환경부 보도자료(2023.1.18.)(검색일: 2023.4.24.)의 자료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3) 다자간 민관협력 체계 구축

환경부는 국내 기업의 ESG 대응을 지원하거나, 환경분야의 문제 해결에 복수의 기업이 공동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하기 위하여 관련 기업 및 기관 간의 다자간 업무협약을 추진하는 사례가 있다.

먼저, 국내 중소·중견기업의 ESG 대응 지원을 위한 사례이다. 환경부는 코스닥 상장기업, 한국환경산업기술원과 함께 코스닥기업의 ESG 경영 지원을 위해 다자간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이에 따라, 환경부와 코스닥협회는 국내 기업의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전 세계 환경분야 시장에서 경쟁력이 높은 업종 및 기업을 우선 대상으로 하여 사업 컨설팅, 예산지원, 정보공개까지 전 단계를 지원하기로 하였다.⁵²⁾ 또 다른 예로, 국내 대기업 중에서 중소·중견기업을 협력사로 두고 있는 비율이 큰 삼성전자, LG전자, 현대차·기아차가 요청하여 환경부는 협약 기업, 한국환경산업기술원과 ‘상생협력 ESG경영 촉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이로써 협약에 참여한 기업은 환경경영과 관리에 상대적으로 취약한 협력사를 자체적으로 지원하는 것과 동시에 시급성과 희망 여부에 따라 지원이 필요한 협력사를 환경부에 추천하여 지원받을 수 있게 되었다.⁵³⁾

환경부는 산업별 복수의 기업과 공동으로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방식으로 추진하기도 하는데, 2021년 출범한 ‘녹색소비-ESG 얼라이언스’가 그 예다.⁵⁴⁾ 이 경우, 녹색소비 확산이라는 특정 목적을 가지고 환경부가 이와 연관 있는 기업 등에게 먼저 공동 협력을 제안했으며,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 및 기관들과 다자간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서로 유기적으로 협조할 수 있는 장을 마련했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52) 환경부 보도자료(2023.2.7.)(검색일: 2023.4.24.)

53) 환경부 보도자료(2023.2.20.)(검색일: 2023.4.24.)

54) 환경부 보도자료(2021.12.8.)(검색일: 2023.8.27.)

〈표 2-6〉 환경부-기업-한국환경산업기술원 간 업무협약의 주요 내용

구분	기본방향	환경부	코스닥협회/ 협약 참여기업	한국환경산업 기술원
코스닥 기업 ESG 경영 지원	코스닥 상장기업의 ESG경영 활성화를 통해 환경 관련 공급망 관리, 공시요구 등에 대응하고 이를 통해 수출 경쟁력 강화	코스닥기업 대상 ESG 지원 및 총괄	- 코스닥협회 회원사 대상 환경부의 ESG 지원사업 홍보 - 우수사례 발굴 등 ESG 지원사업 추진 협력	ESG 컨설팅 등 지원사업 지원
상생협력 ESG 경영 촉진	국내 수출기업의 ESG경영 활성화 및 환경 관련 공급망 관리, 공시요구 등에 대응하여 수출 경쟁력 강화	협약 당사자 간 상생 협력 체계 구축, 협약 참여기업과 협력을 통한 국내 중소·중견기업에 ESG 지원사업 총괄	상생협력 체계 참여, 협력사의 ESG 대응 지원, 환경부 지원사업 연계 등 ESG 지원사업 추진 협력	ESG 컨설팅 등 지원사업 지원

자료: 환경부 보도자료(2023.2.7.)(검색일: 2023.4.24.)의 자료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표 2-7〉 녹색소비-ESG 얼라이언스 참여기관 및 역할

구분	참여기관	역할
정부	환경부	생활밀착형 제품 홍보, 인증제품에 대한 혜택(인센티브) 확대, 인증 우수성 적극 홍보
환경표지 인증기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인증제품 현황을 협약 기업에 실시간 공유, 인증기업 지원사업 적극 발굴
소비자 단체	한국녹색구매네트워크, 녹색소비자연대 전국연합회, 소비자시민모임	인증제품 구매·판매 실적 등 시장분석을 통해 소비자들이 선호하는 생활밀착형 제품 발굴하여 얼라이언스에 제공
유통사	GS리테일, 네이버, 이마트, 홈플러스, 초록 마을, 쿠팡, 우체국쇼핑, 롯데하이마트, BGF 리테일, 롯데쇼핑(e커머스), 올가홀푸드	자사에서 유통·판매되는 인증제품에 대한 올바른 환경성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 녹색제품 판매 촉진 위한 노력
카드사	BC카드, 우리카드, 국민카드, 하나카드	환경표지 인증제품의 소비 활성화를 위해 구매 혜택(인센티브) 발굴 적극 노력
은행사	국민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농협은행	

자료: 환경부 보도자료(2021.12.8.)(검색일: 2023.8.27.)의 자료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4) 전담조직 및 온라인 플랫폼 운영

현재 환경부가 추진 중인 ESG 관련 업무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서 지원하고 있다. 환경부 장관은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0조의5(전담기관의 지정 등)에 근거하여 이 기관을 환경책임투자 지원업무 전담기관으로 지정하였다. 이에 따라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조직 내에 ESG인프라지원단을 설치하고, 환경부 추진 ESG 업무를 실무적으로 지원하고 있는데, 주로 녹색금융 교육·홍보, 녹색채권 활성화 및 지원, 중소·중견기업 ESG 컨설팅 지원, 녹색분류체계 적용 확대 등을 담당한다.

〈표 2-8〉 한국환경산업기술원 ESG인프라지원단 직무 내용

구분	직무 내용
ESG 경영지원실	• 환경정보공개시스템 운영 • 환경정보 등록 지원, 서류평가 및 현장확인 실시 • 환경정보공개제도 시상식 개최 및 제도 대국민 홍보 • 중소·중견기업 친환경경영(ESG) 컨설팅 지원 • 기업 환경성 평가 및 금융 우대 협력 • 녹색기업 지정제도 개선 및 운영지원 • 녹색기업 대상 시상식 개최 및 제도 홍보 • 환경책임투자 종합플랫폼 운영
녹색투자 지원실	• 녹색채권(이차보전 지원, 유동화증권 발행 지원) 활성화 및 지원 • 녹색분류체계 적용 확대(4대 환경목표 연구, 녹색분류체계 여신 적용 등) • 환경책임투자 제도 운영 • 녹색금융 교육 및 홍보 • 녹색금융 관련 국제협력
전과정 평가실	• 환경성적표지(저탄소제품) 관련 법령 및 규정 관리 • 환경성적표지(저탄소제품) 인증 및 제도 운영 • 환경성적표지(저탄소제품) 국제상호인정 등 국제협력 업무 • 제품 환경성적 산정방법 대상제품 선정 및 작성지침 개발 • 환경성적표지 작성지침(저탄소제품 기준) 고시 제·개정 • 국가 전과정목록 데이터베이스(LCI DB) 구축

구분	직무 내용
	• 국가 전과정목록 데이터베이스(LCI DB) 국제 플랫폼 등록 등 국제협력 업무 • 전과정평가 교육 및 확대, 환경성적 산정 및 온실가스 감축 지원사업 운영 • 환경성적표지 홈페이지, 인증심사프로그램(ezEPD), 국가 LCI DB 시스템 운영 • 환경성적표지(저탄소제품) 사후관리 및 환경성적표지 인증심사원 보수 교육 • 환경성적표지(저탄소제품) 홍보, 기업 교육·지원사업, 국내외 유관기관 협력

자료: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홈페이지(검색일: 2023.8.24.)의 자료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2022년 2월에는 환경책임투자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환경책임투자 종합플랫폼’ 온라인 서비스가 시작되었다. 이 플랫폼에는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환경성 평가체계, 환경정보공개제도 등 환경부가 추진 중인 환경책임투자 관련 주요 정책에 대한 정보가 수록되어 있다. 이용자들은 이에 대한 의견을 개진할 수 있으며, 환경부는 의견 수렴한 내용을 정책에 적극 반영하는 데 활용하고, 플랫폼의 내용과 기능도 고도화해 나갈 예정이다.⁵⁵⁾

〈그림 2-6〉 환경책임투자 종합플랫폼 구성도

환경책임투자	녹색 분류체계	녹색채권	환경정보공개제도	환경성평가
환경책임투자 소개	분류체계소개	녹색채권소개	정보공개 제도 소개	환경성평가 소개
환경책임투자필요성	적용대상	녹색채권 발행현황	기업 기관 환경정보	평가산식
국내정책추진방향	녹색채권 관리체계와의 관계	기여도 계산기	환경정보소개	평가현황
추진사업소개		해외 녹색채권 관련기준	기타자료	지원현황
		가이드라인	국내외환경정보 공개현황	
			알림/참여	
탄소감축실천	녹색금융시상식	환경경영	공지사항	국제협력네트워크
생활속 실천사례	시상식소개	환경기업컨설팅	동향뉴스	커뮤니티
정책방향 (K-RE100 등)	수상분야 및 기준	녹색기업	세미나/강연소식	관심메뉴
	수상기업 소개	환경경영트렌드	각종 보고서	

자료: 환경부 보도자료(2022.2.18.)(검색일: 2023.8.24.)

55) 환경부 보도자료(2022.2.18.)(검색일: 2023.8.24.)

3. 산업통상자원부

1) 한국형 K-ESG 가이드라인 발표⁵⁶⁾

산업통상자원부는 앞의 기획재정부 ESG 관련 정책으로 소개한 ‘ESG 인 프라 확충 방안’의 중점 추진과제로 포함되어 있는 ‘K-ESG 가이드라인’을 개발해 2021년 12월에 공개하였다. 현재 국내외 평가지표가 약 600개 이상 운용되고 있고, 글로벌 ESG 평가기관은 각기 고유의 기준과 방식으로 기업을 평가하고 있어, 정부 차원에서 국내 기업들의 ESG 평가 대응을 위한 지원 조치를 마련하게 되었다.

이 가이드라인은 DJSI, MSCI, EcoValids 등 국내외 주요 13개 평가기관에서 사용하는 항목별 평가지표와 공시기준 등을 분석해 공통 요소를 도출하고, 이에 대해 전문가, 기관 및 관계부처 등으로부터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수립되었다. 글로벌 기준에 부합하면서도 국내 상황에 적합한 ESG 지표가 제시되어 있으므로, 국내 기업, 중소·중견기업, 평가 및 검증기관, 투자기관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범용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기업의 경우, 자사의 ESG 경영 목표를 수립할 때 전반적으로 참고하고, ESG 평가기관은 ESG 평가 시 자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또한, 평가·검증기관의 니즈를 고려하여 추가로 포함된 대체 및 추가 진단항목도 참고 가능하다.

가이드라인에서 제시된 평가항목은 기존 ESG 요소에 정보공시(Public)를 더하여 4개 영역(P·E·S·G), 27개의 범주에 총 61개의 기본 진단항목으로 구분되어 있다. 그리고 각 항목에 대한 추가설명, 용어정리, 참고자료 등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다. 이 중 해양환경은 환경(E)과 사회(S) 영역과 관련이 있는데, 해당 내용은 제3장 제2절 ESG 관련 해양환경 분야 정책 현황에서 자세하게 다루었다.

56) 산업통상자원부 보도자료(2021.12.1.)(검색일: 2023.4.24.)

2022년 12월에는 ‘공급망 실사 대응을 위한 K-ESG 가이드라인’이 별도로 마련되었는데, 이는 수출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한 것이라, 기존 K-ESG 가이드라인이 국내 상장 대기업 중심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점에서 큰 차이가 있다.⁵⁷⁾ 앞으로 산업통상자원부는 급변하는 글로벌 ESG 동향을 반영해 매 1~2년마다 가이드라인 개정판을 발간하고, 기업의 업종 및 규모를 고려한 가이드라인도 마련할 계획이 있다. 그리고 이 가이드라인을 토대로 정부에서 직접 기업 ESG를 평가할 계획은 없다는 점을 확실하게 밝혔다.⁵⁸⁾

〈표 2-9〉 K-ESG 가이드라인 기본 진단항목 체계

영역	범주	진단항목
[P] 정보공시(5)	정보공시 형식	• ESG 정보공시 방식 • ESG 정보공시 주기 • ESG 정보공시 범위
	정보공시 내용	• ESG 핵심이슈 및 KPI
	정보공시 검증	• ESG 정보공시 검증
[E] 환경(17)	환경경영 목표	• 환경경영 목표 수립 • 환경경영 추진체계
	원부자재	• 원부자재 사용량 • 재생 원부자재 비율
	온실가스	• 온실가스 배출량 (Scope 1 & Scope 2) • 온실가스 배출량 (Scope 3) • 온실가스 배출량 검증
	에너지	• 에너지 사용량 • 재생에너지 사용 비율
	용수	• 용수 사용량 • 재사용 용수 비율

57) 산업통상자원부 보도자료(2022.12.7.)(검색일: 2023.4.24.)

58) 산업통상자원부 보도자료(2021.12.1.)(검색일: 2023.4.24.), p. 6.

영역	범주	진단항목
[E] 환경(17)	폐기물	• 폐기물 배출량 • 폐기물 재활용 비율
	오염물질	•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 수질오염물질 배출량
	환경 법/규제 위반	• 환경 법/규제 위반
	환경 라벨링	• 친환경 인증 제품 및 서비스 비율
[S] 사회(22)	목표	• 목표 수립 및 공시
	노동	• 신규 채용 및 고용 유지 • 정규직 비율 • 자발적 이직률 • 교육훈련비 • 복리후생비 • 결사의 자유 보장
	다양성 및 양성평등	• 여성 구성원 비율 • 여성 급여 비율(평균 급여액 대비) • 장애인 고용률
[S] 사회(22)	산업안전	• 안전보건 추진체계 • 산업재해율
	인권	• 인권정책 수립 • 인권 리스크 평가
	동반성장	• 협력사 ESG 경영 • 협력사 ESG 지원 • 협력사 ESG 협약사항
	지역사회	• 전략적 사회공헌 • 구성원 봉사참여
	정보보호	• 정보보호 시스템 구축 • 개인정보 침해 및 구제
	사회 법/규제 위반	• 사회 법/규제 위반
[G] 지배구조(17)	이사회 구성	• 이사회 내 ESG 안건 상정 • 사외이사 비율 • 대표이사 이사회 의장 분리 • 이사회 성별 다양성 • 사외이사 전문성

영역	범주	진단항목
[G] 지배구조(17)	이사회 활동	• 전체 이사 출석률 • 사내이사 출석률 • 이사회 산하 위원회 • 이사회 안건 처리
	주주권리	• 주주총회 소집 공고 • 주주총회 개최일 • 집중/전자/서면 투표제 • 배당정책 및 이행
[G] 지배구조(17)	윤리경영	• 윤리규범 위반사항 공시
	감사기구	• 내부감사부서 설치 • 감사기구 전문성(감사기구 내 회계/재무 전문가)
	지배구조 법/규제 위반	• 지배구조 법/규제 위반

자료: 관계부처 합동(2021), pp. 26-28.

2) 중소·중견기업 ESG 대응 지원사업 추진

2022년 2월, 유럽연합은 공급망 실사 지침 최종안을 발표하였다. 이에, 우리 정부는 국내 대기업, 중소·중견기업 모두 공급망 실사에 적기 대응할 수 있도록 서둘러 지원 조치를 취해나갔다. 먼저, 우리나라에 ESG 협력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대·중소기업 ESG 협력네트워크 포럼’을 출범하였다. 반도체·이차전지, 석유화학·정유, 자동차·조선·기계, 바이오·제약, 화장품·식품, 에너지산업 등 각 업종별로 주요 대기업의 공급망 실사와 관련된 평가항목 추세를 분석 및 제공하여 공동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대·중소기업의 ESG 협력기반을 조성하였다.⁵⁹⁾

같은 해 3월에는 경제단체 및 수출 관련 공공기관 등과 함께 수출 중소·중견기업의 ESG 지원 시범사업에 착수하였다. 미국, EU 등 주요 국가와 공급망 실사를 도입한 글로벌 기업의 중소·중견 협력사에게 모의평가와 공

59) 산업통상자원부 보도자료(2022.2.10.)(검색일: 2023.4.24.)

급망 컨설팅을 제공했으며, 우리 수출기업의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업종별 대응 가이드’도 마련하였다. 이 사업은 2023년부터 정식사업으로 추진되었다.⁶⁰⁾

8월에는 대기업과 공공기관 등이 보유한 미활용 기술을 중소·중견기업에 무상 이전하여 이들의 기술경쟁력을 높여주고, 혁신성장을 지원하며, 대·중소기업의 동반성장을 돕기 위해 ‘산업부-포스코 기술나눔’을 진행하였다. 이 기술나눔 사업에는 2013년부터 2022년까지 25개의 대기업과 공기업 등이 참여했으며, 1,154개의 중소·중견기업에게 총 2,577건의 기술을 이전하였다. 특히, 포스코 그룹은 기술나눔에서 무상으로 기술을 이전한 대표 기업 중 한 곳이다. 2017년부터 참여하여 2021년까지 기업 241곳에 564건의 기술을 이전해 주었는데, 2022년에는 무려 561건의 기술을 제공하였다. 이렇게 포스코 그룹으로부터 기술을 이전받은 중소기업들은 신제품을 개발하거나 기존 제품의 성능 개선, 공정효율 향상 등을 통해 매출 증가, 원가 절감 등의 성과를 내고 있다.⁶¹⁾

3) 전담조직 및 온라인 플랫폼 운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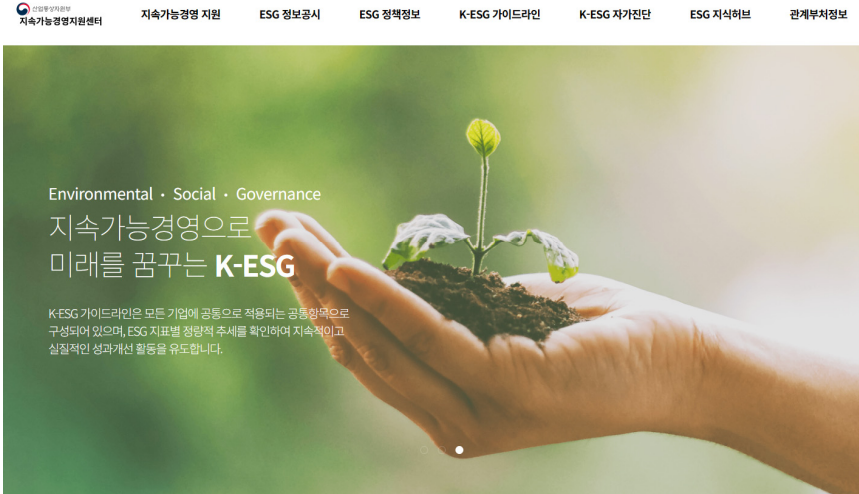
산업통상자원부는 「산업발전법」 제19조제5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2(지속가능경영 지원센터의 지정 등)에 따라 2019년 한국생산성본부(KPC)를 지속가능경영지원센터로 지정하였다. 이 센터는 온라인 플랫폼을 운영해 ESG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데, ESG 개념부터 산업부의 K-ESG 가이드라인에 대한 정보, 이를 활용한 자가진단 소개, 각종 ESG 관련 행사, 경영우수사례, 연구자료 등 홍보자료, 유관부처 및 지역자치단체에서 구성한 K-ESG 네트워크에 관한 정보 등을 확인할 수 있다.⁶²⁾

60) 산업통상자원부 보도자료(2022.3.30.)(검색일: 2023.4.24.)

61) 산업통상자원부 보도자료(2022.8.2.)(검색일: 2023.4.24.)

62) 산업통상자원부 지속가능경영지원센터 홈페이지(검색일: 2023.8.19.)

〈그림 2-7〉 산업통상자원부 지속가능경영지원센터 메인 화면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지속가능경영지원센터 홈페이지(검색일: 2023.8.19.)

4. 중소벤처기업부

1) 중소기업 ESG 지원 고도화 방안 발표

세계적인 흐름으로 보면, 대기업과 더불어 중소벤처기업에도 ESG 경영 도입을 점차 요구하는 분위기다. 그러나 대부분의 중소벤처기업은 비용, 인력, 시간 등 ESG 경영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여건이 충분하지 않은 편이라 부담이 클 수밖에 없다. 이에, 중소벤처기업부는 2021년 11월 규율보다는 지원 성격의 「중소기업 ESG 촉진방안」을 발표하였다. 이 계획은 중소기업이 느끼는 부담과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각도로 지원하고, ESG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전환하여 이들이 자발적이고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중소기업 ESG 인식제고, 생태계 조성, 거버넌스 구축 등 세 가지 부문에서 지원방안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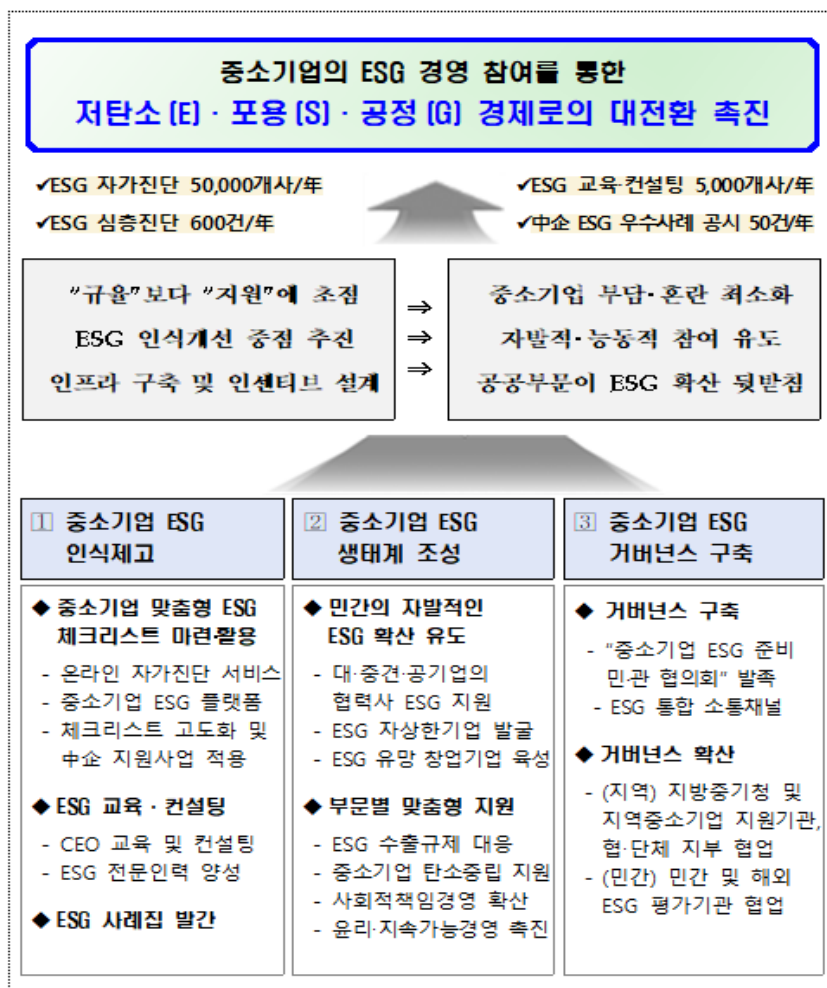
먼저, ESG에 대한 중소기업의 인식제고를 위해서는 K-ESG 가이드라인을 기초로 하여 중소기업 ESG 체크리스트를 만들었으며, 기업은 이를 자가진단용으로 활용할 수 있다. 또한 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사업과 체크리스트를 연동해 중소기업의 자가진단 참여율을 높여 ESG에 대한 인식을 더욱 확산시키고, 맞춤형 교육 및 컨설팅, 경영 안내서 등을 제공할 예정이다.

둘째, 중소기업의 ESG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대기업과 중견기업 등의 상생 지원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협력사의 ESG를 적극 지원하는 기업에게 동반성장지수 부문에 가점을 부여하고, 이를 자상한 기업으로 선정해 수출지원사업 및 중견기업 R&D 참여 우대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하였다.

셋째, 중소기업 ESG 거버넌스 구축을 위해, 민간, 중소기업 지원기관 및 정부가 참여하는 ‘중소기업 ESG 준비 민·관 협의회’를 구성하여 현장의 의견을 청취하고, 정보를 공유, ESG 지원사업을 발굴 및 연계하는 등 협력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⁶³⁾

63) 중소벤처기업부 보도자료(2021.11.23.)(검색일: 2023.4.24.)

〈그림 2-8〉 중소기업 ESG 촉진방안 기본방향



자료: 중소벤처기업부(2021), p. 5.

2) 전담조직 및 온라인 플랫폼 운영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중소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1979년 설립된 중소기업부 산하기관이다. 이 기관은 중소기업의 진흥을 위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2022년 하반기에 중소기업부에서 ‘중소기업 ESG·탄소중립 온라인 종합플랫폼’을 구축했고, 현재 중소기업진흥공단이 이를 운영하고 있다. 이 종합플랫폼을 통해 ESG 자가진단, 탄소중립 전환지원 사업, 온실가스 인벤토리, ESG 교육영상 등에 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그림 2-9〉 중소기업진흥공단의 ESG 통합플랫폼 메인 화면



자료: 중소기업진흥공단 ESG 통합플랫폼 홈페이지(검색일: 2023.10.6.)

5. 산림청

1) 산림부문 기업참여 ESG 활성화 추진과제 제시⁶⁴⁾

산림청은 2022년 「선진국형 산림경영관리를 통한 ‘산림르네상스’ 추진 전략(2022~2027)」을 발표하였다. 이 전략은 산림의 경제·환경·사회문화적 기능 극대화를 목표로 6대 전략과 20대 실천과제를 제시하였다.

〈그림 2-10〉 산림르네상스 추진전략

비전	
선진국형 산림경영·관리를 통한 산림르네상스 시대 창출	
목표	
산림의 경제적·환경적·사회문화적 기능 극대화	
○ 목재자급률(%) - ('21) 16 → ('27) 25	○ 산림복지 수혜(백만명) - ('21) 18 → ('27) 32
	○ NDC 기여(백만톤) - ('18) 46 → ('30) 32
6대 전략	20대 실천과제
1. 돈이 되는 경제 입업	- 탄소흡수능력이 높은 기후대별 맞춤형 우수 수종 조립 국정 - 임도 등 인프라 확충과 선도산림경영단지 확대로 목재자급률 증대 국정 - 국산목재와 산림바이오매스 이용 확대 국정 - 청정임산을 생산·유통·소비 활성화 및 임산물재해보험 확대 국정 - 신산업 육성과 사회적기업 발굴로 양질의 일자리 창출
2. 함께 가는 환경 입업	- 산림보전지불제 도입과 산지구분 체계의 합리적 재편 국정 - 미세먼지·열성현상 저감 등 쾌적한 정주를 위한 도시숲·정원 확대 국정 -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달성 방안 전면 수정 국정
3. 삶에 깃든 사회 입업	- 생애주기별 맞춤형 산림복지 서비스 다각화 제공 국정 - 숲 처방 및 국가건강지원정책과 연계된 산림치유 활성화 - 산림·산촌관광 활성화, 산촌향(向) 트렌드를 반영한 산촌진흥 국정 지관
4. 산림재해 대응, 보전·복원 강화	- ICT 기반 예방·감시·예측체계 강화로 산림재난 피해 최소화 국정 - 산림재해 취약지역의 관리강화 및 피해 조기복구 국정 - 생물다양성이 우수한 지역의 과학적인 보호·복원 국정
5. 산림을 국제협력 중추 사업화	- 산림을 대한민국 국제협력의 대표 전략분야화 - 탄소중립을 위한 국내외 산림부문 기업참여 ESG 활성화 국정 - 산림협력을 통한 남북 그린데탕트 추진 국정
6. 산림과학·기술연구 촉진	- 산림바이오산업 활성화 및 신소재 연구개발 지원 국정 - 인공위성과 빅데이터로 산림공간 디지털 플랫폼 구현 국정 - 실사구시(實事求是) 연구개발, 고객 중심의 산림과학 실현
전략 지원 과제	
① 신속·적정한 법령 개정 및 규제개혁	② 과감한 구조조정으로 필요재원 마련
③ 산림재해 대응, 탄소중립 관련 조직 강화	④ Great Work Place 조직문화 조성

* **국정** : 윤석열정부 110대 국정과제 **지관** : 윤석열정부 지역균형발전 비전 국정과제

자료: 산림청(2022), p. 5.

64) 산림청(2022), pp.22~24.

6대 전략 중 다섯 번째에 해당하는 ‘산림을 국제협력 중추 사업화’ 전략은 산림 분야에 기업의 참여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한 과제를 포함하고 있다. ‘산림을 대한민국 국제협력의 대표 전략분야화’와, ‘탄소중립을 위한 국내외 산림부문 기업 참여 ESG 활성화’ 과제가 이에 해당되며, 특히 두 번째 과제는 현 정부의 국정과제와도 연계되어 있어 주목할 만하다.

산림부문에 기업참여 ESG 활성화를 위한 두 가지 실천과제를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산림을 대한민국 국제협력의 대표 전략분야화’하기 위한 과제 이행을 위해 첫째, 한국형 REDD+ 모델 구축 계획을 제시하였다. 이는 민간부문에서 공동으로 재원을 조성하면, 이 재원으로 대규모 REDD+⁶⁵⁾ 사업을 이행하여, NDC 달성에 활용하는 것이 목적이다. 여기에서 기업의 역할은 재정적 지원자이며, 참여 기업은 이에 상응하는 배출권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 둘째, 기업이 REDD+로 확보한 배출권이 국내에서도 거래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하고, 셋째, 기업의 REDD+ 참여에 대한 안내 및 컨설팅 지원 등을 위해 「REDD+ 지원법」 제정 및 전담 조직을 신설해야 한다.

〈표 2-10〉 한국형 REDD+ 사업 참여 기관별 역할

주체	역할
산림청	• 대상국 정부와 협상
GGGI	• 펀드 조성 및 운영
AFoCO, 임업진흥원 등	• REDD+ 사업 이행
기업	• 재정 지원 및 이에 상응하는 배출권 확보

자료: 산림청(2022), p.23.

65) REDD+는 산림전용, 산림황폐화 방지, 산림보전, 지속가능한 산림경영, 탄소축적 능력 향상 등 개발도상국에서 산림을 통해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활동을 의미

다음으로 ‘탄소중립을 위한 국내외 산림부문 기업 참여 ESG 활성화’를 이행하기 위한 계획으로 첫째, 탄소감축 대응이 시급한 국내 주요 기업의 참여를 우선 활성화하기 위해 ‘산림르네상스 ESG포럼’을 구성 및 운영하기로 하였다. 둘째, 글로벌 ESG 공시 표준화에 대비하여 산림부문 ESG 정보 플랫폼을 구축하고, 셋째, 산주-지방자치단체-기업을 연계해 산림탄소 상쇄제도를 규모화하고 수익성이 증대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넷째, ‘도시녹화운동’으로 민관협력을 강화할 계획을 제시하였는데, 이는 참여 주체에 따라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정보 및 부지를 제공하고, 기업은 숲을 조성하고, 조성된 숲은 지방자치단체와 시민단체가 관리 및 운영할 수 있도록 체계를 활성화하는 방식이다. 실제로 기업의 참여로 조성된 숲은 서울숲, 울산 대공원 숲, 대전 유림공원 숲 등이 대표적이다. 2022년 12월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었고, 이에 따라 숲 조성 사업에 참여하는 기업은 조성한 숲의 기부채납으로 세제 혜택을 제공받고, 도시숲 조성에 따른 기업의 탄소상쇄실적을 인정받을 수 있게 되었다.

〈표 2-11〉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중 기업 참여 관련 조항

조항	조문 내용
제19조 (도시숲등의 기부채납)	①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도시숲등의 조성·관리를 위하여 개인 또는 기업·단체 등이 나무와 토지등을 기부하려는 경우에 이를 받을 수 있다. ② 산림청장은 「국유재산법」 제8조에도 불구하고 제1항에 따라 기부채납된 나무와 토지등을 관리·처분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기부채납 및 관리·처분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5조의2 (탄소흡수원 인정)	산림청장은 이 법에 따라 조성·관리되는 도시숲등에 대하여 탄소흡수 기능·효과 등을 고려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탄소흡수원으로 인정할 수 있다.

자료: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 및 제25조의2

2) 산림 분야 ESG 평가지표 마련

산림 분야는 앞에서 설명한 산업통상부의 K-ESG 가이드라인과 한국 ESG기준원에서 개발한 ESG 모범규준 평가항목에 반영되어 있다. 이는 산림의 다양한 공익적 기능 중 탄소흡수원으로서의 기능이 기후변화 대응과 저탄소 사회 구현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먼저, K-ESG 가이드라인에는 환경(E) 분야에 추가 진단항목 중 하나로 산림탄소흡수량 항목이 포함되었다. 이에 따라 기업이 자사의 탄소배출을 상쇄하기 위해 신규조림, 재조림, 식생복구, 산림경영, 목제품 또는, 산림바이오매스 이용, 산림전용 및 산림황폐화 방지 활동(REDD+ 등) 등 산림을 통해 탄소흡수량을 획득하면 ESG 활동 성과로 평가받을 수 있다.⁶⁶⁾

ESG 모범규준은 국내 기업들이 대내외적으로 신뢰받을 수 있도록 미래 지향적인 관점에서 사회책임경영과 지배구조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한국 ESG기준원(KCGS)이 국내 최초로 2010년 12월에 제정 및 발표한 가이드라인이다. 이 가이드라인은 2021년에 개정되었고, 이때 산림 분야가 새롭게 반영되었다. ESG 모범규준에 대해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 환경경영(E), 사회책임경영(S), 기업지배구조(G) 세 개의 분야로 구성되어 있으며, 환경경영 모범규준의 경우, 4개 부문⁶⁷⁾과 6개의 분야⁶⁸⁾에서 우리 기업들이 추구해야 할 바람직한 환경경영의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산림 분야와 관련해서는 친환경 사업장 분야와 생태계 보전 분야에 언급되어 있다. 친환경 사업장 분야에서는 기업이 에너지신산업, CCUS 기술, 산림의 탄소흡수원 유지를 위한 활동 등 다양한 온실가스 감축수단을 직간접적으로 추진하거나 이용을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시하였다. 생태계 보전 분야에서는 산림을 생태계 다양성을 위해 중요한 자산으로 보고 기업이 이에

66) 관계부처 합동(2021), p. 158.

67) 리더십과 거버넌스, 위험관리, 운영 및 성과, 이해관계자 소통

68) 친환경 제품 및 서비스, 친환경 공급망, 친환경 사업장, 성과관리, 환경회계, 생태계 보전

대한 보전과 이용에 조화를 이루어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이 가능하도록 해야 하며, 산림의 인위적 훼손을 막고, 탄소흡수기능을 유지하기 위해 적극 노력이 필요하다고 제시하였다.⁶⁹⁾

〈그림 2-11〉 K-ESG 가이드라인의 추가 진단항목: ‘산림탄소흡수량’

구분	분류번호	영역	범주	
	E-기후변화 대응-추가1	환경	기후변화 대응	
항목 명칭	산림탄소흡수량			
항목 설명	· 조직의 탄소배출을 상쇄하기 위한 목적으로 신규조림, 재조림, 산림경영, 식생복구, 목제품 이용, 산림 바이오매스 이용, 산림전용 및 산림황폐화 방지 활동(REDD+ 등) 등 산림을 통해 탄소 흡수량을 획득하는 수준을 확인			
성과 점점	조직이 배출하는 탄소를 상쇄하기 위하여 산림을 통해 흡수하는 탄소 양을 측정 [데이터 원천] 산림탄소흡수량 공시 여부, 연도별 산림탄소흡수량 산출 현황 (사업보고서, 홈페이지, 산림탄소흡수량 모니터링 및 검증 보고서) [데이터 기간] 최근 5개년 (회계연도 기준) [데이터 범위] 국내, 해외 지점 포함 [데이터 산식] N/A			
점점 기준	<산림탄소흡수량 산출 기준>			
	(a)	산림바이오매스 탄소흡수량	tC	
	(b)	고사유기물 및 산림토양의 탄소저장변화량 (선택)	tC	
	(c)	총 탄소흡수량 (c=a+b)	tC	
	(d)	베이스라인 흡수량	tC	
	(e)	사업활동에 따른 배출량	tCO ₂	
	(f)	누출량	tCO ₂	
	(g)	t 기간	년	
	(h)	이산화탄소 순흡수량 (h=g/100*(c-d)*44/12-e-f)	tCO ₂	
	1단계	과거 5년간 산림탄소흡수량 정보 없음		
	2단계	과거 5년간 산림탄소흡수량 공시		
	3단계	과거 5년간 자사 배출량 대비 산림탄소흡수량 상쇄량 하락 추세		
	4단계	과거 5년간 자사 배출량 대비 산림탄소흡수량 상쇄량 상승 추세		
5단계	과거 5년간 자사 배출량 대비 산림탄소흡수량 상쇄량 매년 상승 추세			
점점 기준 적용방안(단계별)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0점	25점	50점	75점	100점

자료: 관계부처 합동(2021), p. 158.

69) 한국ESG기준원(2021), pp.18~29.

3) 산림부문 배출권거래제 외부사업 추진

온실가스 외부감축사업이란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 및 고시된 할당대상업체의 조직경계 외부의 배출시설이나 배출활동 등에서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온실가스를 감축, 흡수 또는 제거하는 사업을 말한다.⁷⁰⁾ 승인받은 외부사업으로 온실가스를 감축하면 그 실적을 인증받아 거래할 수 있고, 온실가스 배출권을 할당받은 업체 중 자체 감축이 어렵거나 미흡한 경우, 그 실적을 구매하여 정부에 배출권으로 제출 또는 배출권 시장에서 거래할 수 있다.⁷¹⁾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상쇄제도는 배출권거래제 할당대상업체의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수단 중 하나다. 외부사업자가 외부사업을 통해 발행받은 인증실적(KOC: Korea Offset Credit)⁷²⁾을 배출권거래제 할당대상업체 등에 판매하고, 이 업체는 직접 구매한 외부사업 인증실적을 상쇄배출권(KCU: Korean Credit Units)⁷³⁾으로 전환하여 배출권거래제도에서 상쇄 또는 거래할 수 있다.⁷⁴⁾

〈그림 2-12〉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상쇄제도



자료: 해양환경공단(2020.11.2.)(검색일: 2023.10.6.), p. 4.

70) 「외부사업의 타당성 평가 및 감축량 인증에 관한 지침」 제2조(정의)

71) 환경부 보도자료(2015.1.28.)(검색일: 2023.10.6.)

72) 외부사업 인증실적(KOC: Korea Offset Credits): 외부사업을 통해 발행된 온실가스 감축 크레딧으로 1KOC는 1이산화탄소상당량톤에 해당

73) 상쇄배출권(KCU: Korean Credit Units): 외부사업 인증실적(KOC)을 배출권으로 전환한 것으로 1KOC는 1KCU로 전환, 배출권시장에서 거래 가능

74)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검색일: 2023.8.22.)

외부사업의 타당성 평가와 감축량 인증, 상쇄등록부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 및 절차는 「외부사업의 타당성 평가 및 감축량 인증에 관한 지침」에서 규정한다.

〈표 2-12〉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상쇄제도 법적 근거

구분	명칭
법률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25조(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제29조(상쇄) 및 제30조(외부사업 온실가스 감축량의 인증)
	•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7조(상쇄), 제48조(외부사업에 대한 타당성 평가 및 승인·승인 취소) 및 제49조(외부사업 온실가스 감축량의 인증 및 인증취소)
지침	• 「외부사업 타당성 평가 및 감축량 인증에 관한 지침」

자료: 저자 작성

육상 분야의 경우, 다수의 민간기업이 ESG 경영 실천의 일환으로 산림조성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데, 이 사업은 현재 온실가스 감축 외부사업으로 상쇄등록부에 등록되어 있다. ‘산림부문 배출권거래제 외부사업’은 기업이나 지방자치단체, 산주 등이 도시숲(공원) 조성, 산림관리(조림, 갱신) 등의 탄소흡수원 증진활동 또는 목재제품을 활용하여 탄소저장 활동으로 확보한 이산화탄소 흡수 실적을 정부가 인증해주고, 해당 실적을 배출권 거래시장에서 거래 가능하도록 제도화되어 있으며,⁷⁵⁾ 현재 운영기관으로 지정된 한국임업진흥원에서 외부사업을 통해 기업의 ESG 경영을 지원하고 있다. 산림부문 외부사업 방법론은 신규조림재조림 사업, 식생 복구사업, 갱신조림을 통한 산림경영 사업, 산림재해 피해지 조림사업 등 총 아홉 건이 온실가스 종합정보센터 상쇄등록부시스템에 등록되어 있다.⁷⁶⁾

75) 한국임업진흥원 보도자료(2022.10.7.)(검색일: 2023.8.22.)

76)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상쇄등록부시스템 홈페이지(검색일: 2023.8.22.)의 자료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표 2-13〉 산림부문 외부사업 방법론 등록 현황('23.8월 기준)

No.	방법론 명	방법론 분야	최초등록 (신청)	관장기관
1	신규조림/재조림 사업의 방법론	산림 - 탄소흡수원 유 지 및 증진	'15.4.21.	농림축산 식품부
2	식생 복구 사업의 방법론		'17.1.11.	
3	갱신조림을 통한 산림경영 사업의 방법론		'19.1.3.	
4	산림재해 피해지 조림사업의 방법론		'20.2.25.	
5	습지를 제외한 토지에 시행된 소규모 A/R CDM 프로젝트 활동		'16.10.7.	GIR센터
6	습지에서 실행되는 소규모 A/R CDM 프로젝트 활동		'16.10.7.	
7	습지를 제외한 토지의 조림과 재조림		'16.10.7.	
8	황폐화된 맹그로브 서식지의 조림과 재조림		'16.10.7.	
9	목제품 이용 사업의 방법론		'17.1.11.	

자료: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상채등록부시스템 홈페이지(검색일: 2023.8.22.)의 자료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2023년에는 산림부문 배출권거래제 외부사업으로 대상지 7곳이 등록되었는데, 한국임업진흥원은 이 사업지에서 연간 이산화탄소 약 1,230톤을 흡수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하였다. 이번에 신규 대상지로 선정된 한화호텔앤드리조트는 기업 중에서 최초로 양평군 일대를 산림부문 배출권거래제 외부사업으로 등록하였다. 이 사례는 단일 수종으로 식생이 불량한 대상지를 이산화탄소 흡수가 우수한 다양한 수종의 숲으로 재조성하여 산림의 탄소흡수 능력을 증진시켰으며, 산림의 왕성한 생장을 유도하기 위해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경영하여, 탄소경영을 통한 기업립의 탄소흡수원 증진활동 모범사례를 제시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⁷⁷⁾

4) 산림 분야 민간협력 체계 구축

산림청은 산림보전을 통한 탄소중립과 기업의 ESG 경영 강화를 위해 민

77) 경향신문(2023.1.5.)(검색일: 2023.8.22.)

간기업과 함께 산림 분야 정책 및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민간기업과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파트너십을 구축하고 있는데, 2021년 포스코, SK그룹, 유한킴벌리, 현대백화점그룹을 시작으로, 2022년에 8건, 2023년 10건, 2027년까지 20건 체결을 목표로 하고 있다. 가장 최근인 지난 6월에는 티웨이항공과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으며,⁷⁸⁾ 티웨이항공의 취항국이자 산림청의 해외산림협력센터·사업단이 있는 몽골, 베트남, 중앙아시아 등 개발도상국에 산림보전 및 복원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고, 기후변화, 산불 등 재해로 인한 국내 산림 훼손지 복원 활동 등 분야에서 협력하기로 하였다. 이 사례는 산림청과 티웨이항공이 사업 발굴단계에서부터 같이 논의를 시작했다는 점에 주목할 만하다.

이 밖에도 산림청은 산림 분야에서 기업의 ESG 경영이 촉진될 수 있도록 2021년부터 기업간담회를 개최해 오고 있으며, 국내 주요 대기업 중심으로 ESG 담당자와 관련 분야 전문가 등이 주로 참여해 왔다. 간담회에서는 기업의 ESG 경영을 산림 분야의 다양한 영역과 연계할 수 있는 방안 모색,⁷⁹⁾ 해외 온실가스 감축사업(REDD+), 산림탄소상쇄제도 등 산림 분야 정책과 사업 현황 등을 공유하였다.⁸⁰⁾ 때로는 요청에 따라 산림 분야 관련 기업군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 설명회를 개최하거나,⁸¹⁾ 민관협력(거버넌스) 구축으로 기업의 ESG 경영 구체화를 위한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⁸²⁾ 꾸준히 기업들과 산림 분야에서 소통 및 협력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왔다. 가장 최근에는 ‘그린 ESG 밋업데이’ 행사를 개최하여, 민간기업이 탄소중립에 맞춰 지원할 수 있는 산림 분야의 주요 정책과 사례를 소개하고, MOU를 체결한 기업과 추진 중인 사업을 설명하였다. 이처럼 산림청은 비정기적이지만 매년 지

78) 산림청 보도자료(2023.6.28.)(검색일: 2023.10.14.)

79) 산림청 보도자료(2021.3.23.)(검색일: 2023.10.14.)

80) 산림청 보도자료(2021.4.9.)(검색일: 2023.10.14.)

81) 산림청 보도자료(2021.3.23.)(검색일: 2023.10.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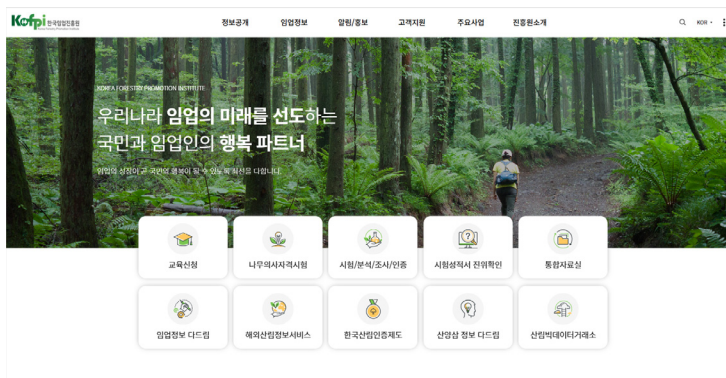
82) 산림청 보도자료(2022.3.4.)(검색일: 2023.10.14.)

속적으로 국내 민간기업과 산림 분야에서 협력방안 모색을 위한 자리를 갖고 있으며 점점 더 많은 기업 및 단체에서 설명회에 참석하고 있다.⁸³⁾

5) 전담조직 및 온라인 플랫폼 운영

한국임업진흥원은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29조의2~4에 근거해 설립 및 운영되고 있는 산림청 산하의 공공기관이다. 한국임업진흥원은 같은 법 제29조의3에 따라 다양한 사업을 수행하는데, 그 중에 산림 분야 ESG와 관련된 사항도 포함되어 있다. 예를 들어, 지방자치단체, 산주, 기업 등이 탄소흡수원을 유지하고 증진하는 활동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이 과정에서 추가 확보한 산림탄소흡수량을 정부가 인정해주는 산림탄소상쇄제도 등 산림탄소·인증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또한 국내 민간기업이 해외 산림협력 분야로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시범사업 운영 등 해외산림협력 활성화 사업을 담당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자세한 사항은 한국임업진흥원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⁸⁴⁾

〈그림 2-13〉 한국임업진흥원 메인 화면



자료: 한국임업진흥원 홈페이지(검색일: 2023.10.9.)

83) 산림청 보도자료(2023.9.15.)(검색일: 2023.10.14.)

84) 한국임업진흥원 홈페이지(검색일: 2023.10.9.)

6. 지방자치단체

우리나라는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정부 부처별로 성격에 맞는 정책을 마련해 국내 기업을 지원하고 있다. 한편, 각 지역에서도 해당 지역에 소재한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조례 제정에 적극 나서고 있다. 지금까지 제주도를 제외한 대부분의 광역 지자체가 지역 기업의 ESG 경영 확산 및 지원을 위한 조례를 수립하였다. 2016년 경기도 조례가 처음 제정되었고 2021년 이후로 대부분의 조례가 마련되었는데 그 중에서도 2023년에 가장 많은 수가 제정되었다. 각 지자체는 이 조례를 근거로 하여 관련 업무를 수행할 전담기관을 지정하고 이 기관에서 지원 사업을 수행하도록 하고 있다.

〈표 2-14〉 각 지자체의 기업 ESG 경영 지원 관련 조례 제정 현황

시도	시군구	조례명	제정일자
경기도	-	• 경기도 공공기관 및 중소기업의 CSR(기업의 사회적 책임) 활성화 지원 조례	2016.6.7.
	-	• 경기도 ESG 경영 활성화 지원 조례	2022.7.19.
	부천시	• 부천시 기업 ESG 경영 활성화 지원 조례	2022.12.26.
	성남시	• 성남시 중소기업 ESG 경영 활성화 지원 조례	2023.8.7.
	수원시	• 수원시 이에스지(ESG) 경영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2023.3.23.
강원도	-	• 강원특별자치도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경영 활성화 지원 조례	2023.6.9.
서울시	강남구	• 서울특별시 강남구 이에스지(ESG) 경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	2022.11.4.
	관악구	• 서울특별시 관악구 중소기업 이에스지(ESG) 경영 활성화 지원 조례	2023.7.6.
	금천구	• 서울특별시 금천구 이에스지(ESG) 경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	2023.1.10.
	동작구	• 서울특별시 동작구 ESG 경영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2022.12.8.
	마포구	• 서울특별시 마포구 이에스지(ESG) 경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	2023.7.13.
	성동구	• 서울특별시 성동구 이에스지(ESG)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2023.9.21.
인천시	남동구	• 남동구 ESG 경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	2023.5.4.
	서구	• 인천광역시 서구 ESG 경영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2023.7.7.

시도	시군구	조례명	제정일자
경상남도	-	• 경상남도 ESG경영 확산 및 지원 조례	2023.6.13.
	양산시	• 양산시 기업 ESG 경영 활성화 지원 조례	2023.7.3.
	진주시	• 진주시 이에스지(ESG) 활성화 지원 조례	2023.4.5.
경상북도	-	• 경상북도 기업 ESG 경영 지원 조례	2022.3.3.
	-	• 경상북도 공공기관 ESG 경영 지원 조례	2023.7.13.
	창원시	• 창원시 중소기업 ESG 경영 활성화 지원 조례	2023.5.31.
	구미시	• 구미시 기업 ESG 경영 지원 조례	2022.12.30.
	김천시	• 김천시 기업 ESG 경영 지원에 관한 조례	2023.6.1.
전라남도	-	• 전라남도 이에스지(ESG) 경영 활성화 지원 조례	2023.6.1.
	-	• 전라남도의회 이에스지(ESG) 실천 조례안	2023.8.3.
	-	• 전라남도교육청 이에스지(ESG) 교육 및 실천 조례	2023.6.1.
	나주시	• 나주시 ESG 경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	2023.7.12.
	여수시	• 여수시 이에스지(ESG) 경영 활성화 지원 조례	2023.9.19.
	완도군	• 완도군 ESG 경영 활성화 지원 조례	2023.9.25.
전라북도	-	• 전라북도 중소기업 ESG 경영 활성화 지원 조례	2022.11.11.
	고창군	• 고창군 기업 ESG 경영 확산 및 지원 조례	2023.8.1.
충청남도	-	• 충청남도 중소기업 · 소상공인 ESG 경영 활성화 지원 조례	2021.12.30.
	아산시	• 아산시 ESG 경영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2023.9.15.
충청북도	-	• 충청북도 기업 ESG 경영 지원 조례	2021.12.31.
	진천군	• 진천군 이에스지(ESG) 경영 활성화 지원 조례	2023.2.10.
	충주시	• 충주시 이에스지(ESG) 경영 활성화 지원 조례	2023.8.11.
부산시	-	• 부산광역시 기업 ESG 경영 지원 조례	2023.5.17.
울산시	-	• 울산광역시 ESG 경영 지원 조례	2021.12.29.
	동구	• 울산광역시 동구 ESG 경영 지원 조례	2023.9.25.
광주시	-	• 광주광역시 ESG 경영 지원 조례	2021.7.23.
	서구	• 광주광역시 서구 이에스지(ESG) 경영 지원 조례	2023.8.14.
대구시	-	• 대구광역시 ESG 경영 활성화 지원 조례	2022.12.30.
	달서구	• 대구광역시달서구 ESG 경영활성화 지원 조례	2023.8.11.

자료: 저자 작성

기업 ESG 경영 지원 성격을 가진 국내 최초의 조례는 「공공기관 및 중소기업 CSR 활성화 지원 조례」인데, 이는 우리 사회에 ESG 개념이 본격적으로 도입되기 이전에 제정되었다. 이후 ESG가 전 세계적으로 화두가 되면서 우리 정부는 2021년을 ESG 경영 확산의 원년으로 선포하였고, 이때부터 각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기업의 ESG 경영 지원 조례를 제정하기 시작했다. 전국에서 이 조례를 처음으로 마련한 지역은 광주광역시다. 2021년 7월에 「광주광역시 ESG 경영 지원 조례」가 제정되었고, 전담기관으로 지정된 광주상공회의소에서 지역 기업의 ESG 경영 지원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이 조례에 근거하면 지역 내 모든 기업이 지원 대상이지만, 광주시는 현실적으로 ESG에 자체 대응이 어려운 중소기업 등을 우선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2022년부터 ESG 경영 인식 제고를 위한 설명회, 기업 수요 맞춤형 ESG 경영 온·오프라인 교육, ESG 관련 동향 및 정책자료 제공, 경영진단 및 컨설팅 등 프로그램을 운영했다.⁸⁵⁾ 그 결과, 실제로 참여한 기업들은 덕분에 ESG 경영 도입 확산과 인식 개선에 더해 공급망 ESG 실사에 대비하는 방법도 찾을 수 있었다는 등 광주시의 지원 사업을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⁸⁶⁾

이후 각 시·도, 시·군·구로 ESG 경영 활성화를 위한 조례 제정 움직임이 빠르게 확대되었다. 2021년 12월에만 세 개 지역, 2022년에 여덟 개 지역, 2023년에는 9월 기준으로는 29개 지자체에서 조례를 마련하였다.⁸⁷⁾ 각 조례마다 조문 구성 또는 명칭에 다소 차이는 있지만, 대체로 기본계획(또는 지원, 추진계획이라고도 함) 수립·시행, 실태조사 실시, 지원사업 추진, ESG 경영 지원 위원회에 관한 사항, 자문단 운영, 보조금 지원, 정보공시, 기본원칙 및 중점관리 목표 설정, 성과평가 및 혜택, 협력체계 구축 등 기업의 ESG 경영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85) G.ECONOMY(2022.3.9.)(검색일: 2023.3.31.)

86) 광주상공회의소 보도자료(2022.12.29.)(검색일: 2023.03.31.)

87)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검색일: 2023.10.1.)의 자료를 바탕으로 저자 정리

〈표 2-15〉 각 지자체의 기업 ESG 경영 지원 관련 조례의 주요 조문

조문	내용
기본계획 수립·시행	• ESG 경영 현황 및 전망 • ESG 경영 활성화 정책의 추진방향 및 목표 수립 • 지원사업,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 ESG 경영 활성화를 위한 기업 및 기관 등 협력에 관한 사항
지원사업	• ESG 경영 홍보 및 교육 • ESG 경영 촉진을 위한 경영 진단 및 전략 수립 • ESG 경영을 위한 분야별 전문가의 컨설팅 및 법률 상담 • ESG 경영 우수 중소기업 등 발굴 및 홍보 • 지자체 중소기업육성기금을 통한 중소기업 융자 • 지자체 신용보증재단의 보증
성과평가 및 혜택	• ESG 경영 성과평가를 통해 우수기관에 대해서는 인증 부여, 포상, 지원사업 우선 적용 등 인센티브 제공
협력체계 구축	• ESG 경영 확산 및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경우, 정부, 다른 지방자치단체, 국내외 기업, 기업 협의회, 대학, 연구기관, 시민단체, 관계 기관 등과 협력체계 구축

자료: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검색일: 2023.10.1.)의 자료를 바탕으로 저자 정리

제3절 종합 시사점

2020년 초, 전 세계적으로 글로벌 투자자들이 기업경영 전략인 ESG를 새로운 투자 결정의 중요 기준으로 고려하기 시작하였다. 이후 2021년부터 글로벌 대기업을 중심으로 ESG 경영 도입이 급속히 확산되었고, 이를 반영하듯 언론매체에 ESG가 자주 등장하는 것은 물론, ESG에 대한 투자 규모 또한 매우 늘었으며, 전 세계적으로 관련 규제나 제도 등이 빠른 속도로 수립되어 왔다.

이에, 우리나라 정부는 2021년을 ESG 원년의 해로 선포한 이후부터 중

양부처마다 다각적으로 기업의 ESG를 지원하기 위한 정책을 발표하기 시작하였다. 앞의 제2절에서는 각 부처별 정책을 분석하여 국내 ESG 지원 정책의 공통점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해양환경 분야에 적용가능한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었다.

첫째, 우리 정부의 기업 ESG 정책은 ‘지원’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주요 대기업 중심으로 ESG 경영이 도입 및 추진되고 있으며, 중소·중견기업이 ESG에 대응하기에는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 환경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중견기업을 지원하는 정책을 중점적으로 마련하였다. 환경부는 기업이 환경친화적인 방식으로 사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친환경 경제활동을 컨설팅, 설비 및 기술 전환을 위한 금융 지원 등의 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 중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우리나라 중소벤처기업의 ESG에 대한 인식 개선과 도입 부담을 완화하여 자발적이고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인프라 구축 및 인센티브 제공에 초점을 두고 있다. 이는 대체로 기업의 사업영역 내에서 개선해야 하는 상황에 필요한 지원수단이다. 해양환경 관련 기업들은 영세한 곳이 많아 ESG 도입 자체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므로, 해양환경 분야에도 필요한 정책이라고 판단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K-ESG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우리 기업들이 ESG 전략수립과 평가에 연계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는데, 산림청이 기존에 반영되어 있지 않았던 산림탄소 흡수원을 ‘환경(E)’ 영역의 성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의 평가항목에 추가 반영한 점은 매우 주목할 만하다.

둘째, 육상과 해양은 그동안 공공관리의 영역으로 여겨져 왔는데, 최근 민간기업의 ESG 경영 도입을 계기로, 정부와 기업이 공동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인식이 생겨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추세를 반영하여, 환경부와 산림청은 환경 그리고 산림이라는 공유자원을 정부와 기업이 공동으로 보전하고 복원하는 데 참여하고, 이 접근법이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정

책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정부와 기업이 양자 또는 다자간 MOU를 체결하는 방식으로 환경 또는 산림을 보전 및 복원을 위해 협력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환경부의 ‘녹색소비-ESG 얼라이언스’는 다수의 기업이 특정 분야의 문제 해결을 위해 공동의 목표를 가지고 참여한 사례이며, 같은 분야에 많은 기업들이 참여하도록 유도할 수 있는 매우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이다. 이 방식을 통해 참여기업 간의 유기적인 협조도 가능하고, 정부와 기업 간의 소통 및 교류의 장으로도 활용할 수 있다. 한편 산림청은 일반적인 양자 간 MOU를 체결하는 방식으로 추진 중인데, 특이점은 협력사업을 발굴하는 과정부터 파트너 기업과 같이 논의하기 때문에 정부와 기업 각자가 원하는 바를 협력사업에 적극 반영할 수 있다는 점이다.

셋째, 각 부처는 ESG 관련 업무를 이행하는 전담조직을 두고 있다. 이는 관련 법률에 근거하여 지정 및 운영되고 있다. 공통된 사항은 이 전담조직들은 최근 신설된 조직이 아니라, 기존의 해당 부처 산하 또는 관련 업무를 수행 중인 기관에서 담당하고 있다는 점이다. 또한 해당 부처에서 지원하는 ESG 관련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온라인 플랫폼도 운영하고 있다. 이를 해양환경 분야로 적용해본다면, 현재 해양환경 분야에는 공공기관, 연구소, 민간단체 등 유관기관이 다수 존재하고 있으므로, 이 중 ESG 업무 전담기관으로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곳을 지정하고 해당 기관이 운영하는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한다면 ESG 관련 정보를 충분히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마지막으로, 중앙정부 차원에서의 기업의 ESG 지원을 위한 움직임은 각 지방정부로도 확산되었다. 지자체는 ESG 제도를 확보하려는 노력으로 지역 내 기업의 ESG 활성화 지원을 위한 조례를 적극 제정하기 시작했고, 제주도를 제외한 대부분의 지자체가 ESG 관련 조례를 두고 있다. 각 조례마다 규정사항은 약간 차이가 있으나, 기본적으로 기업 ESG 경영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 지원사업 발굴 및 제공, 기업의 ESG 성과 평가를 통한 우수기관에 인센티브 제공 등을 포함하고 있다. 해양환경 분야도 민간기업의 ESG를 활용한 해양환경 관리를 지속하고자 한다면, 활성화 정책의 추진방향을 담은 기본계획 수립을 비롯하여, 해양환경 분야 기업의 ESG 지원사업 발굴, 인센티브 제공 체계 등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표 2-16〉 부처별 민간기업 ESG 지원정책 종합

구분	환경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산림청	지방자치단체 (광주광역시)
지원 대상	(국내 기업) 기업의 ESG 대응, (육상-환경) ESG를 활용한 환경보호	(국내 기업) 기업의 ESG 대응	(국내 기업) 기업의 ESG 대응	(육상-산림) ESG를 활용한 산림보전 및 복원	(지역 기업) 기업의 ESG 대응
ESG 관련 주요 정책 및 수단	K-Taxonomy , 환경 분야 ESG 지원사업, 다자간 MOU 등 민·관 협력	K-ESG 가이드 라인, 중소·중견기업 지원 MOU	중소기업 ESG 촉진방안	산림르네상스 추진전략, 양자 간 MOU 등 민·관 협력	광주광역시 ESG 경영 지원 조례
전담 이행기관	한국환경산업 기술원	한국생산성 본부	중소벤처기업 진흥공단	한국임업진흥 원	광주상공 회의소
근거 법률	환경기술 및 환 경산업 지원법	산업발전법	중소기업 진흥 에 관한 법률	임업 및 산촌 진 흥촉진에 관한 법률	광주광역시 ESG 경영 지원 조례
온라인 플랫폼	환경책임투자 종합플랫폼	지속가능경영 지원센터	ESG 통합플랫폼	한국임업 진흥원	광주상공 회의소

자료: 저자 작성

03

민간기업의 해양환경 분야 ESG 활성화 필요성 및 정책 현황

제1절 해양환경 분야에 민간기업 ESG 활성화 필요성 —

1. 해양환경에 관한 인식 조사

우리가 해양을 바라보는 시각은 바다라는 공간자원과 해양자원이 스스로와 직간접적으로 얼마나 관련 있는지에 따라 각기 다르다. 이에, 제1절에서는 우리 국민과 국내 민간기업이 현재 해양환경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를 진단해보았다.

우선, 국민인식도는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이 매년 발표하는 ‘해양수산 국민인식도 조사’ 결과를 토대로 하였으며, 최근 3년(2020~2022년)간의 응답 결과를 분석하였다. 민간기업의 인식 조사는, 본 연구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한 ‘해양환경 분야 ESG 활성화를 위한 국내 민간기업 설문조사’ 결과 중 해당되는 부분을 일부 발췌하여 정리하였다.

1) 해양환경 분야 국민인식조사 선행사례 분석

(1) 개요

최근 국내외 해양수산 환경이 변화하면서 우리 국민의 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점차 커지고 있다. 이에,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은 해양·수산·해운·항만 분야 전반에 걸쳐 국민인식과 정책적 수요를 파악하기 위해 2017년부터 매년 ‘해양수산 국민인식도 조사’를 실시해왔다. 본 연구에서는 2020년부터 2022년까지의 조사 결과를 활용했는데, 특히 해양환경에 대한 국민인식도를 파악하기 위해 ① 해양환경에 대한 평소 관심도, ② 해양수산 분야 중 정책추진이 시급한 분야, ③ 해양 분야 중 연구 추진이 시급한 분야, ④ 해양공익기능 유지를 위한 국가예산 추가에 대한 의견 등 총 네 가지 문항의 응답 결과를 분석하였다.

(2) 주요 결과

KMI 국민인식조사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⁸⁸⁾ 첫째, 해양환경에 대해 평소 관심이 있다는 응답이 65% 이상으로, 우리 국민은 어느 정도 해양환경에 관심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둘째, 해양수산 전 분야 중에서 가장 시급하게 추진해야 할 정책을 묻는 질문에는 ‘해양환경 및 해양생태계 보호 확대’를 가장 우선순위로 선택한 응답자가 가장 많았는데, 그 비율은 매년 증가하고 있다.⁸⁹⁾ 그 다음 ‘해양생물종 보호와 해양생물다양성 확보’ 정책이 조속히 추진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뒤를 이었다. 셋째, 향후 시급히 추진되어야 할 해양 관련 연구 분야에 대해서는 응답자 절반이 ‘해양환경’이라고 답하였다. 그 중에서도 해수온 상승 대응, 청정한 수질관리 등에 관

88) 한국해양수산개발원(2020.6.3; 2021.6.7.)(모든 자료 검색일: 2023.6.20.); 한국해양수산개발원(2022.6.24.)(검색일: 2023.10.1.)

89) ‘해양환경 및 해양생태계 보호 확대’ 정책을 가장 시급히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은 2020년 44.5%에서 2021년 59.5%, 2022년 59.7%로 매년 증가하였다.

한 연구가 우선적으로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마지막으로, 해양영토 수호, 환경오염 방지 등 해양의 공익적 기능을 유지하는 데 정부 예산을 추가적으로 투입하는 것이 필요한지에 대한 질문에는 응답자 75% 이상이 그렇다고 답하였다.

해당 인식조사 결과를 통해, 우리 국민의 해양환경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뿐만 아니라 해양환경 관련 정책 마련의 시급성, 해양의 공익적 기능의 중요성에 대한 국민의 공감대가 어느 정도 형성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2) 해양환경에 대한 민간기업 ESG 담당자 인식 설문조사

(1) 개요

다음은 민간기업 관점에서 바라본 해양환경에 대한 인식조사 결과이다. 본 연구는 민간기업의 해양환경 분야 ESG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한 정책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이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국내 소재 민간기업의 ESG 실무 담당자 100명을 대상으로 2023년 8월 11일부터 9월 7일까지 온라인으로 조사하였다.

설문조사에 응답한 기업의 유형으로는, 대기업 및 계열사가 19%, 중견기업 69%, 중소기업 12%로 나타났다. 업종별로는 제조업이 68%였으며, 비제조업은 32%였다. 해양 및 연안과 관련 있는 기업은 33%였고, 나머지 67%는 해당이 없는 것으로 보아, 본 설문에 참여한 기업 절반 이상이 해양 또는 연안과 크게 관련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1〉 설문조사 응답 기업의 특성

구분	비율(%)
해양환경 분야 ESG 추진 여부	추진
	미추진
업종	제조업
	비제조업
기업 유형	대기업 및 계열사
	중견기업
	중소기업
매출 규모	1천억 원 미만
	1천억~2천억 원 미만
	2천억~5천억 원 미만
	5천억~1조 원 미만
	1조 원 이상
해양·연안 관련 (복수응답 가능)	연안지역 소재
	해양자원/공간 활용
	해당 없음

자료: 저자 작성

설문조사는 ① ESG 경영 도입 현황, ② 해양환경 분야 ESG에 대한 인식, ③ 해양환경 분야 ESG 추진 실태, ④ 정책적 지원 수요 등 크게 네 개의 파트로 구성하였다. 이중 본 절에서는 해양환경 분야 ESG에 대한 국내 민간기업의 인식도를 파악하기 위해, ESG 담당자를 대상으로 해양환경 분야에 대한 관심도, 해양환경 분야 문제 심각도, 문제 해결 시급성, 정부의 문제 해결 노력 정도, 민간기업의 참여 필요성, 현재 민간기업의 기여 정도에 관한 질문에 응답하도록 하였다.

아래에서는 각 문항에 대한 응답 결과와 더불어 기업의 유형, 해양·연안과의 연관성, 해양환경 분야 ESG 추진 여부 등과도 비교 분석하였다.

(2) 주요 결과

먼저, 해양환경 분야에 대한 관심 정도를 질문하였는데, ‘관심 있다’가 44%, ‘보통이다’는 35%로 나와 전체 응답자의 79%가 해양환경 분야에 어느 정도 이상의 관심은 있는 것으로 보인다. 대기업 응답자 중 73.7%, 중견기업은 37.7%, 중소기업은 33.3%가 관심 있다고 응답했고, 연안지역에 위치한 기업 중 50%, 해양자원 또는 공간을 이용하는 기업 중 84.7%가 관심이 있다고 응답한 것을 보아, 기업 규모가 클수록, 해양·연안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높을수록 상대적으로 해양환경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진 것으로 보인다. 해양환경 분야 ESG 추진 여부로 비교해보면, 추진 중인 기업의 85.7%가 관심 있다고 응답했고, 미추진 기업은 37.2%만이 관심 있다고 응답했는데, 이 결과를 보면 현재 추진 중인 기업이 미추진 기업보다 해양환경에 대한 관심도가 더 큰 것으로 보인다.

다음은 해양환경 분야에서 발생하는 문제가 어느 정도로 심각하다고 생각하는지를 질문하였다. 그 결과, 대기업(78.9%), 중견기업(76.8%), 중소기업(75%) 모두 현재 해양환경 문제가 심각하다고 보는 의견이 많았다. 또한, 해양·연안과 관련이 없는 기업조차도 70% 이상은 해양환경 문제가 심각한 수준이라고 응답하였다. 이러한 가운데 이 문제를 얼마나 시급하게 해결해야 하는지를 질문하였고 그 결과, 79%가 시급하다고 응답했으며, 이 역시 기업 규모와는 관계없이 문제 해결이 시급하다는 데 의견이 모아졌다.

지금까지의 결과를 보면, 민간기업 관점에서 보는 해양환경 문제의 심각성과 해결 시급성은 높은 편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 정부가 해양환경 문제 해결의 주체로서 어느 정도 노력하고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는 ‘노력하고 있지 않다(38%)’, ‘보통이다(37%)’, ‘노력하고 있다(25%)’로 나타났다. 해양환경 분야에서 ESG 활동을 추진 중인 기업들 중에서는 42.9%만이 정부가 노력하고 있다고 답하였으며, 미추진 기업의 경우

22.1%로 나왔다. 이 결과는 민간기업 관점에서 볼 때, 해양환경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정부의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는 의미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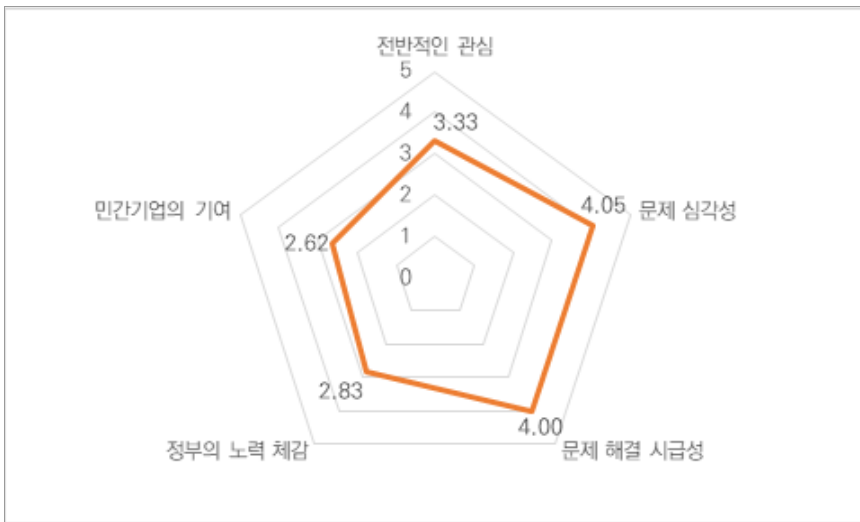
한편, 민간기업이 해양환경 분야 문제 해결에 얼마나 기여하고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는 ‘기여하고 있지 않다(44%)’와 ‘보통이다(45%)’가 대부분이었고, ‘기여하고 있다’는 11%에 불과했다. 민간기업 ESG 담당자의 입장에서 볼 때 아직은 기업의 기여도가 낮은 수준으로 평가되었다.

이어서 민간기업의 참여가 필요한지에 대한 질문에는 ‘필요하다’는 응답이 90%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특히 해양환경 분야 ESG 추진 여부로 봤을 때, 추진 중인 기업은 92.9%, 미추진 기업은 89.5%가 기업 참여의 필요성에 동의하였다. 또한, 해양·연안과 관련이 있는 기업의 응답자 전원이 기업의 참여가 필요하다고 답변한 것으로 보아, 해양환경과 관련이 있는 기업일수록 해양환경 문제 해결에 기여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민간기업의 참여가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는 ‘해양 직·간접 이용기업의 지속가능한 경영을 위해서(51.1%)’, ‘사회를 구성하는 일원으로 사회적 책임을 이행하기 위해서(48.9%)’, ‘기업의 경영활동에서 발생하는 해양환경 영향을 줄이기 위한 노력으로(45.6%)’, ‘환경 관련 국제협약 등에 따른 정부의 규제화 가능성에 대비하기 위해서(34.4%)’ 순으로 응답률이 높게 나왔다. 반대로 참여가 필요하지 않다고 응답한 경우, 그 이유는 ‘기업경영 본연의 목적인 이윤추구가 우선’이라는 응답과 ‘해양환경 분야는 정부 등 공공영역에서 관리하는 것이 더 적절하기 때문’이라는 응답이 각각 50%로 나왔다.

지금까지는 민간기업 ESG 담당자의 응답을 통해 파악한 해양환경 분야에 대한 인식도를 분석하였는데, 각 질문에 대한 응답 결과를 평균 5점 척도로 나타내면 <그림 3-1>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민간기업 ESG 담당자는 해양환경 분야에 어느 정도 관심이 있고(3.33점), 해양환경 관련 문제가

다소 심각한 수준이라고 생각하며(4.05점), 이에 대한 문제 해결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많았다(4.00점). 그런데 해양환경에 대한 관리 주체로서 정부의 노력은 다소 미흡하고(2.83점), 민간기업의 기여 역시 부족한 편이라고(2.62점) 평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3-1〉 해양환경 분야에 대한 민간기업 ESG 담당자 인식 정도



자료: 저자 작성

2. 해양환경 분야에서 민간기업의 역할 변화 요구

1) 해양환경 공동관리 주체로서 민간기업의 참여

해양은 국민 모두가 이용할 수 있는 공유재다. 즉, 누구나 접근해 이용할 수 있는 ‘비배제성(non-excludability)’과 한정된 양을 두고 이용자들이 경쟁적으로 이용하는 ‘경합성(rivalry)’의 특징을 가진다.⁹⁰⁾ 그러므로 해양

90) 문흥안(2016), p. 160.

을 과도하게 개발하고 이용하게 되면 해양환경은 회복 불가능한 수준으로 훼손되고, 결국 해양자원은 고갈되는데,⁹¹⁾ 경제학에서는 이를 ‘공유지의 비극’이라는 이론으로 설명한다. 해양은 고유의 자정능력과 완충능력을 지니지만, 자정능력이 한계를 넘어서면 해양생태계가 파괴되어 원상복구가 거의 불가능하거나 원상회복이 되더라도 그 과정에서 막대한 시간과 비용, 노력을 피할 수 없게 된다.⁹²⁾

공유지의 비극을 막고 지속가능성을 높이려면 무엇보다 관리가 중요하다. 그렇다면 해양의 관리 주체는 누구일까? 누구나 이용 가능하듯 관리도 마찬가지다. 전통적으로는 정부가 국가 차원의 관리 정책을 수립하고 직접 현장의 문제와 수요를 파악해 지원하는 방식으로 해양을 관리해왔다. 우리나라의 해양환경 관리정책은 이미 발생한 일을 해결하는 사후관리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정부의 일방적인 지원 성격이 강했다. 그런데 최근에는 사전에 해양환경 오염 등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규제 조치 등을 도입해 예방하는 사전예방적 접근 방식으로 관리방식이 전환되었다. 그 일환으로 오염원인자 책임원칙이라는 제도가 도입되었는데, 「해양환경보전법」제8조(오염원인자 책임의 원칙)에 따르면, “해양을 이용·개발하는 행위로 해양오염 또는 해양생태계 훼손을 발생시킨 자는 그 오염·훼손을 방지하고, 오염·훼손된 해양환경을 복원할 책임을 지며, 해양환경의 복원 및 오염·훼손으로 인한 피해의 구제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게 된다.

이와 같이 정부는 그 동안 해양의 관리자로 여겨졌다. 반면 민간기업은 해양에 있어 대표적인 이용자로 간주되었는데, 자사의 이윤추구 목적 달성을 위한 경영활동 과정에서 수질, 대기 등 환경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주범으로 여겨지기도 했다.⁹³⁾ 이에 정부는 민간기업의 경영 활동에서 발생하는

91) 김귀영 외(2013), p. 121.

92) 임송학(2007), p. 66.

93) 시사저널(1992.7.16.)(검색일: 2023.4.24.)

해양환경 오염을 사후에는 해결, 사전에는 예방하는 차원에서 기업을 감시하고 규제 조치를 적용해 관리해왔다. 이처럼 종래의 관점으로 볼 때 해양환경 관리 측면에서 정부는 관리자, 민간기업은 이용자로 구분되었고 때로는 서로 대립관계에 놓여있기도 했다.

그러나 해양환경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정부 혼자만의 힘으로는 한계가 있다. 관리 대상인 연안·해양은 공간적으로 매우 광범위하고 접근성도 낮기 때문이다. 특히 우리나라는 지리적으로 삼면이 바다와 맞닿아 있고 해안선 길이는 총 15,257.8km로 길고 복잡해 국토면적이 비슷한 다른 국가들에 비하면 관리여건이 불리한 편이다. 이러한 여건에서 정부의 해양환경 관리를 위한 정책적 대응에 한계를 보완하는 역할로 시민사회단체가 등장했고, 이들의 참여는 점차 확대되었다. 하지만 시민사회단체가 접근할 수 있는 공간은 먼 바다가 아닌 육상과 가까운 연안에 집중되어 있고, 주로 자연환경조사나 모니터링, 해변 정화, 안전·사고 계도, 홍보 등 활동 가능한 범위와 영역에 제약이 있다. 무엇보다 지속적인 활동을 위해 외부로부터 재정적인 지원이 수반되어야 한다는 현실적인 문제도 있다. 비록 정부와 시민사회단체가 역량과 자원을 총 동원해 해양환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이들의 힘만으로는 여전히 부족함이 있다. 한편, 민간기업은 기술, 자본, 인력 등 해양환경을 보전하고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관리자로 참여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이에, 더 이상 해양을 이용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관리자로서 역할도 할 수 있도록 유도하여 민관협력 체계를 구축해 해양환경을 공동 관리해 나간다면 상승효과가 나타날 수 있을 것이다.

민간기업이 공동 관리 주체로 참여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해양에 대한 인식변화가 우선시 되어야 한다. 이 연구 제3장 제1절에서 민간기업 ESG 담당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해양환경에 대한 인식조사 결과를 보면 기업인 역시 해양환경에 대한 관심과 문제 해결의 필요성, 더 나아가 민간기업의

참여 또한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국내 SK그룹 회장 겸 국내 기업을 대표하는 대한상공회의소 최태원 회장은 2021 P4G 서울 정상회의 비즈니스 포럼 자리에서 이제는 기업이 환경 문제 해결 주체로 나서야 할 때임을 강조하였다. 최 회장은 기업이 장기간 이윤 극대화를 목적으로 경영활동을 해왔고, 그 결과 환경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에 이제는 친환경 전환 기술과 자원을 가지고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단지 선언적 수준의 대응이 아니라 실제 행동에 변화를 이끌어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기업의 인식과 행동을 친환경적으로 유인하고 환경 외부효과를 효과적으로 내재화시키는 메커니즘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⁹⁴⁾ 이를 반영하듯 최근 민간기업은 ESG 실천의 일환으로 친환경, 사회적 책임 활동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찾기 위해 다양한 분야를 검토하고 경영방식에 적용하고 있다. 일부 기업은 해양환경과 관련된 분야를 ESG 경영에 접목해 추진하는 것에 관심을 보이거나, 이미 추진 중인 경우도 있다. 특히, 연안 지역에 위치한 기업 또는 해양공간과 자원을 이용하는 기업은 연안·해양 이용자로서 책임의식을 가지고 해양환경 보전 활동에 참여하고 있거나 참여를 적극 검토 중이다.

정부의 관점에서 볼 때, 민간기업의 참여가 더욱 활발해지면 정부의 행정력이 미치지 못하는 사각지대까지 범위를 확장할 수 있게 되어 해양환경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데 동력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민간기업 입장에서는 제1의 존속 목적인 이익 창출을 위해 자원을 지속가능하게 이용할 수 있어야 지속가능 경영이 가능하다. 기업은 누구보다 이 점을 잘 알고 있어 이제는 이용자로서의 위치를 넘어 관리자로서의 역할에도 주목하고 있고 육상뿐만 아니라 해양 분야까지 영역을 확대해 나가기 시작하였다. 이에, 정부는 기업이 보유한 기술, 자원, 전문인력 등을 최대한 활용해 민간기업의 참여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94) 연합인포맥스(2021.5.27.)(검색일: 2023.4.24.)

2) 대표 사례 : 민관협력 기반 마산만 수질 개선

민간기업이 해양환경 분야에서 ESG경영을 실천하기 시작한 것은 최근의 일이 아니다. 다만, ESG 개념이 보편화되기 전이라 이 용어를 사용하지 않았을 뿐, 오래 전부터 민관협력을 기반으로 해양환경 오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 있었다. 예를 들어, 마산만 연안오염총량관리 제도를 도입해 운영하는 과정은 수질오염 개선을 위해 민관이 협력한 대표적인 모범사례이다.

마산만은 1970년대 시작된 산업화와 도시화로 인해 오염을 넘어 죽음의 바다가 되었다. 당시 이 지역에 국가산업단지가 들어섰고 마산이 공업도시로 성장하게 되면서 각종 생활하수, 공장폐수, 산업쓰레기가 마산만으로 유입된 결과였다. 특히, 마산만은 지형이 반폐쇄형이라 해류의 이동이 없고 자정작용이 어렵다. 결국 1975년 주변의 해수욕장은 폐쇄되었고, 1979년에는 어패류 채취도 금지되었으며, 1981년에는 적조가 대규모로 발생하는 등 수질오염은 최악에 이르렀다.⁹⁵⁾

〈그림 3-2〉 오염된 마산만 모습



〈1989년 11월〉



〈1981년 마산만 적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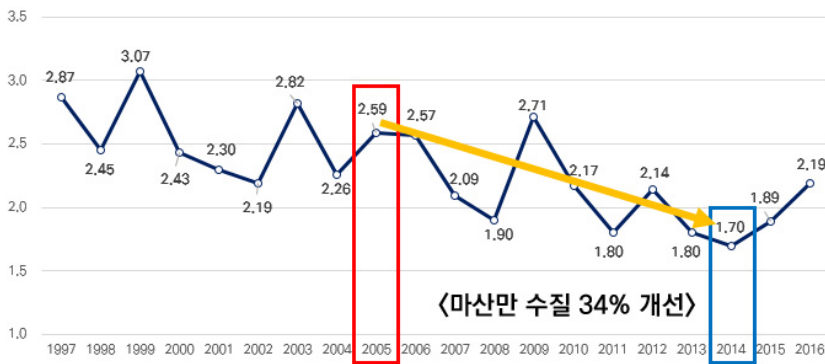
자료: 경남신문(2021.7.27.)(검색일: 2023.4.24.)

95) 경남신문(2021.7.27.)(검색일: 2023.4.24.)

이에, 우리 정부는 1982년 「해양환경관리법」에 근거해 마산만을 특별관리해역으로 지정하였다. 이후 2005년에 연안오염총량관리제도를 도입했으며, 2007년부터 이 제도를 마산만에 처음 적용하고 5년 단위로 수질 개선에 본격 돌입하였다. 연안오염총량관리는 대상 해역이 수용할 수 있는 오염물질량의 범위를 설정하고, 이에 따라 유입량을 관리하는 제도로, 오염물질의 농도가 아닌 배출총량을 기준으로 통제한다. 이 제도를 도입한 2005년에는 마산만 수질의 화학적 산소 요구량(COD)이 2.59mg/L였고, 1차 목표수질은 2.5mg/L로 시작해 점차 목표를 높여갔다. 그 결과, 제도 시행 이후 1차 기간이 종료된 2011년 마산만의 수질은 1.80mg/L까지 매우 개선되었다. 2차(12~16) 기간 종료 때는 COD가 2.19mg/L로 1차 때보다 다시 올라갔지만 수질개선 목표치에는 달성하였다.

〈그림 3-3〉 마산만 화학적 산소 요구량 변화 추이

단위: mg/L



자료: 경남신문(2018.1.5.)(검색일: 2023.4.24.)의 자료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마산만이 연안오염총량관리 제도를 통해 수질오염 목표에 달성하기까지 그 과정에서 우리는 ‘마산만 특별관리해역 민관산학협의회’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 협의회에는 정부, 지방자치단체, 산업계(기업), 학계(연구소 포함), 시민단체가 참여하였다. 이들은 마산만과 관련된 이해관계자로서 민·관·산·학이 모여 10년간 마산만의 수질 개선을 위해 목표수질 감축 목표량 설정, 오염저감을 위한 사업계획 조정 및 합의, 해양환경 정화활동, 관련 교육 시행 등 각자의 위치에서 역할을 다하고 함께 협력하였다. 그 과정에서 관계부처인 해양수산부와 지방자치단체들은 관련 법·제도를 정비하고 정책을 수립해 지원하였으며, 학계 전문가들과 시민환경단체 등은 현장에서 앞장서 변화를 이루어내는데 기여하였다. 그 결과, 죽음의 바다로 불리던 마산만 주변 해수욕장은 다시 시민의 품으로 돌아갔고, 근처 봉암갯벌에도 환경보호종인 잘피, 수달, 붉은발말뚝게 등이 관찰되는 등 해양생태계가 점차 회복되었다.⁹⁶⁾

지금까지 마산만 수질 개선 사례를 통해 확인한 것과 같이, 해양환경 문제는 우리 모두의 문제로 인식되어야 하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더 이상 공공의 영역에만 의지할 것이 아니라 민간이 참여하는 협력 거버넌스 체제로 추진될 수 있도록 민관협력 모델이 필요하다. 현재 민간기업은 ESG 경영 도입으로 환경분야에 자사가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모색하고 있다. 그러므로 정부는 이 기회를 통해 민간기업의 관심과 노력이 해양환경 분야로 대폭 확대되고, 기업이 해양환경 문제 해결의 새로운 핵심 주체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96) 경남신문(2018.1.5.)(검색일: 2023.4.24.)

제2절 ESG 관련 해양환경 분야 정책 현황

앞의 제2장 제2절에서는 범부처 정책방향에 따라 주요 부처별로 추진 중인 ESG 관련 정책 현황을 검토하였다. 이어서 이 절에서는 해양환경 분야에 초점을 맞추어서 ESG와 관련된 정책 현황을 살펴보았다. 주요 관계부처들이 ESG 관련 가이드라인 등 제도를 정비하거나 기업의 ESG 활동 지원을 위한 구체적인 사업을 추진 중인데 반해, 해양환경 분야에서는 ESG 활성화 또는 기업의 ESG 경영 지원을 명시적인 목표로 하여 추진하는 정책은 아직까지는 드물다.

따라서 이 절에서는 우선, 현재 추진 중인 해양환경정책 중에서 ESG와 상대적으로 연관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분야를 도출하고, 분야별로 관련된 법정계획을 분석하여 ESG와 연계가 가능한 사업들을 제시하였다. 여기에서 도출된 사업들은 제4장에서 기업들을 대상으로 ESG 협력 수요조사를 할 때 기초자료로 활용하였다.

1. 해양환경 관련 정책의 범위

해양환경 분야의 모법인 「해양환경보전법」 제2조에 따르면 해양환경이란 “해양에 서식하는 생물체와 이를 둘러싸고 있는 해양수(海洋水), 해양지(海洋地), 해양대기(海洋大氣) 등 비생물적 환경 및 해양에서의 인간의 행동양식을 포함하는 것으로서 해양의 자연 및 생활상태”를 의미한다.⁹⁷⁾ 즉, 해양환경은 ‘해양에 서식하는 생물체’, ‘해양생물체를 둘러싸고 있는 비생물적 환경’, 그리고 ‘해양에서의 인간의 행동양식’ 등 크게 세 가지 요소를

97) 「해양환경보전법」 제2조 제1호

포함하고 있다. 앞의 두 가지는 「환경정책기본법」상의 자연환경의 개념과 유사한 것으로, ‘자연환경’으로서 해양환경을 접근한 것이다. 그러나 「해양환경보전법」상의 해양환경은 ‘해양에서의 인간의 행동양식’도 포함하고 있어 자연환경으로서의 해양환경을 넘어서 광범위하게 정의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같은 법에서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은 “해양오염 및 해양생태계의 훼손을 예방하고 오염물질의 제거 등을 통하여 오염되거나 훼손된 해양을 개선함과 동시에 원래의 상태로 복원·유지하며 해양환경의 공간자원, 생명자원, 식량자원 등을 적절히 활용·이용하는 등의 해양의 건강성을 유지하면서 해양을 지속가능하게 보전·관리·활용하는 행위”로 규정되어 있다.⁹⁸⁾

해양수산부의 현행 조직 체계에서 해양환경정책은 해양환경정책관실에서 총괄한다. 해양환경정책관실에는 해양환경정책과, 해양공간정책과, 해양보전과, 해양생태과 등 네 개 과가 속해 있다. 그러나 해양환경의 개념이 광범위하게 정의되어 있고 해양환경의 보전 및 활용이 다양한 행위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해양환경정책은 해양환경정책관실의 업무에 국한되는 것은 아니다. 해양환경정책관실뿐만 아니라 해양수산생명자원과를 비롯하여 해양관광, 수산, 해운·항만 등 해양수산부의 다양한 부서와도 직간접적으로 관련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런 이유로 해양수산부 소관 법률 중 해양환경정책과 관련 있는 법률을 살펴보면 담당 부서가 해양환경정책관실 소속이 아닌 경우도 드물지 않다.

98) 「해양환경보전법」 제2조 제2호

〈표 3-2〉 해양환경정책과 관련된 주요 법률 현황

담당 부서	법률
해양환경정책과	•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법률
해양환경정책과, 해사산업기술과, 해양보전과	• 해양환경관리법
해양환경정책과	• 항만지역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
해양공간정책과	•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해양공간정책과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항만연안재생과, 해양공간정책과	• 연안관리법
해양생태과	•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해양생태과	•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
생물다양성과(환경부), 해양생태과	•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해양생태과, 자연생태정책과(환경부)	• 습지보전법
해양보전과	•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해양수산생명자원과	•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 · 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해양레저관광과	•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해양레저관광과	•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해양정책과	•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어업정책과	• 수산업법
수산자원정책과	• 수산자원관리법
양식산업과	•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자료: 저자 작성

2. 주요 ESG 지표 내 해양환경 관련 항목

1)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중 해양환경 관련 경제활동

제2장의 제2절에서 살펴본 대로 환경부는 투자 촉진을 위해 녹색경제활

동에 대한 기준과 원칙을 제시하는 한국형 녹색분류체계를 개발했다. 이 분류체계는 ‘온실가스 감축’, ‘기후변화 적응’, ‘물의 지속가능한 보전’, ‘순환경제로의 전환’, ‘오염 방지 및 관리’, ‘생물다양성 보전’ 등 6대 환경목표 별로 구분하여 총 74개의 경제활동을 제시하고 있다.⁹⁹⁾ 6대 환경목표 중에서는 물의 지속가능한 보전을 제외한 나머지 환경목표들은 모두 해양환경 분야와 관련 있다.

각각의 분야별로 살펴보면, ‘이산화탄소 포집’ 분야에서는 블루카본 등 배출되는 이산화탄소를 포집하는 활동이 해양환경과 관련된 경제활동에 포함된다. ‘기후변화 적응’ 분야에서는 기후변화 적응을 위한 소재·부품·장비 제조, 재난 방지 및 기후예측시설·시스템 구축·운영, 기후변화 적응 관련 조사·연구나 교육·문화·예술 활동이 해당된다. 그리고 ‘자원순환 분야’는 해양폐기물의 발생 억제, 수거·회수·선별·분리, 재활용·새활용, 열분해, 에너지 회수까지의 전 활동이 포함된다.

대기오염 방지 및 처리는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대기오염물질을 방지 및 처리하는 활동이다. 해양환경과 관련해서는 「항만대기질법」 또는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른 대기오염물질 방지 및 처리 활동이 포함될 수 있다. 마찬가지로 해양오염 방지 및 처리는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른 오염물질을 방지 및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마지막으로, ‘육상 및 해양생태계 보호·복원’은 습지나 바다숲 등 육상 및 해양보호지역, 하천 및 연안 생태계의 보호·복원을 위한 활동이며, ‘생물종 보호·보전 활동’은 멸종위기 야생생물, 해양보호생물, 국제적 멸종위기종을 보호·보전하거나 외래생물을 퇴치하기 위한 활동을 말한다.¹⁰⁰⁾

99) 환경부(2022), pp. 20-27.

100) 위의 책, pp. 20-27.

〈표 3-3〉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중 해양환경 관련 경제활동

분야	경제활동	설명
[제1절 녹색부문] 1. 온실가스 감축		
바. 이산화탄소 포집	(1) 배출되는 이산화탄소 포집	이산화탄소를 포집하는 설비를 구축·운영하는 활동
[제1절 녹색부문] 2. 기후변화 적응		
가. 기후변화 적응	(1) 기후변화 적응 핵심기술 활용을 위한 소재·부품·장비 제조	기후변화 적응의 핵심기술인 (1) 재난 방지시설·시스템, (2) 기후 예측시설·시스템, (3) 물공급, (4) 해수담수화, (5) 하폐수 재이용에 필요한 소재·부품·장비를 생산하기 위한 설비를 구축·운영하는 활동
	(2) 재난 방지 및 기후 예측시설·시스템 구축·운영	태풍, 홍수 등 기후변화에 따른 재난 방지 또는 기후 예측시설·시스템을 구축·운영하는 활동
가. 기후변화 적응	(3) 기후변화 적응 관련 조사·연구	기후변화 적응과 관련된 조사·연구 활동
	(4) 기후변화 적응 관련 교육·문화·예술 활동	기후변화 적응, 온실가스 감축, 환경개선 관련 (1) 교육, (2) 문화·예술 활동
[제1절 녹색부문] 4. 순환경제로의 전환		
가. 자원 순환	(1) 폐기물 발생 억제	자원의 효율적인 이용을 통하여 폐기물 발생 억제를 위한 생산 설비를 구축·운영하는 활동
	(2) 폐기물 수거·회수·선별·분리	폐기물의 수거·회수 및 선별·분리 설비를 구축·운영하는 활동
	(3) 폐기물 재활용 (재사용·재제조·재생이용)·새활용	(1) 재활용가능자원을 그대로 또는 고쳐서 다시 쓰거나 생산활동에 다시 사용하는 재사용, (2) 분해·세척·검사·보수·조정·재조립 등 일련의 성능을 유지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드는 재제조, (3) 재활용 가능자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원료물질로 다시 사용하는 재생이용 (폐유 정제유, 폐금속 재자원화, SRF, 바이오매스 등을 활용한 플라스틱 원료, 불소화합물(F-gas) 재생이용 등), (4) 버려지는 자원에 디자인을 더하거나 활용방법을 바꿔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내는 새활용, (5) 산업단지 또는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부산물을 원료나 에너지로 재활용하는 활동 중 하나 이상을 위한 설비를 구축·운영하는 활동
	(4) 폐기물 열분해	폐기물을 열로 분해하여 (1) 원료 또는 연료를 만들거나, (2) 그 원료 또는 연료를 가공하여 석유·화학제품을 생산하는 설비를 구축·운영하는 활동
	(5) 폐기물 에너지 회수	폐기물로부터 에너지를 회수하기 위한 설비를 구축·운영하는 활동

분야	경제활동	설명
[제1절 녹색부문] 5. 오염 방지 및 관리		
가. 대기오염 방지 및 처리	(1) 대기오염 방지 및 처리	대기오염을 예방하기 위해 입자상물질, 황산화물, 질소산화물, 휘발성유기화합물 등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대기오염물질에 대하여 사전 예방·저감, 처리, 측정·감시하기 위한 장비, 시설을 설치·개보수·운영하는 활동
나. 해양오염 방지 및 처리	(1) 해양오염 방지 및 처리	해양에 유입 또는 해양으로 배출되어 해양환경에 해로운 결과를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폐기물, 기름, 유해액체물질 및 포장유해물질 등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른 오염물질의 배출방지, 확산방지·제거, 수거·처리하는 장비, 시설을 설치·개보수·운영하는 활동
[제1절 녹색부문] 6. 생물다양성 보전		
가. 생물다양성	(1) 육상 및 해양 생태계 보호·복원	습지·바다숲 등 육상·해양 보호지역, 하천 및 연안 생태계의 보호·복원을 위한 활동
	(4) 생물종 보호·보전	멸종위기 야생생물·해양보호생물·국제적 멸종위기종을 보호·보전하거나 외래생물을 퇴치하기 위한 활동

자료: 환경부(2022), pp. 20~27을 기반으로 저자 재정리

2) K-ESG 가이드라인 기본 진단항목 중 해양환경 관련 항목

K-ESG 가이드라인은 기업의 ESG경영 평가를 위해 네 개 영역(P·E·S·G), 27개 범주에서 총 61개의 기본 진단항목을 제시하고 있다.¹⁰¹⁾ 이 중에서 영역을 기준으로 하면, 해양환경은 주로 환경(E)과 사회(S) 영역과 관련이 있다. 범주 기준으로는 ‘원부자재’, ‘온실가스’, ‘폐기물’, ‘오염물질’, ‘환경 라벨링’ 및 ‘지역사회’ 등 총 27개 중에서 여섯 개 범주가 해양환경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범주별 진단항목을 구체적으로 확인해 보면 ‘원부자재’, ‘온실가스’, ‘환경 라벨링’, ‘지역사회’는 해양환경과 연계할 수 있는 항목을 포함하고 있으나, ‘폐기물’과 ‘오염물질’의 경우 현재 가이드라인에 제시되어 있는 기본 진단항목들은 해양환경 분야와 직접적인 관련성이 낮은 것으로 판단된다.

101) 관계부처 합동(2021), pp. 26~28.

〈표 3-4〉 K-ESG 진단항목 중 해양환경 분야와 연계 가능한 항목

영역	범주	기본 진단항목	해양환경 분야 적용(예시)
환경(E)	원부자재	E-2-2 재생 원부자재 비율	해양폐기물 기반 재생 원부자재
	온실가스	-	-
	폐기물	-	-
	오염물질	E-7-1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항만 및 선박의 대기오염물질
	환경 라벨링	E-9-1 친환경 제품 및 서비스 비율	해양폐기물, 수산/해조류 부산물 활용 친환경 제품 등
사회(S)	지역사회	S-7-1 전략적 사회공헌	해양환경개선 활동, 해양환경 ODA, 해양환경교육, 자원순환 스타트업 창업 지원(재정 및 기술개발 지원, 일자리 창출 등) 등 다수

자료: 저자 작성

우선, 환경(E) 영역에서 현재 제시되어 있는 기본 진단항목 중에서 해양 환경 분야와 연계할 수 있는 항목은 ‘E-2-2 재생 원부자재 비율’이다. 재생 원부자재는 천연자원 사용을 줄이고 자원순환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재 활용이 가능한 자원을 원료물질로 재사용하도록 만든 것이다. 재생 원부자재 비율은 제품이나 서비스를 생산할 때 총 투입된 원부자재 중에서 재생 원부자재의 비율로 계산할 수 있다. 특히 제품 대량 생산을 위해 원부자재 사용량이 많은 제조업이나 광업 등이 우선적으로 해당될 수 있으나 종이나 플라스틱 등을 원부자재로 사용하는 서비스업 등에도 적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해양폐기물을 활용하여 만든 재생 나일론이나 펠릿 등을 원부자재로 투입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될 수 있다.

또 다른 항목은 ‘E-7-1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인데, 이 항목은 기업이 소유, 관리, 통제하는 사업장과 같은 물리적 경계 내에서 발생하는 대기오염 물질의 저감 성과를 평가한다. 이 항목은 원래 「대기환경보전법」을 기준으로 하고 있으나, 이를 응용하면 항만구역 내 사업장이나 선박에 적용할 수 있는 추가 진단항목을 개발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E-9-1 친환경 제품

및 서비스 비율’은 전체 제품 중에서 국내외 인증표준 등에 따라 친환경 제품으로 인증받은 제품의 비율을 말한다. 이를 해양환경 분야에 접목해 보면, 해양폐기물이나 수산부산물 등을 활용한 제품에 대한 친환경 인증을 생각해 볼 수 있다.

해양환경과 관련한 ESG 활동의 대다수는 사회(S) 영역의 ‘S-7-1 전략적 사회공헌’과 연계할 수 있다. 이 항목은 기업이 지역사회에 일원으로서 지역의 환경·사회문제를 해결하는 데 기여했는지를 평가한다. K-ESG 가이드라인은 기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기업이 적용할 수 있는 11개 분야를 제시하고 있다. 이 중에서 해양환경과 연계할 수 있는 분야는 특히 ‘환경 보호/개선’, ‘교육 및 인식 개선’, ‘국제 교류/구호’, ‘창업 생태계 육성’, ‘과학/기술 발전’, ‘일자리 창출’ 그리고 ‘기타 자원봉사’ 등이다. 대표적으로 해변 정화와 같은 다양한 해양환경개선 활동, 해양환경교육, 해외 해양환경 ODA 사업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 그리고 예를 들어 어떤 기업이 해양폐기물 자원순환 스타트업의 창업을 기술적·재정적으로 지원한다면, ‘과학/기술 발전’, ‘창업 생태계 육성 및 일자리 창출’ 성과로도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림 3-4〉 ‘전략적 사회공헌’ 11개 항목 중 해양환경 연계 가능 항목

문화/체육 진흥	과학/기술 발전	국제 교류/구호	보건/의료 증진
환경 보호/개선	사회적 약자 권익 신장	소비자 보호	교육 및 인식 개선
일자리 창출	창업 생태계 육성	기타 자원봉사 등	

주: 하늘색은 해양환경 분야와 연계 가능한 항목을 뜻함
 자료: 관계부처 합동(2021), p. 113을 참고하여 저자 작성

전략적 사회공헌은 일회성 또는 단순 기부형 사업은 배제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기업의 ESG 활동이 전략적 사회공헌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사업적·사회적 필요에 따라 추진 분야별로 대표 프로그램을 제시하고, 장기적이고 지속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중장기 실행계획을 수립하며, 성과를 측정할 수 있도록 성과관리 지표(KPs)를 설정하고 주기적인 이행점검이 필요하다.

한편 가이드라인은 기본항목 외에도 추가 진단항목을 활용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기본 진단항목은 모든 산업영역에서 가능한 한 많은 기업에 공통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설정하였기 때문에 기업 규모나 산업 유형 또는 기업별 ESG 경영 목표에 따라서는 적용하는 데 한계가 있을 수 있다. 따라서 가이드라인은 기본 진단항목 외에 추가 진단항목을 제공하고 있으며, 필요시 기본 진단항목을 대체해서 활용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예를 들면, 앞의 제2장 제2절 산림청의 기업 ESG 지원 정책에서 다룬 바와 같이, 환경(E) 분야의 추가 진단항목 중 ‘산림탄소흡수량’은 기업이 자신들의 탄소배출을 상쇄하기 위해 신규조림, 재조림, 산림경영, 식생복구, 목제품 이용, 산림바이오매스 이용, 산림전용 및 산림황폐화 방지 활동(REDD+ 등) 등 산림을 통해 탄소 흡수량을 획득할 경우 이를 평가해서 점수화하고 있다.

이처럼 산림탄소흡수량의 사례와 같이 해양환경 분야에서도 추가 진단항목을 발굴하고 구체적인 산출 및 점검 기준을 개발한다면, 현재는 ‘전략적 사회공헌’ 항목으로 분류되는 다수의 ESG 활동들을 ‘환경(E)’ 영역의 성과로 인정받을 수 있을 것이다.

3. ESG 관련 해양환경 분야 주요 계획 및 사업

위에서 한국형녹색분류체계와 K-ESG 가이드라인을 해양환경 분야와 연계하여 분석한 결과를 종합해보면, 특히 온실가스 감축, 기후변화 적응, 자원순환, 대기 및 해양 오염 방지, 생물다양성 보전, 그리고 지역사회 공헌이 해양환경 분야에서 ESG와 관련된 핵심 이슈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해양환경 분야의 주요 계획들 중에서 이러한 이슈들을 중점적으로 다루는 계획을 분석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먼저, 각 계획의 특징을 개괄적으로 살펴보고 개별 계획의 추진과제들 중에서 민간기업의 ESG와 연계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들을 도출하였다. 이 결과는 제4장에서 설문조사와 심층인터뷰를 통해 기업들의 수요를 조사할 때 기초자료로 활용하였다.

1) ESG 관련 해양환경 분야 주요 계획

‘해양환경종합계획’은 「해양환경보전법」에 따라 10년 단위로 수립되는 해양환경 분야 최상위 계획으로서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을 위한 정책방향과 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제5차 계획(2021~2030)은 6대 추진전략과 22개 추진과제로 이루어져 있다. 그중에서 ① 해양 기후변화 과학적 대응능력 강화, ② 해양 분야 온실가스 저감수단 다양화, ③ 해양생태계 기후변화 적응력 확보, ④ 해양환경 분야 국제협력 선도, ⑤ 시민 참여형 해양쓰레기 관리 기반 구축, ⑥ 스마트 해역환경 관리체계 구축, ⑦ 해양보호구역 확대 및 관리체계 고도화, ⑧ 디지털 기반 스마트 해양대기 관리시스템 구축, ⑨ 해양생태관광 활성화, ⑩ 첨단 해양바이오산업 활성화를 대표 정책과제로 제시하였다.¹⁰²⁾

102) 해양수산부(2021d), p. 43.

‘해양수산 분야 2050 탄소중립 로드맵’은 2050년 해양수산 탄소 네거티브(-136.2만 톤)를 비전으로, 5대 부문(해운, 수산·어촌, 해양에너지, 블루카본, 항만)별 온실가스 감축 및 흡수원 확대 전략을 제시하고 있다.¹⁰³⁾ ‘제4차 기후변화대응 해양수산부문 종합계획(2022~2026)’은 2030 NDC 및 해양수산분야 2050 탄소중립 로드맵의 이행을 위한 단기 이행계획으로서 온실가스 배출 저감, 온실가스 흡수 및 전환, 기후위기 선제적 대응 및 이행력 확보 등 4대 추진전략별로 세부전략을 제시하고 있다.¹⁰⁴⁾

‘제1차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 기본계획(2021~2030)’은 2020년 「해양폐기물법」 제정에 따라 수립된 계획이다. 이 계획은 크게 두 부분으로 구분되어 있는데, 해양폐기물 관리 분야는 해양폐기물의 발생 예방, 수거·운반 체계 개선, 처리·재활용 촉진 및 관리 기반 강화 등 해양폐기물의 전 주기적 관리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¹⁰⁵⁾ 해양오염퇴적물과 관련해서는 해양오염퇴적물의 발생 예방, 정화·복원 사업의 관리 강화, 관련 기술개발 및 시장 확대 등을 다루고 있다.¹⁰⁶⁾

‘제2차 해양생태계 보전·관리 기본계획(2019~2028)’은 「해양생태계법」에 따라 수립된 기본계획으로 ① 해양생태계 서식지 보호, ② 해양생물 보호·복원, ③ 해양생태계서비스 혜택 증진, ④ 해양생태계 보전·관리 기반 선진화, ⑤ 해양생태계 거버넌스 체계화에 관한 중점 추진과제 총 16개를 제시하고 있다.¹⁰⁷⁾ ‘제1차 갯벌 등의 관리 및 복원에 관한 기본계획(2021~2025)’은 2020년에 「갯벌법」이 제정되면서 갯벌과 그 주변지역을 공간적 범위로 하여 수립된 계획이다. 이 계획은 ① 갯벌관리의 과학적 기반 강화, ② 실효적 관리수단 확대, ③ 갯벌생태계 복원을 통한 탄소흡수원

103) 해양수산부(2021e), pp. 10~16.

104) 해양수산부(2022), p. 18.

105) 해양수산부(2021c), p. 47.

106) 해양수산부(2021c), p. 123.

107) 해양수산부(2019), p. 57.

확충, ④ 갯벌 생태계서비스 활용 증진 및 ⑤ 갯벌관리 거버넌스 기반 확보 등 5대 추진전략을 바탕으로 기존의 보전 중심의 관리정책에서 벗어나서 갯벌의 자연적 가치를 제고하고, 다양한 생태계서비스의 현명한 이용을 지향하고 있다.¹⁰⁸⁾

‘제1차 수산부산물 재활용 기본계획(2023~2027)’은 2022년 7월부터 「수산부산물법」이 시행됨에 따라 수립된 최초의 법정계획이다. 수산부산물의 재활용 산업 육성을 위해 이 계획에서는 자원순환 전 주기 기반을 구축하고, 연안 및 어장 환경개선이나 소재화 등 고부가가치 재활용을 위한 기술개발을 추진하며 수산부산물 재활용 생태계를 조성하는 것을 주요 전략으로 삼고 있다. 또한, 현행 「수산부산물법」상 폐류의 껍데기로 한정되어 있는 수산부산물의 범위를 수산물의 포획·채취·양식 가공 판매 과정에서 기본 생산물 외에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뼈, 지느러미, 내장, 껍질 등으로 확대하는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¹⁰⁹⁾

‘제2차 해양환경교육 종합계획(2021~2025)’은 「해양환경보전법」과 「환경교육진흥법」에 근거해 수립된 종합계획이다. 이 계획은 ① 저변 확대를 위한 기반 구축, ② 학교 해양환경교육 활성화, ③ 사회 해양환경교육 활성화 등 3대 분야를 바탕으로 추진과제 총 열 개를 제시하고 있다.¹¹⁰⁾ ‘제1차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 활성화 기본계획(2021 ~2025)’은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립된 기본계획이다. 이 계획은 ① 해양교육문화 콘텐츠 강화, ② 해양교육문화산업 생태계 조성, ③ 해양교육문화 제도·기반 정비를 추진전략으로 하며, 이를 이행하기 위해 총 아홉 개의 추진과제를 제시하고 있다.¹¹¹⁾

108) 해양수산부(2021a), p. 23.

109) 해양수산부 보도자료(2023.1.12.)(검색일: 2023.4.22.)

110) 연합뉴스(2021.10.25.)(검색일: 2023.4.22.)

111) 해양수산부(2021b), p.10.

2) 민간기업의 ESG와 연계 가능한 해양환경 분야 사업

위에서 개괄한 주요 계획들의 추진과제들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그 중에서 민간기업의 ESG와 연계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들을 도출하였다. 크게 세 가지 기준을 적용하였는데, 첫 번째는 ‘해양환경’과의 관련성이다. ‘제4차 기후변화대응 해양수산부문 종합계획’처럼 해양수산 분야 전체를 포괄하는 종합계획의 경우, 해양환경과 관련 없는 추진과제들이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이런 과제들은 일차적으로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둘째, ‘기업이 수행할 수 있는 역할의 존재 여부’이다. 예를 들어 ‘해양수산물 유전자변형 생물체(LMO) 안전관리’는 기후변화가 해양생태계에 미치는 잠재적인 위협 요인을 관리하기 위해 필요하다. 그러나 이 과제는 “해양수산물 LMO 연구·생산시설 및 대량 배양시설에 대한 유출 방지 등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안전한 LMO 연구·산업활동을 도모”하고, “수입·생산된 LMO의 유통 관리체계를 개선하며, 위해성 저감을 위한 비의도적 자연방출에 따른 위해성 평가 및 관리체계를 마련”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¹¹²⁾ 따라서 민간기업이 아니라 관련 전문연구기관과 행정기관이 수행하는 것이 더 적합하다. 반면에 ‘갯끈풀 등 유해해양생물 관리’는 기업이 사회공헌 활동의 일환으로 직접 제거 작업에 참여할 수 있다. 이처럼 민간기업이 참여해서 특정 업무를 직접 수행하든지, 재정적 또는 기술적 지원 등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수행하든지 민간기업이 담당할 수 있는 ‘구체적인 역할’이 있어야 한다.

마지막으로는 ‘지속가능성’이다. 가능한 한 일회적인 이벤트성 사업보다는 지속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사업들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였다. 이렇게 해서 도출한 결과는 아래의 표와 같다.

112) 해양수산부(2022), p. 62.

일부 사업은 기업이 단독으로 수행할 수 있지만, 시민단체, 정부, 전문기관 등 다른 주체들과의 협력이 필요한 사업들도 있다. 즉, 사업의 특성에 따라서 추진모델은 다를 수 있다. 또한, 특정 기업군에 적합한 경우¹¹³⁾와, 산업 유형을 불문하고 공통적으로 적용 가능한 사업들도 있다. 여기서는 일단 해양환경 분야에서 추진 또는 계획 중인 사업들 중에서 민간기업의 ESG와 연계할 수 있는 사업들을 전체적으로 제시하는 데 주안점을 두었다. 이러한 사업들이 기업들의 수요에 실제로 부합하는지 그리고 구체적인 추진모델 등에 대해서는 제4장에서 심층적으로 논의하였다.

〈표 3-5〉 해양환경 분야 사업 중 민간기업의 ESG와 연계 가능한 사업(안)

사업	온실 가스 감축	기후 변화 적응	자원 순환	해양 오염 방지· 개선	생물 다양성 보전
바다숲 조성	●	●		●	●
식생·비식생 갯벌 보호·복원	●	●		●	●
갯벌 생태 모니터링		●		●	●
갯벌 생태마을 운영		●		●	●
유해해양생물(갯끈풀) 제거 및 모니터링		●			●
유해해양생물(괘생이모자반 등) 재활용 기술개발		●	●	●	●
해양(보호)생물 서식지 관리		●		●	●
멸종위기 해양생물종 복원 및 증식		●			●
수족관 내 해양생물 전시·홍보·교육		●			●
선체부착생물의 친환경적 제거 및 수거		●		●	●
선박평형수 처리장치 설치		●		●	●
반려해변(해변 정화) & 모니터링	●			●	●
연안정화의 날	●			●	●
침적쓰레기 수거	●			●	●

113) 예를 들면 오염퇴적물 정화 및 사후 모니터링, 원료물질 하역·운송·야적 시 비점오염원 관리, 해양 직접 방류 배출수 수질 모니터링은 임해산업단지에 입지한 사업장에 적합한 사업들임

사업	온실 가스 감축	기후 변화 적응	자원 순환	해양 오염 방지· 개선	생물 다양성 보전
해상국립공원 해양폐기물 수거	●			●	●
낙시터 환경개선 사업 및 캠페인(납추 등 오염물질 수거)	●			●	●
항만 내 선박폐기물(생활쓰레기, 로프 등) 집하장 설치	●		●	●	●
도서 해양폐기물 인프라 확충: 집하장, 정화운반선, 전처리·에너지화 시설 등	●		●	●	●
도서지역 해양폐기물 에너지 마을	●		●	●	●
해양폐기물 활용 플라스틱 대체재 기술개발: 재생 나일론, 재생 포장재 등	●		●	●	●
해양폐기물 업사이클링 제품 개발 및 구매 활성화	●		●		
패각 자원화: 수거체계, 집하·전처리 시설, 재활용 기술개발	●		●		
해조류 부산물 재활용 기술개발, 재활용 제품 구매	●		●		
친환경 해안선 복원(블루리빙)	●	●			●
인공해안선 연성화(소프트리빙)	●	●			●
오염퇴적물 정화 및 사후 모니터링				●	
원료물질 하역·운송·야적 시 비점오염원 관리				●	
해양 직접 방류 배출수 수질 모니터링				●	●
해양환경교육: 해양환경 이동교실 운영	○	○	○	○	○
해양환경교육: 해양환경 교보재 제작·보급	○	○	○	○	○

자료: 저자 작성

한편, 위에서 제시한 사업들 중 상당수는 국제협력사업의 형태로 추진할 수 있다. 대표적으로, 동남아시아나 아프리카 등 지원이 필요한 국가에서 기업이 염습지 식생 복원사업이나 다양한 해양생태계 보전 사업, 지역주민

역량강화를 위한 해양환경 교육·훈련 사업 그리고 집하장 등 해양폐기 수거·처리 인프라 구축 등의 지원 사업을 수행하는 것이다. 이 중에서 예를 들면 블루카본이나 해양폐기물 인프라 구축 사업 등은 특히 온실가스 감축 실적으로 활용할 수도 있다.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할당대상업체는 이 실적을 국제감축사업으로 연계해서 배출권으로 전환할 수 있다. 의무할당 대상업체가 아닌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를 통해 자발적 감축 노력으로 인증 받을 수도 있다.

4. 정부의 민간참여형 해양환경 분야 ESG 정책 현황

2022년 국내 주요 민간기업이 ESG 경영 실천의 일환으로 해양수산부가 주도하는 사업에 참여하게 되면서 기업들은 해양환경 분야를 ESG와 연계할 수 있는 새로운 영역으로 보고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다. 위에서 민간기업이 ESG와 연계하여 참여 가능한 해양환경 분야 사업(안)을 제시하였는데, 이중 국가주도형 사업인 바다숲 조성 사업과 갯벌복원 사업, 그리고 반려해변사업 등에는 이미 민간기업이 참여하고 있다. 갯벌복원과 바다숲 조성 사업의 경우, 정부와 기업이 업무협약을 맺고 기존의 국가주도 사업절차에 따라 추진 중이다. 한편, 반려해변 제도는 민간기업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정해진 가이드라인에 따라 활동하면 된다. 해양환경 분야에 민간기업의 참여 현황 및 사례는 제4장 제1절에서 자세하게 다루기로 하고, 여기서는 해양수산부가 추진하는 대표적인 국가주도형 사업인 바다숲 조성과 갯벌복원 사업을 중심으로 살펴보겠다.

1) 국가주도형 사업 ① : 갯벌복원사업

갯벌복원사업은 정부가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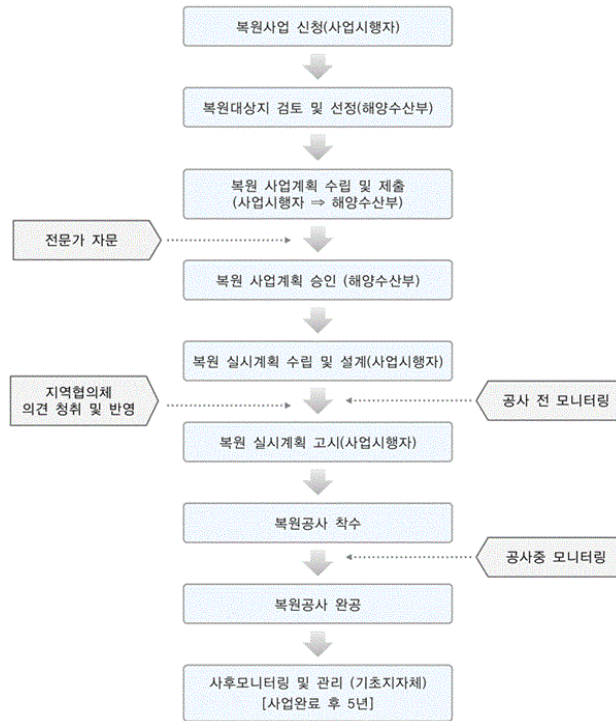
에 관한 법률」(이하, 갯벌법)에 근거해 추진하는 국가주도형 사업이다. 2017년 이전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적으로 사업을 시행하였으나, 이후로는 해양환경공단(KOEM)이 해양수산부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다. 이 사업은 해수소통형, 갯벌재생형, 기능개선형, 경관개선형, 기수역복원형으로 유형이 총 5가지 였는데, 탄소흡수원 확충을 위해 유휴 갯벌에 염생식물 군락지를 조성하는 갯벌 식생 복원사업이 2021년부터 새롭게 추가되었다. 우리나라 갯벌은 대부분 비식생 갯벌인데 이는 탄소흡수원으로 지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국제사회로부터 블루카본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국내의 염습지 면적을 확대하기 위해 갯벌 식생 복원사업을 새로운 유형으로 추가하게 된 것이다.¹¹⁴⁾

갯벌복원사업에 관한 세부사항과 절차는 ‘갯벌복원사업 지침’을¹¹⁵⁾ 따른다. 사업은 대상지 선정, 사업 시행, 이관지 사후관리까지 총 3단계로 진행된다. 첫째, 대상지 선정 단계에서는 사업시행자가 복원사업을 신청하면, 해양수산부에서 복원 대상지를 검토해 선정한다. 이후 사업시행자가 복원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해양수산부에 제출하면, 부처에서 전문가 자문을 거쳐 복원 사업계획을 승인하고, 사업비를 배정하게 된다. 현재 갯벌복원사업은 국비와 지방비 각각 7:3 비율로 부담한다. 둘째, 사업 시행 단계에 접어들면, 사업시행자가 복원 실시계획을 수립·설계하여 지역협의체로부터 의견을 청취한 후 이를 계획에 반영하고, 공사 전 모니터링을 실시한 뒤 복원 실시계획을 최종 고시해야 한다. 이후 갯벌 복원공사에 착수하게 되고, 공사가 완료되면 5년 후 해당 지자체에 관리 권한을 이양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사후관리 단계에서는 해당 지자체가 이관 받은 복원지를 사후 모니터링하고 관리하게 된다.

114) 해양수산부 보도자료(2021.12.3.)(검색일: 2023.8.27.)

115) 갯벌복원사업 지침

〈그림 3-5〉 갯벌복원사업 추진 절차



자료: 갯벌복원사업 지침, 별표 1

갯벌복원사업에 민간기업이 참여한 사례로는 2022년 11월 해양수산부와 기아가 맺은 업무협약이 국내 최초이자 현재 유일하다. 기아는 지속가능경영 차원에서 해양생태계의 복원 및 관리를 지원하는 블루카본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는데, 그 일환으로 해양수산부와 MOU를 체결하여 유휴 갯벌에 염생 식물 군락지를 조성하고 복원하는 갯벌 식생 복원사업을 추진하게 되었다. 서산 가로림만, 태안 근소만, 신안 북부권역, 제주 성산읍 총 4개소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시작하고, 2050년까지 660km²의 염습지를 조성할 계획이다.¹¹⁶⁾

116) 해양수산부 보도자료(2022.11.28.)(검색일: 2023.10.1.)

2) 국가주도형 사업 ② : 바다숲 조성 사업

바다숲 조성 사업은 전국 연안에 갯녹음으로 훼손된 해역과 바다숲 조성이 가능한 해역에 대규모로 바다숲을 조성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연안 생태계와 수산자원 서식처를 복원하고 탄소흡수원을 확보하기 위해 추진하는 국가사업이다. 이 사업은 해양수산부 수산자원정책과에서 담당하며, 한국수산자원공단이 「수산자원관리법」과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 근거하여 시행하고 국비 100%로 진행된다.

이 사업에는 해양수산부, 지방자치단체, 한국수산자원공단이 참여하고, 사업 절차는 표준프로세스(SP)에 따라 사업신청, 사업선정, 계획수립 및 시행, 자금배정, 이행점검, 사업평가 및 환류까지 총 6단계로 진행된다. 첫째, 사업신청 단계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바다숲 조성 사업 희망지역을 선정하여 한국수산자원공단에 추천하면, 공단에서 이를 취합해 해양수산부에 제출한다. 둘째, 한국수산자원공단은 사업후보지에 대한 조사 및 평가 결과를 설명하고, 사업희망지를 접수한 해양수산부에서 바다숲 선정위원회를 구성해 사업지를 최종 선정한다. 셋째, ③ 공단에서 바다숲 조성관리사업 세부계획을 수립하고, 해양수산부는 사업 추진 계획과 공단이 수립한 세부계획을 승인한다. 넷째, 공단에서 해양수산부로 보조금 교부신청서를 제출하면 해양수산부에서 보조금을 교부한다. 다섯째, 공단은 사업 추진 실적을 분기별로 보고하고, 어업인과 지자체로부터 협조를 받아 4년 동안 사업을 이행하게 된다. 해양수산부는 사업 추진과 예산 집행 등을 점검하고, 지방자치단체는 이행점검 시 협조하게 된다. 마지막으로, 사업이 종료되면 공단은 매년 2회씩 사업을 평가하고, 해양수산부는 사업평가와 환류의 총괄을 맡는다. 또한, 사업지와 관련된 지자체로 바다숲을 이관하며, 해당 지자체는 사업 완료지에 대해 사후관리를 맡게 되는데, 이때 지자체는 공단에 사후관리를 다시 위탁하게 되고, 공단은 이를 다시 받게 되는 구조로 추진되고 있다.¹¹⁷⁾

〈표 3-6〉 국가 바다숲 조성 사업 추진 절차

담당기관	(1) 사업신청	(2) 사업선정	(3) 계획 수립 및 시행
해양수산부	• 사업시행지침 시달	• 바다숲 선정위원회 구성하여 사업지 선정	• 바다숲 조성관리사업 추진 계획 승인(이사회 의결→해양수산부 승인) • 공단의 바다숲 조성관리 사업 세부계획 승인(보조금 확정 시)
시도	• 시군구에서 추천한 구역 중에서 우선순위 정하여 공단에 추천	• 해당 없음	• 해당 없음
시군구	• 바다숲 조성관리사업 후 보지 목록표에서 사업희망지역을 시도에 추천	• 해당 없음	• 해당 없음
공단	• 시도 추천목록 및 구비서류 등 취합하여 해양수산부에 제출	• 사업후보지 조사·평가 결과 설명 등	• 바다숲 조성관리사업 세부계획 수립
담당기관	(4) 자금배정	(5) 이행점검	(6) 사업평가 및 환류
해양수산부	• 보조금 교부(해양수산부→공단)	• 사업 추진, 예산 집행 등 점검	• 사업평가 및 환류 총괄 • 사업 완료 후 해당 지자체로 이관
시도	• 해당 없음	• 이행점검 등 협조	• 사업완료지에 대해 사후관리
시군구	• 해당 없음	• 이행점검 등 협조	• 사업완료지에 대해 사후관리
공단	• 보조금 교부신청서 제출	• 사업 추진 실적 분기별 보고, 어업인 및 지자체와 유기적인 협조 등	• 연 2회 사업평가 • 정산보고서 제출 • 지자체로부터 사후관리 위탁

자료: 해양수산부(2021)(검색일: 2023.10.1.), p. 21.

바다숲 조성 사업은 갯벌복원사업 대비 민간기업의 참여가 상대적으로 활발한 편이다. 사업 추진체계는 KB국민은행, 현대자동차, 효성그룹과 같이 해양수산부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추진하는 경우도 있는데 반해, 사업

117) 해양수산부(2021)(검색일: 2023.10.1.), p. 21.

시행기관인 한국수산자원공단과 직접 협력 관계를 맺고 추진하는 사례도 있다.

3) 연안 탄소흡수원 관리 및 활용 촉진 조례 제정

위에서 기술한 것과 같이 중앙정부에서 민간기업과 함께 탄소흡수원 확보를 위한 국가사업을 추진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데, 최근 지방자치단체도 블루카본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지역의 연안 탄소흡수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정책 마련에 나섰다. 2023년 2월 전라남도가 국내 최초로 「연안 탄소흡수원 관리 및 활용 촉진 조례」를 제정하였고, 이어서 같은 해 5월 전라북도에서 동일 명칭의 조례를 제정하였다.¹¹⁸⁾ 전라남도의 경우, 전국 연안 지자체 중 해안선 길이가 가장 길고 갯벌면적도 가장 넓어 그만큼 블루카본 자원이 풍부한 곳이다. 이러한 자연적, 지리적 배경을 활용해 비식생 갯벌, 바다숲, 염습지 등 다양한 블루카본 자산의 탄소흡수 능력을 인정받고, 연안 탄소흡수원의 보존·관리 및 확충을 통해 2050 탄소중립 사회 실현과 기후위기 대응에 기여하고자 전국에서 가장 먼저 연안 탄소흡수원 정책을 마련하게 되었다.

전라남도와 전라북도 조례는 약 10여개의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고 내용은 대체로 유사하다. 민간기업의 참여 관련해서는, 전라남도 조례 제10조에서 연안 탄소흡수원 관리와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필요시 기업과도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 최근 전라남도 여수시에서도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해 지역 내 산단 기업의 ESG 경영과 연계하여 여수시만의 블루카본 정책을 마련하고 있으며, 그 일환으로 시 차원의 연안 탄소흡수원 관리 및 활용 조례 제정을 추진 중이다.

118)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검색일: 2023.10.1.)

〈표 3-7〉 전남·전북 연안 탄소흡수원 관리 및 활용 촉진 조례 주요 내용

구분	전라남도 조례	전라북도 조례
제1조	목적	목적
제2조	정의	정의
제3조	도지사의 책무	도지사의 책무
제4조	실태조사	기본계획의 수립
제5조	연안 탄소흡수원의 확충	실태조사
제6조	조사·연구	연안 탄소흡수원의 확충
제7조	보호·관리	조사·연구
제8조	홍보	보호·복구
제9조	업무의 위탁	홍보
제10조	협력체계 구축	업무의 위탁
제11조	-	협력체계 구축

자료: 전라남도 연안 탄소흡수원 관리 및 활용 촉진 조례(전라남도 조례 제5689호, 2023.2.28.), 전라북도 연안 탄소흡수원 관리 및 활용 촉진 조례(전라북도 조례 제5269호, 2023.5.8.)

제3절 종합 및 시사점

제3장에서는 해양환경 전반에 대한 국민과 기업의 인식정도를 파악해보았고, 이 분야에 민간기업의 ESG 활성화가 필요한 이유, 그리고 ESG와 관련된 우리나라 해양환경 분야 정책 현황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였다.

KMI가 수행한 국민인식조사와, 본 연구에서 국내 민간기업 ESG 담당자를 대상으로 한 인식조사 결과를 각각 분석했는데, 모두 해양환경에 어느 정도 관심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기업의 관점에서는 현재 해양환경에서 일어나는 문제가 심각하다고 봤으며, 시급히 해결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반면 해양환경 문제를 해결하는데 정부의 노력과 기업의 기여도는 다소 낮은 편이라는 아쉬운 평가가 주를 이루었다. 한편,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민간기업의 참여가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서는 대부분이 공감하였고, 그 이유로는 해양과 연안을 직간접적으로 이용하는 기업의 지속가능한 경영을 위해서, 그리고 사회를 구성하는 일원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이행하기 위해서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과거에는 해양이 기업에게 이용의 공간으로만 여겨졌다면, 오늘날에는 기업 스스로도 관리 주체가 되어야 한다는 인식을 가지기 시작한 것이다.

해양은 그동안 정부 주도로 관리되어 왔는데, 이제는 자본과 기술력을 보유한 민간기업이 새로운 관리 주체로 등장하게 되어, 민관 공동관리 체계가 정착된다면 기존보다 관리의 영역이 확대되고 관리방식 또한 고도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 기업 역시 해양환경 관리에 참여를 통해 사회적 책임을 이행함과 동시에 자사의 브랜드 가치 상승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기대에 힘입어, 우리나라에서는 최근 국내 일부 대기업을 중심으로 해양환경 분야와 ESG를 연계한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앞서 한국형 녹색분류체계와 K-ESG 가이드라인을 해양환경 분야와 연계해 분석하였고 그 결과 온실가스 감축, 기후변화 적응, 자원순환, 대기 및 해양오염 방지, 생물다양성 보전, 그리고 지역사회 공헌이 주요 이슈로 도출되었는데, 이 여섯 가지 항목과 관련 있는 해양수산부 사업 역시 매우 다양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기업의 ESG를 활용한 민관 공동협력 사업이 갯벌복원사업, 바다숲 조성 사업, 반려해변제도 등 일부에 국한되어 있다. 앞으로 해양환경 분야의 사업들이 민간기업의 ESG와 연계되어 적극 추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민간기업이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있고, 이를 통해 ESG 평가 등 가시적인 성과를 확보할 수 있는 사업을 적극 발굴하여 제시할 필요가 있다.

04

민간기업의 해양환경 분야 ESG 사례 및 현안

제2장과 제3장에서는 주요 부처별로 추진 중인 ESG 정책과 해양수산부의 해양환경정책 중에서 ESG와 관련이 있는 정책 현황을 개괄적으로 살펴 보았다. 이번 장에서는 우리나라 주요 기업들이 해양환경 분야에서 추진하고 있는 ESG 사례를 살펴보고 주요 현안을 분석하였다. 먼저, 제1절에서는 주요 기업의 해양환경 분야 ESG 추진 현황과 사례를 유형별로 구분하여 살펴보고, 제2절에서는 해양환경 분야 ESG 관련 기업 및 관련 전문가 심층인터뷰 등을 종합하여 주요 현안을 도출하였으며, 제3절에서는 민간기업 ESG 담당자 대상의 주요 설문조사 결과를 분석했다.

제1절 민간기업의 해양환경 분야 ESG 현황 및 사례 —

민간기업들의 해양환경 관련 ESG를 모두 파악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다. 따라서 이 절에서는 우선 매출액을 기준으로 주요 기업들의 해양환경 분야 ESG 추진 현황을 전반적으로 살펴보고 주요 유형을 도출하였으며, 이어서 유형별 대표 사례들을 구체적으로 분석하였다.

1. 주요 기업의 해양환경 분야 ESG 현황

민간기업의 해양환경 분야 ESG 활동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서 이 연구에서는 분석 대상을 2022년 매출액 기준으로 상위 50대 기업으로 한정하였다.¹¹⁹⁾ 이들 기업은 자체적으로 탄소중립 또는 기후변화 대응 로드맵을 수립하는 등 규모가 작은 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극적인 ESG 경영을 실천하고 있다. 또한, 활동 실적을 지속가능경영보고서나 ESG 보고서 등을 통해 정기적으로 공개하고 있어 활동 현황을 파악하는 데도 용이하다.

기업별 지속가능경영보고서는 기업이 속한 산업 유형별로 구성 방식이 다소 차이가 있으나 전반적으로는 K-ESG 가이드라인의 기본항목을 준용하고 있다. 활동 내역은 비교적 구체적으로 제시된 경우도 일부 있으나 대다수의 보고서에서는 간략한 수준으로만 서술되어 있다. 50대 기업 중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공개한 기업은 총 41개 기업이며, 이 중에서 13개 기업이 해양환경 관련 ESG 활동을 보고하였다. 이들 기업의 해양환경 관련 ESG는 주로 사회(S) 분야에 포함되어 있으며, 특히 ‘지역사회 공헌’ 항목에 집중되어 있다.

활동 유형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아래 표와 같이 크게 ‘해양폐기물 저감 및 자원순환’, ‘생물다양성 보전 및 해양생태계 복원’, ‘해양오염 저감’, ‘시민·기업 파트너십’ 등 4대 분야, 총 10개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먼저, ‘해변 정화’는 기업들이 사회공헌의 일환으로 수행해 온 대표적인 활동으로, 최근에는 반려해변 제도와 연계해서 추진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다. ‘생물다양성 보전 및 해양생태계 복원’은 참여기업 수나 활동의 다양성 측면에서 가장 눈에 띄는 분야다. 바다숲 복원, 철새 또는 멸종위기종 보호, 해수욕장 복원을 통한 연안생태 복원, 치패 및 치어 방류, 해양으로 직접

119) 2022년 기준 매출액 상위 50대 기업은 ceoranking.com이 제공하는 정보를 기준으로 하였으며, 금융기업과 공기업은 포함함(CEORANKING(검색일: 2023.4.8.))

방류되는 배출수 모니터링이나 선박평형수 처리장치 설치 확대 등이 이에 해당된다. 이 밖에도 한국가스공사나 현대글로벌처럼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한 국제 이니셔티브에 참여하는 사례도 있었으며, 국내에서 수행된 사례는 아니나 선박 속도 제한을 통해 고래 충돌을 방지한 경우도 있다. 세 번째 유형인 ‘시민단체와의 파트너십’은 해양 정화, 해양생물보호, 해양생태계 복원 등 다양한 보전 활동을 수행하는 시민환경단체를 기업들이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국내 시민단체뿐만 아니라 현대자동차나 기아처럼 해외의 시민단체를 지원하는 경우도 있다.

해양환경 분야에서 특히 중요한 이슈인 해양폐기물과 관련한 기업의 ESG는 전통적인 사회공헌 활동인 해양폐기물 수거에서 더 나아가서 해양폐기물을 재활용하거나 발생 저감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으로 확대되고 있다. 예를 들면, 삼성전자와 현대자동차는 폐어망 등의 해양폐기물을 재활용해서 자사 제품의 소재로 활용하고 있으며, 포스코케미칼과 현대제철은 폐각 재활용 기술을 개발하여 자원순환에 참여하고 있다. 그런가 하면, 현대오일뱅크와 CJ는 해양쓰레기 발생 저감을 위해 생분해성 플라스틱을 개발하고 있고, 삼성전자는 파타고니아와 공동으로 미세플라스틱 발생량을 줄이기 위한 세탁기를 개발하고 있다.

한편 ESG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대기업이 해양환경 문제 해결을 위한 혁신적인 아이디어와 기술을 가진 스타트업을 지원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SK이노베이션, GS리테일 등이 대표적인데, 이들 기업은 별도의 스타트업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매년 친환경 스타트업을 발굴하여 육성하고 있다. 이러한 프로그램은 단순히 재정적 지원뿐만 아니라 기술자문, 경영컨설팅, 소셜임팩트 측정, 협업모델 발굴 등도 포함하고 있어, 환경적·경제적 가치를 추구하는 스타트업의 빠른 성장을 유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이 밖에도 ‘해안 복원’, ‘해양환경교육’, ‘해양오염 방제’, ‘항만대기오염 저감’ 등도 각각 별도의 활동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으나 참여기업 사례는 위에서 서술한 유형들에 비해 아직까지는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다.

〈표 4-1〉 매출액 상위 50대 기업의 해양환경 관련 주요 ESG 활동 유형

분야	세부 유형	주요 사례
해양폐기물 저감 및 자원 순환	해변 정화	- 기아, GS칼텍스, 현대, 현대제철, 현대오일뱅크, 이마트 - GS칼텍스, 한국가스공사(반려해변)
	해양플라스틱 쓰레기 발생 저감	- 현대오일뱅크, CJ: 생분해성 플라스틱(PHA) 개발 - 삼성전자(공동: 파타고니아): 미세플라스틱 발생 저감 세탁기 개발
	자원순환 (해양폐기물 재활용)	- 삼성전자: 모니터 뒷면 커버에 해양폐기물, 스마트폰에 페어망 활용 - 현대자동차: 페어망으로 카펫용 BCF 원단 개발 - 농협금융지주: 해양폐기물 재활용 IC카드 - 포스코케미칼, 현대제철: 폐각 재활용
생물다양성 보전 및 해양 생태계 복원	생물다양성 보전 및 해양생태계 복원	- 기아, SK이노베이션(베트남), 포스코인터내셔널(맹그로브숲 복원) - 포스코홀딩스(트리톤), 남동발전(바다숲 복원) - 남동발전, 한국가스공사(철새, 멸종위기종 보전) - 중부발전(해수욕장 복원, 서천갯벌과 연계) - GS칼텍스, 현대오일뱅크: 치패/치어 방류 - 한국가스공사: KOGAS 생물다양성 보전 방침 발표, 국제·국내적 생물다양성 보호지역 손실 Zero라는 정량적 목표 제시 - 현대제철: 해양 직접 방류 배출수의 생태독성 모니터링 - 현대글로벌비스: 선박평형수처리장치 설치 확대; 생태환경 및 멸종위기종 보호 이니셔티브 참여; 선박 속도 제한을 통한 고래 충돌 방지
	해안 복원	한국가스공사: 유실해안 복원(삼척)

분야	세부 유형	주요 사례
해양오염 예방 및 관리	해양오염 방제	• GS칼텍스: 부두별 방제창고, 방제교육, 해상 오일펜스 설치
	항만대기오염 저감	• 현대글로벌비스: 선박 스크러버 설치, 친환경선박 항만 인센티브 제도
해양환경 시민·기업 파트너십	시민단체 파트너십	• 현대자동차: Healthy Seas(유럽) • 한국가스공사: 통영환경운동연합 • 기아: The Ocean Cleanup(네덜란드)
	스타트업 지원	• SK이노베이션: 에그(해조류 부산물, 불가사리 활용 스타트업 지원 등) • GS: 에코 소셜임팩트(궤생이모자반 활용 다이어트식품 개발 스타트업 지원)
	해양환경교육	• 현대자동차: 어린이 해양환경교육체험관

주: 2022년 매출액 기준
자료: 저자 작성

2. 해양환경 분야 ESG 주요 사례 분석

위에서 매출액 상위 50대 기업을 대상으로 해양환경 분야의 ESG 현황을 개괄적으로 살펴보고 총 10개의 활동 유형으로 분류하였다. 여기에서는 그 중에서 특히 기업들의 활동이 상대적으로 집중되어 있는 4개 분야에 대해 대표적인 사례를 중심으로 추진방식을 구체적으로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개별 기업의 지속가능경영보고서 외에도 언론보도, 웹사이트 자료 및 이해관계자 인터뷰 등을 활용하였다. 또한, 필요한 경우 50대 기업에 포함되지 않은 기업의 사례도 일부 포함하였다.

1) 해변 정화

해변정화는 기업들이 사회공헌 차원에서 가장 대표적으로 수행하는 활동이다. 침적쓰레기 수거보다는 해변가에 방치된 쓰레기 수거 활동이 더 일

반적이다. 추진방식은 크게 기업이 자체적으로 기획하여 추진하는 방식과 정부가 운영하는 제도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구분된다. 해변 정화는 활동에 필요한 기술이나 장비, 예산이나 시간에 대한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은 반면, 기업 구성원이 직접 참여하는 현장 활동을 통해 친환경 이미지를 홍보할 수 있어서 다수의 기업에서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최근에는 특히 쓰레기 수거와 조깅을 결합한 플로깅,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펫 플로깅 등 다양한 형태로 확대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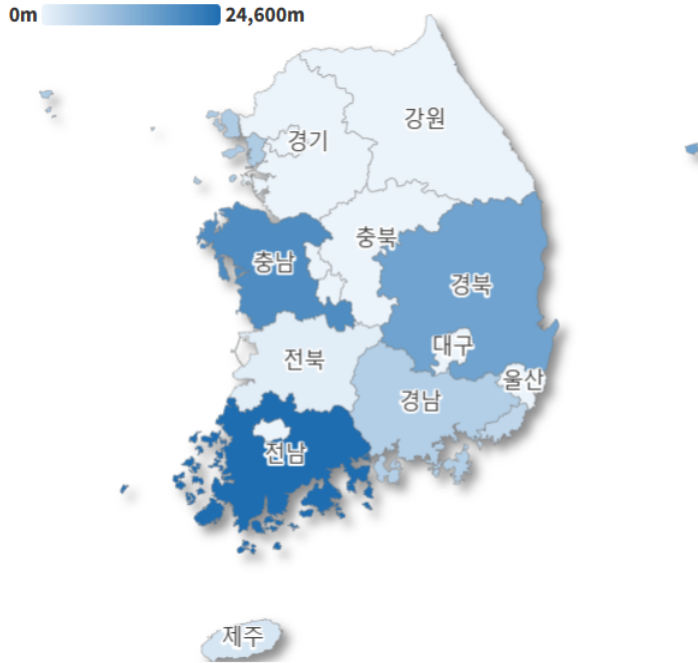
기존에는 기업이 자체적으로 기획하는 방식이 주를 이루었으나 해양수산부가 해양 정화활동에 민간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반려해변 제도를 도입·시행한 이후부터는 이 제도를 활용하는 사례가 점차 증가하고 있다. 반려해변 제도는 기업이나 단체 또는 학교 등이 특정 해변을 입양해 2년 동안 가꾸고 돌보는 것으로, 반려해변을 입양한 기관은 해당 해변에서 매년 3회 이상 정화활동을 하고 해양환경교육 등 해양환경보호에 관한 캠페인을 연 1회 이상 진행해야 한다.

제도 도입 첫해인 2020년에는 세 개 기업이 시범사업에 참여하였는데 2022년에는 88개 기관으로 참여가 크게 늘었으며, 2023년 4월 기준으로 총 107개 기관이 총 73곳¹²⁰⁾의 해변을 관리하고 있다. 2022년까지 총 3,906명이 반려해변에서 정화활동을 실시하였고, 총 63,593kg의 해양폐기물이 수거되었다.¹²¹⁾

120) 해양수산부 발표자료(2023.4.5.)

121) 조선미디어(2023.3.15.)(검색일: 2023.4.14.)

〈그림 4-1〉 국내 반려 해변 현황(2023년 3월 기준)



자료: 조선미디어(2023.3.15.)(검색일: 2023.4.14.)

〈그림 4-2〉 주요 기업의 반려해변 활동 모습



〈HMM〉



〈하이트진로〉



〈세븐일레븐〉



〈CJ제일제당〉

자료: (왼쪽 위) HMM 보도자료(2023.3.15.)(검색일: 2023.4.14.); (오른쪽 위) 하이트진로 보도자료 (2022.6.9.)(검색일: 2023.4.14.); (왼쪽 아래) 서울경제(2022.10.27.)(검색일: 2023.4.14.); (오른쪽 아래) 인천일보(2022.9.27.)(검색일: 2023.4.14.)

2) 생물다양성 보전 및 해양생태계 복원

생물다양성 보전 및 해양생태계 복원은 민간기업의 해양환경 관련 ESG 중에서도 가장 다양한 활동이 이루어지는 분야다. 이러한 활동은 주로 개별 기업이 단독으로 수행하거나 민관협력에 기반하여 추진된다. 예를 들어, 현대제철이 사업장 주변의 해양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해양으로 직접 방류되는 배출수에 대한 생태독성 모니터링을 실시하는 것은 전자에 해당된다면, 블루카본 프로젝트는 민관협력의 대표적인 사례다. 여기에서는 특히 세 가지 민관협력 사례의 추진방식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았다.

(1) 민관협력을 통한 갯벌 복원

블루카본은 해양 분야에서 기후변화 대응 및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중요한 정책수단 중의 하나이자 기업 입장에서는 온실가스 감축수단을 발굴하기 위해 특히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분야다. 이러한 이유로 블루카본에 대한 민관협력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진행 중인 대표적인 사업으로는 기아와 해양수산부 협력을 통한 갯벌복원사업을 들 수 있다. 기아는 2021년에 발표한 ‘2045 탄소중립’의 추진과제의 하나로 해양생태계 보전에 직접적으로 기여하기 위해 ‘블루카본 프로젝트’를 제시하였다.¹²²⁾ 한편 해양수산부는 새로운 블루카본으로 주목 받고 있는 비식생 갯벌을 국제사회에서 공식 탄소흡수원으로 인정받기 위한 연구를 추진하고 있다. 해양수산부는 갯벌 식생 복원 등 블루카본 확대 사업에 민간의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2022년 11월에 기아와 ‘블루카본 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했다.¹²³⁾ 이 사업에서 기아는 기업 임직원들이 갯벌 정화활동과 염생식물 식재활동에 직접 참여하고, 해양생태계 변화와 탄소 흡수 효과 연구를 후원하며 그 결과를 국내외에 홍보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¹²⁴⁾

〈그림 4-3〉 해양수산부-기아 ‘블루카본 협력사업’ 업무협약 체결식



자료: 이코노미리뷰(2022.11.28.)(검색일: 2023.4.15.)

122) 현대자동차그룹 홈페이지(검색일: 2023.4.15.)

123) 해양수산부 보도자료(2022.11.28.)(검색일: 2023.4.15.)

124) 이코노미리뷰(2022.11.28.)(검색일: 2023.4.15.)

(2) 민관협력을 통한 바다숲 조성

또 다른 민관협력 사례로 KB금융그룹의 금융상품을 활용한 바다숲 조성 사업을 들 수 있다. KB금융그룹은 2021년에 탄소중립 중장기 추진전략으로 ‘KB Net Zero S.T.A.R’를 선언했고,¹²⁵⁾ 이어 2022년에 4월 22일 지구의 날을 맞이하여 ‘KB Net Zero S.T.A.R. 금융상품 패키지’를 출시했다. 여기에는 ‘KB Net Zero S.T.A.R. 공익신탁’이 포함되어 있는데, 고객이 이 상품에 가입할 경우 은행에 납부하는 금액의 10%를 고객 명의로 기부하고, KB국민은행 역시 같은 금액을 기부한다.¹²⁶⁾ 이렇게 조성된 기부금 2억 원을 활용하여 환경단체인 (사)에코피스아시아를 통해 국내 금융업계로는 최초로 블루카본 바다숲 조성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사)에코피스아시아는 이 사업의 기획 및 운영 실무를 담당하고, 실제 조성 사업은 해양생태기술연구소 및 한국수산자원공단과 삼자 공동협약을 체결하여 진행하고 있다. 잘피 생존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대상지역과 이식 방법 및 이식 시기를 결정하는 데 전문가들과의 협업이 필수적이다. 또한, 잘피는 「해양생태계법」에 따라 지정·보호되고 있는 해양보호생물이므로 채취·이식을 위해서는 관계당국의 허가가 필요하며, 바다숲 조성 완료 후에 지속적인 관리를 위해서는 경남도와 남해군의 지원이 중요하다.

즉, 이 사례는 금융상품을 통한 국민과 기업의 참여를 바탕으로 기획·운영 실무 조직,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보유하고 있는 기관, 해양수산부와 지자체 간의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추진되는 사업으로 민관협력에 기반한 해양환경 분야 ESG의 새로운 모델을 보여주는 사례라 할 수 있다.

이 사업은 현재 우리나라 대표적인 잘피 서식지인 경남 남해군 언포 연안에 1ha 규모로 거머리말 성체 이식을 완료하였으며, 2025년까지 3년 동

125) 핀테크경제신문(2021.6.27.)(검색일: 2023.4.15.)

126) 빅터뉴스(2022.4.22.)(검색일: 2023.4.15.)

안 이식된 거머리말의 정착과 성장 과정을 정기적으로 조사하여 생태 복원 효과를 평가할 예정이다.¹²⁷⁾

〈그림 4-4〉 KB Net Zero S.T.A.R. 블루카본 바다숲 조성 사업



자료: 에코피스아시아 홈페이지(검색일: 2023.4.15.)

(3) 기업의 기술력을 활용한 바다숲 조성

포스코는 제2장에서 살펴본 대로 ‘기업시민’이라는 경영이념을 바탕으로 기업의 사회적·환경적 책임을 경영 전반에 실천하는 노력을 적극적으로 기울이고 있다. 예를 들어, 매년 설비 투자비의 10% 이상을 환경개선에 투자하고 있으며,¹²⁸⁾ 2022년에 포스코홀딩스가 출범하면서 그룹ESG협의회에서 ‘탄소’, ‘안전’ 및 ‘생물다양성’을 3대 핵심 ESG 이슈로 선정하기도 했다.¹²⁹⁾ 특히 연안지역에 입지한 철강기업이라는 점 때문에 해양수질 관리, 해양폐기물 수거, 바다숲 조성 등 다양한 해양환경 및 해양생태계 보전 활동을 추진하고 있다.¹³⁰⁾ 이 중에서 ‘기업시민 대표사업’인 인공어초 설치를

127) 한국수산자원공단 보도자료(2022.12.27.)(검색일: 2023.4.15.)

128) 포스코 홈페이지(검색일: 2023.4.15.)

129) 포스코홀딩스(2022), p. 53.

130) 포스코(2022), p. 55.

통한 바다숲 조성 사업은 포스코가 이미 2000년부터 지속적으로 추진해 온 사업이다.

앞에서 살펴본 KB금융그룹과 포스코는 둘 다 바다숲 조성 사업이라는 점에서는 동일하다. 그러나 KB금융그룹의 사례는 잘피 이식을 통한 바다숲 조성이라면, 포스코의 경우에는 인공어초를 활용하였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그리고 앞의 두 사례는 모두 기업의 역할이 주로 재정적 지원을 비롯하여 기술개발 외적인 부분에 해당하였다면, 포스코의 사례는 기업이 기술개발을 직접 주도하였다는 점에서 큰 차이가 있다.

포스코는 산하 연구원인 포항산업과학연구원(RIST)과 함께 철강 공정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산물인 슬래그를 활용하여 트리톤(Triton)이라는 인공어초 3종을 개발하였다. 슬래그에는 칼슘과 철 등 미네랄이 많이 함유되어 있어 이를 갯녹음 지역에 설치하면 해양 플랑크톤 증식과 해조류 포자 부착이 촉진되어 해양생태계를 회복시키는 데 효과가 있다. 또한, 비중이 높고 강도도 우수하여 태풍이나 해일과 같은 자연재해나 해수 부식에도 강한 것이 특징이다.¹³¹⁾ 그 외에도 트리톤 어초를 사용하면 일반어초에 비해 해양생태계 복원 기간이 단축되었으며, 트리톤이 설치된 바다숲은 1ha당 연간 3~16톤의 이산화탄소를 흡수·저장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¹³²⁾ 이런 장점 덕분에 포스코는 세계자연보전총회(WWC)와 세계지속가능발전기업협의회(WBCSD)에서 우수사례로 소개되었으며, 2020년 세계철강협회 스틸리어워드(Steelie Awards) ‘지속가능경영’ 부문 최우수기업으로 선정되기도 했다.¹³³⁾

131) 위의 책, p. 53.

132) 비즈트리뷴(2020.5.28.)(검색일: 2023.4.15.)

133) 포스코, 위의 책, p. 53.

〈그림 4-5〉 포스코 트리톤 바다숲 조성 과정



자료: 포스코 홈페이지(검색일: 2023.4.16.)

포스코는 2010년 해양수산부와 바다숲 및 수산자원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으며, 2014년에는 해양수산부로부터 트리톤 어초를 일반어초로 승인받아서 국가 바다숲 조성 사업에 활용하고 있다. 2010년부터 2021년까지 우리나라 갯녹음 연안 30여 곳에 공급된 트리톤 어초는 약 7,000기에 이른다.¹³⁴⁾

〈그림 4-6〉 전남 여수시 거문도 어장에 트리톤 설치 후 모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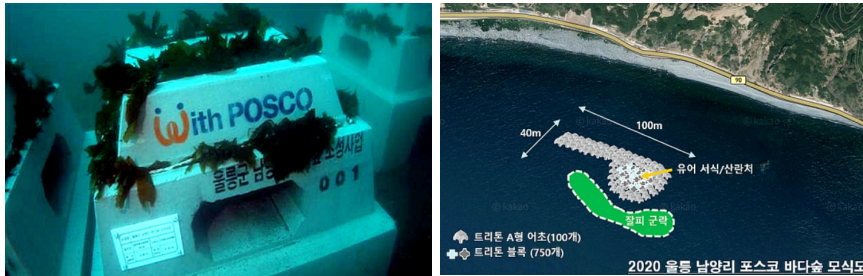
자료: 포스코 홈페이지(검색일: 2023.4.16.)

한편 포스코는 기업시민 지역협력을 위한 첫 번째 사업으로 2020년 경북도와 울릉군과 협력하여 ‘울릉군 바다숲 조성 사업’을 추진하였다. 울릉군과 지역 어촌계의 의견 수렴, 그리고 사전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울릉군 서면 남양리 연안 앞바다를 대상지역으로 선정했으며, 포스코 예산 3억

134) 포스코 홈페이지(검색일: 2023.4.16.)

1,500만 원을 투자하여 트리톤 100기와 블록 750개 설치 등 총 0.4ha 규모의 바다숲을 조성하였다.¹³⁵⁾

〈그림 4-7〉 울릉군 남양리 바다숲 조성 사업



자료: 경북매일(2020.5.29.)(검색일: 2023.4.16.)

3) 시민환경단체 지원

기업이 직접적인 참여를 통해 해양환경 분야 ESG 활동을 수행하는 경우도 있지만, 시민환경단체를 지원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참여하는 방식도 있다. 후자의 경우에 기업은 재정적인 지원을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여기에서는 해외기업이 국내 환경단체를 지원하거나 반대로 국내 기업이 해외 환경단체를 지원하는 경우, 그리고 국내 기업이 국내 환경단체를 지원하는 경우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1) 해외기업의 국내 해양환경단체 지원

대표적인 친환경 의류기업인 파타고니아의 환경보전 노력은 이미 1980년대부터 시작되었다. 매년 순이익의 2%를 환경단체에 기부하는 것을 시작으로 1985년부터는 순이익의 10%를, 1996년부터는 매출액의 1%를 후원하는 것으로 지원 규모가 증가하였다.¹³⁶⁾ 2002년에는 파타고니아 창업

¹³⁵⁾ 울릉군 보도자료(2020.5.28.)(검색일: 2023.4.16.)

자가 ‘지구를 위한 자발적 세금(지구세)’을 뜻하는 ‘1% for the Planet’이라는 비영리조직을 설립하여 환경보전 활동에 다른 기업들의 참여와 연대를 독려해 오고 있다.¹³⁷⁾ 이렇게 해서 누적된 기부금은 2023년 기준으로 5억 3천만 달러에 달한다.¹³⁸⁾

우리나라에서도 2023년 현재 총 59개의 환경단체가 파타고니아의 지원을 받고 있는데, 해양 관련 단체로는 디프다제주, 세이브제주바다, 시세퍼드 코리아, (사)동아시아바다공동체 오션, (사)생태지평, 통영거제환경운동연합 등이 있다. 지원받는 단체가 다양한 만큼 이들의 활동영역 역시 해양쓰레기 수거, 해양생물 보호, 해양생태계 조사, 습지보전 등으로 다양하다.¹³⁹⁾

〈그림 4-8〉 파타고니아의 지원을 받은 주요 해양환경단체

		
제주도 제주시 디프다제주 <디프다제주>는 제주 해양쓰레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해양 속 잠적 쓰레기를 수거하고 바다를 지키는 그린 다이빙을 소개하고 해양쓰레기 정화 활동을 진행해 왔습니다.	제주도 제주시 세이브제주바다 <세이브제주바다>는 깨끗한 바다를 만들기 위해 2017년부터 바다 정화 활동과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 캠페인 등 진행해 왔습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시세퍼드 코리아 <시세퍼드 코리아>는 해양 생물 보호와 해양 서식지 파괴를 멈추기 위한 직접 행동을 목적으로 수중 채집 청소 및 다양한 해양 보호 캠페인 등을 진행해 왔습니다.
		
경상남도 통영시 통영거제환경운동연합 통영사무소 <통영환경운동연합>은 기후 위기 대응과 생물 다양성 보호를 위해 거머리알류 보전 운동, 해양쓰레기 정화 활동 등의 활동을 진행해 왔습니다.	경상남도 통영시 오션 <오션>은 해양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조사 연구, 교육, 정책 개발, 국제 협력 등의 활동을 진행해 왔습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생태지평 <생태지평>은 환경과 생태계 다양성 보호를 위해 갯벌 습지 해양 생물 연구 조사, 정책 개발 및 교육 등을 진행해 왔습니다.

자료: 파타고니아 코리아 홈페이지(검색일: 2023.4.20.)

136) 조선일보(2023.2.24.)(검색일: 2023.4.20.)

137) 1% for the Planet 홈페이지(검색일: 2023.4.20.)

138) 1% for the Planet 홈페이지(검색일: 2023.4.20.)

139) 파타고니아 코리아 홈페이지(검색일: 2023.4.20.)

파타고니아에 비해 지원사업 규모는 작으나 유사한 방식으로 비영리단체를 지원하는 기업으로 영국의 친환경 화장품회사인 러쉬를 들 수 있다. 러쉬는 2013년부터 ‘채리티팻’이라는 바다로션 제품의 판매액 중 부가세를 제외한 금액 전액을 환경보전, 동물보호 및 인권 관련 비영리단체를 지원하는 데 사용하고 있다. 현재까지 총 119개 단체에 총 17억 원 이상을 후원하였다. 해양 관련 단체로는 핫핑크돌핀스, 세이브제주바다, 시세퍼드 코리아, 해양동물생태보전연구소, (사)생태지평, 통영거제환경운동연합 등이 있으며, 이들은 주로 해양쓰레기 수거, 해양생물 보호, 해양생태계 보전 및 관리 등의 활동을 수행하고 있다.¹⁴⁰⁾

〈그림 4-9〉 러쉬코리아의 지원을 받은 주요 해양환경단체



자료: 러쉬코리아 홈페이지(검색일: 2023.4.20.)

140) 러쉬코리아 홈페이지(검색일: 2023.4.20.)

(2) 국내 기업의 해외 해양환경단체 지원

해외기업의 국내 비영리단체 지원과는 정반대로 국내 기업이 해외 지사를 통해서 해외 환경단체를 지원하는 경우도 있다. 대표적으로, 현대자동차는 유럽지사를 통해 2021년에 유럽의 해양환경단체인 Healthy Seas와 업무협약을 맺고 침적폐기물 업사이클링 프로젝트를 지원하고 있다.

Health Seas는 북해, 지중해 등 유럽의 여섯 개 해역에서 페어망 등 유령어구로 인한 해양생태계 훼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13년에 설립된 비영리단체다.¹⁴¹⁾ 이 단체의 주요 활동 분야는 페어망 수거, 어구 해양투기 방지를 위한 어민 교육 및 페어망으로 인한 환경피해에 대한 대중인식 제고 등 크게 세 가지로 구분된다. 자원봉사 다이버들이 해저에 침적된 페어망을 수거하고, 수거된 어망은 재활용 업체인 아쿠아필(Aquafil)을 통해 에코닐(Econyl)이라는 재생 나일론 원사를 만드는 데 활용된다.

현대자동차는 현재, 그리스 해역에서 이 단체의 활동을 지원하고 있는데, 향후에는 다른 유럽국가로 활동지역을 확대할 예정이다. 또한, 에코닐을 현대의 전기차인 아이오닉5의 바닥매트를 비롯한 차량 내부 소재로뿐만 아니라 사내 카펫 등 다양한 목적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3) 국내 기업의 국내 해양환경단체 지원

국내 기업이 국내 환경단체를 지원하는 사례들도 증가하고 있는데, KT&G가 해양쓰레기 관련 시민단체인 (사)동아시아바다공동체 오션을 지원한 사례가 그 예다. KT&G와 (사)동아시아바다공동체 오션 및 해양환경공단은 2021년에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해양생태계 보호 프로젝트를 진행하였다.¹⁴²⁾ 이 프로젝트는 해양생물다양성 회복을 위해 해양쓰레기 수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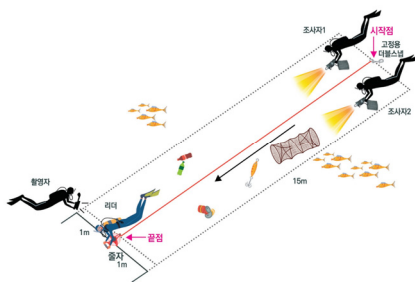
141) Healthy Seas 홈페이지(검색일: 2023.4.20.)

142) KT&G(2022), p. 30.

및 해양생물 피해 실태조사, 해양생태계 보호를 위한 인식 증진 캠페인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¹⁴³⁾

총 14회에 걸쳐 진행된 해양쓰레기 수거 활동에는 KT&G 임직원들도 참여하였으며, 페어망 등 수중쓰레기 수거는 앞에서 서술한 현대자동차의 사례와 유사하게 전문 다이버들과 협업을 통해 진행되었다. 특히 이 프로젝트에 참여한 다이버들의 조직인 해양탐사그룹 팀부스터는 다이버들을 위한 수중정화 매뉴얼(UDS: Underwater Debris Survey)을 개발하여 활용하고 있다. 수거된 해양쓰레기는 유형별로 분류하여 데이터를 수집하고, 대중인식 개선을 위한 정크아트 전시회에도 활용하였다.

〈그림 4-10〉 KT&G의 해양환경단체 지원 사례



〈해양탐사그룹 팀부스터의 수중쓰레기 조사방법〉



〈정크아트 전시회〉

자료: (좌) 팀부스터(2022), p. 10, (우) KT&G(2022), p. 30.

민간기업은 아니지만 공무원연금공단의 사례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제주도에 위치한 공무원연금공단은 그동안 올레길 전담관리기관으로서 올레길 정화나 반려해변 입양 등 제주의 해양환경보전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다. 2022년부터는 지역 내에서 활발히 활동 중인 해양환경단체인 세이브제주바다, 디프다제주, 플로빙코리아와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그동안

143) 뉴시스(2021.5.20.)(검색일: 2023.4.20.)

해변에 국한되었던 활동 범위를 바닷속까지 확대하고 보다 체계적인 환경 보전 기반을 마련하게 되었다.¹⁴⁴⁾

이 사례는 비영리 해양환경단체를 지원한다는 측면에서는 KT&G의 사례와 유사하나, 지역에 위치한 기관이 해당 지역에서 활동하는 해양환경단체와의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활동의 지속성과 지역 해양환경 문제 해결의 효과성을 더욱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4) 해양폐기물을 활용한 자원순환체계 구축

(1) 수산기업과 제조업 간 협력

대표적인 수산기업인 동원산업은 지속가능한 어업을 위한 해양생태계 보전의 일환으로 폐어망 자원화를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 2022년 말에 동원산업은 현대차·기아와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어업활동에서 발생하는 폐어망을 자원화하여 자동차 부품 소재로 활용하는 것이 이 협약의 핵심이다. 동원산업이 매년 약 645톤의 폐어망에서 약 100톤의 나일론을 추출하여 공급하면, 현대차·기아는 재활용 소재 및 부품화 기술개발을 통해 엔진 커버 등으로 활용할 계획이다.¹⁴⁵⁾

해양폐기물 자원순환이 제대로 구현되기 위해서는 특히 공급과 수요 간의 안정적인 연계와 규모의 경제, 그리고 기술개발이 전제되어야 한다. 이를 이 사례에 대입해 보면, 동원산업이 일종의 ‘공급자’가 되고, 현대차·기아는 ‘수요자’로 역할을 하게 된다. 그리고 두 기업은 각각 우리나라의 수산업과 자동차산업 분야에서 대표적인 기업이므로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는 데도 상대적으로 유리한 조건을 갖고 있다. 또한, 현대차·기아는 기업 내 기초소재연구센터를 통해 자원화 기술개발을 추진하는 데 유리한 여건과

144) 뉴스N제주(2022.8.2.)(검색일: 2023.4.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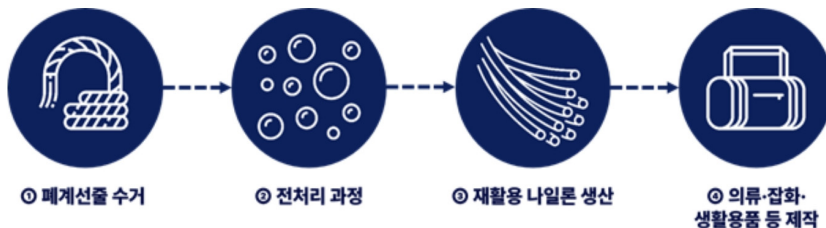
145) 서울파이낸스(2022.12.19.)(검색일: 2023.4.16.)

역량을 확보하고 있다. 물론 현재는 협력의 초기 단계이므로 성공 여부를 판단하기에는 이르나, 이런 점에서 이 사례는 해양폐기물 자원순환을 위한 새로운 협력 모델로 참고해 볼 수 있다.

(2) 스타트업과 대기업 간 협력

앞에서 살펴본 폐어망 외에 대표적인 해양폐기물인 폐로프 재활용을 위한 사례로는 해양폐기물 자원순환 스타트업인 포어시스와 글로벌 해운·물류기업인 HMM 간 협력 사례를 들 수 있다. 선박이 항만에 정박할 때 계선 줄이라는 로프로 고정하게 된다. 안전을 위해서 이 로프는 통상 5~7년 주기로 교체하므로, HMM에서만 매년 약 20톤의 폐로프가 발생하고 있다.¹⁴⁶⁾ 이제까지는 폐기물로 매립하거나 소각했던 이 폐로프를 재활용하기 위해 HMM과 포어시스는 올해 초에 폐로프 자원순환 프로젝트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이 협약을 통해 폐로프 수거 및 공급은 HMM이 담당하고 포어시스는 세척·탈염 등 전처리 과정을 거쳐 재생 나일론 원료를 생산하게 된다. 무게 기준으로 하면 수거된 폐로프의 약 80~90%가 재활용될 것으로 예상된다.¹⁴⁷⁾

〈그림 4-11〉 폐로프 자원순환 프로젝트 운영 프로세스



자료: HMM 홈페이지(검색일: 2023.4.16.)

146) HMM 홈페이지(검색일: 2023.4.16.)

147) HMM 홈페이지(검색일: 2023.4.16.)

이 사례는 국내 해운사로는 처음으로 폐로프를 재활용한다는 점에서는 큰 의미가 있으나, 산업적 관점에서 보면 해결해야 할 몇 가지 과제가 남아 있다. 폐어망 사례에서 설명한 대로 해양폐기물 자원순환이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수요와 공급, 규모의 경제 그리고 기술개발이라는 세 가지 요소가 필요하다. 폐로프 사례에 이를 적용해 보면, 현재는 HMM의 폐로프만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수거량은 연간 20여 톤으로 많지 않다. 따라서 다른 해운사의 참여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폐로프 수거·운반 체계가 개선되어야 한다. 또한, 폐로프 재활용 나일론에 대한 수요 확대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즉, 폐로프 자원순환 프로젝트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벨류체인 일부가 아니라 전 과정에서의 협력이 필요하다.

유사한 스타트업 사례로 넷스파의 경우를 살펴보면, 이 기업은 폐어망을 활용해서 재생 나일론과 플라스틱을 생산하는 업체이다. 넷스파는 폐어망에 특화된 분쇄기를 개발하여 하루 1.5톤의 나일론을 분리할 수 있으며, 순도 95%의 재생 나일론을 생산하는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¹⁴⁸⁾ 넷스파는 국제 인증기관인 UL 솔루션으로부터 국내 최초로 폐어망 수거부터 재생 나일론 생산의 전 과정에 대한 인증(UL ECV-2809 OP(Ocean Plastic))을 획득함으로써 기술력을 입증하였다.¹⁴⁹⁾

넷스파는 벨류체인의 첫 단계인 폐어망 수거·집하·운반 시스템 구축을 위해서 롯데케미칼, SK에코플랜트 등 대기업과 협력하고 있으며, 생산된 재생 나일론 및 플라스틱을 자동차 부품, 스포츠 의류 등 제조업체로 공급하기 위한 협력체계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예를 들어, 2022년에 삼양사와 폐어망 재활용 플라스틱 원료 공급 계약을 체결하여 자동차용 소재로 사용될 플라스틱 펠릿을 1,100톤을 공급했다.¹⁵⁰⁾ 그리고 LG화학과 업

148) 뉴시스(2023.1.30.)(검색일: 2023.4.16.)

149) 소셜임팩트뉴스(2023.4.24.)(검색일: 2023.4.27.)

150) 유니콘팩토리(2022.8.29.)(검색일: 2023.4.27.)

무협약을 통해 내년부터 재활용 플라스틱을 LG화학의 열분해유 공장의 원료로 공급할 예정이다.¹⁵¹⁾

(3) 대기업 간 협력

일반적으로 대기업은 기업별로 독립적인 전략에 따라 ESG 경영을 추진하기 때문에 이들 간에 협력하는 사례는 흔하지 않다. 특히 동일한 업계에 속해 있는 경우에는 더욱 그렇다. 이런 점에서 대표적인 철강기업인 포스코와 현대제철이 폐각 자원순환을 공동으로 추진한 사례는 새로운 ESG 협력 모델로서 주목할 만하다.

국내에서는 매년 30~35만 톤의 폐각이 발생하는데 이제까지는 활용할 방법이 마땅치 않아 오랜 기간 방치되어 왔다.¹⁵²⁾ 특히 해안가에 방치된 폐각은 미관을 해치고 악취를 유발할 뿐만 아니라 침출수는 해양환경 오염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그러나 포스코와 현대제철이 폐각 재활용을 추진함으로써 이런 문제들도 해결의 실마리를 얻게 되었다. 이 두 기업은 소결 공정에 필요한 석회석의 대체재로 폐각을 활용하기 위해 폐각 가공 전문업체인 여수바이오와 함께 공동연구를 진행하였다. 그 결과 2021년 국립환경과학원으로부터 재활용환경성 평가 승인을 받는 데 성공하였다. 현재 방치되어 있는 폐각 92만 톤을 대체재로 사용한다고 가정하면 약 41만 톤의 온실효과 감축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¹⁵³⁾

기업 간의 유기적인 협력 외에도 이 사례는 해양수산부가 법률 제정을 통해 그동안 자원순환의 장애 요인들을 해소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해양수산부는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재활용이 가능한 수산부산물의 유형을 정의하고 분리배출, 보관·운반 및 처리에 관

151) LG Careers(검색일: 2023.4.18.)

152) 환경미디어(2021.9.16.)(검색일: 2023.4.18.)

153) 환경미디어(2021.9.16.)(검색일: 2023.4.18.)

해 새롭게 규정함으로써 패각 자원순환의 기반을 마련하는 데 기여하였다. 그리고 최종 소비자인 두 기업의 협력을 통한 경제성 확보는 자원순환의 지속가능성을 높였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3. 종합 및 시사점

이 절에서는 우리나라 주요 기업들의 해양환경 분야 ESG 활동 현황을 유형별로 구분하여 주요 유형별 대표 사례들을 살펴보았다. 2022년 매출액 기준 상위 50대 기업 중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공개한 41개 기업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13개 기업이 해양환경 관련 ESG 활동 실적이 있었다. 또한, 이들의 대다수가 복수의 활동을 수행한 것으로 나타나 향후에 민간 기업의 해양환경 ESG를 확대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기업들의 활동이 상대적으로 집중되어 있는 4개 분야의 사례 분석 결과 추진방식의 특성을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 민간기업의 해양환경 ESG 활동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은 해양 정화활동이다. 특히 2020년에 반려해변 제도가 도입되면서 참여기업의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해서 2023년 4월 기준으로 총 107개 기관이 참여하고 있다. 그러나 이 제도는 효과성 측면에서는 다소 한계가 있다. 반려해변 제도는 2년 동안 연 3회 이상의 정화활동과 1회 이상의 해양환경보호 캠페인을 진행하면 조건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하기 때문이다. 물론 이와 상관없이 매년 수십 회의 정화활동을 수행하는 기관도 있으나 해변 청소 위주로 이루어지는 활동의 특성상 다른 ESG 활동에 비해 효과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보면, 해양 정화는 특별한 기술이나 장비가 필요 없고 시간이나 예산에 대한 부담도 적기 때문에 기업들이 해양환경 ESG에

비교적 쉽게 ‘진입’할 수 있게 한다는 장점이 있다. 즉, 반려해변 제도는 해양환경 ESG 참여기업의 외연을 비교적 쉽게 확장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반려해변 제도를 통해서 해양환경 ESG를 처음 경험해 보고 나서 해양환경 분야에 관심을 갖게 되면 새로운 유형의 ESG 활동을 시도해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앞에서 살펴본 공무원연금공단이 바로 이런 경우인데, 처음에는 반려해변 정화활동에서 출발해서 현재는 지역의 민간단체들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활동 범위를 바닷속까지 확장하는 등 진화해 나가고 있다.

둘째, ‘협력의 촉매제’ 역할을 수행할 주체가 필요하다. 앞에서 살펴본 다수의 사례에서 해양환경 ESG는 기업과 다른 주체들 간의 협력에 기반해서 이루어지고 있다. 기업과 시민단체 또는 기업과 해양수산부뿐만 아니라 기업과 전문기관 그리고 해양수산부/지자체 등 다자간 협력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처럼 여러 주체들 간의 협력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초기 단계부터 이를 기획하고 조율하는 주체가 필요하다.

이런 점에서 해양수산부가 담당 부서별 협력에서 탈피하고, 담당 창구를 일원화해서 부서별 매칭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것은 중요한 의미가 있다. 규모가 큰 민간기업들은 일반적으로 ESG 전담부서를 운영하고 있는데, 특히 앞에서 살펴본 파타고니아의 경우에는 이미 오래전부터 친환경 의류기업을 표방해 온 기업답게 환경팀이 별도로 있다. 이처럼 환경 분야에 특화된 인력이 있다면 해양환경 ESG를 기획하고 추진하는 데 별 어려움이 없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기획과 운영에 특화된 외부조직이 역할을 대신 수행하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다. 앞에서 살펴본 잘피숲 조성 사례에서는 (사)에코피스아시아라는 환경 ESG를 전문적으로 기획·운영하는 조직이 재정 지원을 담당하는 금융기관과, 현장에서 잘피를 이식하는 전문가 집단 그리고 관련 행정을 담당하는 지자체 등과의 협력을 지원하고 있다. 특히 국제감축사업의 경우에는 기획·운영이 중요하므로 이런 역할을 수행할 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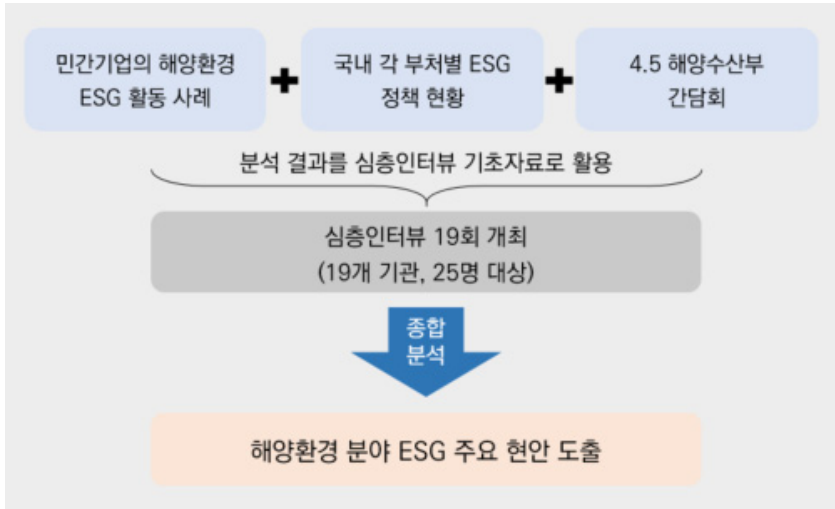
직을 양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재정적 지원자’에서 ‘기술적 지원자’로 기업의 역할을 확대할 수 있도록 다양한 해양환경 ESG를 발굴해야 한다. 앞의 사례들에서 기업은 주로 재정적인 후원을 담당하는 경우가 많았으며, 포스코의 트리톤 사례에서처럼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전문적인 기술력을 활용하는 사례는 드물었다. 그러나 해양환경 ESG에서 민간기업이 기여할 수 있는 것은 단순히 재정만은 아니다. 기업은 자본 외에도 전문적인 기술과 경험 그리고 네트워크를 보유하고 있으므로 기업이 자신들의 장점을 발휘해서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ESG 활동을 발굴하고 참여를 유도할 필요가 있다.

제2절 해양환경 분야 ESG 관련 주요 현안

이 절에서는 심층인터뷰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해양환경 분야 ESG 활성화를 위해 고려해야 할 주요 현안을 도출하여 분석하였다. 인터뷰 기획을 위해서는 제3장에서 살펴본 ESG 관련 국내 및 해양환경 정책 현황, 제4장 제1절의 문헌자료를 중심으로 한 주요 기업별 사례 및 해양수산부에서 주관한 민간기업 대상 간담회 결과를 종합적으로 활용하였다. 심층인터뷰는 해양환경 ESG를 수행한 경험이 있는 주요 기업들과 관련 기관의 담당자를 대상으로 진행하였다. 이 절에서 도출된 현안들은 제5장에서 민간기업의 해양환경 ESG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정책방안을 마련하는 데 활용하였다.

〈그림 4-12〉 해양환경 분야 ESG 관련 주요 현안 도출 방안



자료: 저자 작성

1. 심층인터뷰 대상 및 방법

국내 기업 중 해양환경과 관련된 ESG 활동을 추진하는 기업들은 아직까지는 그 수가 많지 않은 편이며, 제1절에서 살펴본 대로 규모가 큰 기업들이 주를 이루고 있다. 해양환경 ESG가 국내 기업에 보편적으로 확대되어 있거나 이를 지원하기 위한 해양수산부의 정책방안이 아직까지 체계화되지 못한 상황에서 이들 기업의 초기 경험은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이들을 대상으로 대표적인 질적연구방법인 심층인터뷰를 실시하여 기업별 ESG 추진 여건과 해양환경 ESG 추진 현황, 추진과정에서의 어려움, 지원 수요 등을 심층적으로 분석하였다.

인터뷰 대상 기업들은 크게 두 가지 방식을 종합하여 선정하였다. 우선, 기업의 보도자료 또는 지속가능경영보고서, 언론기사 등 문헌조사를 통해

해양환경 ESG 추진 경험이 있는 기업들을 조사하였다. 이들 중에서 특히 지난 4월 5일 해양수산부 해양환경정책관 주관으로 개최된 해양환경 분야 ESG 활성화를 위한 기업 간담회에 참석한 기업들을 우선 섭외 대상으로 고려하였다.¹⁵⁴⁾ 인터뷰에 응한 기업의 경우, ESG 추진 현황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와 경험 등을 공유할 수 있도록 ESG 실무 담당자를 섭외하였으며, 해양환경 분야별 세부 담당자가 있는 경우에는 가능한 한 이들을 모두 참여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제1절의 사례 분석에서 살펴본 것처럼 이들 기업과 협력하는 다른 기업이나 해양수산 관련 공공기관, NGO 등이 있으면 또한 인터뷰 대상에 포함하였다. 이렇게 하여 총 19개 기관의 해양환경 ESG 실무 담당자 및 전문가 등 총 25명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표 4-2〉 심층인터뷰 대상자 목록

소속기관 유형	대상기관 수	참석자 수	분야
민간기업	13	17	금융업, 유통업, 제조업, 수산업, 해운물류업 등
공공기관	2	3	해양환경, 수산자원관리
연구소	2	3	해양환경, 해양생태 등
NGO	2	2	환경
합계	19	25	-

자료: 저자 작성

인터뷰는 2023년 6월 19일부터 8월 8일까지 약 7주에 걸쳐 이루어졌는데, 연구진이 대상 기관을 직접 방문하여 진행하였다. 각각의 인터뷰에서는 기업별 ESG 추진 여건, 해양환경 ESG 추진 배경 및 목적, 기업의 역할, 주요 성과 및 향후 계획을 비롯하여 특히 해양환경 ESG 추진 과정에서 경험한 여러 가지 애로사항과 이를 바탕으로 한 지원 수요 등을 중점적으로 다루었다. 인터뷰는 반구조화된(semi-structured) 방식으로 진행하였으

154) 이 간담회에는 금융업, 제조업, 유통업 등 다양한 산업영역에 속하는 총 21개 기업의 ESG 담당자가 참석함(해양수산부 보도자료(2023.4.4.)(검색일: 2023.4.6.))

며, 인터뷰당 평균적으로 1시간 30분~2시간 정도 소요되었다. 모든 인터뷰는 참석자들의 사전 동의를 얻어서 녹취하였으며, 질적연구방법에 따라 녹취록을 분석하여 최종적으로 주요 현안을 도출하였다. 이 연구에서 적용한 인터뷰 준비에서 분석까지의 전반적인 절차는 <표 4-3>과 같다.

〈표 4-3〉 심층인터뷰 절차

단계		주요 내용
준비단계		• 연구주제 & 연구문제 설정
		• 인터뷰 대상자 섭외
		• 반구조화된(semistructured) 설문 준비
인터뷰 단계		• 인터뷰
분석단계	데이터 관리	• 전사(transcription)를 통해 원시 데이터(raw data) 생산
		• 전체 인터뷰 데이터를 개괄하고 잠재적 주제들을 파악하기
		• 잠재적 주제들을 정제·분류해서 초기 주제 프레임워크 구성하기
분석단계	데이터 관리	• 데이터에 주제를 표시(labeling)하고 주제별로 데이터 추출하기
		• 추출된 데이터를 검토하기: 주제 프레임워크 정교화
		• 데이터를 요약하고 종합하기
	추상화 & 해석	• 카테고리 구성하기
		• 연관관계(linkage) 생성하기
		• 해석하기(패턴 찾기, 근거 설명하기 등)

자료: 윤성순 외(2019), p. 90.

2. 심층인터뷰 주요 결과

민간기업들의 해양환경 ESG 활동은 전반적으로 초기 단계이므로 아직까지는 완료된 사례가 많지 않다. 따라서 심층인터뷰를 통해서 도출된 현안 역시 기업들이 해양환경 분야에 새롭게 진입하거나 ESG 아이тем 발굴·기획 등 초기 단계에 집중되는 특성을 보인다. 이 밖에는 해양환경 분야

중에서 기업들의 관심이 가장 집중된 주제인 블루카본과 해양폐기물 관련 사업 추진에 관한 이슈가 도출되었다.

1) 인력 및 정보 부족으로 인한 ESG 사업 기획의 한계

인터뷰에 참여한 기업의 상당수는 ESG 전담부서를 운영하고 있다. 그중 일부 기업은 ESG 평가 대응과 사업 추진 부서를 구분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반대로 전담부서가 없는 경우에는 최소한 ESG 업무 담당자를 지정하여 대응하고 있다. 이처럼 개별 기업마다 ESG 관련 조직 및 인력 현황은 상이하나 대체적으로 소수의 인원이 ESG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유사하다.

ESG 담당자가 후보 사업을 발굴하고 기획하는 방식은 기업마다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우선, 담당자가 언론기사나 정책자료 또는 그 외의 다양한 인터넷 자료 검색을 통해서 정보를 직접 수집해서 자체적으로 아이템을 개발하는 유형이 있다. 이 경우에는 해양환경에 대한 담당자의 사전지식이나 개인적인 관심 유무에 따라 정보 수집 결과가 영향을 받게 된다. 해양환경은 육상환경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영역에 속하므로 대다수 업무 담당자들은 이 단계에서부터 이미 어려움을 느끼게 된다.

또 다른 방식은 기업 외부의 지원을 통해 아이템을 발굴하고 기획하는 방식이다. 기업 내 ESG 전담인력이 있다고 할지라도 ESG 전체 영역을 다루어야 하거나, 환경 분야를 전담하는 인력이 있는 경우에도 육상과 해양을 포괄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해양환경 분야에만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못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한계로 인해 인터뷰에 참여한 여러 기업들은 아이템 발굴 및 기획 단계에서 NGO나 전문 컨설팅 업체의 도움을 받기도 한다. 이때 NGO는 이전부터 해당 기업과 여러 형태로 협력관계를 유지해 오던 단체이거나 해양환경 ESG 기획을 위해서 별도로 섭외한 단체일

수도 있다. 일부 기업은 컨설팅 업체에 위탁 용역을 주기도 하는데, 컨설팅 업체가 해양환경과 관련된 여러 개의 후보 아이টে을 발굴하여 보고서를 작성하면 기업은 이 중에서 적절한 아이টে을 고르는 방식이다.

이처럼 해양환경 ESG를 기획하는 방식은 기업마다 다소 차이가 있으나 전담인력 부족 및 사전지식의 한계로 인해 기획의 가장 첫 단계인 아이টে을 발굴을 위한 정보 수집 단계에서부터 기업들은 난관에 부딪히고 있다.

자체적인 노력을 통해서든 외부 기관의 지원을 통해서든 후보 아이টে을 대한 정보를 일단 얻었다고 할지라도 기업들은 해당 아이টে이 실제로 실현 가능한 것인지 등을 평가하거나 구체적으로 누구와 협력해야 하는지 등 세부적인 기획을 하는 데 여전히 어려움을 겪는다.

일부 기업의 경우, 수동적인 자료 검색 수준을 넘어서 직접 해양수산부나 유관기관에 연락하여 필요한 정보를 문의하는 등 기획 단계에서 적극적인 노력을 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러한 경험이 있는 인터뷰 참여자들은 해양수산부나 유관기관이 기업의 이러한 수요에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체계를 아직 갖추지 못했다고 느끼고 있다. 이에 대한 원인으로 해양환경 ESG가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해양수산부 내에서도 기업 지원 체계가 아직은 본격적으로 갖춰져 있지 않았고 특히 기업과 협력하는 방식이 아직까지는 낯설기 때문일 것이라고 추측하였다.

이 밖에도 어떤 인터뷰 대상자는 해양수산부 내 부서 간 장벽을 하나의 걸림돌로 지적하기도 했다. 예를 들어 기업의 입장에서는 바다숲 조성이나 인공어초 사업은 모두 해양환경과 관련된 사업이라고 생각하지만, 해양수산부의 업무체계에서는 해양환경 파트가 아니라 수산 파트의 영역으로 분류되어 있어 적절한 문의처를 찾는 일부터 쉽지 않다.

기업의 ESG 담당자 입장에서는 해양환경 분야가 자신의 전문분야가 아

니므로 기획 단계에서 기업의 진입장벽을 낮추기 위해서는 해양수산부 내 기업 지원창구의 일원화 등 지원체계 구축이 필요하며, 정기 간담회와 같은 오프라인 네트워크나 온라인 플랫폼 등 정보 제공을 위한 서비스가 확대되기를 희망하였다. 타 부처에서는 ESG 활동 유형별로 어떤 평가에 활용할 수 있는지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도 지원하기도 한다.

2) 기업별 수요를 고려한 해양환경 ESG 아이템 부족

문헌자료를 바탕으로 한 사례 분석 결과와 유사하게 심층인터뷰에 참여한 기업들이 가장 일반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해양환경 ESG는 바로 반려해변으로 대표되는 해양 정화활동이다. 이러한 유형의 사업에 대한 평가는 인터뷰한 기업의 담당자마다 다소 차이가 있었다. 대다수 담당자들은 반려해변 제도와 같은 해양 정화활동이 일회성 이벤트 성격이 강하다고 인식하고 있다. 그 이유는 반려해변 제도에서 요구하는 조건은 2년간 연 3회의 정화활동과 1회 이상의 해양환경보호 캠페인으로 낮은 수준이며, 단순 정화활동 위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참여자들이 만족감이나 효과성을 구체적으로 체감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게다가 여러 기업들이 동일한 해변을 입양하거나 바다환경지킴이가 활동하는 해변의 경우 ‘쓰레기 품귀’ 현상이 벌어지는 경우도 있다. 그래서 인터뷰한 기업의 담당자들에 따르면, 지역별 코디네이터가 기업별 활동구역이 중복되지 않도록 해변을 세분화거나 기업들의 활동기간을 서로 겹치지 않도록 조정하기도 하며, 기업의 정화활동이 예정된 날에는 바다환경지킴이 활동을 일시적으로 중단하는 경우도 있었다. 이처럼 반려해변 제도는 ESG가 본격적으로 화두가 되기 이전에 사회공헌 차원에서 기업들이 수행했던 활동들과 차별성이 거의 없으며, 효과 면에서도 회의적이어서 참여기간 2년을 모두 채우지 않고 중단할 것을 고민하는 기업도 있었다.

반대로 일부 기업은 반려활동으로 인정받기 위한 기준과 상관없이 자발적으로 추가적인 정화활동을 수행하기도 하며, 임직원뿐만 아니라 임직원의 가족까지 참여하는 행사로 확대하거나, 해변쓰레기 외에 침적쓰레기 수거 등 활동의 영역과 수준을 확대하기를 원하기도 하였다. 또한 인터뷰에 참여한 어떤 기업은 해양과는 직접적으로 상관없는 기업이나 반려해변 제도 참여를 계기로 다른 해양환경 분야에도 관심을 기울이게 되었다면서 이 제도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기도 하였다.

이처럼 반려해변 제도의 긍정적인 효과를 강조하는 의견도 일부 있으나 인터뷰한 기업들의 대다수는 반려해변 제도와 같은 해양 정화활동이 해양환경 분야 ESG의 대표사업으로 인식되는 것에 우려를 표했으며, 기업들이 추진할 수 있는 아이템이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였다.

특히 탄소배출량이 많은 기업, 연안 지역에 사업장이 입지해 있거나 해양을 직접적으로 이용하는 기업들의 경우 해양 정화활동 수준을 넘어서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대규모 콘텐츠 발굴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위에서 언급했듯이 기업 혼자만의 힘으로는 규모 있는 사업을 발굴해서 기획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따라서 해양수산부가 추진하는 사업 중에서 기업들의 이러한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다양한 아이템을 발굴하여 선택의 폭을 넓혀줄 필요가 있다.

이때 특히 중요한 것은 기업의 사업영역과의 관련성이다. 기후변화 대응과 관련하여 가장 영향력이 높은 것으로 인정받는 경영평가 기준인 CDP(탄소정보공개프로젝트)를 비롯하여 기업의 ESG 경영 성과를 평가하는 주요 이니셔티브에서 기업보고서를 검토할 때 중요한 기준은 바로 특정 ESG 활동과 해당 기업의 사업영역과의 관련성 여부다. 즉 단순히 사회공헌 차원에서 ESG 경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해당 기업의 사업영역에서 환경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과 리스크를 줄이는 것이 핵심이다. 따라서 해양환경

분야 ESG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아이템을 다양화하는 것도 물론 필요하지만, 산업별 특성을 고려하여 기업의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아이템 발굴을 지원하는 체계를 구축하는 것은 더욱 중요하다.

3) 기업 간 아이템 ‘선점’ 경쟁

인터뷰에 참여한 기업들이 해양환경 분야에서 ESG 활동을 시작하게 된 중요한 계기 중 하나는 육상에서의 활동과 차별성을 부각할 수 있다는 것이다. ESG 개념이 본격적으로 회자되기도 전에 많은 기업이 사회공헌의 일환으로 환경보전 활동을 해왔는데, 이러한 활동은 대부분 육상에서 이루어졌다. 특히 나무심기 캠페인이 대표적인데, 숲가꾸기 경영의 원조인 유한킴벌리가 1980년대 중반에 국내 최초로 ‘우리강산 푸르게 푸르게’ 캠페인을 통해 나무심기, 숲가꾸기, 학교숲 만들기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한 이래 업종을 불문하고 다수의 기업들이 유사한 활동을 추진해 오고 있다. 여기에 산림청과 지자체들의 지원도 증가하면서 기업들의 숲가꾸기 활동은 현재까지도 가장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다.

이처럼 기업의 호응도가 높은 이유는 숲이 정서적으로 친숙하며, 공간적인 접근성도 좋아서 참여하기가 쉽기 때문이다. 특히 도시숲의 경우에는 기업 직원들뿐만 아니라 고객들과 함께하는 활동으로도 적합하다. 그리고 숲가꾸기 활동은 그 결과가 단기간에 가시적으로 드러나기 때문에 만족도가 높고 홍보 효과도 높은 편이다.

그러나 바로 이런 이유들로 인해 다수의 기업들이 숲가꾸기 활동을 추진하다 보니 다른 한편으로는 차별성을 부각하기가 쉽지 않다는 문제가 있다. 숲가꾸기 활동이 워낙 보편적으로 행해지는 사업이라 대상지역이나 세부적인 추진방법에서 차이를 두는 것은 한계가 있다는 게 인터뷰 참여자들의 의견이다. 그래서 환경적 가치를 추구하면서도 다른 기업들과 차별성을 둘

수 있는 ‘새로운’ 영역으로서 해양이 등장하기 시작한 것이다. 인터뷰에 참여한 ESG 담당자들 다수는 해양으로 관심을 돌리게 된 중요한 계기로 ESG 아이тем으로서 해양환경 분야의 ‘신선함’을 강조했다.

그러나 해양환경 분야에서도 구체적으로 어떤 활동을 추진하느냐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은 ‘선점 가능성’이다. ESG 담당자들에 따르면, 아이тем 발굴 단계에서 좋은 평가를 받은 아이тем이라 할지라도 이미 다른 기업이 시작해 버렸다면 이 아이тем은 우선순위가 낮아지게 된다. ESG 본연의 목적에 충실해서 진정성 있게 ESG 활동을 실천하는 것이 물론 가장 중요하지만, 그와 동시에 기업 입장에서는 다른 기업과의 차별화를 추구하는 것 역시 무시할 수 없는 가치라는 것이다.

결국 ‘차별화’는 기업들이 육상에서 해양환경 분야 ESG로 관심을 돌리게 만든 중요한 요인이지만, 일단 특정 기업이 특정 아이тем에 대한 ‘최초’ 타이틀을 차지해 버리면 반대로 다른 기업들이 진입하는 데 걸림돌로 작용하기도 한다. 즉, 해양환경 ESG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기업 간의 아이тем 선점 경쟁을 완화할 수 있는 대안이 필요하다.

위에서 살펴본 숲가꾸기 활동으로 다시 돌아가면, 유한킴벌리가 ‘최초’ 타이틀을 차지한 이후에도 수십 년간 많은 기업이 유사한 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다. ESG가 본격적으로 화두가 된 이후에도 숲가꾸기 활동의 인기는 여전하다. 이는 위에서 언급한 대로 접근성이나 효과의 가시성 등으로도 설명할 수 있지만, 숲가꾸기 활동이 ESG 평가항목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K-ESG 가이드라인은 추가항목으로 산림탄소흡수량을 포함하고 있는데, 이는 기업의 탄소 배출을 상쇄하기 위한 목적으로 신규 조림이나 재조림, 식생 복구, 산림경영 또는 산림 황폐화 방지 활동 등을 통한 산림의 탄소흡수량을 측정하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바다숲 조성이나 갯벌 복원을 통한 탄소흡수량이 평가항목으

로 추가된다면 더 이상 기업 간 아이템 선점 경쟁은 크게 의미가 없게 된다. 이전에는 어느 기업이 국내 ‘최초로’ 바다숲 또는 갯벌복원사업을 추진하느냐가 중요했다면, 앞으로는 이러한 활동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얼마나 많은 탄소 흡수 성과를 인정받을 수 있느냐가 더 중요해지는 것이다.

기업 간 선점 경쟁을 완화할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은 기업과 해양수산부 간의 협력 방식을 전환하는 것이다. 기업은 ESG 활동을 추진할 때 공신력을 확보하기 위한 방편으로 관련 정부부처와 업무협약을 맺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특정 기업과 해양수산부가 업무협약을 맺는다면 다른 기업들 입장에서는 그 아이টে에 대해서는 그 기업이 선점한 것으로 여겨진다. 따라서 다른 기업들은 동일한 아이টে을 선택할 이유가 줄어들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지금까지 개별 기업과 해양수산부가 업무협약을 맺는 방식 대신 산업별 복수의 기업이 해양수산부와 공동으로 협력하는 체계를 구축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예를 들면 해양쓰레기 저감을 위한 ESG 활동과 관련하여 특정 기업 단독이 아니라 유통업계의 주요 기업들과 해양수산부가 공동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개별 기업 입장에서는 기업 간 아이টে 경쟁 압박을 덜 받게 되며, 사업의 효과성 측면에서는 여러 기업이 공동으로 참여하므로 스케일업 효과가 나타날 수도 있다.

4) 민간 참여형 국가사업의 추진체계 미비

기후변화 대응과 탄소중립이 핵심 환경 이슈로 대두되면서 해양환경 분야 중에서도 기업들이 특히 관심을 갖는 대표적인 분야는 바로 블루카본 사업이다. 앞에서 살펴본 숲가꾸기 사업에서는 나무가 탄소흡수원으로 기능하는 그린카본이라면, 블루카본은 해양생물 등과 같은 해양생태계의 탄소흡수원을 의미한다.

블루카본은 2013년에야 국제사회에서 공식적으로 인정될 만큼 아직은

전반적으로 초기 단계라 할 수 있다. 현재까지 IPCC 지침에 포함된 블루카본은 갈피 등의 해초류와 염생식물 그리고 맹그로브 등 3종에 불과하다. 이에 우리나라는 이미 공식적으로 인정을 받은 블루카본 서식지를 확대하는 한편 연구개발과 국제협력을 통해 비식생 갯벌과 해조류 등 신규 블루카본 후보군의 국제 인증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이 중에서 특히 블루카본 서식지 확대 사업, 즉 갯벌복원사업을 통한 염생식물 서식지를 확대하거나 갈피 식재를 하는 바다숲 조성 사업에 관심을 보이는 기업이 최근에 증가하고 있다. 갯벌복원사업은 「갯벌법」에, 그리고 바다숲 조성 사업은 「수산자원관리법」에 법적 근거를 두고 있다. 먼저, 「갯벌법」은 갯벌복원사업의 기본원칙, 복원사업 시행 주체 및 대상지역, 갯벌복원사업계획 및 실시계획의 수립 및 변경, 복원사업 시행을 위한 토지 등의 수용·사용 및 사후관리 등 갯벌복원사업의 전반적인 절차와 주체별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또한 해양수산부훈령으로 제정된 갯벌복원사업 지침은 갯벌복원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세부사항과 절차를 제시하고 있다. 한편 「수산자원관리법」은 수산자원관리기본계획에 바다숲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전문기관인 한국수산자원공단이 수산자원조성 시행지침에 따라 바다숲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이처럼 이 사업들은 모두 관련 법률에 따라 추진되는 국가 주도형 사업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민간기업이 ESG의 일환으로 갯벌 복원이나 바다숲 조성 사업에 참여할 경우 사업 전반에 관한 행정적 절차와 주체별 역할이 명확하지 않은 문제가 발생한다. 갯벌복원사업을 중심으로 주요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갯벌복원사업은 복원 대상지 선정과 복원사업 시행 및 사후관리 등 크게 세 단계로 구분된다. 먼저, 「갯벌법」과 복원사업지침은 해양보호구역, 습지보호지역 등 아홉 가지 유형에 포함되는 곳으로서 복원 이후 갯벌의 생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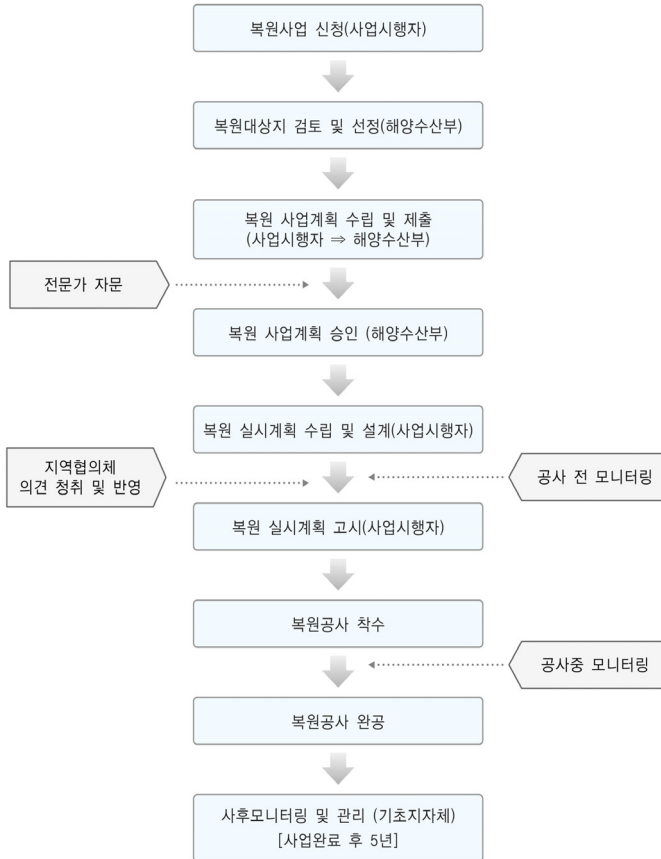
적 가치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곳을 대상지역으로 제시하고 있다. 여기에 속하는 지역에 대해 사업시행자가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면 이를 바탕으로 대상지의 적합성, 갯벌 복원의 논리, 복원 의지, 경제성, 기대효과 및 성공 가능성 등을 기준으로 검토하고 최종 대상지역을 선정하게 된다.

그러나 민간기업이 복원사업에 참여하는 경우, 대상지역으로 자신들의 사업장 인근의 갯벌을 선호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왜냐하면 ESG 평가기관에서 사업장 인근에서의 활동 실적을 요구하기 때문이다. ESG 평가를 논외로 하더라도 복원된 갯벌이 기업의 연고지에 있어야 기업의 지역사회 공헌 효과가 부각되어 기업 이미지 제고에 더 도움이 되며, 해외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복원 갯벌 견학 등 IR(Investor Relations)에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기업이 참여할 때는 복원 대상지역이 사실상 처음부터 특정되어 버리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 이럴 경우 법률과 지침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상지역 검토 및 선정 절차를 그대로 적용해야 할지 아니면 별도의 절차와 기준이 필요할지 제도적 검토가 필요하다.

둘째로는 민간 참여형 갯벌복원사업에서 사업시행자가 불명확하다는 점이다. 「갯벌법」에 따르면 해양수산부 장관, 시·도지사 또는 기초지자체의장이 복원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¹⁵⁵⁾ 사업시행자가 시·도지사 또는 기초지자체의 장일 경우 복원 대상지에 대해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해양수산부 장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으면 실시계획을 수립·고시해야 한다. 이때, 사업비는 해양수산부와 해당 지자체가 7:3의 비율로 각각 국비와 지방비를 분담하게 된다. 복원공사가 완공된 이후에는 사업시행자 또는 시행자로부터 위탁을 받은 기관은 5년간 모니터링 등 사후관리를 실시해야 한다. 이처럼 「갯벌법」에 근거해서 복원사업을 추진할 경우 재원 확보 방안을 비롯해 주체별 역할이 명확하다.

155) 「갯벌법」 제20조

〈그림 4-13〉 「갯벌법」에 따른 갯벌복원사업 추진 절차



자료: 갯벌복원사업 지침, 별표 1

반면에, 갯벌복원사업에서 기업은 일반적으로 기부금을 출연해서 사업비를 부담하는 방식으로 참여하게 되는데, 이 경우 사업시행자가 해양수산부인지 시·도지사 또는 기초지자체의 장인지 아니면 기업인지 명확하지 않다. 따라서 사업계획과 실시계획을 누가 수립해야 하는지 그리고 사업비는 기업이 전적으로 부담하는지 아니면 국비나 지방비로 일부를 분담할 수 있는지 역시 불분명하다. 갯벌 복원은 세부적인 복원 유형이나 대상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기본적으로 수십억 원에서 수백억 원의 사업비가 소요되는 사업이다. 따라서 특정 기업이 단독으로 사업비를 부담할 경우, 「갯벌법」에 따라 정부 예산이 투입되는 복원사업에 비해 복원 면적이 상대적으로 줄어들 가능성이 크며, 이 정도 규모의 사업비를 홀로 감당할 수 있는 기업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그렇다고 해서 지자체가 사업비 일부를 부담해야 하는 법적 근거도 없다. 그리고 법률에 따른 대상지 검토 및 선정 절차를 거치지 않고 대상지역이 기업 연고지로 처음부터 특정되는 복원사업에 국비가 투입될 경우, 자칫 그 지자체에 특혜를 제공하는 것으로 비칠 우려도 배제할 수 없다.

한편 「갯벌법」에 따라 시행자는 필요시 토지·물건 또는 권리를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으며, 이때 손실보상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민간 참여형 사업의 경우 시행자가 불분명하며, 토지 등의 수용·사용 가능 여부도 모호하다. 그리고 이런 유형의 사업이 공익사업에 해당되는지도 면밀히 따져보아야 한다. 결국 제도적인 보완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민간 참여형 갯벌복원사업은 토지 등의 수용·사용이 필요 없는 곳, 즉 손실보상이 불필요한 곳으로 한정될 가능성이 높다.

한편 「갯벌법」에 따른 복원사업의 경우, 사업비에는 설계비, 공사비, 갯벌 조사·모니터링 및 기타 유지·관리 비용이 포함된다.¹⁵⁶⁾ 그러나 민간기업이 사업비를 부담하는 경우, 사업비 사용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은 없다. 실시설계비나 공사비는 사업비에 당연히 포함되겠지만 5년간의 사후 모니터링을 포함한 유지·관리 비용을 누가 부담해야 하는지 명확하지 않다. 이 비용까지를 사업비에 포함하여 기업이 부담하게 되면 실질적인 복원 면적은 더욱 줄어들 수밖에 없다.

156) 갯벌 조사 및 모니터링 비용은 사전, 진행 과정 및 사후 모니터링 비용을 포함하며, 유지·관리 비용은 복원지역 유지·관리 및 홍보 등의 제반비용을 포함함(갯벌복원사업 지침 별지 1의 사업신청서 양식 참고)

또한 「갯벌법」에 따른 복원사업의 경우, 복원사업 종료 후 기초지자체의 장이 5년간 사후 모니터링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때 모니터링 항목, 조사 시기 및 주기 등 세부적인 사항은 갯벌복원사업 지침에 명시되어 있다. 그러나 민간 참여형 사업에서는 누가 사후 모니터링의 의무를 지게 되는지 확실하지 않으며, 모니터링 기간과 방법 역시 지침을 준용해야 하는지 아니면 간소화된 방식도 무방한지 논의가 필요하다. 예를 들어, 재원의 출처가 정부든 민간기업이든 상관없이 복원 갯벌을 일관된 원칙과 방식으로 관리하기를 원하면 전자가 적합할 것이다. 반대로 향후에 민간기업이 갯벌복원사업을 외부사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면, 이에 필요한 수준으로 모니터링을 간소화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다.

요약하면, 민간기업과 중앙부처, 지자체 및 지자체의 위탁을 받은 전문기관 등 갯벌복원사업과 관련된 주체들 간의 역할이 명확하게 정립되지 않으면 민간기업의 참여 확대를 기대하는 것은 쉽지 않다. 특히나 갯벌복원사업은 다른 사업들에 비해 사업비가 월등히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애초에 기업의 참여가 쉽지 않은 상황에서 제도의 미비는 더욱 큰 걸림돌로 작용할 것이다.

제도 정비의 핵심은 결국 갯벌복원사업에 참여하는 민간기업의 지위와 사업비 부담 방식으로 요약된다. 즉, 사업비를 부담하는 민간기업에 사업시행자의 지위를 부여할 것인가와 정부와 지자체가 사업비 일부를 분담할 필요가 있는지가 핵심이다. 먼저, 민간기업이 갯벌복원사업의 시행자가 될 경우 기업은 사업비를 제공하고 사업단계별 실무적인 사항은 전문기관이 위탁받아 시행하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이처럼 제삼자가 국가사업의 시행자가 되는 사례는 「연안관리법」에서 찾아볼 수 있다. 「연안관리법」은 사업구역에 따라 해양수산부 장관, 시·도지사 또는 기초지자체의 장을 각각 연안정비사업의 시행자로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이들의 지정을 받아서 제삼자 역시 시행자로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지정 절차

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다.¹⁵⁷⁾ 또는 민간기업 대신 해양수산부가 시행자로서 사업을 총괄하고 추진 절차는 「갯벌법」을 준용하는 방식도 고려해 볼 수 있다.

둘째는 사업비 부담 방식인데, 「갯벌법」에 따른 복원사업이 해양수산부와 지자체가 7:3의 매칭펀드로 재원을 확보하는 것과 달리 민간투자에 기반한 사업은 관련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그러나 사업계획 수립부터 사후관리에 이르는 복원사업의 전 과정에 소요되는 비용을 고려할 때 기업이 홀로 모든 비용을 감당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으며, 그렇게 되면 사업 시행효과도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민간 참여형 갯벌복원사업 역시 정부투자에 기반한 사업과 마찬가지로 궁극적으로는 탄소 흡수, 해양생태계 보전 등의 순기능이 있으므로, 중앙정부나 지자체가 재원을 분담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블루카본이 중요한 이슈로 부각되면서 민간기업이든 해양수산부든 현재는 염생식물을 식재하는 갯벌식생 복원사업에 우선적으로 관심을 갖고 있지만, 이 밖에도 갯벌 복원에는 다양한 유형이 있다. 예를 들어, 해수소통이 단절된 갯벌의 노둑길이나 연륙교 등을 교량화하는 해수유통형, 폐염전 및 폐양식장 등을 정비하여 해수유입을 통해 자연천이를 유도하는 갯벌재생형 그리고 오염물질을 제거하여 갯벌의 생태적 기능을 회복시키는 기능개선형 등이 대표적이다. 따라서 식생 복원 외에 다른 유형의 복원사업에도 기업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도록 제도적 정비와 홍보가 병행될 필요가 있다.

여기에서는 갯벌복원사업을 중심으로 민간기업의 참여 시 제도적 미비점을 살펴보았다. 바다숲 조성 사업 역시 민간 참여형으로 추진할 경우 이와 유사한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이 두 가지 사업처럼 국가 주도형

157) 「연안관리법」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사업 중에서 ESG 경영 차원에서 민간기업의 참여 수요가 높은 사업들을 추려내고, 각각 사업의 추진 절차와 관련 주체별 역할을 정비하여 민간기업의 참여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확대하여야 한다.

5) 해양폐기물 자원순환 생태계 열악

위에서 살펴본 갯벌 식생 복원이나 바다숲 조성과는 같은 블루카본 사업 외에도 민간기업이 특히 관심을 갖는 분야는 바로 해양쓰레기 자원순환이다. 이는 해양수산부가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정책이기도 하다. 2022년 말에 해양수산부는 ‘해양폐기물 재활용 활성화 대책’을 내놓은 데 이어 2023년 4월에는 ‘해양쓰레기 저감 혁신대책’을 발표하는 등 해양폐기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책적 노력을 적극적으로 기울이고 있다.

‘해양폐기물 재활용 활성화 대책’은 2027년까지 물질 재활용률을 2021년 수거량 대비 20% 이상(24.1천 톤 이상)으로 높이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¹⁵⁸⁾ 이를 위해서 이 대책은 특히 해양폐기물의 수집·운반·집하 및 재활용 체계를 전반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전략과 추진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반면에 ‘해양쓰레기 저감 혁신대책’은 연간 발생량보다 수거량을 늘려 해양쓰레기 네거티브를 달성하는 것이 목표로서, 수거·집하에 특화된 세분화된 전략을 제시하고 있다.¹⁵⁹⁾ 즉, 이들 대책은 모두 해양쓰레기 저감을 넘어서 궁극적인 자원순환을 위해서는 해양쓰레기 수거부터 최종 재활용 소재 생산 및 활용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이 체계적으로 연계되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해양폐기물이 글로벌 이슈로 대두되면서 해양폐기물을 재활용한 제품들도 점차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해양폐기물 재활용 산업시장은 육상폐기물

158) 해양수산부 보도자료(2022.12.13.)(검색일: 2023.6.20.)

159) 해양수산부 보도자료(2023.4.20.)(검색일: 2023.6.20.)

산업에 비해 현저히 영세하고 밸류체인 역시 아직까지는 안정적으로 구축되지 못한 실정이다. 여기에서는 심층인터뷰 결과를 바탕으로 해양폐기물 자원순환 밸류체인의 성장을 저해하는 요인을 다음과 같이 세 가지로 구분하였다.

첫째, 해양폐기물 재활용에 있어서 가장 큰 걸림돌은 산업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만큼 해양폐기물이 안정적으로 공급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현재 해양쓰레기 수거는 어구·부표 보증금제나 수매사업 및 침적쓰레기 수거사업 또는 어민의 개별 배출 등 다양한 방법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집하시설이 충분치 않거나 지역적으로 산재해 있으며 특히 재활용이 가능한 폐기물의 선별·분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가 있다. 따라서 해양폐기물을 산업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1차 집하장뿐만 아니라 거점 집하시설을 확충하여 재활용 원료로서의 해양폐기물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배출단계에서부터 분리배출이 정착되어야만 한다. 선별·분리된 폐기물의 안정적 공급은 재활용 전체 공정 중에서 경제성을 확보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전제조건이다.

해양폐기물 재활용 산업시장이 성장하면서 재활용 원료에 대한 수요는 증가하는데 공급이 이를 따라가지 못하면 해양폐기물을 외국에서 수입하는 사례가 늘어나게 된다. 물론 해양폐기물은 전 지구적인 문제이므로 지구 전체 차원에서 보면 해양폐기물을 수입하는 것도 의미가 있다. 그러나 해양폐기물 문제를 글로벌 이슈이기 전에 우선 지역문제로 바라본다면 해양폐기물의 안정적 공급체계가 없는 재활용 산업시장이 성장하더라도 국내 해양폐기물 문제 해결에는 크게 기여하지 못하는 모순된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다.

재활용이 가능한 해양폐기물을 확보하는 데 있어서 특히 중요한 것은 해운기업이나 수산기업 등 기업 소속 선박에서 발생하는 해양폐기물이다. 이

런 기업들은 정기적으로 대량의 로프나 어망 등을 구입하기 때문에 구입처와 구입량, 재질 및 폐기물 발생량 등을 확인하기가 용이하다. 따라서 이런 기업의 폐기물은 일반적인 해양폐기물과 동일한 수거·집하 과정을 거치는 것이 아니라 별도의 체계를 통해서 처리 단계로 바로 연계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다. HMM이나 동원산업과 같이 일부 기업들은 처리업체와 MOU를 체결하여 자사의 해양폐기물을 직접 제공하는 사례가 있으나, 수산업계나 해운업계 전반으로 확대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은 아직까지는 미흡한 편이다.

따라서 해당 업계 전반으로 이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기업들로 하여금 어망 등의 구입 및 폐기물 발생에 관한 내부적인 정보관리체계를 갖추도록 유도해야 한다. 그리고 이들로 하여금 적절한 조건을 갖춘 폐기물 처리업체나 재활용 업체에 폐기물을 직접 배출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지원수단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이런 기업들은 ‘폐기물 배출자’가 아니라 ‘재활용 자원 공급자’로서 인식되어야 하며, 폐기물 직접 배출 실적을 해당 기업의 ESG 성과로 활용할 수 있거나 경제적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그에 부합하는 보상체계가 마련되어야 한다. 해양폐기물 재활용 소재를 사용하여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은 탄소배출 저감 성과를 누리지만 소재의 원료가 되는 해양폐기물을 제공하는 기업은 그렇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직접 배출을 의무화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다. 한편 이런 기업들의 폐기물이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시기가 정해져 있는 데 반해서 재활용 업체들의 매월 작업 물량은 정해져 있다. 따라서 어항이나 항만에 기업 소속 선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재질별로 분리하여 집하할 수 있는 시설을 확충하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문제는 현재 해양폐기물 재활용 시장은 나일론 중심으로 형성되어 있어 규모가 영세하다는 것이다. 해양폐기물이 다양한 산업영역에서 소재로 활용되기 위해서는 나일론 외에도 PE, PP, PET 등 다양한 해양플라스

틱 종류도 재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기술개발을 지원하고 인프라를 확대해야 한다. 그러나 가격이나 기능 면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해양폐기물만 100% 사용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다. 따라서 해양폐기물 재활용 원료를 사용하도록 소재사들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소재 생산 시 사출조건에 따라 해양폐기물과 신제 플라스틱을 혼합해서 사용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고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와 더불어 해양폐기물 세척 과정에서 세척수의 오염도에 대한 소재사들의 요구에 부합할 수 있도록 기술개발과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해양폐기물 재활용 소재에 대한 최종 수요가 아직까지는 부족하며, 재활용 제품에 대한 신뢰도를 입증할 수 있는 방안이 현재까지는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점을 문제로 지적할 수 있다. 해양폐기물 재활용 소재를 활용하여 최종제품을 생산하는 사례가 일부 있으나, 해양폐기물의 사용 비중에 대한 기준은 현재 마련되어 있지 않다. 즉, 해양폐기물 재활용 소재가 극히 일부만 포함되더라도 기업 입장에서는 해양폐기물을 활용한 성과로 홍보할 수 있는 셈이다. 그러나 이런 경우, 자칫 그린워싱이라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장기적으로 해양폐기물 재활용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해양폐기물 재활용 제품에 대한 인증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전체 원·부자재 사용량 중에서 일정 비율 이상의 해양폐기물 재활용 원·부자재를 사용한 경우에만 재활용 제품으로 공식적으로 인정한다든지, 재활용 원·부자재 중에서 일정 비율은 해양플라스틱을 사용해야 한다는 기준을 생각해 볼 수 있다. ‘해양폐기물 재활용 활성화 대책’에서 해양수산부는 해양폐기물 재활용 제품에 대한 공적 인증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해양폐기물 재활용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재활용 제품에 대한 인증도 필요하지만 해양폐기물 출처에 대한 인증이 더욱 중요하다. 국제적

으로는 OBP(Ocean Bound Plastic) 또는 OP(Ocean Plastic) 등 해양폐기물의 출처와 이력에 따라 인증을 구분하고 있다. 이처럼 출처에 대한 인증을 통해 한편으로는 폐기물의 해양 유입을 줄이고, 다른 한편으로는 해양폐기물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함으로써 신뢰도를 높이고 재활용을 확대할 수 있다.

인증과 관련한 또 다른 이슈는 국내 인증제도가 필요한지에 관한 것이다. 현재 해양폐기물 재활용에 대한 수요가 있는 기업들은 일반적으로 글로벌 비즈니스를 추구하는 기업이다. UL이나 Control Union 등 국제적으로 널리 통용되는 인증체계가 이미 존재하는 상황에서 새롭게 국내 인증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이런 기업에는 굳이 필요 없을 것이다. 그러나 글로벌 인증이 필요 없는 기업에는 국내 인증제도가 의미가 있다. 해외 인증과 유사한 기준을 적용하되 비용은 더 저렴하다면 국내 인증제도의 활용이 더욱 확대될 것이다. 이처럼 인증제를 활성화하면 재활용 제품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지고 이는 다시 최종 수요를 확대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어 궁극적으로는 재활용 생태계를 확대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6) 기업 참여 유인수단으로서 외부사업 방법론 개발 부족

민간기업의 해양환경 분야 ESG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참여기업의 주변을 확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러나 앞에서 살펴본 대로 반려해변 제도를 제외하면 아직까지는 소수의 기업들만 해양환경 ESG 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여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우선 K-ESG 가이드라인을 비롯해서 주요 ESG 평가체계에서 해양환경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평가항목이 없다는 것이 하나의 원인일 수 있다. 그 외에도 해양에 대한 심리적 거리와 정보 부족 역시 하나의 걸림돌로 작용했을 수 있다.

그러나 인터뷰 분석 결과에 따르면 중요한 이유 중의 하나는 바로 기업 간의 아이템 선점 경쟁이다. 해양환경에 관심이 있는 기업일지라도 다른 기업이 먼저 특정 아이터를 선점해 버리면 그 아이터는 추진을 포기할 가능성이 높다. 사회적 책임 차원에서 ESG를 추진하지만 기업은 근본적으로는 이윤 창출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기업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홍보하는 것 역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따라서 이미 다른 기업, 특히 경쟁기업이 선점한 아이터는 효용가치가 낮아지게 되는 것이다.

결국 기업 간 선점 경쟁을 완화하고 기업의 참여를 유인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보상수단이 필요한데, 인터뷰에 응한 기업들 대다수는 특히 외부사업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외부사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면 굳이 자신들이 선점할 수 있는 아이터를 발굴하기 위해 노력할 필요도 없고 이미 다른 기업이 추진하는 사업일지라도 얼마든지 중복해서 추진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해양환경 분야에서는 최근에 부산항만공사와 동원부산컨테이너터미널이 협력하여 하역장비 운영 방식을 화석연료에서 전기에너지로 전환한 사례 등 현재까지 외부사업으로 인정된 사례가 총 일곱 건으로 많지는 않은 편이다. 외부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기업들의 수요를 지속적으로 조사하는 한편 해양수산부의 해양환경 관련 업무 중에서 외부사업으로 적절한 후보들을 다양하게 발굴하고 기업에 홍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실제로 외부사업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각각의 후보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론을 개발해야 한다. 앞에서 살펴본 갯벌 식생 복원사업을 예로 들면, 복원 전후 모니터링을 통해 데이터를 확보하고 탄소저감 효과 측정 방법론을 개발하여 적용하는 것이다.

〈표 4-4〉 해양환경 분야 ESG 관련 주요 현안

현안	주요 내용	ESG 활성화를 위한 시사점
인력 및 정보 부족으로 인한 ESG 사업 기획의 한계	• 기업의 전담인력 부족, 해양환경에 대한 사전지식 부족 • NGO나 컨설팅 업체가 후보 아이템 발굴 지원하는 경우 있음 • 해수부의 기업 지원체계 미비, 기업과 협력하는 방식에 익숙지 않음 • 해수부 내 부서 간 장벽	• 해수부 내 기업 ESG 지원창구 일원화 • 오프라인 네트워크, 온라인 플랫폼 등 다양한 채널로 해양환경 ESG 기획에 활용할 수 있는 정보 제공 • ESG 활동과 평가 활용 정보 연계 제공
기업별 수요를 고려한 ESG 아이템 부족	• 반력해변 제도 참여기업이 다수이나 만족도는 전반적으로 높지 않음(대부분 일회적 이벤트성 행사로 인식. 일부 기업은 반력해변 제도를 계기로 해양환경 분야에 관심 증대. 그러나 후속 아이템 기획에 한계) • 지속가능한 대규모 콘텐츠 발굴에 관심 있으나 기업 단독으로 기획은 한계 • ESG 평가에서 ESG 활동과 기업의 사업영역과의 관련성은 중요한 기준이나 기업 혼자 힘으로는 관련 있는 아이템 발굴이 어려움	• ESG 아이템의 다양화 • 기업의 사업영역을 고려한 아이템 발굴 지원
기업 간 아이템 '선점' 경쟁	• 숲가꾸기 등 육상 ESG 활동과 차별성을 위해 해양환경 분야에 관심 갖기 시작 • 해양환경 분야 중 세부 아이템 선정 기준은 선점 가능성 유무 • 타 기업이 선점한 아이템은 평가가 좋아도 우선순위가 낮아짐	• 기업 간 선점 경쟁 완화 방안 필요: 산림탄소흡수량과 같이 평가항목에 추가, 복수의 기업과 해수부 간 다자간 협력체계 구축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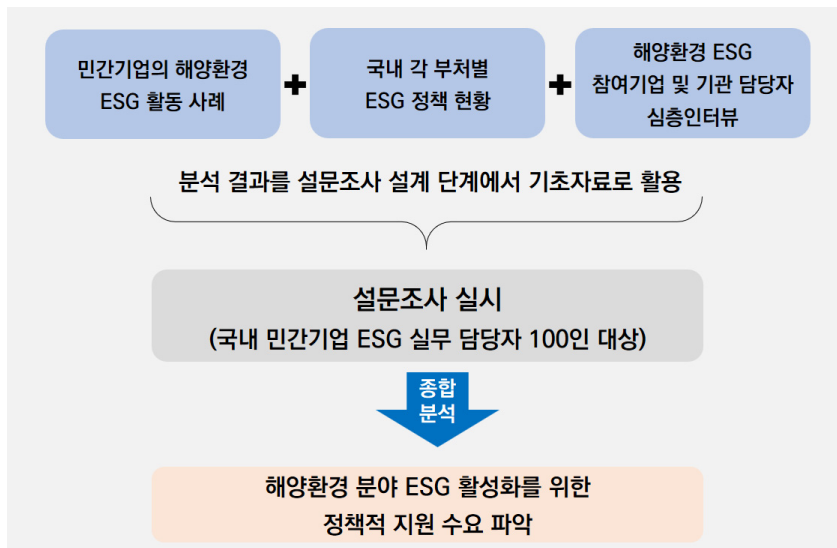
현안	주요 내용	ESG 활성화를 위한 시사점
민간 참여형 국가사업 추진체계 미비	- 갯벌법에서 갯벌복원사업을 규정하고 있으나 민간 참여형 사업에는 적용되지 않음 - 민간 참여형 갯벌복원사업의 추진 절차와 주체별 역할 모호: 대상지 선정, 사업계획 및 실시계획 수립, 사업비 분담, 토지 등의 수용·사용, 사후 모니터링 등 - 바다숲 조성 사업도 민간 참여형으로 추진 시 유사한 문제 발생 우려	- 제도 정비: ① 민간기업의 지위(시행자로서 지위 부여 여부), ② 사업비 부담 방식(민간기업이 전액 부담? 정부 또는 지자체가 부담 가능?), ③ 사업 추진 절차 및 주체별 역할 명확화 - 복원사업 유형 중 식생 복원형 외에도 다른 유형을 민간 참여형 ESG 아이টে็ม으로 개발 - 갯벌복원사업 외에도 국가 주도형 사업 중 민간기업의 참여 수요가 높은 사업 조사 및 제도 정비
해양폐기물 자원순환 생태계 열악	- 선별·분리된 해양폐기물의 안정적 공급은 해양폐기물 자원순환의 경제성 확보를 위한 필수요건이나 현재까지는 미충족. 공급 부족 시 수입 사례 증가 우려 - 나일론 중심의 영세한 해양폐기물 재활용 시장 - 해양폐기물 재활용 소재에 대한 최종 수요 부족, 재활용 제품 신뢰도 낮음 - 해양폐기물 '출처'에 대한 국내 인증 미비(제품 대상 인증제는 도입 예정): 해외는 OBP, OP 등 출처 인증 활발	- 해운·수산업 소속 선박의 해양폐기물 직접 배출 확대(일반 해양폐기물과 혼합하지 말고 처리 단계로 바로 연계): 기업 내부의 어망·어구 정보관리체계 구축, 어항·항만 내 전용 집하장 마련, '폐기물 배출자'에서 '재활용 자원 공급자'로 인식 전환, 경제적 인센티브 제공, ESG 실적으로 활용 등 - 다양한 종류의 플라스틱 재활용을 위한 기술개발, 소재사의 요구 부합 노력(신제 플라스틱과 혼합, 세척수 오염도 관리) - 해외 인증제도와 유사한 기준이 되 비용은 더 저렴한 국내 인증 개발, 해양폐기물 재활용 소재에 대한 최종 수요 확대
기업 참여 유인수단으로서 외부사업 방법론 개발 부족	- 기업 간 선점 경쟁은 해양환경 ESG 활성화에 걸림돌 - 외부사업은 선점 경쟁을 완화하는 일종의 새로운 보상수단으로 인식되고 있으나, 해양환경 분야에서 외부사업 인정 실적은 현재까지는 미미	- 기업별 외부사업 수요 조사 - 해양수산부의 해양환경 업무 중 외부사업으로 연계 가능한 후보사업 발굴 및 홍보 - 후보사업별 외부사업 방법론 개발

자료: 저자 작성

제3절 해양환경 분야 ESG 관련 정부의 지원 수요

이 절에서는 설문조사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해양환경 분야에서 민간기업의 ESG 추진 현황, 애로사항 등 추진 실태와, 확대 계획 유무 및 방향, 앞으로 민간기업의 참여 활성화를 위해 개선이 필요한 사항 및 정책적 지원 수요 등을 분석하였다. 설문지 설계를 위해서는 제2장 제2절에서 문헌 자료를 중심으로 한 국내 ESG 정책 현황, 제4장 제1절에서 살펴본 주요 기업별 사례와 제2절의 심층인터뷰 결과를 종합적으로 활용하였다. 설문조사는 국내 민간기업 ESG 실무 담당자 1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하였다. 이 절에서 분석한 결과는 제5장에서 민간기업의 해양환경 분야 ESG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정책방안을 도출하는 데 활용하였다.

〈그림 4-14〉 해양환경 분야 ESG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지원 수요 파악



자료: 저자 작성

1. 설문조사 대상 및 방법

본 연구에서는 앞의 절에서 실시한 심층인터뷰와 더불어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우리나라 민간기업의 해양환경 분야 ESG 추진 현황과 한계, 향후 확대 계획 및 방향,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지원 수요 등을 중점적으로 진단하였다.

이번 설문조사는 해양환경 ESG 경험 유무와 관계없이 국내 민간기업 100곳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해당 기업의 ESG 실무 담당자가 설문에 응답하도록 하였다. 조사에 응한 기업은 대기업, 중견·중소기업으로 다양했으며, 여기에는 앞의 제2절 심층인터뷰에 참여한 기업도 일부 참여하였다.

〈표 4-5〉 설문조사 참여 기업

구분		비율(%)
기업 유형	대기업 및 계열사	19.0
	중견기업	69.0
	중소기업	12.0
해양환경 ESG 추진	추진	14.0
	미추진	86.0

자료: 저자 작성

설문조사는 2023년 8월 11일부터 9월 7일까지 약 한 달에 걸쳐 이루어졌으며, 온라인으로 진행하였다. 조사 내용은 기업의 ESG 경영 도입현황, 해양환경 분야 ESG에 대한 인식, 해양환경 분야 ESG 추진 실태, 정책적 지원 수요에 대해 다루었다. 이중 인식조사 결과는 앞의 제3장 제1절에서 이미 다루었으므로 이번 절에서는 제외하였다.

2. 설문조사 주요 결과

1) 응답 기업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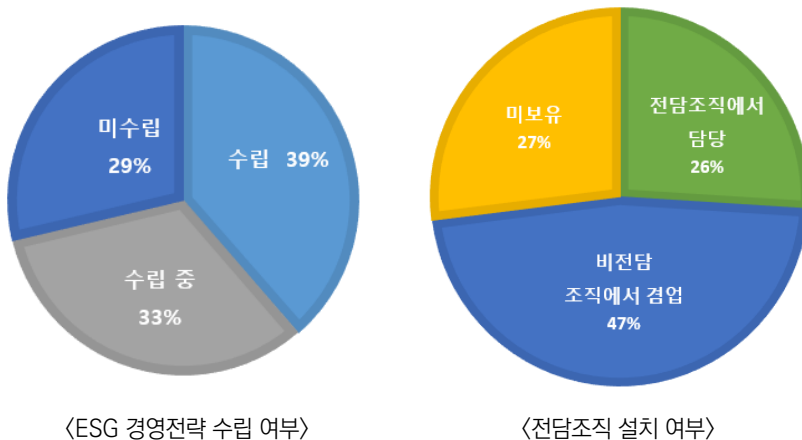
먼저 이번 설문조사에 응답한 기업의 특성을 살펴보면, 상장기업은 51%, 비상장기업은 49%였다. 기업 규모로는 중견기업이 69%로 가장 많았으며, 대기업과 계열사는 19%, 중소기업은 12%였다. 업종별로는 제조업(68%)이 관련 기업이 비제조업(32%) 보다 두 배 이상 많았는데, 제조업 중에서는 기계 및 장비 제조업(16%), 화학제품 제조업(14%), 금속제품 제조업(13%) 순으로 많았고, 비제조업 중에는 유통·물류업 및 도소매업이 각각 10%로 가장 많았다. 연안 및 해양과의 연관성을 확인하기 위한 질문에는 33%가 연안지역에 사업장이 입지해 있거나 해양을 이용한다고 응답하여, 이번 설문에 응한 기업 중 1/3 정도가 연안 및 해양과 직간접적으로 연관이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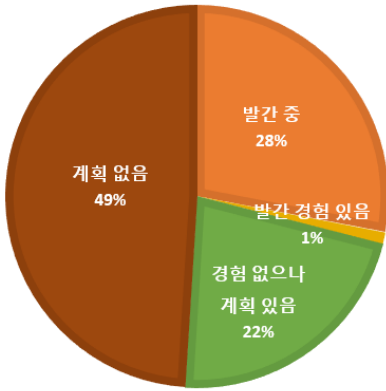
2) ESG 경영 도입 현황

다음으로는 각 기업의 ESG 경영 도입 현황 및 추진 여건을 파악하기 위해 ESG 경영전략 수립, 전담조직 설치,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발간, 경영성과 평가 여부에 대해 질문하였다. 먼저 응답 기업 100곳 중 39%는 ESG 경영전략을 수립한 상태였으며, 33%는 수립 중인 것으로 나타나 70% 이상이 ESG 경영전략을 수립하고 이를 토대로 추진해나가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 외 기업은 아직 경영전략을 마련하지 않은 상태였으며 이중 89.3%는 구체적인 수립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둘째, ESG 업무 전담조직 설치 여부에 관해서는, 26%만이 현재 사내에 별도 조직을 두고 있었으며, 47%는 전담조직 없이 ESG 실무자가 겸업 상태로 업무를 수행 중인 것을 알 수 있었다. 향후 1~2년 이내에 전담조직을 구성할 계획이 있는 기업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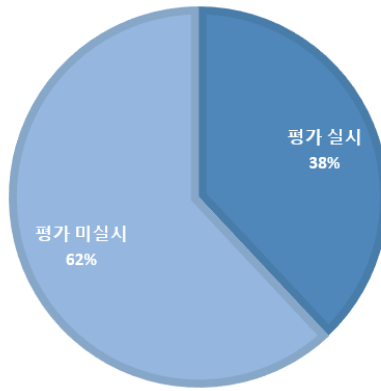
18.9%였으며, 나머지 기업은 구체적인 계획이 없다고 응답하였다. 셋째, 현재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발간하는 기업은 28%였으며, 지금은 아니지만 앞으로 계획이 있는 기업은 22%, 발간계획이 전혀 없는 기업은 49%에 달했다. 마지막으로, 기업이 ESG 경영성과 평가를 할 때, 내부에서 자체적으로 또는 외부 기관을 통해 실시하거나 두 가지 방법을 병행하는 경우도 있다. 이번 설문조사에서는 38%의 기업이 ESG 경영성과 평가를 실시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중 외부기관을 통해 평가하는 기업은 84.2%, 자체평가를 실시하는 기업은 50%로 확인할 수 있었다. 정리하면, 설문에 응한 100개 기업 중에는 ESG 경영전략을 세우고, 이를 전담할 조직을 구성 및 운영하며, 이행 결과를 담은 보고서를 발간하고, ESG경영 성과평가를 실시하는 등 ESG 경영 도입 후 체계적으로 이행 및 평가를 수행하고 있는 기업은 아직 소수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

〈그림 4-15〉 ESG 경영 도입 현황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발간 여부〉



〈ESG 경영 평가 실시 여부〉

자료: 저자 작성

3) 환경분야 ESG 추진 현황

이어서 ESG 3대 분야 환경(E), 사회(S), 지배구조(G) 중 가장 중요하고, 추진이 시급한 순서를 묻는 질문에는 ‘환경’이 1순위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이 설문에 응한 기업 100곳 중 환경 분야에서 ESG를 추진 중인 기업은 53%였는데, 주로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및 검증(83.0%), 폐기물 배출량 저감 및 재활용 비율 증가(81.1%), 에너지 사용량 절감 및 재생에너지 사용량 증가(79.2%), 대기 및 수질 오염물질 배출량 저감(73.6%)을 위한 활동에 참여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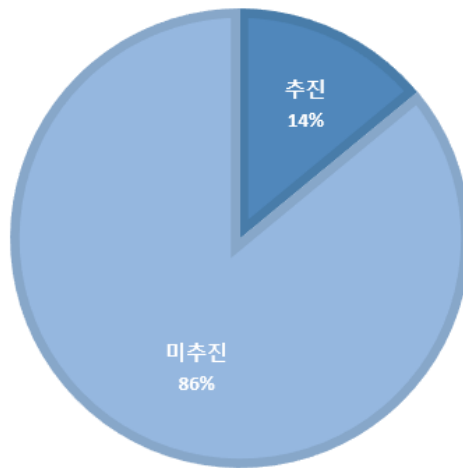
4) 해양환경 분야 ESG 추진 현황

(1) 추진 여부 및 배경

위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기업 100곳 중 53%가 환경분야 ESG를 추진 중이지만, 해양환경 분야는 겨우 14% 정도만 참여 중인 것으로 나타나, 현

재 해양환경 분야에서 국내 민간기업의 ESG 추진 정도는 미미한 수준임을 알 수 있었다. 실제로 응답자 100명이 평가한 자사의 해양환경 분야 ESG 활동 수준은 5점 만점에 평균 1.97점으로, 매우 낮게 인식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림 4-16〉 해양환경 분야 ESG 추진 현황



자료: 저자 작성

이에 대해, 각 기업이 해양환경 분야 ESG 추진 여부를 결정하는 데 있어 결정적인 요인이 무엇인지를 알아보고자 아래의 표와 같이 예상되는 주요 원인을 제시하고, 각 항목마다 5점 척도로 답변하도록 하였다. 각 문항은 앞의 제2절의 심층인터뷰 진행 과정에서 확인한 내용을 기초로 하여 구성하였다.

먼저, 해양환경 분야 ESG를 추진 중인 14%의 기업이 응답한 주요 추진 배경으로, 국제사회의 규제논의와 민간부문의 역할 강조에 따라 조기 대응하기 위해서(3.79점), 자사 경영진의 높은 관심 및 ESG 경영전략체계에 포

합되어 있으므로(3.71점), 해양쓰레기 등 해양환경 문제가 전 세계 이슈로 급부상하였기 때문에(3.71점)가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였다. 반면 나머지 86%의 기업이 응답한 현재 해양환경 분야에 참여하지 않는 이유는 기존 사업영역과 무관해서(3.86점), 해양환경에 대해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3.85점), 해양환경 ESG에 특화된 평가항목이 부재하므로(3.84점)가 상위 3위권에 올랐다. 비록 지금은 해양환경 분야와 연계하여 ESG 경영을 추진 중인 건은 없지만, 앞으로 3년 이내에 추진할 계획이 있는지에 대해 추가 질의하였는데 5.8%만 그렇다고 응답하였고, 70.9%는 모르겠음, 23.3%는 계획이 없다는 것으로 보아 단기간에 우리 기업들의 해양환경 ESG 활동이 크게 확대될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예상된다.

〈표 4-6〉 해양환경 분야 ESG 추진 및 미추진 배경

구분	주요 내용	순위
추진 배경	• 국제사회의 규제논의 및 민간부문의 역할 강조에 따른 조기 대응	1
	• 해양쓰레기 등 해양환경 문제가 전 세계 이슈로 급부상	2
	• 자사 경영진의 높은 관심 및 ESG경영 전략체계에 포함	
	• 자사의 기존 사업영역과 연계 가능	4
	• 국정과제 등 정부의 정책방향 고려	5
	• 해양·연안 관련 기업으로 해양보전 및 관리에 대한 책임의식	6
	• 육상의 환경 분야 ESG에 집중된 다른 기업들과 차별화	7
	• ESG 컨설팅 등 외부기관에서 사업 기획 및 추진에 도움	8
	• 탄소배출권 거래제 대비 차원	
	• 연안지역에 위치한 기업으로서 지역사회 환원	
	• 정부·공공기관, 타 기업 등에서 협력 제안	11
	• 사업비 규모에 대한 적은 부담	12
미추진 이유	• 자사의 기존 사업영역과 무관함	1
	• 해양환경에 대해 잘 알지 못함(사내 해양환경 관련 전문지식 보유 인력 부족 또는 전무)	2
	• 해양환경 ESG에 특화된 평가항목이 부재함	3
	• 자사의 ESG경영 전략체계(비전, 목표, 전략, 실행과제 등)에 미포함	4
	• 현재 추진 중인 육상환경 분야에 집중하고자 함	5

구분	주요 내용	순위
	• ESG 업무 담당 인력이 부족함	6
	• 해양환경 분야에 참여 가능한 활동에 관한 정보 부족으로 사업 기획에 어려움	7
	• 정부의 정책적 지원이 미흡함	8
	• 사업비 규모에 대한 부담이 큼	9
	• CEO 및 임직원의 관심도가 낮음	10
	• 신뢰할 수 있는 외부의 협력 파트너 발굴에 어려움(예: 서비스·컨설팅 기관, 관련 전문가 또는 전문기관 등)	11

주: 보기 문항은 본 연구 제4장 제2절 심층인터뷰를 통해 파악한 내용을 활용하여 구성
 자료: 저자 작성

(2) 해양환경 ESG 관심분야

이 설문에서는 아래의 표와 같이 ‘해양환경 분야 ESG 활동’을 총 11개로 구분하여 제시하였는데, 이는 앞의 제4장 제1절에서 매출액 상위 50대 국내 기업이 추진하고 있는 대표적인 해양환경 관련 주요 ESG 활동 유형을 분석한 결과를 활용한 것이다.

〈표 4-7〉 주요 해양환경 분야 ESG 활동 및 세부 설명

연번	분야	설명
1	해변 정화활동	• 해양수산부 & 해양환경공단의 반려해변 프로그램 참여 • 조직 내 임직원 플로깅 캠페인 추진 등
2	해양오염 방제	• 해상 오일펜스 설치, 방제교육, 부두별 방제창고 설치 등
3	항만대기오염 저감	• 선박저속운항(VSR) 프로그램 참여, 선박 배기가스 저감장치(예: SCR) 설치 등
4	해양생태계 복원	• 맹그로브숲 복원, 바다숲 조성, 잘피 이식, 갯벌 복원 등 사업에 참여
5	해양생태계 및 해양생물다양성 보전	• 선박 수중소음 저감 기술개발 등을 통한 해양보호생물 보호 • 철새 등 멸종위기생물종 보호 • 치어/치패 방류 등 해양보호구역 관리 • 해양 직접 방류 배출수의 생태독성 모니터링 등

연번	분야	설명
6	해안 복원	• 해변의 해안 침식지나 해안사구 훼손지역 복원 등
7	해양폐기물 자원순환 촉진	• 페어망 등 해양폐기물 수거 지원 및 재활용 소재, 제품 생산 등
8	해양플라스틱 쓰레기 발생 저감 기술개발	• 플라스틱 대체소재로서 바이오 기반의 생분해성 플라스틱 등 기술개발 • 미세플라스틱 발생 저감 가전제품 개발 등
9	해양환경 관련 시민단체 지원	• 해양쓰레기 정화, 해양보호구역 관리, 해양보호생물 보전 등을 위해 활동하는 국내 해양환경 관련 시민단체를 지원
10	해양환경 분야 스타트업 육성 및 지원	• 해양쓰레기 자원순환, 해조류 부산물을 이용한 친환경 포장재 생산 스타트업 등 육성 및 지원
11	해양환경 교육 및 홍보	• 어린이 대상 미세플라스틱, 해양쓰레기, 생물다양성 관련 주제로 다양한 체험교육 제공 등

자료: 저자 작성

이를 토대로 하여, 응답자에게 11개 분야에 대해 중요도와 시급성을 각각 5점 척도로 평가하도록 하였는데, 그 결과 ‘해양생태계 및 해양생물다양성 보전’이 1위, ‘해양플라스틱 쓰레기 발생 저감 기술개발’이 2위로 나타났다. 실제로 이 설문조사에서 해양환경 분야 ESG를 추진 중이라고 응답한 14%의 기업이 참여 중인 주요 분야는 해변정화활동이 57.1%, 해양폐기물 자원순환 촉진 50%, 해양생태계 및 해양생물다양성 보전이 42.9%, 해양플라스틱 쓰레기 발생 저감 기술개발이 35.7%로 확인되었다. 또한, 위에서 현재는 추진 중이지 않지만 향후 3년 이내 추진할 의향이 있다고 응답했던 5.8%의 기업은 ‘해양폐기물 자원순환 촉진(80%)’과 ‘해양생태계 및 해양생물다양성 보전(60%)’ 분야에 가장 많은 관심을 보였는데, 그 이유는 기존 사업 영역과 연계가 가능하다는 점(60%)과 탄소배출권 거래제에 대비를 위해서(60%)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비록 현재 해양환경 분야 ESG를 추진 중인 기업과 향후 추진 계획이 있다고 응답한 기업의 수가 적어 일반화하기에는 한계가 있지만, 기업들의 ESG 추진 관점에서 볼 때, 해양환경 분야에서는 크게 ‘해양생태계보전 및 관리’와 ‘해양폐기물 관리’ 분야로 관심이 집중되어 있는 경향을 보이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표 4-8〉 해양환경 분야 ESG 활동 유형별 중요도, 시급성, 관심도

연번	해양환경 분야 ESG 활동 유형	중요도 ¹⁾	시급성 ¹⁾	관심도 ²⁾
1	해변 정화활동	3.75점	3.38점	40%
2	해양오염 방제	4.20점	3.99점	40%
3	항만대기오염 저감	4.12점	4.01점	0%
4	해양생태계 복원	4.13점	3.93점	20%
5	해양생태계 및 해양생물다양성 보전	4.34점	4.19점	60%
6	해안 복원	3.92점	3.82점	0%
7	해양폐기물 자원순환 촉진	4.19점	4.06점	80%
8	해양플라스틱 쓰레기 발생 저감 기술개발	4.32점	4.13점	20%
9	해양환경 관련 시민단체 지원	3.55점	3.41점	0%
10	해양환경 분야 스타트업 육성 및 지원	3.74점	3.53점	40%
11	해양환경 교육 및 홍보	3.85점	3.57점	0%

주1: 중요도와 시급성은 이 설문에 참여한 민간기업 ESG 실무 담당자 100명이 각 활동 유형에 대해 5점 척도로 응답한 결과임

주2: 관심도는 현재 해양환경 분야 ESG를 추진하고 있지 않지만, 향후 추진 의향이 있다고 응답한 5.8%에 해당하는 기업의 분야별 관심정도를 나타냄

자료: 저자 작성

(3) 추진 체계

앞의 심층인터뷰 과정에서 확인할 수 있었던 것처럼, 민간기업이 ESG 활동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사업을 기획해야 한다. 이 설문조사에서 현재 해양환경 분야 ESG를 추진 중이라고 응답한 14개 기업 중 85.7%는 조직 내 ESG 담당부서 또는 실무자가 직접 정보를 발굴·수집하여 사업을 기획한다고 응답하였고, 35.7%는 외부의 전문기관이나 관련 민간단체 등으로부터 정보를 제공받아 이를 참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을 기획하는 단계부터 추진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에서 어떤 방식으로 진행할 것인지를 고려해야 하는데, 이 연구 제4장에서 다른 해양환경 분야 ESG 주요 사례를 통해 알 수 있듯, 기업이 단독으로 ESG 활동을 추진하는 경우도 있지만, 보통은 다른 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추진하는 사례가 많다. 협력 파트너로는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연구소, 민간단체(NGO 등), 학계, 타 민간기업 등 다양하다. 이 설문에 응답한 14개 기업의 경우에는, 중앙정부와 협력하는 사례가 33.3%로 가장 많았다. 이러한 추진체계 내에서 민간기업은 사업기획, 사업비 투자, 기술장비 지원, 전문인력 지원, 현장활동 등 참여할 수 있는 영역은 매우 다양하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주로 재정적 지원자(43.6%) 그리고 현장 참여자(43.6%)로서 역할을 하고 있으며, 기업이 자체적으로 지원 가능한 기술이나 전문 지식 등을 그 과정에서 적절하게 활용하고 있는 사례는 극히 드문 것으로 나타났다.

5) 해양환경 분야 ESG 추진 장애요인

다음은 민간기업이 해양환경 분야에서 ESG를 추진할 때의 어려움이 무엇인지를 파악하기 위해, 앞의 제2절의 심층인터뷰 진행 과정에서 확인한 내용을 기초로 하여 아래의 표와 같이 주요 장애요인을 10가지로 제시하였다.

이에 대해, 설문에 참여한 기업 100곳은 각 항목마다 5점 척도로 답변하였는데, 해양환경 분야 ESG를 추진 중인 경우 직접 경험한 애로사항을 바탕으로 응답하였고, 미추진 기업은 향후 추진하게 될 경우 예상되는 장애요인을 고려하여 답변하였다.

해양환경 분야 ESG 추진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응답자의 응답 결과를 기준으로 보면, ‘해양환경 분야 정보 및 전문지식 부족과 사업발굴 및 추진에 어려움이 있음’이 1순위였고, ‘사내 ESG 업무 담당 인력 부족’이 뒤를 이었다. 이 결과는 해양환경 분야 ESG 미추진 기업의 응답결과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났는데, 미추진 기업이 전체 기업의 86%인 점이 결과에 크게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한편 현재 추진 중인 기업에게는 ‘정부 및 지자체의 정책적 지원 미흡’이 1순위였으며 그 다음 2순위는 ‘일회성이 아닌 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하게 추진할 수 있는 사업 부족’으로 나왔다.

〈표 4-9〉 해양환경 분야 ESG 추진의 장애요인

No.	주요 장애요인	전체	추진 중	미추진
1	• 해양환경 분야 정보 및 전문지식 부족과 사업 발굴 및 추진에 어려움	3.71	3.71	3.71
2	• 사내 ESG 업무 담당 인력 부족	3.70	3.71	3.70
3	• 시간, 비용 투자 대비 사업 성과 미흡	3.67	3.79	3.65
4	• 일회성이 아닌 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하게 추진할 수 있는 사업 부족	3.62	4.14	3.53
5	• 정부, 지자체의 정책적 지원 미흡	3.62	4.21	3.52
6	• 사업 추진 과정에서 고려해야 할 이해관계 복잡	3.60	3.79	3.57
7	• 민간기업이 참여할 수 있는 역할 제한적	3.58	3.43	3.60
8	• 조직 내 현업부서 간 협조 제한적	3.47	3.50	3.47
9	• 신뢰할 수 있는 외부의 협력 파트너 발굴에 어려움	3.40	3.36	3.41
10	• 다수의 민간기업 간의 참여분야 중복으로 홍보 효과 미미	3.35	3.43	3.3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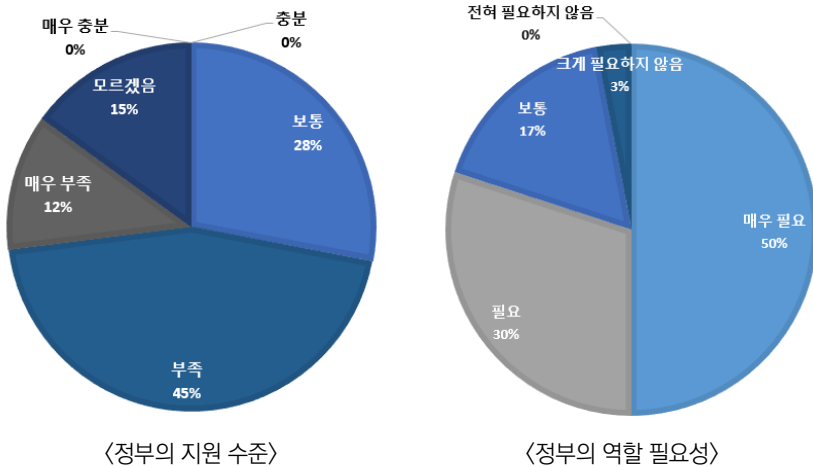
주: 전체에 응답한 기업은 100곳, 추진 중에 응답한 기업은 14곳, 미추진에 응답한 기업은 86곳
자료: 저자 작성

6) 해양환경 분야 ESG 정책적 지원 수요

(1) 정책적 지원 수준 및 필요성

위에서 해양환경 분야 ESG를 추진 중인 기업은 정부의 정책적 지원을 필요로 한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에 대해, 설문에 응답한 기업 100곳 전체에게 현재 우리 정부의 해양환경 분야 ESG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지원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를 질문하였는데 ‘충분하다’는 의견은 전혀 없었으며, ‘보통이다’ 28%, ‘부족하다’가 57%로 나타나, 정부의 지원이 충분하지 않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한편 정부의 역할이 필요한지 대해서는 ‘매우 필요하다’가 50%, ‘필요하다’가 30%로 전체의 80%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주를 이루었다.

〈그림 4-17〉 해양환경 분야 ESG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지원 수준 및 역할 필요성



자료: 저자 작성

(2) 향후 개선사항

앞으로 해양환경 분야에서 민간기업의 ESG 활동이 확대 및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아래의 표와 같이 10가지로 제시하였다. 이 역시 본 연구의 심층인터뷰 과정에서 획득한 현장의 정보를 토대로 구성하였으며, 여기에는 민간기업의 해양환경 분야 ESG 추진을 저해하는 내적, 외적 요인이 모두 포함되어 있다.

응답자는 각 항목마다 5점 척도로 답변하였으며, 그 결과는 해양환경 분야 ESG 추진 여부와 관계없이 설문에 응한 100개 모든 기업(A), 해양환경 분야 ESG 추진 중인 14개 기업(B), 현재 추진하고 있지 않은 86개 기업(C)의 응답으로 구분하여 비교해보았다.

먼저 전 기업의 응답과 미추진 기업의 응답 경향이 비슷하게 나타났는데, 이는 미추진 기업이 전체 기업의 86%를 차지하고 있어 결과 전반에 크게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이 두 그룹에서는 ‘CEO 및 임직원의 해양환경 분야에 대한 관심 증진’과 ‘ESG 업무 담당인력 보강’, 그리고 ‘사업기획에 활용할 수 있는 해양환경 관련 정보제공’이 가장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현재 해양환경 분야 ESG를 추진 중인 기업의 경우 ‘ESG 항목과 연계해서 평가 받을 수 있는 방안 마련’이 제일 필요한 사항으로 언급되었으며, 그 다음은 앞의 A와 C 그룹과 마찬가지로 ‘CEO 및 임직원의 해양환경 분야에 대한 관심 증진’과 ‘사업기획에 활용할 수 있는 해양환경 관련 정보제공’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이 결과를 종합 분석해보면, 민간기업이 해양환경 분야에서 ESG를 추진하고자 할 때 정부 등 외부로부터의 지원이 부족하다고 느끼기도 하지만, 기업 내부 여건으로 인하여 추진에 한계가 있다는 점도 공통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다만, 응답 결과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차이점은 현재 해양환경 분야 ESG를 추진 중인 기업이 미 추진 중인 기업보다 상대적

으로 각 항목에 대한 개선의 필요성을 더욱 강하게 느끼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표 4-10〉 민간기업의 해양환경 분야 ESG 확대를 위한 개선 필요사항

No.	개선이 필요한 사항	A	B	C
1	• CEO 및 임직원의 해양환경 분야에 대한 관심 증진	3.96	4.14	3.93
2	• ESG 업무 담당인력 보강	3.95	4.00	3.94
3	• 사업기획에 활용할 수 있는 해양환경 관련 정보 제공	3.79	4.07	3.74
4	• 사내 임직원의 해양환경 분야에 대한 지식 함양	3.75	3.93	3.72
5	• ESG 항목과 연계해서 평가 받을 수 있는 방안 마련	3.75	4.21	3.67
6	• 사업추진 과정에서 이해관계자간 원활한 소통 및 협조 필요	3.71	3.71	3.71
7	• 해양환경 분야 ESG 업무 지원 전담조직 부재	3.69	3.64	3.70
8	• 기존 사업추진 절차 내 참여주체간 역할 개선	3.67	3.79	3.65
9	• 조직 내 부서간 협력 강화	3.57	3.86	3.52
10	• 민간기업 참여형 사업 절차 마련	3.53	3.57	3.52

주: 1) 5점 평균은 '전혀 필요없다' 1점부터 '매우 필요하다' 5점까지 점수를 부여하여 산출

2) (A) 100개 기업 모두 응답, (B) 해양환경 ESG 추진 중인 14개 기업 응답, (C) 해양환경 ESG 미추진 86개 기업 응답

자료: 저자 작성

(3) 정책적 지원 수요

지금까지 민간기업의 해양환경 분야 ESG 추진의 장애요인과 활성화를 위해 개선할 사항에 대해 확인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하여 앞으로 정책적으로 정부의 지원이 필요한 사항을 마지막으로 질문하였다. 이 문항 역시 위와 동일한 방식으로 해양환경 분야 ESG 추진 여부를 고려하지 않고 전 기업 100곳이 모두 응답하도록 하였으며, 그 결과는 추진 기업과 미추진 기업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먼저 미추진 기업의 경우 항목별로 응답에 큰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으나, '사업별 추진 방법 및 절차 안내서 제공'을 가장 필요로 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법·제도 개선’과 ‘평가체계 마련’이 뒤를 이었다. 추진 기업의 경우에는 ‘해양환경 분야 ESG 관련 협업 가능 기관, 단체 등 연계 지원’이 1순위로 나왔으며, 그 다음은 ‘사업별 추진 방법 및 절차 안내서 제공’, ‘법·제도 개선’, ‘인증제도 도입 및 지원’, 그리고 ‘ESG 우수기업 인증 및 홍보 강화’가 동일한 점수로 뒤를 이어 우선 지원정책에 대한 수요 차이는 크지 않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표 4-11〉 민간기업의 해양환경 분야 ESG 확대를 위한 정부 지원 사항

No.	정책적 지원 수요	A	B	C
1	• 사업별 추진 방법 및 절차 안내서 제공	3.75	3.79	3.74
2	• 민간기업 참여 활성화를 위해 해양환경 관련 법·제도 개선	3.73	3.79	3.72
3	• 해양환경 분야 ESG 관련 협업 가능 기관, 단체 등 연계 지원	3.72	3.86	3.70
4	• 해양환경 분야 ESG 업무지원 전담조직 필요	3.71	3.71	3.71
5	• 해양환경 분야 관련 인증제도 도입 및 지원	3.71	3.79	3.70
6	• 해양환경 분야와 연계 가능한 ESG 평가체계 마련	3.70	3.57	3.72
7	• 민간기업 대상 해양환경 분야에 대한 역량강화 교육 제공	3.68	3.71	3.67
8	• 해양환경 분야 ESG 우수기업 인증 및 홍보 강화	3.60	3.79	3.57
9	• 업종별 다자간 MOU 체결을 통한 공동참여 추진 지원	3.59	3.43	3.62
10	• 해양환경 분야 ESG 관련 정보제공 및 상호교류 등을 위한 온·오프라인 플랫폼 마련	3.53	3.36	3.56

주: 1) 5점 평균은 ‘전혀 필요없다’ 1점부터 ‘매우 필요하다’ 5점까지 점수를 부여하여 산출
 2) (A) 100개 기업 모두 응답, (B) 해양환경 ESG 추진 중인 14개 기업 응답, (C) 해양환경 ESG 미추진 8개 기업 응답
 자료: 저자 작성

05

민간기업의 해양환경 분야 ESG 활성화 정책방안

제1절 해양환경 분야 ESG 활성화 기본방향

1. 민간기업의 해양환경 분야 ESG 추진 여건분석 종합

본 연구에서는 앞의 제4장에서 다룬 심층인터뷰와 설문조사 결과를 통해 민간기업이 해양환경 분야 ESG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애로사항을 경험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인터뷰와 설문조사에 응한 기업마다 다소 차이는 있었으나 결과를 종합해 보면, 기업의 해양환경 분야 참여 활성화를 저해시키는 요인에는 기업의 내부여건과 외부의 정책적 환경 모두 해당되었다. 이 요인들을 아래의 표와 같이 해양환경 ESG 활동 기획, 이행, 성과 측, 추진 단계별로 구분해서 보면 더욱 분명하게 나타나는데, 기업들이 겪고 있는 애로사항은 특히 기획단계에 집중되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먼저 기업들은 ESG 활동 기획 과정에서 자사의 경영전략이나 사업영역을 해양환경 분야와 연계할 수 있는지를 고려해야 한다. 만약 관련성이 낮다면 임직원의 관심 또한 높지 않을 가능성이 크므

로 해양환경 분야 ESG 추진 동력 자체를 얻기가 쉽지 않다. 뿐만 아니라 향후 ESG 평가 단계에서 실적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해당 기업이 추진한 ESG 활동이 업태와 관련이 있는 분야인지가 중요하게 작용하기 때문에, 임직원이 해양환경 분야에 관심이 있더라도 이를 연계 추진할 수 있는지 우선 고민해야 한다. 이 단계를 거쳐 해양환경 분야와 ESG 활동을 접목하기로 한 경우 ESG 업무 담당자 또는 부서의 영역으로 접어들게 되는데, 기본적으로 해양환경과 어느 정도 관련이 있는 기업이 아니라면 ESG 담당자 역시 해양환경에 대한 지식 부족 등으로 이 분야를 잘 알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게다가 해당 업무를 소수의 인원이 전담하고 있다면, 외부의 도움 없이 자체적으로 ESG 활동을 기획하기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기획 단계에서는 기업의 ESG 활동에 대한 수요가 반영되어, 실제로 이들이 참여할 수 있는 사업 아이템이 발굴되고, 이를 함께 추진할 수 있는 공신력 있는 협력 파트너 발굴, 추진 체계, 예산, 성과 활용방안 등에 관한 정보가 가장 필요하다. 그러나 현재는 기업이 관련 사항을 직접 문의하거나 따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 곳이 일원화되어 있지 않아 정보 수집 과정에만 해도 많은 시간이 요구된다. 또한 기업이 참여할 수 있는 해양환경 분야 사업 등 주요 아이템은 몇 가지로 한정되어 있는데, 이 아이템을 매개로 정부와 특정 기업이 공식 업무협약을 체결하게 되면, 다른 기업들은 중복을 피하기 위해 해당 아이템을 활용한 ESG 기획을 보류하게 되는 경우도 적지 않다.

해양환경 분야와 관련된 ESG 활동을 기획하고 이를 이행하는 과정에서는 다음과 같은 한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간기업이 국가사업에 참여하게 되는 경우, 민간참여형 사업 절차나 제도가 별도로 마련되어 있지 않고 현행 국가주도형 사업 절차를 따르게 된다. 그렇다 보니 공동 참여 주체로서 기업의 위상, 역할 등이 정립되어 있지 않아, 기업들은 대체로 재정적 후원자로서의 기능에 머무르게 되는 경향이 있다. 그리고 참여 희망

사업의 종류 및 규모에 따라 투자비용이 달라지기 때문에 기업들은 가능한 범위 내에서 참여할 수 있는 사업을 선택하게 된다. 또한,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특히 해양 분야는 사업 시행 대상지의 관할 지방자치단체, 어촌계 등 이해관계자가 있어 이들의 원활한 협조가 반드시 필요하다. 그렇지 않은 경우 사업 이행과정에 비교적 많은 시간이 소요되게 된다. 그밖에도 ESG 활동이 진행되면 이를 전담할 인력이 필요한데, 기업마다 다소 차이는 있으나 대부분 ESG 담당 부서는 소수의 인원으로 구성되어 있어 업무를 수행하는데 시간적으로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외부의 유사업무 수행 기관에게 위탁하는 경우도 있으며, 이때는 ESG 추진을 위한 별도의 비용이 발생하게 된다.

마지막으로 성과 단계에서는 다음과 같은 요인이 추진에 한계로 작용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민간기업이 해양환경 분야와 연계하여 ESG 활동을 추진하는 경우, 추진 성과로서 기업에게 직접적으로 제공되는 보상수단이 부족한 편이다. 예를 들어, 기업이 해양환경 분야에 참여해 활동한 실적을 온실가스 감축 실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경로가 아직 마련되어 있지 않다거나, 또는 해양환경은 환경 분야임에도 불구하고 ESG 평가로 들어가면 환경(E) 항목이 아닌 사회공헌(S) 활동으로 분류된다는 점이다. 그렇다 보니 기업 입장에서는 기존에 육상환경 분야와 ESG 활동을 연계하여 안정적으로 추진해오다가 해양환경 분야를 블루오션으로 보고 활동 범위를 확장하려는 움직임이 있는데, 실제로 참여해보면 시간과 비용을 투자한 것에 비해 추진 성과는 상대적으로 미미하다고 느낄 수도 있다. 현재 기업들은 해양환경 분야 ESG 활동 추진 실적을 보도자료 등을 통해 기업 마케팅에 활용하고 있다. 그런데 이 경우도 지속가능한 참여가 아닌 일회적인 이벤트성 활동으로 그치게 되거나 ESG 활동 본연의 목적과 다르게 보일 경우 그린워싱(Green washing)으로 비춰질 가능성도 있다.

〈표 5-1〉 민간기업의 해양환경 ESG 참여 한계 요인 분석

단계	내부요인(기업 환경)	외부요인(정책 환경)
기획	• 기업 경영전략과 관련성 부족 • 사업영역과 해양환경의 낮은 연계성 • 임직원의 해양환경 분야 관심 저조 • ESG 업무 전담인력 소수 • ESG 담당자의 해양환경 지식 부족 • 부서 간 정보교류 및 협력 체계 미흡 • 공신력 있는 파트너 발굴 어려움 • 다른 기업이 선점한 아이템 중복 회피 • ESG 경영 도입을 위한 여건 부족	• 기업 ESG 지원 계획 및 전략 부재 • 민간참여형 ESG 아이템 한정 • 정부와 특정 기업의 1:1 협력 체계 • 해양환경 분야 민간참여형 법·제도 미흡 • 부처 내 해양환경 ESG 담당창구 미통합 • 해양환경 ESG 정보 지원 플랫폼 부재
↓		
이행	• 참여 주체로서 기업의 역할 불명확 • 시간과 비용 부담	• 민간참여형 사업 추진 절차 부재 • 사업 추진 과정에 복잡한 이해관계
↓		
성과	• 투자 대비 성과 부진 • 기업홍보 효과 저조 • 지속가능한 참여 가능성 불투명 • ESG 평가 또는 실적 등 보상 수단 부족	• 기업 참여 유인책 부족 • 기업의 지속가능한 참여 방안 미비

자료: 저자 작성

2. 민간기업의 해양환경 분야 ESG 활성화 방향 도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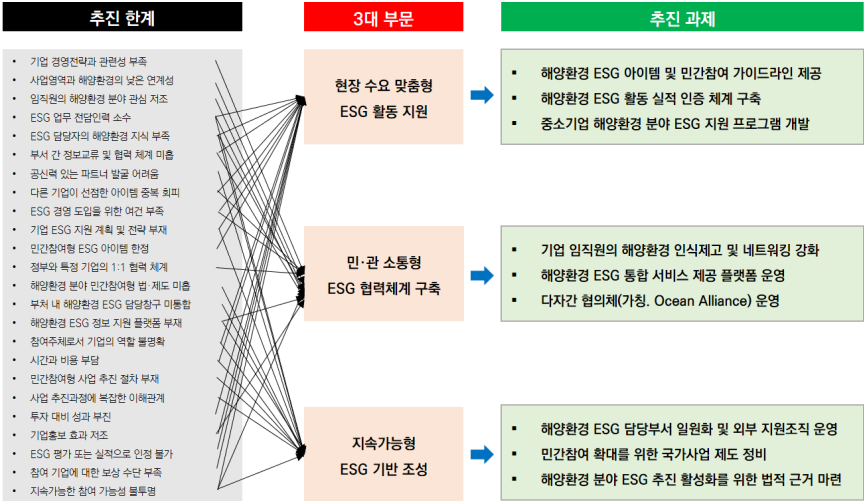
상기에서는 국내 민간기업들이 해양환경 분야에서 ESG 활동을 추진하고자 할 때 경험한 애로사항을 추진 단계별로 종합 정리하였다. 이는 해양환경 분야 ESG 활동 추진을 저해하는 것으로 파악된 요인들을 기획, 이행, 성과 단계별로 구분하고 각 단계에서 특히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한계점을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살펴보았다. 그런데 사실 각 요인들은 추진 단계 전반에 걸쳐 연계되어 있으므로, 하나의 단계에서 발생하는 한계점으로 규정하기 보다는 전체에 대한 한계요인으로 종합하여 보는 것이 적절하다. 이에 본 연구는 민간기업의 내·외부적 여건에 따른 해양환경 분야 ESG 활성화 저해 요인 분석을 통해, 이러한 환경이 개선되고 궁극적으로는 민간기업의 ESG 활동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방향을 3대 부문 9가지 추진과제로 도출하였다.

먼저, 본 연구에서 민간기업의 해양환경 분야 ESG 활성화를 위한 방향은 규제가 아닌 “지원”의 성격을 가진다. 이는 정부가 2021년을 ESG 경영 확산의 원년으로 선포하고 국내 기업의 ESG 경영 도입 및 추진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 수립 방향을 “지원”으로 설정한 것을 기조로 삼아 원칙을 정한 것이다. 또한 본 연구에서 해양환경 분야 ESG 활동에 참여한 경험이 있거나 관련 분야에 종사하고 있는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청취한 결과를 토대로 하여 활성화 방향을 ① 현장 수요 맞춤형 ESG 활동 지원, ② 민·관 소통형 ESG 협력체계 구축, ③ 지속가능형 ESG 기반 조성으로 설정하였다. 그리고 각 부문별 추진과제는 해양수산부와의 정책협의, 전문가 자문회의 등을 통해 검토하는 등 실현가능성에 무게를 두었다.

첫째, ‘현장 수요 맞춤형 ESG 활동 지원’은 실제로 현장에서 해양환경 분야 ESG 활동을 추진 중인 또는 추진을 고려하고 있는 이해관계자들의 수요를 반영한 정책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며, 추진과제로는 해양환경 ESG 아이템 및

민간참여 가이드라인 제공, 해양환경 ESG 활동 실적 인증체계 구축, 중소기업 해양환경 분야 ESG 지원 프로그램 개발을 제안하였다. 둘째, ‘민·관 소통형 ESG 협력체계 구축’은 정부와 민간기업 간의 소통을 통해 공동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해양환경 분야 ESG 활동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것이며, 추진과제로는 기업 임직원의 해양환경 인식제고 및 네트워킹 강화, 해양환경 ESG 통합 서비스 제공 플랫폼 운영, 다자간 협의체 운영을 제시하였다. 셋째, ‘지속가능형 ESG 기반 조성’은 민간기업의 해양환경 분야에 참여가 일회성이 아닌 지속가능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추진과제로는 해양환경 ESG 담당부서 일원화 및 외부 지원조직 운영, 민간참여 확대를 위한 국가사업 제도 정비, 해양환경 분야 ESG 추진 활성화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을 제안하였다. 각 부문별로 제안한 추진과제는 아래의 제2절에서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다.

〈그림 5-1〉 민간기업의 해양환경 분야 ESG 활성화 방향 도출 과정



자료: 저자 작성

제2절 해양환경 분야 ESG 활성화를 위한 추진과제

〈그림 5-2〉 민간기업의 해양환경 분야 ESG 활성화 추진과제

3대 부문	9대 추진과제
현장 수요 맞춤형 ESG 활동 지원	- 해양환경 ESG 아이템 및 민간참여 가이드라인 제공 - 해양환경 ESG 활동 실적 인증 체계 구축 - 중소기업 해양환경 분야 ESG 지원 프로그램 개발
민·관 소통형 ESG 협력체계 구축	- 기업 임직원의 해양환경 인식제고 및 네트워킹 강화 - 해양환경 ESG 통합 서비스 제공 플랫폼 운영 - 다자간 협의체(가칭. Ocean Alliance) 운영
지속가능형 ESG 기반 조성	- 해양환경 ESG 담당부서 일원화 및 외부 지원조직 운영 - 민간참여 확대를 위한 국가사업 제도 정비 - 해양환경 분야 ESG 추진 활성화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

자료: 저자 작성

1. 현장 수요 맞춤형 ESG 활동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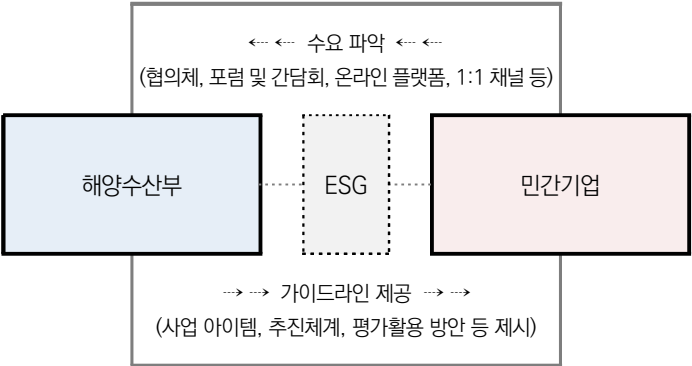
1) 해양환경 ESG 아이템 및 민간참여 가이드라인 제공

기업이 ESG 활동을 기획할 때 자사의 경영전략과의 연관성부터, ESG 실적으로의 인정 여부 등 다양한 사항들을 고려한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그중에도 ESG 담당 인력과 해양환경에 대한 정보 부족은 기획단계에서 아 이템을 발굴할 때 장애요인을 작용하게 되어, 결국 기업의 해양환경 분야 로의 신규 진입에 영향을 줄 수 있다. 따라서 정부가 기업이 참여할 수 있 는 해양환경 분야 ESG 아 이템을 다양하게 발굴하여 제공하고, 해당 아 이템을 추진하는 방법, 추진 모델, 참여 주체별 역할, ESG 활동 실적을 평가

에 활용하는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제시하면, 기업이 겪고 있는 기획단계에서의 어려움은 다소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 절의 추진과제 중 하나로 제안한 오션 얼라이언스 같은 다자간 협의체, 임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ESG 포럼 및 간담회, 해양환경 ESG 통합 정보 제공 온라인 플랫폼, 부처 내 또는 외부의 지원조직을 기업의 수요 파악을 위한 통로로 적극 활용하고, 기업에서 직접 제시한 아이디어 등이 가이드라인에 반영될 수 있도록 기업의 수요 기반형 가이드라인 개발 체계를 마련한다면, 기업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표 5-2〉 민간기업 수요 기반 해양환경 ESG 가이드라인 제공



자료: 저자 작성

2) 해양환경 ESG 활동 실적 인증 체계 구축

(1) 해양환경 분야 ESG 평가지표 개발

ESG 활동 관점에서 해양환경 분야는 육상 분야보다 상대적으로 잘 알려져 있지 않아, 최근 기업들이 블루오션으로 주목하기 시작하였다. 그런데 해양환경 분야에는 기업의 ESG 활동 실적을 인정하는 일종의 보상 수단이 충분히

마련되어 있지는 않다. 이로 인해 기업들은 해양환경 분야 ESG 활동을 기획할 때 아이টে를 선점하여 ‘최초’ 타이틀을 거머쥌 수 있는지가 중요한 기준이 되었고, 이 타이틀을 가진 기업은 이를 기업 마케팅에 적극 활용하고 있다. 반면 특정 기업이 해당 아이টে를 이미 선점했거나, 그 기업과 차별화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면, 해양환경으로 진입을 재고하게 되는 경우도 있다. 따라서 기업 간의 아이টে 선점 여부와 관계없이 더 많은 기업이 해양환경 분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해서는 기업이 ESG 활동 실적을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수단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기업이 해양환경 분야와 관련된 활동을 했을 경우, ESG 평가 점수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해양환경 분야 ESG 평가지표를 개발하는 것이다. 앞의 제2장의 국내 ESG 정책 현황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정부는 우리 기업들이 쉽게 ESG를 적용할 수 있도록 글로벌 ESG 평가기준에 부합하면서 국내 상황을 고려하여 만든 K-ESG 가이드라인을 발표하였다. 그러나 현재 해양환경 분야와 관련된 활동을 별개의 평가항목으로 인정하는 지표가 없어, 해양환경 ESG 활동은 주로 사회(S) 항목 중에서도 ‘전략적 사회공헌’ 영역으로 평가받고 있다. K-ESG 가이드라인은 각 영역의 범주별로 산업이나 조직의 특성을 고려하여 현재 글로벌 평가지표에 속하지 않더라도, ESG 경영의 필요요소를 추가적으로 제시하고, 기업 상황에 따라 선택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지표를 만들어 이를 추가 진단항목에 포함시키고 있다. 그 예로 산림 분야가 대표적인데, K-ESG 가이드라인의 추가 진단항목 중 하나로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산림탄소흡수량’이 포함되었다. 그밖에도 최근 몇 년 전부터 산림청이 주도하여 산림 분야를 ESG 평가지표에 반영 또는 연계하기 위한 연구도 진행되어 왔다.¹⁶⁰⁾

160) 민간 몽골 사막화 방지 조림사업 성과분석을 통한 ESG 평가 연계방안 연구(‘21), 해외산림분야 ESG 경영사례 분석을 통한 국내 적용방안 연구(‘22), 산림경영 ESG 평가지표 개발을 통한 산림탄소 투자활성화 연구(‘22) 등

본 연구 제3장에서 분석한 것과 같이 기존의 해양환경 분야 사업 중 민간기업의 ESG와 연계 가능한 사업은 매우 다양하다. 이 사업들은 현재 ‘전략적 사회공헌’ 항목으로 분류되지만, K-ESG 가이드라인의 기본 진단항목 중 환경(E) 영역에 있는 원부자재, 온실가스, 폐기물, 오염물질, 환경 라벨링 부문 등과 연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현재 기업들이 관심을 보이는 해양환경 분야 ESG 대표 사업인 갯벌복원사업이나 바다숲 조성 사업의 경우 산림탄소흡수량과 같이 ‘환경(E)’ 영역의 성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평가지표를 개발하여 K-ESG 가이드라인의 추가 진단항목에 포함시킨다면, 기업들은 해양환경 ESG 기획 단계에서 평가지표와의 연계 가능성을 우선적으로 검토하게 될 것이므로, 기업 간 아이템 선점 경쟁은 완화되고 자연스럽게 해양환경 분야에서 ESG 활동을 실천하고자 하는 기업이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2) 해양환경 부문 외부사업 방법론 개발

위에서 제안한 해양환경 분야 ESG 평가지표 개발과 같이, 기업의 해양환경 분야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또 다른 방법은 기업이 온실가스 외부사업 실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방법론을 개발하는 것이다. 온실가스 외부감축사업은 배출권거래제 할당대상업체 조직경계 외부의 배출시설이나 배출활동 등에서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온실가스를 감축, 흡수 또는 제거하는 사업을 말한다.¹⁶¹⁾

해양환경 부문의 외부사업은 해양수산부가 관장기관으로서 사업 승인 및 인증을 담당하고, 해양환경공단과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은 운영기관으로서 외부사업의 타당성 평가 및 방법론 검토, 사업 관리 등을 수행한다.

161) 「외부사업의 타당성 평가 및 감축량 인증에 관한 지침」 제2조(정의)

〈표 5-3〉 외부사업 관련 기관별 역할

구분	기관명	역할
총괄기관	환경부	• 외부사업 총괄 및 조정 • 외부사업에 관한 종합적인 기준과 지침 기준 수립 • 인증위원회 구성 및 운영 • 검증기관 지정 및 관리, 검증심사원 교육 및 양성 • 외부사업 타당성 평가 결과에 대한 협의 • 방법론 승인 및 개정에 대한 협의 • 외부사업 감축량 인증에 대한 의견 제출
관장기관	해양수산부	• 외부사업 승인에 관한 지침 제·개정 • 외부사업에 대한 타당성 평가 및 승인 • 방법론 승인 및 개정 • 외부사업 온실가스 감축량 인증 • 상쇄등록부 관리 및 운영
운영기관(위탁)	해양환경공단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 외부사업 타당성 평가 • 외부사업 방법론 검토 • 외부사업 감축량 인증 검토 • 외부사업 사업 및 방법론 관리

자료: 「외부사업 타당성 평가 및 감축량 인증에 관한 지침」 제4조(주무관청 역할분담) 정리;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2021.4.29.), p. 10.

2023년 8월 22일 기준으로 상쇄등록부시스템에 국내 외부사업 1,072건, 방법론 292건이 등록되었으며, 온실가스 감축량 인증실적은 1,275건으로 4,962만 톤이 인증되었다. 이 중 해양수산부의 외부사업 방법론은 총 7건이며, 방법론 분야는 에너지 수요와 수송으로 해운 및 항만 부문과 관련이 있고, 해양환경 분야와 관련된 방법론은 아직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¹⁶²⁾

162)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상쇄등록부시스템 홈페이지(검색일: 2022.8.22.)

〈표 5-4〉 해양수산부 외부사업 방법론 등록 현황('23.8월 기준)

No	방법론 명	방법론 분야	최초등록 (신청)
1	• 항만 화물 운송장비 연료 전환 사업의 방법론	에너지 수요	'20.10.22
2	• 화석연료를 사용하던 항만 화물운송장비가 전력을 사용함에 따른 화석연료 절감사업의 방법론	에너지 수요	'20.10.22
3	• 선박의 유류발전을 선박육상전원으로 전환하는 사업의 방법론	수송	'20.10.22
4	• 내수면어선의 전력 사용에 따른 화석연료 사용량 절감 사업의 방법론	에너지 수요	'21.12.30
5	• 국내 선박의 저탄소 연료전환 사업의 방법론	수송	'21.12.30
6	• 재생에너지 및 ESS를 활용한 해상운송수단 전력공급 사업의 방법론	수송	'22.9.30
7	• 전기 및/또는 하이브리드 추진 내항여객선의 도입에 따른 화석연료 절감 사업의 방법론	수송	'23.6.9

자료: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상세등록부시스템 홈페이지(검색일: 2023.8.22.)

다수의 기업들은 해양환경 분야 ESG 활동을 추진할 때 일회적인 이벤트성 사업보다는 지속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사업을 선호하고 있는데, 그러한 관점에서 장기적으로 온실가스 발생 저감 또는 탄소흡수량 인증을 받기 위해 갯벌복원, 바다숲 조성, 해양폐기물과 관련된 사업에 가장 관심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사업에 참여하여 온실가스 감축 실적을 인정받을 수 있는 인증 기준은 현재 부재하다. 한편 대표적인 육상 분야인 산림 부문은 앞의 제2장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신규조림·재조림, 식생복구, 갯신조림을 통한 산림경영, 산림재해 피해지 조림사업 등 9건의 방법론이 개발되어 있고, 기업들은 이를 적극 활용하고 있다. 따라서 해양환경 부문에서도 갯벌복원, 바다숲 복원, 해양폐기물 자원순환 등과 관련하여 외부사업 방법론이 개발된다면 더 많은 기업들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3) 중소기업 해양환경 분야 ESG 지원 프로그램 개발

최근 유럽연합은 기업이 자사 공급망 내에서 인권과 환경에 대한 ESG 경영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의무적으로 실사하도록 하는 ‘공급망 실사법’을 공식화하였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들도 ESG 경영을 도입해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으나 시간, 인력, 자본 등 모든 면에서 중소기업이 이에 대응해 나가는 것은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했을 때, 해양과 직·간접적인 관련이 있는 것이 아니라면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해양환경 분야로의 진입을 우선순위로 두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사회공헌 차원에서 해변정화 활동 등 낮은 단계의 해양환경 분야 ESG 활동에는 참여 가능하겠지만 현재 중소기업에게 이보다 더 중요한 현안은 공급망 실사 제도에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는 것이다.

따라서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해양환경과 관련된 기업, 그 중에서도 대기업과 거래 관계에 있는 협력업체를 중심으로 하여 해양환경 분야로의 참여를 우선적으로 유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장기적으로는 그 외 중소기업도 해양환경 분야로 참여를 확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ESG 경영 도입 단계부터 단계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 특히 해양환경 관련 기업은 영세한 곳이 많기 때문에 ESG 경영 도입 수준 진단 등 전반적인 컨설팅이 필요할 것이다. 이와 더불어, 친환경 설비 구축을 위한 자금여건 개선, 친환경 기술로의 전환 및 도입을 위한 대기업의 기술이전 연계 등을 종합 지원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을 제안한다.

2. 민·관 소통형 ESG 협력체계 구축

1) 기업 임직원의 해양환경 인식제고 및 네트워킹 강화

기업이 ESG경영 추진방향을 설정하고 이를 토대로 ESG 활동을 기획할 때 실무 담당자의 해양환경에 대한 지식수준, 관심 정도, 그리고 추진 의지도 중요하지만 의사결정 권한을 가진 임원들의 인식 또한 매우 중요하게 작용한다. 이에 따라 국내 민간기업의 임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해양환경 ESG 연례 포럼이나 간담회 등을 개최할 것을 제안한다. 이 자리에는 기업인과 해양수산부 관련 부서 담당자뿐만 아니라 해양환경 ESG와 관련된 국가사업을 시행하는 해양환경공단, 한국어촌어항공단, 한국수산자원공단 등 실무 담당자가 직접 참석하도록 한다. 이는 지난 2023년 5월 해양수산부가 주관하여 민간기업 ESG 실무자와의 간담회를 개최한 방식을 토대로 한 것이며, 이보다 논의의 정도를 구체화 및 심화하기 위해서 참여 범위를 기업 측은 임원까지, 정부 측은 실무 지원조직까지로 가능한 확대할 것을 제안한다.

이 자리를 통해, 해양수산부는 해양환경 분야에 기업의 역할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여 기업의 참여를 적극 유도하고, 현재 부처에서 추진 중인 주요 정책과 사업 소개 및 기업의 ESG와 연계하여 협력할 수 있는 방안을 공유할 수 있다. 기업은 해양환경 분야 ESG 추진 과정에서 겪는 현장의 애로사항과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 사항을 건의할 수 있을 것이다.

이처럼 정부와 기업이 포럼 또는 간담회와 같은 네트워킹을 통해 일회적인 만남이 아니라 정기적으로 자리를 갖게 된다면 해양환경에 대한 인식 제고는 물론이고 더 많은 기업들의 참여로 해양환경 분야 ESG가 활성화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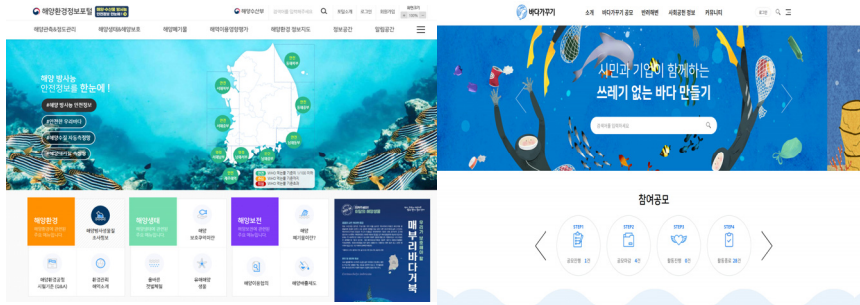
2) 해양환경 ESG 통합 서비스 제공 플랫폼 운영

기업은 해양환경 분야 ESG 활동을 기획할 때 외부의 전문 컨설팅 기관이나 NGO 등 민간단체로부터 도움을 받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ESG 업무 담당자가 직접 정보를 수집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런데 해양환경 분야 활동은 아직 잘 알려져 있지 않기도 하고, ESG 담당 창구도 다원화되어 있으며, 필요한 정보 또한 산재되어 있어 기업 담당자가 기획단계에서부터 한계에 부딪히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ESG 업무 담당자들이 원하는 정보를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보 제공 플랫폼이 필요하다.

우리나라 각 중앙부처는 국내 기업 ESG 경영 지원정책을 마련한 것에 더해 수요자가 관련 정보를 쉽게 접할 수 있도록 부처별 성격에 맞는 정보 제공 온라인 플랫폼을 개설하였다. 이 플랫폼들은 각 부처가 법률에 근거하여 지정한 ESG 외부 지원조직에서 직접 운영하고 있다.

한편 해양환경 관련해서는 ESG 정보를 통합 관리 및 제공하는 별도의 온라인 플랫폼이 아직은 없다. ‘해양환경정보포털’이나 ‘바다가꾸기’가 대표적인 해양환경 정보 제공 플랫폼이긴 하지만 ESG와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는 데 특화된 사이트는 아니다. 그러므로 기존 플랫폼과는 달리 해양환경 분야 ESG 온라인 플랫폼을 새로 구축하는 것도 방법이다. 또는 기존의 유사 플랫폼을 H/W로 활용하고, 그 안에 S/W로 ESG 관련 정보들을 포함하여 해양환경 ESG 통합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더욱 빠르고 현실적인 방안이 될 수 있다. 특히 해양환경정보포털은 해양환경공단이 「해양환경관리법」에 근거하여 운영 중이고, 바다가꾸기 플랫폼은 2022년 6월 개설되어 한국해양재단에서 운영하는 등 공신력 있는 기관이 담당하고 있다는 점과, 이미 해양환경 분야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플랫폼으로 국민에게 알려져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큰 장점이다.

〈그림 5-3〉 해양환경정보포털, 바다가꾸기 메인 화면



자료: 해양환경정보포털 홈페이지(검색일: 2023.8.19.), 바다가꾸기 홈페이지(검색일: 2023.8.19.)

해양환경 ESG 통합 서비스 제공 플랫폼에서 해양환경 분야 ESG 아이팀 목록, 추진 방법, 협력 파트너 연계, ESG 성과 활용 방안 등 가이드 제공과 더불어 ‘(가칭) 해양환경 분야 ESG 전문인력 양성’과 같은 온라인 교육도 제공하여 기업 ESG 담당자가 해양환경 ESG 활동 기획단계에서 충분히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한, 기업의 해양환경 ESG 활동 우수 사례를 홍보하여 다른 기업들이 참고할 수 있도록 한다. 기업 입장에서 정부정책 지원 수요, 건의사항 등을 자유롭게 제기하고 정부에서는 기업 지원 정책을 마련할 때 현장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온라인 소통창구를 둔다.

이와 같이 기업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정보제공 플랫폼을 운영하되, 일방적인 정보 공급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소통 가능한 방식으로 운영한다면 기업이 해양환경 분야 ESG 추진 과정에 겪는 어려움이 다소 해소되어 더 많은 기업들의 참여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3) 다자간 협의체(가칭. Ocean Alliance) 운영

해양환경 분야는 해양 관련 기업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기업에게 새로운 영역일 것이다. 그동안 기업들이 육상분야 중심으로 ESG 활동을 추진해오다가 최근 들어서 해양환경 분야에 관심을 가지게 되면서 기업 간 아이템 선점 경쟁이 시작되었다. 일부 기업들은 실현가능한 아이템을 빠르게 발굴하고 해양수산부와 양자 간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는데, 이로서 이 기업은 해당 아이템에 대해 ‘최초’ 기업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게 되었다. 다른 기업들은 선점 경쟁 논리에 따라 동일한 아이템을 추진하고자 할 경우 차별화할 수 있는 방법을 찾거나 아예 다른 아이템을 새로 발굴하기도 한다. 이처럼 특정 아이템을 두고 정부가 하나의 기업과 협력하는 방식으로는 많은 기업의 참여를 기대하기 어려울 수 있다. 기업 입장에서도 ‘최초’는 전례가 없음을 의미하기 때문에 리스크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정부가 기업 간 아이템 선점 경쟁을 완화하고 현재 추진 중인 사업 또는 활동에 기업이 활발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해서는, 공동의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다자간 협의체를 운영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참여 기업들을 두 가지 방식으로 나누어 구성하고 (가칭) 오션 얼라이언스(Ocean Alliance)로 명명해 운영하는 방안을 제안한다.

먼저, 정부가 생물다양성 보전, 기후변화 대응, 해양폐기물 자원순환 기여 등 특정 분야와 연계하여 공동의 목표를 설정한 뒤 각 기업에게 참여를 통한 협력을 제안한다. 이때 국내 모든 기업을 대상으로 하고, 참여 기업이 확정되면 정부는 이들과 다자간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이로서 기업들은 서로 경쟁 관계가 아닌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동일한 역할을 수행하는 협력 관계에 있게 된다. 이 다자간 협의체 모델을 분야별로 구성하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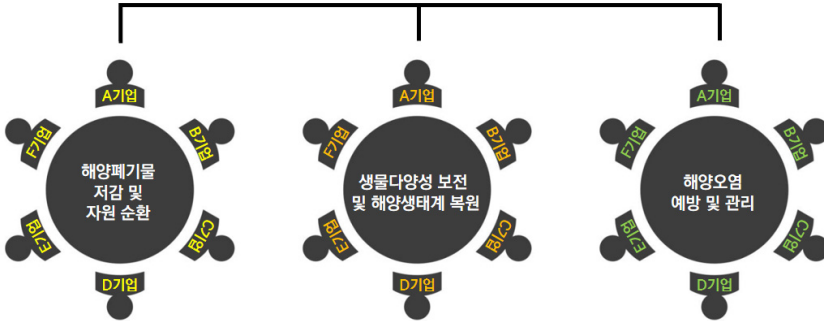
추진하게 되면 아이템 중복 여부와 관계없이 해양환경 분야 문제 해결에 다수의 기업들이 참여할 수 있게 되고, 이 협의체에 가입한 기업들은 정부로부터 관련 정보를 직접 제공받을 수 있으며, 기업 간 정보교류 또한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정보뿐만 아니라 기업 간 기술 협력도 가능한데, 앞의 제4장에서 다룬 바와 같이 국내 대표 철강 기업인 포스코케미칼과 현대제철이 해양수산부와 3각 협력 체제를 통해 폐각을 제철 소재로 사용할 수 있게 된 사례가 대표적이다. 이 과정에서 두 기업은 석회석을 폐각으로 대체하기 위해 공동 연구를 추진하였으며, 해양수산부는 이들의 폐각 재활용 노력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관련 법률을 제정하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을 마련하였다.

지금까지는 공동의 목표 달성을 위해 분야를 제안하지 않고 모든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협의체를 구성하여 정례적으로 운영하는 방식이었다면, 두 번째는 한국원양산업협회 또는 한국해운협회 등 분야별 협회를 활용해 협력하는 방안이다. 이 역시 정부가 협회의 회원사들과 협력하는 모델이므로 앞의 다자간 협력방식과 동일하다. 이 경우 정부가 협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각 협회에 소속되어 있는 대표 기업들을 필두로 하여 해양환경 분야 ESG 활동에 동참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면 자연스럽게 해당 분야의 관련 기업들의 참여가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민간기업이 ESG 차원에서 참여할 수 있는 해양환경 분야의 사업 규모, 추진 체계 등에 따라 정부와 특정 기업이 양자 간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추진하는 것이 더 효과적인 경우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여기에서 제안한 것과 같이, 특정 분야의 이슈 대응을 목표로 다수의 기업들이 공동 참여하여 정부와 다자간 업무협약을 맺고 협의체를 발족하는, 가령 ‘오션 얼라이언스(Ocean Alliance)’를 적극 활용한다면 더 많은 기업들을 해양환경 분야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림 5-4〉 (가칭) 오션 얼라이언스 구성 체계(안)

▶ 오션 얼라이언스(Ocean Alliance) ◀



자료: 저자 작성

3. 지속가능형 ESG 기반 조성

1) 해양환경 ESG 담당부서 일원화 및 외부 지원조직 운영

해양수산부에서는 기획조정실 소속의 장기전략데이터기획팀이 ESG 업무를 총괄하고 있다.¹⁶³⁾ 이 팀은 해양수산 분야 전반에 대한 ESG 전략 수립 등을 담당한다.¹⁶⁴⁾ 각 분야별로는 관련 실이나 과에서 직접 실무를 수행하고 있다. ‘해양환경’ 분야를 예로 들면, 해양환경정책과가 주무부서고, 해양공간정책과, 해양보전과 및 해양생태과와 협력하여 추진 중이다.¹⁶⁵⁾

163)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5조 제6항

164) 해양수산부 홈페이지(검색일: 2023.8.29.)

165) 해양수산부 보도자료(2023.4.4.)(검색일: 2023.8.29.)

〈그림 5-5〉 해양수산부 조직 체계



자료: 해양수산부 홈페이지(검색일: 2023.8.27.)

일례로 KB국민은행은 해양환경정책과와 협력하여 바다숲 조성 사업에 참여하고 있다. 기아(KIA)는 해양생태과와 업무협약을 맺고 갯벌복원사업에 참여 중이다. 그런 반면, 해양환경과 관련이 있지만 해양환경정책관 이하 네 개 부서가 아닌 다른 부서에서 추진 중인 사례도 있는데, 현대자동차와 효성그룹이 바다숲 조성 사업에 참여하기 위해 수산자원정책과와 업무협약을 체결한 경우다. 비록 ‘바다숲 조성’이라는 아이템은 동일하지만 담당부서가 다른 것처럼 현재 해양수산부 내에는 해양환경 ESG 담당 창구가 다원화 되어 있다. 이는 앞의 제3장 제2절에서 설명한 것과 같이, 법률에서 정의하는 해양환경의 개념이 광범위하고 해양환경의 보전과 활용에 해당하는 행위가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해양환경 관련이라고 해서 해양환경정책관실의 업무로만 국한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

〈표 5-5〉 해양수산부-민간기업 ESG 협력 사례

기업명	분야	담당 부서(MOU 체결)
기아	해양 환경	해양정책실
KB국민은행		해양환경정책관
현대자동차, 효성그룹		수산정책실 어업자원정책관
네이버	해운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자료: 해양수산부 홈페이지(2023.8.28.)

하지만 이러한 운영방식이 기업에게는 해양환경 분야로의 진입장벽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 현재는 해양수산부와 협력을 희망하는 기업이 직접 담당부서와 담당자를 찾아 개별적으로 접촉하고 있기 때문이다. 기업이 겪고 있는 이러한 불편과 부담은 해소하고 기업의 수요에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해양환경 ESG 업무 대응 방식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해양수산부 내 카운터파트(counterpart)로서 해양환경 ESG를 전담하는 단일창구를 설치하고, 외부에 실무 조직을 운영하는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는 총 3단계로 구분하여 조직을 운영할 수 있다. 무엇보다 실현가능성에 초점을 맞추어 기존의 조직체계를 최대한 활용하되, 해양환경 ESG 담당부서를 지정하고 고유의 역할과 기능을 부여하는 것이 현실적일 것으로 판단된다. 먼저 해양수산부 내에 해양·수산·해운·항만·물류 전 분야의 ESG 업무를 총괄하는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 이 부서는 해양수산부 조직 자체의 ESG 경영뿐만 아니라 해양수산 관련 기업의 ESG 경영 도입 및 대응을 지원하고, 기업의 ESG를 매개로 한 민·관 협력형 사업 추진 활성화를 위한 방향을 제시하는 전략을 수립 및 발표하는 역할을 한다. 이를 현재 조직 체계에 적용하면, 기획조정실의 장기전략데이터기획팀이 담당부서가 된다.

둘째, 총괄 부서에서 발표한 전략에 따라 해양환경 분야와 관련된 ESG 업무를 수행할 전담부서를 설치한다. 이 경우 창구를 단일화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며, 그 외 관련 부서와는 협조가 원활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이 부서가 담당하게 될 ESG 관련 주요 업무는 민간기업이 참여할 수 있는 해양환경 ESG 사업 아이템 발굴 및 제공, 민간참여형 추진 모델 제시, 기업의 수요 파악 및 협력 확대 방안 논의 등을 위한 해양수산부-기업 ESG 협의체 설치 및 운영, 정부-기업 간 ESG 업무협약 체결, 외부의 실무 전담조직 지원 등이다. 현재 유사 기능을 하고 있는 부서는 해양환경 ESG 주무부서인 해양환경정책과이며, 이 부서로 ESG 업무 창구를 일원화하고 부서의 기능을 강화한다면 보다 효율적인 업무 수행과 기업 수요에 체계적인 대응이 가능할 것이다.

셋째, 해양수산부 내 해양환경 ESG 주무부서의 업무를 실무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외부 조직이 필요하다. 이 조직은 해양환경 분야의 유관기관으로서, 해양수산부에서 담당하는 분야에 대한 전문성을 보유한 인력과 관련 사업을 추진한 경험이 있는 곳이 적합할 것으로 보인다. 이 기관은 해양환경 ESG에 관심을 보이거나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에게 해당 사업에 대한 정보부터 추진방법, 협력 가능 기관 소개 등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하고, 현장에서 사업을 직접 시행하거나, 이를 지원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그밖에 해양환경에 대한 기업인의 인식제고를 위한 교육 제공, 기업의 참여 활성화를 위한 해양환경 ESG 우수사례 홍보, 최신 정보 제공을 위한 온라인 플랫폼 운영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이처럼 해양수산부 조직 내부와 외부에 ESG 업무를 전담할 주체가 명확해지면, 개별 기업은 해양환경 분야와 연계한 ESG 활동을 기획하는 단계에서부터 적극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어, 본격 사업의 참여로 이어지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표 5-6〉 해양환경 분야 ESG 담당 조직 체계 및 기능(안)

구분		분야	역할 및 기능(안)
해양수산부	총괄	해양 수산 전반	- 해양수산부 ESG 경영 업무 담당 - 해양·수산·해운·해사·항만 분야 기업참여형(ESG) 민관협력 사업 추진 전략 수립
장기전략데이터기획팀			
해양수산부	분야별	해양 환경	- 해양수산부-기업 ESG 협의체 운영 - 해양환경 ESG 사업 아이템 발굴 및 제공 - 민간참여형 사업 추진 모델 제시 - 해양수산부-기업 간 해양환경 ESG 업무협약 체결 - 외부 실무 담당조직 지원
해양환경정책과			
유관기관 (외부)	분야별	해양 환경 등	- 해양환경 ESG 활동 참여 가이드 및 맞춤형 컨설팅 제공 - 해양환경 ESG 협력기관 연계 지원 - 해양환경 ESG 사업 직접 수행 및 수행 지원 - 해양환경 분야 역량강화 교육 제공 - 해양환경 ESG 우수사례 홍보 - 해양환경 ESG 정보 제공 온라인 플랫폼 운영
해양 관련 기관			

자료: 저자 작성

2) 민간참여 확대를 위한 국가사업 제도 정비

해양수산부에서 추진 중인 사업 중 지금까지 기업들이 가장 관심을 보이는 분야는 갯벌 식생복원, 바다숲 조성, 그리고 해양폐기물 자원순환 구축이다. 특히 갯벌복원사업과 바다숲 조성사업은 본 연구 제3장 제2절에서 설명한 것과 같이 법률에 근거하여 추진되는 국가주도형 사업으로, 최근 민간기업 ESG 차원에서의 참여 사례가 증가하고 있지만, 진행 방식은 별도의 규정 없이 현행 절차를 따르고 있다. 즉, 기업이 참여하는 경우 이들에게 사업 시행자로서의 지위를 부여할지 여부, 정부와 기업 간의 사업비 부담 방식, 사업 추진 절차, 그리고 주체별 역할 등이 별도로 정립되어 있지 않다. 이에, 아래에서는 국가주도형 사업 중 민간기업의 참여 수요가 높은 사업의 제도 정비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1) 갯벌 식생복원사업

갯벌 식생복원사업은 2021년 해양수산부와 기아가 업무협약을 체결하면서 국내 최초 민간참여형으로 추진되고 있다. 아직 사업이 완료되지 않았지만 이 사례를 토대로 전체 절차를 살펴보면, 민간기업은 사업의 선정 단계에서 복원사업을 신청하였고, 예산 배정 단계에서 주로 역할을 하였으며, 이후 사후 모니터링 관리 단계에서 역할을 요구받을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를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먼저 복원 대상지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기업은 자사의 사업장이 위치한 지역 등 개인적으로 선호하는 지역을 사업 대상지로 요구하는 편이다. 그러나 갯벌복원사업 지침에서는 복원 이후 갯벌의 생태적 가치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곳, 해양수산부 장관이 갯벌 복원 대상지의 적합성, 갯벌 복원 논리, 지자체의 복원 의지, 경제성, 기대효과, 갯벌 복원 성공 가능성을 검토해 복원 대상지를 선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사업시행자는 기업의 수요를 최대한 고려하되 현실적으로 사업 실행가능성이 높은 곳을 적지로 검토하고, 이 과정에서 해당 지역의 지자체와 협의 과정을 거쳐 대상지를 최종 선정하고 있다.

사업 대상지가 정해지고 나면, 사업시행자는 복원사업을 실시하게 되고 공사가 완공되면 5년간 관리한 후, 복원된 갯벌을 해당 지자체로 이관하는 절차를 거친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민간자본을 투입하여 국가사업을 완료한 사례가 없어, 현재 진행 중인 민간참여형 사업이 완료되면 누가 사후관리를 맡게 될지 불투명한 상황이다. 기존 국가주도형으로 추진할 때와 동일하게 지자체에게 사후관리 권한을 부여할 수는 있으나, 지자체 입장에서 볼 때 민간자본을 투입해 복원한 갯벌을 이관 받아 관리해야 할 의무는 없다. 하지만 민간이 참여하여 복원한 갯벌만 제3의 주체가 별도로 관리하게 되면, 오히려 국가 전체 차원에서는 관리체계가 이원화되는 상황이 발생할

다. 그러므로 현행과 동일한 방식으로 복원된 갯벌을 지자체로 이관하되, 지자체의 재정적 여건에 따라 해당 갯벌을 복원한 민간기업이 사후관리에 직접 참여하도록 하는 공동관리 모델이 필요하다.

또한, 갯벌복원사업은 현재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7:3 비율로 예산을 부담하여 추진하고 있는데, 민간참여형은 민간자본이 추가로 투입되기 때문에 이를 고려하여 국비:지방비:민간부담금의 분담률이 결정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국비 50%와 민간자본 50%로 한다면 국가와 민간이 공동으로 복원사업에 참여하고 관리에 대한 공동 책임의식을 갖아야 한다는 상징성을 부여할 수도 있다. 그리고 현행 법률상 민간자본은 사업 시행주체인 공공기관에게 직접 교부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이로 인해 기업의 입장에서는 추가적으로, 또는 크게 필요하지 않은 방식의 행정절차를 거쳐야 하는 번거로운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기업이 사업시행자인 공공기관에게 직접 교부가 가능할 수 있도록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

〈표 5-7〉 갯벌복원사업 추진체계 비교 개선방안

추진 절차		국가 주도형 (현행)	민간 참여형 (기존)	민간 참여형 (개선방안)
사업 선정	복원사업 신청 (지자체 협조)	사업시행자	민간기업	민간기업
	복원 대상지 검토 및 선정	정부	좌 동	정부
	복원 사업계획 수립 및 제출	사업시행자	좌 동	사업시행자
	복원 사업계획 승인	정부	좌 동	정부
	예산 배정	정부, 지자체 (70:30)	민간기업 (100%)	정부(+지자체): 기업 (50:50)
사업 시행	복원 실시계획 수립 및 설계	사업시행자	좌 동	사업시행자
	복원 실시계획 고시	사업시행자	좌 동	사업시행자
	복원공사 착수	사업시행자	좌 동	사업시행자
	복원공사 완공	사업시행자	좌 동	사업시행자
이관지 사후관리	사후 모니터링 관리 (사업완료 후 5년)	지자체	미정	지자체(+기업)

자료: 갯벌복원사업 지침의 자료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2) 바다숲 조성사업

바다숲 조성사업도 갯벌 식생복원사업과 마찬가지로 최근에 들어서 기업 참여형으로 추진 중인 사례가 있다. 현행 국가주도형 체계로는 정부, 지자체, 한국수산자원공단이 3자간 협력모델을 이루어 추진하는 데, 민간이 참여하는 모델은 딱히 규정된 것이 없으므로 추진 방법 및 체계는 구성하기 나름이다. 보통은 사업을 제안한 기업과 사업시행자인 한국수산자원공단의 참여를 기본으로 하지만, 민간자본으로만 추진되는 경우에는 한국수산자원공단이 아닌 관련 분야 전문성과 기술을 보유한 별도의 기관이 사업 시행자가 될 수 있다. 상황에 따라서는 이 사업에 대한 공신력과 상징성을 부여하기 위해 해당 사업을 추진하는 민간기업과 정부가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경우도 있다. 그 외 민간연구소, 비영리단체, 기타 공공기관 등이 참여하기도 한다.

기존 국가사업 절차 내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사업후보지를 직접 제안하지만, 민간참여형에서는 사업대상지에 대한 협조기관으로서 역할을 한다.

민간기업의 경우 갯벌복원사업 때와 동일하게 사업후보지 발굴, 사업비 투자, 사후관리 단계에서 주로 역할을 하거나,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먼저 기업은 사업 대상지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특별히 선호하는 지역을 제안하는 편인데, 이 지역들은 주로 해당 기업의 지사나 공장이 위치한 곳이다. 하지만 이곳이 생태적 관점에서 바다숲을 조성할 수 있는 곳인지 검토되어야 하고, 해당 지역의 지자체와 어촌계의 원활한 협조 또한 필요하다. 그러므로 사업 대상지를 선정하는 과정에서는 실행가능성을 타진하는 것부터 최종 결정에 이르기까지 민간기업과 사업시행자 간의 충분한 논의가 수반된다.

다음은 사업비 투입 단계다. 국가주도형의 경우 100% 정부 예산이 투입되는데, 민간참여형으로 사업을 추진하게 되면 기존에 없던 민간자본이 투입되게 된다. 다만, 갯벌복원사업과 마찬가지로 정부나 공공기관이 사업 시행주체가 될 경우 현행 법률 상 민간기업으로부터 사업비를 직접 교부받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이에 대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더불어 민간참여형 사업은 정부와 기업이 공동 관리자로서 책임의식을 가지고 민·관 협력 방식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양자 간 합의하여 사업비를 일정 비율로 투자하도록 하는 방안도 고려해볼 수 있다.

정부와 기업은 공동으로 바다숲 조성사업 대상지를 선정하고 사업비를 투입해 사업이 완료되면 사후관리에 들어간다. 최초 3년 동안은 사업 시행자인 한국수산자원공단이 직접 관리하지만 이후부터는 해당 지자체로 관리 권한이 이관되는데, 이때 지자체가 자체 예산을 사용해 한국수산자원공단에 사후관리를 다시 위탁하게 된다. 여기서 문제는 지자체마다 재정 여건이 다르기 때문에 일부 지역에서의 사후관리가 부실하다는 지적도 있다.¹⁶⁶⁾ 그런데 민간자본이 투입된 민간참여형 사업의 경우, 지자체는 국가주도형 사업 때와는 다르게 사업 대상지 협조기관으로서 역할만 하면 되므로 자체 예산을 투입해 사후관리를 맡아야 할 의무는 없다. 아직까지는 민간참여형 사업이 시작된 지 초기단계이므로 사후관리 단계에 접어든 사례는 없지만, 현재 기업 참여형으로 진행 중인 사업을 비롯하여 앞으로 더 많은 기업들이 참여할 가능성을 고려하여 사후관리에 대한 방안을 미리 마련해야 한다. 사후관리 단계에서는 현행 국가주도형과 동일하게 지자체에 관리 권한을 이관하되, 기업이 재정적으로 지원을 한다거나 또는 현장에서 직접 관리에 참여하는 등 현실적으로 가능한 역할을 다양하게 논의해볼 필요가 있다.

166) 공공투데이(2021.10.19.)(검색일: 2023.8.27.)

〈표 5-8〉 바다숲 조성 사업 추진체계 개선방안

추진 절차		국가 주도형 (현행)	민간 참여형 (기존)	민간 참여형 (개선방안)
사업 대상지 선정 (2년)	사업 후보지 제안 (지자체, 어촌계 협조)	지자체	민간기업	민간기업
	사업 후보지 조사 및 평가	공단	좌 동	공단
	적지조사 대상지 선정	정부(공단)	-	정부(공단)
	사업후보지 기본계획 수립	정부(공단)	좌 동	정부(공단)
	사업대상지 선정	정부	좌 동	정부
	사업비 교부	정부	정부:기업 (기준 없음)	정부:기업 (50:50)
사업지 조성관리 (4년)	사업지 계획 수립	공단	좌 동	공단
	바다숲 조성관리	공단	좌 동	공단
	사업지 이관	공단	좌 동	공단
이관지 사후관리	이관지 관리 주기별 조사	지자체 (공단)	미정	지자체 (공단) (+기업)

자료: 한국수산자원공단 홈페이지(검색일: 2023.8.25.)의 자료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3) 해양폐기물 자원순환 생태계 확대

해양폐기물 관리는 민간기업이 ESG 차원에서 크게 관심을 보이는 분야이기도 하며, 전 세계에서 주목하고 있는 분야이기도 하다. 지난 2022년 국제사회는 2024년까지 플라스틱 오염에 관한 법적구속력 있는 세계 최초의 국제협약을 제정하기로 합의하였고, 이에 따라 정부간협상위원회가 진행되고 있다. 이 협약에는 어구 등 해양에 특화된 사항도 포함되어 있어 국내 해양폐기물 관리 체계에 대한 점검과 대응방안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우리 정부는 고부가가치 물질 재활용률을 높이기 위해 2022년 ‘해양폐기물 재활용 활성화 대책’을 수립했으며, 국가 차원에서 해양폐기물의 수집·운반·집하 및 재활용 체계를 전반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발표하였다. 관련하여, 2024년까지 해양폐기물 전처리부터 중간원료 생산, 최종 재

활용 소재 생산 및 수요처 공급까지 안정적으로 연결될 수 있는 원료공급 체계를 갖추고, 2027년까지는 해양폐기물 수거량의 20% 이상을 재활용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처럼 국제사회의 해양폐기물 관리 강화를 위한 규제에 대응하고 우리나라 국가 차원에서의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해양폐기물을 활용한 자원순환 가치사슬(value chain)을 확대 구축하고, 국내 재활용 산업시장의 활성화를 지원할 필요가 있다.

〈그림 5-6〉 해양폐기물 재활용 체계



자료: 저자 작성

국내 해양폐기물 재활용 체계를 살펴보면, 우리나라 해역에서 수거되는 해양폐기물은 집하시설을 거쳐 전처리 장소로 운반된다. 그리고 이곳에서 폐어망이 전처리 과정을 거쳐 기초소재로 만들어지고, 이 재활용 소재가 적용된 최종제품이 생산되어 최종 수요자에게 판매되는 일련의 절차를 거치게 된다.

이 과정 속에서 해양폐기물 재활용이 활성화되려면 앞단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일련의 체계가 기본적으로 충분히 관리되어야 한다. 첫째, 무엇보다 해양폐기물을 수거하여 선별 및 분리 작업을 거쳐 재활용이 가능한 자원으로 양질의 폐어망을 안정적으로 확보 및 공급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수거된 해양폐기물이 중간에 불법 매립 또는 소각되어 빠져나가 지 않도록 관리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또한 국가에서 시행 중인 해양폐기물 수거 및 수매사업이나 어구보증금제도를 통해 어업인이 배출한 폐어망을 확보하는 것 외에 해운이나 수산기업 소속의 선박에서 배출한 해

양폐기물을 활용하는 방안도 고려할 것을 제안한다. 이러한 기업을 통한 해양폐기물 직접 배출을 확대하려면 기업 내부의 어망·어구 정보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어항·항만 내에 전용 집하장을 마련하는 등 정부의 제도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둘째, 선별된 폐어구를 재활용 가능 소재로 만들기 위해서는 전처리기가 필요한데, 현재 국내에는 전처리 기술 또는 시설이 아직은 충분하지 않고, 또한 재활용도 나일론 소재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므로 이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종류의 플라스틱을 재활용할 수 있고, 소재사들이 요구하는 수준의 소재를 공급할 수 있도록 전처리 방법을 고도화하는 등의 기술개발 지원 노력이 필요하다. 셋째로, 국내에서는 아직까지는 해양폐기물 재활용 소재를 사용하는 최종 수요자인 기업들의 수요가 많지 않다. 게다가 재활용 제품에 대한 소비자들의 신뢰도는 낮은 편인데, 해외에서는 해양폐기물 출처에 대한 인증(예: OBP, OP 등)이 활발한 반면 국내에서는 인증제도가 아직 도입되어 있지 않다. 이에, 정부에서는 해양폐기물 출처에 대한 인증과 재활용 소재를 활용한 제품에 대한 인증제 도입을 통해 해양폐기물 재활용 소재에 대한 신뢰도를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동시에 국내 인증 제도의 기준은 해외 인증제도와 유사하게 하되, 인증 획득에 소요되는 비용은 더 저렴하게 책정하면 국내 인증을 받고자 하는 기업들의 부담이 완화될 것이다. 우리 기업들의 해양폐기물 출처에 대한 인증 획득을 통해 재활용 소재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지면, 이를 활용하는 최종 수요 또한 확대되어 국내 해양폐기물 자원순환 생태계가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3) 해양환경 분야 ESG 추진 활성화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

현재 해양환경 분야는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해양환경을 관리하기 위한 과정에 민간기업의 참여를 유도 및 확대하기 위한 제도는 물론이고, 이를 이행하기 위한 법적 기반 역시 마련되어 있지 않다. 민간기업의 ESG 경영

도입이 빠르게 확산되면서 기업들의 해양환경 분야에 대한 관심과 참여로 이어지고 있는데, 아직은 참여 기업의 수, 그리고 이들의 활동 범위 및 역할 등을 볼 때 전반적으로 초기단계다. 그러나 ESG 차원에서 기업들의 지속적인 참여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며, 기업과 정부 간의 협력체계에 기반한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관련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할 것을 제안한다.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해당 지역의 기업들의 ESG경영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고 관련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것과 같이, 중앙정부 차원에서의 국내 민간기업의 해양환경 분야 ESG 활동 추진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법적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앞의 제3장에서 살펴본 것처럼 해양환경정책과 관련된 법률은 매우 다양하므로 해양수산 분야의 가장 상위법령인 「해양수산발전 기본법」에 ESG 지원에 관한 규정을 신설할 것을 제안한다. 예컨대 민간기업의 해양환경 분야를 포함하여 해양수산 전 분야에서의 ESG 경영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민관이 참여하는 협의체 운영에 관한 사항, 국가사업에 민간기업의 기부금 접수에 관한 사항, 해양환경 관련 유관기관에서 ESG 업무를 지원할 수 있는 전담조직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근거를 마련할 것을 제안한다.

〈표 5-9〉 「해양수산발전 기본법」에 해양환경 분야 ESG에 관한 조항 신설(안)

구분	명칭
현행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에 신설	제0조(기본계획 수립)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기업의 해양수산 분야에서의 ESG 활성화를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0년마다 수립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해양수산 분야 ESG 현황 및 전망 2. 해양수산 분야 ESG 활성화 정책의 추진 방향 및 목표 수립 3. 해양수산 분야 ESG 활성화 추진과제 및 추진 방법 4. 해양환경 분야 ESG 활성화를 위한 협력에 관한 사항

구분	명칭
	5. 기본계획 실행을 위한 자원 및 조달 운용 계획 6. 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수산 분야 ESG 활성화를 위하여 기본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0조(해양환경 ESG 민관협의체)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협력체계로서 해양환경 분야 국가사업 수행 공공기관, 국내 민간기업, 협회와의 해양환경 ESG 민관협의체(이하 “민관협의체”를 구성 및 운영할 수 있다. ② 민관협의체 의장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③ 민관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구성한다. 1. 해양수산부 해양환경정책관 및 소속 부서의 실무자 2. 민간기업 임원 및 ESG 담당자 3. 해양환경 관련 협회의 장 ④ 민관협의체 의장은 민관협의체를 대표하며,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⑤ 해양수산부는 민관협의체를 통하여 제시되는 의견이 해양환경 분야 ESG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추진하는 데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⑥ 민관협의체 회의 소집 등 민관협의체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민관협의체 구성원의 의견을 들어 민관협의체 의장이 정한다.
	제0조(전담기관의 지정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환경 관련 ESG 업무를 전문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해양환경 관련 유관기관 또는 단체를 해양환경 ESG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이하 “전담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 및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담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를 수행한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전담기관이 제2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전담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경우 2. 전담기관의 지정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그 밖에 전담기관으로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게 된 경우 ⑤ 전담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의 요건·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0조(기부금의 접수)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자발적으로 기탁되는 기부금품을 사업 목적에 부합하는 범위에서 접수할 수 있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개인·법인 또는 단체로부터 돈이나 그 밖의 재산을 기부받는 경우에는 기부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익명으로 기부하거나

구분	명칭
	기부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기부자가 기부한 돈이나 그 밖의 재산(이하 “기부금품”이라 한다)의 용도를 지정한 경우에는 그 용도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기부자가 지정한 용도로 사용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기부자의 동의를 받아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부금을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자료: 저자 작성

또한, 해양수산부 내 담당 창구를 단일화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를 개정하여 관련 부서의 업무사항으로 추가하도록 한다.

〈표 5-10〉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 업무에 관한 조항 신설

구분	명칭
현행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신설	제10조(해양정책실) ③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00. 해양환경 관련 민간기업 ESG 지원에 관한 사항

자료: 저자 작성

이처럼, 중앙정부 내의 담당 부서 및 이를 지원하는 외부 기관 등 조직 운영에 관한 사항과 기업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한 기본계획 수립, 협력 거버넌스 체계가 법적 근거를 통해 추진된다면 민간기업의 참여가 ESG 열풍으로 인한 일시적인 현상이 아닌 해양환경 보전 및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공동 관리 주체이자 파트너로서 참여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06

결론 및 정책제언

제1절 연구결과의 요약

본 연구는 해양환경 문제 해결을 위한 새로운 주체로서 기술력, 자본력, 인력 등을 보유한 민간기업이 ESG 경영 실천을 통해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한 정책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먼저, 해양환경 분야에 민간기업의 참여 활성화 필요성에 대해 검토하였다. 해양환경은 그동안 국가에서 주도하여 관리해온 공유재이다. 그러나 공간적으로 광범위하고, 다양하고 복잡한 문제들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어 정부 혼자만의 힘으로는 관리하는 데 한계에 이르게 되었다. 전통적으로 정부는 해양을 관리하는 주체, 기업은 이용하는 주체로 서로 상반관계에 있어왔고, 정부는 이러한 기업의 활동을 감시 및 규제하는 역할을 해왔다. 그런데 기업의 입장에서조차 해양환경을 지속가능하게 이용할 수 있어야 경영활동을 계속 이어갈 수 있게 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제 기업은 해양에 대한 이용자 수준을 넘어 관리자의 영역으로 역할을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다. 실제로 국내 기업인들이 응답한 해양환경에 대한 인식 조사 결과를 보면, 해양환경 문제를 심각한 수준이라고 봤고, 이에 대한 해

결이 시급하지만, 정부의 해결 노력은 미미한 수준, 민간기업의 기여는 매우 낮은 수준이라고 평가하였다. 이처럼 기업인들은 해양환경에 대한 보전과 관리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으며, 여기에 민간기업의 참여가 매우 필요하다는 의견이 대부분이므로 지금까지와는 다른 새로운 방식으로 관리체계의 전환이 필요하다.

둘째로 해양환경 분야를 포함하여 정부에서 발표한 국내 ESG 정책 현황을 전반적으로 살펴보았다. 2020년 초, 세계 최대의 자산운용사인 블랙록의 래리핑크 회장이 연례서한을 통해 투자를 결정할 때 기업의 환경지속가능성을 고려하겠다고 선언한 이후부터 전 세계 기업들 사이에서 ESG 열풍이 불기 시작하였다. 이에 우리 정부는 국내 기업들의 ESG경영을 지원하기 위해 2021년을 ESG경영 확산의 원년으로 선포하였고, 중앙부처는 기획재정부 중심의 범부처 합동으로 ESG 정책 로드맵을 수립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주요 부처는 각 분야에서 기업을 지원할 수 있는 ESG 정책을 수립 및 발표하였다. 환경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는 기본적으로 우리 기업들이 ESG경영을 도입하고 이를 이행해나갈 수 있도록 투자 및 기술이전 지원, 컨설팅 제공, 국내 기업 맞춤형 평가지표 개발 등의 방식으로 지원하고 있다. 한편 환경부와 산림청은 각각 환경 그리고 산림분야 관리주체로서 민간기업의 참여를 유도 및 확대하고, 이 분야에 참여한 기업이 ESG 활동의 성과를 인정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이밖에 공통적으로는 부처마다 각 해당 법률에 근거하여 ESG 업무를 담당할 전담기관을 지정하였으며, 이 기관에서 온라인 플랫폼을 구축해 기업들에게 ESG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반면, 해양환경 분야의 경우, 민간기업의 ESG를 활용한 해양환경 분야 민관협력 관리체계로의 전환을 시도하고 있다. 해양수산부는 2023년 국내 기업을 대상으로 수요 파악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였으며, 국내 일부 대기업은 ESG 차원에서 해양수산부의 대표 사업인 갯벌복원사업, 바다숲 조성사업 등에 참여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해양

수산부 차원에서 민간기업의 참여를 확대하고 이들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하여 공식 발표한 것은 없으며, ESG 업무 전담조직도 별도로 두고 있지 않는 등 전반적으로 기업의 ESG 지원을 위한 기반이 조성되어 있지 않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셋째로 민간기업의 해양환경 분야 ESG 참여 현황과 한계를 분석하였다. 실제 국내 기업의 해양환경 분야 참여 비율을 알아보기 위해 두 가지 방법으로 확인하였다. 먼저 2022년 매출액 기준으로 국내 상위 50대 기업의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통해 해양환경 관련 ESG 활동 추진 여부를 파악해 보았다. 그 결과 13개 기업이 해양환경 분야에서 ESG 활동을 추진하였으며 활동 유형은 해양폐기물 저감 및 자원 순환, 생물다양성 보전 및 해양생태계 복원, 해양오염 예방 및 관리, 해양환경 시민·기업 파트너십 등 4대 분야로 구분할 수 있었고, 총 10개 유형으로 세분화할 수 있었다. 다음은 기업의 규모와 관계없이 국내 소재 100개 기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 14개 기업만이 해양환경 분야 ESG 활동에 참여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에서 보듯이 현재 국내 기업의 해양환경 분야에서의 ESG 추진 정도는 미미한 수준인데, 그 원인을 찾아보면 기업의 관점에서 기업 내부의 자체적인 요인과, 외부의 정책적 여건 모두가 해양환경 분야로의 진입 또는 적극 추진을 가로막는 한계로 작용하고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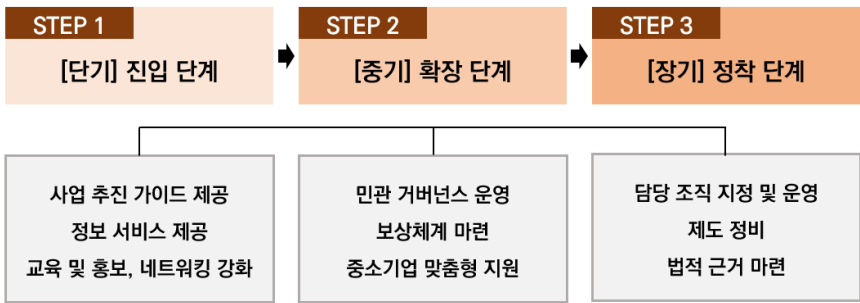
이렇게 파악한 민간기업의 ESG를 활용한 해양환경 분야 참여 현황과 추진 과정에서의 애로사항 등을 고려하여, 마지막으로 민간기업의 해양환경 분야 ESG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지원 방안을 제시하였다. 활성화 기본방향은 우리 정부의 ESG 정책의 기초가 ‘지원’인 것과, 정책적 지원방안의 실현가능성을 고려하여 ① 현장 수요 맞춤, ② 원활한 민·관 소통, ③ 지속 가능 유지로 제시하였다. 이에 따라 현장 수요 맞춤형 ESG 활동 지원을 위해서는 해양환경 ESG 아이тем 및 민간참여 가이드라인 제공, 해양환경 ESG 활동 실적 인증 체계 구축, 중소기업 해양환경 분야 ESG 지원 프로그램

램 개발을 제안하였다. 민·관 소통형 ESG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서는 기업 임직원의 해양환경 인식제고 및 네트워킹 강화, 해양환경 ESG 통합 서비스 제공 플랫폼 운영, 다자간 협의체(가칭. Ocean Alliance) 운영을 제안하였다. 마지막으로 지속가능형 ESG 기반 조성을 추진하기 위한 과제로는 해양환경 ESG 담당부서 일원화 및 외부 지원조직 운영, 민간참여 확대를 위한 국가사업 제도 정비, 해양환경 분야 ESG 추진 활성화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을 제안하였다.

제2절 정책제언 및 후속연구

1. 정책제언

〈그림 6-1〉 해양환경 분야 ESG 활성화 정책화 단계



자료: 저자 작성

민간기업의 해양환경 분야 ESG 활성화를 위해서는 실현가능성과 추진 기간을 고려하여 단기, 중기, 장기로 나누고 이를 상기의 그림과 같이 진입, 확장, 정착 총 세 단계로 추진할 것을 제안한다.

1) 진입 단계

첫 번째는 진입 단계다. 이는 단기간 내에 추진할 수 있어야 하며, 기업이 ESG 추진 분야를 육상 분야에서 해양 분야로 확대해 해양환경 분야로 “진입”할 수 있도록 장벽을 낮추기 위한 과제를 우선 추진하는 단계를 말한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기업이 현실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해양환경 분야 사업 및 정책을 다양하게 발굴하여 제시하고, 참여 방법 및 활용 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안내할 필요가 있다. 기업이 폭 넓게 선택할 수 있도록 다양한 아이템을 제공하면 세부 분야로도 기업의 참여가 가능할 수 있게 되고, 기업들의 복수 선택 또한 가능하게 되어 참여 기업의 수가 배가 되는 것과 같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기업에게는 특히 해양환경에 대해 잘 알지 못한다면 더욱 더 관련 정보가 매우 중요하게 작용한다. 그러므로 언제 어디서나 필요한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해양환경 ESG 통합 서비스 제공 플랫폼을 구축하고, 이 플랫폼은 본 연구에서 제안한 해양환경 ESG 업무 지원 전담조직이 직접 운영하도록 하면, 기업들이 필요시 방향을 설정하는데 큰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될 것이다. 진입단계에서 정보제공 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있다면, 기업 임직원들의 해양환경에 대한 인식 증진이다. 임직원들이 이 분야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알아가게 될수록 해양환경 관리의 관점에서 민간기업의 역할이 필요하다는 것에 공감하고, 적극 참여에 대한 동기부여가 될 수 있다. 그러므로 임직원을 대상으로 해양환경 교육을 상시 제공하고, 해양환경 분야 관련 정부 부처 및 공공기관의 실무자, 그리고 민간기업 임직원 간의 네트워킹을 통해 상호 간의 활동 실적을 공유하고 소통할 수 있는 장을 운영하면 기존의 참여 기업은 물론 신규 진입 기업들의 정착을 도울 수 있게 될 것이다.

2) 확장 단계

두 번째는 확장 단계다. 이는 추진하려면 다소 시간이 필요하며, 해양환경 분야로 새롭게 진입하는 기업들은 물론이고 이미 참여 중인 기업들이 더욱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나아가 활동 영역을 “확장”해 나가도록 하기 위한 방안들을 추진하는 단계에 해당한다.

먼저, 정부와 기업들이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협력체계(가칭, Ocean Alliance)를 구축하고, 이 협력체가 지속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정례화한다. 이 경우, 개별 기업 간의 아이템 선점 경쟁으로 인한 소극적인 참여 분위기를 오히려 적극적으로 전환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되고, 궁극적으로는 이 협력체계를 통해 더 많은 기업들이 참여하는 것은 물론, 이들의 참여 범위를 확장시킬 수 있게 될 것이다.

기업은 시간과 비용을 투자한 것에 대해 성과를 필요로 한다. 그런데 현재는 기업들이 ESG 차원에서 해양환경 분야 활동에 참여하더라도 그 결과를 실제 ESG 관련하여 활용할 수 있는 체계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 아쉬움이 있다. 이 경우 해양환경 분야로 진입하여 시도는 해보았으나, 구체적인 성과로 연계하기 어렵다고 판단이 되면 기업 입장에서는 참여를 지속하기 어렵게 된다. 그러므로 민간기업들이 해양환경 분야 활동에 참여한 실적을 ESG 평가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보상 체계 마련이 필요하다. 대표적으로 해양환경 분야 ESG 평가지표를 개발하거나 해양환경 부문 외부사업 방법론을 개발하는 것이 그 예다. 실제로 일부 기업들은 현재 해양환경 분야에 참여하고 있는 것이 향후 구체적인 실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장기적으로 접근하고 있기도 하다.

한편, ESG경영 도입 자체에 어려움이 있는 중소기업이 E(환경) 분야에서 더 나아가 해양환경 분야로 활동 영역을 확장할 수 있도록 종합 지원하기 위한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이러한 지원을 통해 해양환경 분야로 진입

한 기업들이 활동 범위를 더욱 확장해나가고, 더 많은 기업들의 유입을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3) 정착 단계

세 번째는 정착 단계다. 이 단계의 추진 과제들은 단기간 내에 추진하기 어려우며 일반적으로 추진하는 데 장기간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바로 해양환경 분야에서의 민간기업 ESG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기반을 조성하는 단계다.

현재 해양환경 분야는 민간기업의 ESG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법적 근거, 제도, 조직 등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기업의 참여가 일회성 또는 일시적인 이벤트성으로 그치지 않고 지속가능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법적 근거,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는 해양수산 분야의 가장 상위 법률인 「해양수산발전 기본법」에 민간기업의 해양환경 분야 ESG 추진 활성화 지원을 위한 사항을 규정할 것을 제안하였다. 해양환경 정책과 관련된 법률은 다양하고, 각 관련 법률에서 민간기업의 ESG와 관련된 사항을 규정할 수 있겠으나 해양수산부 차원에서의 민간기업의 ESG를 활용한 해양환경 관리를 위한 협력 강화를 규정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해양수산부 내에서 해양환경 분야와 관련하여 ESG 업무를 전담할 수 있도록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상의 업무분장을 개정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되었다.

추가로 국가주도형 사업에 민간이 참여할 수 있는 형태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갯벌복원사업 지침을 개정하거나, 바다숲 조성사업을 민간참여형으로 추진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한다면 민간기업이 국가 사업에 참여자로서 위상과 분명한 역할을 가지고 참여할 수 있으며, 민관협력형 국가사업 추진 방식이 정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2. 연구의 한계와 향후 연구 과제

기존 ESG 관련 선행연구는 기업의 ESG 동향, 평가, 투자, 법제화 등 규제 대응에 관한 연구가 대부분이나, 본 연구는 해양환경 문제 해결의 관점에서 민간기업과 ESG경영 전략을 문제 해결의 새로운 주체와 매개체로 보고, 정부 입장에서 기업의 참여를 더욱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처음으로 제시하였다. 무엇보다 이 연구는 기업에게는 잘 알려지지 않은 해양환경 분야를 ESG와 접목한 첫 연구라는 점에서 매우 의미가 크다.

그러나 아직 우리나라 기업들의 해양환경 분야 ESG 참여 수준이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연구진이 문헌조사를 통해 접근 및 검토할 수 있었던 사례는 일부에 불과했으며, 관련 자료의 양과 질은 대체로 부족하였다. 이러한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현장의 살아있는 자료를 확보하고자 심층 인터뷰 및 설문조사를 수행하였는데 가장 중요한 대상자를 섭외하는 것부터 쉽지 않았고, 어렵게 연락이 되더라도 실제 인터뷰로 이어지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다. 때문에 현재 기업의 해양환경 분야 ESG 대표 사례가 많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에서 모든 사례를 다루지 못한 점은 개인적인 아쉬움으로 남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구진은 사전 문헌조사를 통해 파악한 사례 중 심층인터뷰 대상을 선정하고, 해당 사례에 실제 참여 중인 이해관계자를 전부 섭외하는 데 성공하였다. 그 결과 각 참여 주체의 입장에서 경험한 애로사항을 청취할 수 있었고, 이를 정책방안 도출에 충분히 활용할 수 있었다. 다만 심층인터뷰에서 다룬 대상은 대기업 중심이었으며, 중소기업도 일부 인터뷰하였으나, 대기업이 추진하는 사례의 추진체계 내에 포함되어 있는 해양폐기물 관련 기업으로 한정되었다. 본 연구는 국내 모든 기업을 대상으로 했으나, 현실적으로 다양한 분야의 중견·중소기업까지 심층인터뷰를 통해 구체적으로 파악하기에는 한계가 있었기에 설문조사를 통해 이들의 해양환경 분야 ESG 추진 경향을 파악하는 정도로 진행하였다.

종합적으로 본 연구는 민간기업의 해양환경 분야 ESG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정부의 관점에서 정책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다만, 이번 연구에서는 큰 틀에서 민간기업의 해양환경 분야 ESG 추진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한 것으로 총론의 성격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일부 추진 과제의 경우 실제 활용가능하기 위해서는 더 나아가 별도의 과제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대표적으로 해양환경 ESG 아이템 및 민간참여 가이드라인 수립의 경우 본 연구에서 다룬 주요 사례와 추진모델을 참고한다면, 단기간 내에 기업에서 활용할 수 있는 정도로 제공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중소기업 해양환경 분야 ESG 지원 프로그램 개발 역시 타 부처에서 발표 및 시행 중인 중소기업 지원 정책과 연계 및 활용할 수 있는 것부터 발굴한다면 부분적으로 우선 개발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해양환경 분야 ESG 평가지표나 외부사업 방법론의 경우 충분한 기한을 두고 후속 연구를 통해 진행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국내 문헌

- 고희경·안동휘·서용구(2021), ESG 환경 경영: 블랙야크 스타일, 상품학연구 39(3), p. 77-86.
- 관계부처 합동(2021), K-ESG 가이드라인 v1.0.
- 국민권익위원회(2022), 소셜 택소노미와 ESG 경영, 113,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윤리경영 브리프스, p. 2.
- 김귀영 외(2013), 해역이용협의제도의 사후환경관리 개선방안, 한국해양환경·에너지학회지, 16(2), pp. 121-129.
- 김도관 외(2022), 부산지역 산업단지 ESG 실태분석 및 시사점, 부산연구원.
- 김수암 외(2021), 해양환경보호활동에 대한 국내외 현황과 정책 방향, 한국과학기술한림원.
- 남정현(2022), ESG 경영제도 정착을 위한 정부의 역할, 중앙대학교 행정대학원.
- 문흥안(2016), 반공유재의 비극, 일감법학, 35, 건국대학교 법학연구소, p. 160.
- 변영조·우승환(2022), 기업의 ESG 경영에 대한 국내·외 연구동향, Clean Technol, 28(2), pp. 193-200.
- 산림청(2022), 선진국형 산림경영관리를 통한 산림르네상스 추진 전략(2022~2027).
- 삼정 KPMG(2021), ESG의 부상, 기업은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 74, 삼정 KPMG 경제연구원.
- 서스틴베스트(2023), 2022 기업 ESG 분석 보고서.

-
- 성은혜·김상구(2015), 해양환경 거버넌스의 영향요인 분석: 부산광역시를 중심으로, 지방정부연구, 18(4), pp. 243-268.
- 손예령(2022), ESG 시대, 기업의 환경 이슈에 관한 연구 동향 분석, 문화와 융합, 44(12), 한국문화융합학회, pp. 130-131.
- 윤미경 외(2021), 원양산업의 ESG 도입 기초 연구, 한국해양수산개발원.
- 윤성순 외(2019), 재해대응 및 환경보전을 위한 연안토지 매수 이행방안 연구, 한국해양수산개발원.
- 임송학(2007), 해양오염방지 및 해양환경보전을 위한 법제도 마련, KPA Journal, 2007년 3-4월호, pp. 66-70.
- 임형철·정무섭(2021), 국내외 ESG 사례를 통해 본 중소기업 ESG 경영 활성화 방안, Asia-Pacific Journal of Business, 12(4), pp. 179-192.
- 장석인(2022), 사회혁신기업의 ESG에 관한 연구, 기업경영리뷰, 13(1), pp. 311-329.
- 장창민(2022), 부산지역 중소기업 ESG 실태분석 및 시사점, 2022년 한국환경정책학회 추계학술대회.
- 정우현 외(2012), 환경거버넌스의 다각화 현황 및 시사점,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 조대형(2021), ESG 글로벌 추진 현황과 사례 분석, 인문사회21, 12(3), pp. 2651-2662.
- 좌미라·한기원·박희망(2020), 해양수산분야 사회문제해결형 R&D 기반 구축 연구, 한국해양수산개발원.
- 좌미라 외(2021)
- 중소벤처기업부(2021), 중소기업 ESG 촉진방안.
- 중소벤처기업부·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2021), 중소기업들을 위한 ESG 경영안내서 이해편.
- 충북연구원(2021), 충북 탄소중립 추진을 위한 ESG 경영 지원정책 방향.
- 팀부스터(2022), 다이버를 위한 수중 정화활동 매뉴얼 -(2) 스쿠버 조사 가이드, (사)동아시아바다공동체 오션.
- 포스코(2022), 2021 포스코 기업시민보고서.
- 포스코홀딩스(2022), Green tomorrow, with POSCO - POSCO Holdings sustainability report 2021.

- 한국ESG기준원(2021), ESG 모범규준.
- 한기원 외(2021), 해양환경산업 육성 방안 연구, 한국해양수산개발원.
- 한상범·권세훈·임상균(2021), 글로벌 ESG 동향 및 국가의 전략적 역할, 대외경제정책 연구원.
- 해양수산부 발표자료(2023.4.5.), 해양환경분야 ESG 기업 간담회.
- 해양수산부(2019), 제2차 해양생태계 보전·관리 기본계획(2019~2028).
- 해양수산부(2021a), 제1차 갯벌 등의 관리 및 복원에 관한 기본계획(2021~2025).
- 해양수산부(2021b), 제1차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 활성화 기본계획(2021~2025).
- 해양수산부(2021c), 제1차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 기본계획(2021~2030).
- 해양수산부(2021d), 제5차 해양환경종합계획 계획(2021~2030).
- 해양수산부(2021e), 해양수산분야 2050 탄소중립 로드맵.
- 해양수산부(2022), 제4차 기후변화대응 해양수산부문 종합계획(2022~2026).
- 환경부(2022),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가이드라인.
- 환경부(2023), 환경분야 ESG 지원사업 안내서.
- KT&G(2022), S-Report 2021 - Imagine a better tomorrow.

국외 문헌

- Ktristel Buysee and Alain Verbeke(2003), Proactive Environmental Strategies: A Stakeholder Management Perspective, Strategic Management Journal, 24(5), pp. 453-470.

인터넷 자료

- 경남신문(2018.1.5.), [인간과 환경 시즌2] (7) 연안오염총량관리제 10년 ‘죽음의 바다’ 마산만 살리다, <http://m.knnews.co.kr/mView.php?idxno=1236731&gubu>

-
- n=(검색일: 2023.4.24.)
- 경남신문(2021.7.27.), [인간과 환경 시즌3] (3) 마산만 살리기, <http://www.knnews.co.kr/news/articleView.php?idxno=1356716>(검색일: 2023.4.24.)
- 경북매일(2020.5.29.), 울릉군 포스코와 손잡고 연안 바다를 풍요롭게… 어민소득 증대 기여, <https://www.kbmaeil.com/news/articleView.html?idxno=847379>(검색일: 2023.4.16.)
- 경인매일(2023.7.10.), ESG지표, 어떻게 준비하고 올바르게 평가받을 것인가?, <https://www.kmaeil.com/news/articleView.html?idxno=406610>(검색일: 2023.8.29.)
- 경향신문(2023.1.5.), 숲 조성 해서 탄소배출권 판다…임업진흥원 “한화호텔앤드리조트 등 7곳 산림 배출권거래제 외부사업 등록”, <https://m.khan.co.kr/economy/economy-general/article/202301051650001#c2b>(검색일: 2023.8.22.)
- 공공투데이(2021.10.19.), 매년 300억원 투입 '바다숲 조성사업', 사후관리 부실…총사업비 3143억, <http://www.public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64792>(검색일: 2023.8.27.)
- 관계부처 합동(2021.8.26.), 친환경·포용·공정경제로의 대전환을 위한 ESG 인프라 확충 방안, https://www.moef.go.kr/nw/nes/detailNesDtaView.do?menuNo=4010100&searchNttId1=MOSF_000000000056362&searchBbsId1=MOSFBBS_000000000028(검색일: 2023.4.24.)
- 관계부처 합동(2022.12.27.), 기업 경쟁력 제고와 지속가능 경제구축을 위한 ESG 인프라 고도화 방안, https://www.moef.go.kr/nw/nes/detailNesDtaView.do?menuNo=4010100&searchNttId1=MOSF_000000000062352&searchBbsId1=MOSFBBS_000000000028(검색일: 2023.4.24.)
- 광주상공회의소 보도자료(2022.12.29.), 광주상의, 제2차 기업 ESG 경영지원 협의회 개최, http://www.gicci.or.kr/user/board/view/board_cd/4030/wr_no/765(검색일: 2023.3.31.)
- 금융위원회 보도자료(2022.12.15.), 유관기관 합동으로 ESG 공시기준을 마련해나가겠습니다 - 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KSSB) 구성·운영 -, <https://www.fsc.go.kr/no010101/79112?srchCtgr=&curPage=&srchKey=&srchText=&srchBeginDt=&srchEndDt>(검색일: 2023.4.24.)
- 기획재정부 보도자료(2021.8.26.), 「제44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개최, <http://www.koel.go.kr/press/press.do>
-

- s://www.moef.go.kr/nw/nes/detailNesDtaView.do?menuNo=4010100&searchNttId1=MOSF_000000000056362&searchBbsId1=MOSFBBS_000000000028(검색일: 2023.3.31.)
- 기획재정부 보도자료(2022.12.28.), ESG 인프라 고도화 방안 발표, https://www.moef.go.kr/nw/nes/detailNesDtaView.do?menuNo=4010100&searchNttId1=MOSF_000000000062352&searchBbsId1=MOSFBBS_000000000028(검색일: 2023.4.21.)
- 뉴스N제주(2022.8.2.), 공무원연금공단 환경경영, 해양환경단체 협력으로 바다 속까지 확장, <https://www.newsjeju.com/news/articleView.html?idxno=86770>(검색일: 2023.4.20.)
- 뉴스시스(2021.5.20.), 'KT&G, 해양 생태계 보호 위한 MOU 체결', https://mobile.newsis.com/view.html?ar_id=NISX20210520_0001446766#_PA(검색일: 2023.4.20.)
- 뉴스시스(2023.1.30.), 부산 혁신의 현장④]넷스파, 폐어망을 목욕시켜 나일론을 뽑는다, https://mobile.newsis.com/view.html?ar_id=NISX20230128_0002172645#_PA(검색일: 2023.4.16.)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홈페이지(2021.3.31.), 문 대통령 “기업인·상공인이 산업·무역 지켜내…이제 경제 반등의 시간”, <https://www.korea.kr/briefing/policyBriefingView.do?newsId=148885692&tongYeog=Y&gubun=&pageIndex=1&srchType=&srchWord=&startDate=&endDate=#policyBriefing>(검색일: 2023.3.31.)
- 러쉬코리아 홈페이지, <https://www.lush.co.kr/board/CHARITYPOT>(검색일: 2023.4.20.)
- 매일경제(2021.7.9.), [테마진단] CSR에서 시작해 CSV를 지나 ESG로, <https://www.mk.co.kr/news/contributors/9944988>(검색일: 2023.4.13.)
- 바다가꾸기 홈페이지, <https://caresea.or.kr/web/main.do>(검색일: 2023.8.19.)
- 법률신문(2021.11.11.),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ESG 인프라 확충 방안” 발표<https://m.lawtimes.co.kr/Content/Article?serial=174214>(검색일: 2023.3.20.)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 www.law.go.kr(검색일: 2023.10.1.)
- 브런치스토리(2022.1.27.), CSR CSV ESG SDGs, <https://brunch.co.kr/@edutechleader/24>(검색일: 2023.4.24.)

비즈트리뷴(2020.5.28.), 포스코, 울릉도 바다숲 가꾼다...장인화 사장 "지역사회 기여 위해 포스코 기술 적극 활용", <https://www.biztribune.co.kr/news/articleView.html?idxno=238955>(검색일: 2023.4.15.)

빅카인즈 홈페이지, <https://www.bigkinds.or.kr>(검색일: 2023.4.24.)

빅터뉴스(2022.4.22.), KB국민은행, 'KB Net ZERO S.T.A.R. 금융상품 패키지' 출시, <http://www.bigta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602>(검색일: 2023.4.15.)

(사)경상북도지속가능발전협의회 홈페이지, 지속가능발전목표란, <http://www.kb21.org/index.php?gt=info/info01>(검색일: 2023.4.24.)

산림청 보도자료(2021.3.23.), 산림을 통한 ESG 경영 전략 기업 설명회 개최, https://www.forest.go.kr/kfswweb/cop/bbs/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1036&mn=NKFS_04_02_01&nttId=3156559(검색일: 2023.10.14.)

산림청 보도자료(2021.4.9.), 산림청 이에스지(ESG) 기업 설명회 개최, 해외 온실가스 감축사업(REDD+)등 산림분야, https://www.forest.go.kr/kfswweb/cop/bbs/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1036&mn=NKFS_04_02_01&nttId=3157188(검색일: 2023.10.14.)

산림청 보도자료(2022.3.4.), 민관협력(거버넌스) 구축으로 기업의 환경·사회·투명(ESG)경영을 구체화, https://www.forest.go.kr/kfswweb/cop/bbs/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1036&mn=NKFS_04_02_01&nttId=3168516(검색일: 2023.10.14.)

산림청 보도자료(2023.6.28.), 산림청과 티웨이 항공, 탄소중립 실천의 동반자로!, https://www.forest.go.kr/kfswweb/cop/bbs/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1036&mn=NKFS_04_02_01&nttId=3185030(검색일: 2023.10.14.)

산림청 보도자료(2023.9.15.), 환경·사회·투명경영(ESG) 실천에 산림청과 동행해요!, https://www.forest.go.kr/kfswweb/cop/bbs/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1036&mn=NKFS_04_02_01&nttId=3187486(검색일: 2023.10.14.)

산업통상자원부 보도자료(2021.12.1.), 우리 기업의 ESG 경영을 지원하는 관계부처 합동 'K-ESG 가이드라인' 발표, <https://www.motie.go.kr/kor/article/ATCLa3d66de4c/164932/view#>(검색일: 2023.4.24.)

산업통상자원부 보도자료(2022.2.10.), 「대·중소기업 ESG 협력네트워크 포럼」 출범

- 식 개최, <https://www.motie.go.kr/kor/article/ATCLa3d66de4c/165278/view>(검색일: 2023.4.24.)
- 산업통상자원부 보도자료(2022.3.30.), ESG 공급망 실사 대응을 위한 시범사업 착수, <https://www.motie.go.kr/kor/article/ATCLa3d66de4c/165457/view>(검색일: 2023.4.24.)
- 산업통상자원부 보도자료(2022.8.2.), 산업부-포스코 그룹, 중소기업에 ESG·소부장 기술나눔, <https://www.motie.go.kr/kor/article/ATCLa3d66de4c/165872/view>(검색일: 2023.4.24.)
- 산업통상자원부 보도자료(2022.12.7.), 공급망 실사 대응을 위한 ESG 지원 본격 추진, <https://www.motie.go.kr/kor/article/ATCLa3d66de4c/166494/view>(검색일: 2023.4.24.)
- 산업통상자원부 지속가능경영 지원센터 홈페이지, <http://www.k-esg.or.kr>(검색일: 2023.8.19.)
- 서울경제(2022.10.27.), 세븐일레븐, '반려해변' 임랑해수욕장 보호한다…플로깅 진행, <https://www.sedaily.com/NewsView/26CIGHJ86N>(검색일: 2023.4.14.)
- 서울파이낸스(2022.12.19.), '동원산업, 폐어망 재활용해 해양 생태계 보전', <https://www.seouln.com/news/articleView.html?idxno=475132>(검색일: 2023.4.16.)
- 소셜임팩트뉴스(2023.4.24.), 폐어망 리사이클 소셜벤처 '넷스파', 국내 최초 재활용 글로벌 인증 취득, <https://www.socialimpactnews.net/news/articleView.html?idxno=466>(검색일: 2023.4.27.)
- 시사저널(1992.7.16.), 기업은 환경을 먹고 자란다, <https://www.sisajournal.com/news/articleView.html?idxno=108366>(검색일: 2023.4.24.)
- 연합뉴스(2021.10.25.), 해수부, 해양환경교육 종합계획 수립…"해양교육 적극 확대", <https://www.yna.co.kr/view/AKR20211025038200003>(검색일: 2023.4.22.)
- 연합인포맥스(2021.5.27.), 최태원 "기업들 환경문제 해결 위한 주체…주도적 역할해야", <https://news.einfomax.co.kr/news/articleView.html?idxno=4149607>(검색일: 2023.4.24.)
-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상쇄등록부시스템 홈페이지, 정보공개, <https://ors.gir.go.kr/home/orme010/activeList.do?menuId=10>(검색일: 2023.8.22.)
- 에코피스아시아 홈페이지, KB Net Zero S.T.A.R. 블루카본 바다숲, <https://www.eco>

peaceasia.org/39/?q=YToyOntzOjEyOjRZXl3b3JkX3R5cGUiO3M6MzoiYWxsJtzOjQ6InBhZ2UiO2k6Mjt9&bmode=view&idx=13789234&t=board
(검색일: 2023.4.15.)

울릉군 보도자료(2020.5.28.), 포스코, 울릉군과 함께 울릉도 연안 생태계 복원을 위한
바다숲 조성사업에 앞장, https://www.ulleung.go.kr/ko/page.do?cmd=258&bod_uid=5711&srchEnable=1&srchSDate=&srchKwd=%EB%B0%94%EB%8B%A4%EC%88%B2&initDay=&srchColumn=bod_title&listType=&initYear=&srchVote=-1&initMonth=&pageNo=1&srchBgguid=-1&srchEDate=&mnu_uid=574&(검색일: 2023.4.16.)

월간 인제경영(2021.11.24.), ESG의 부상, 기업은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 <https://m.post.naver.com/viewer/postView.naver?volumeNo=32814137&memberNo=36647560>(검색일: 2023.4.23.)

유니콘팩토리(2022.8.29.), 삼양사-넷스파, 환상의 콜라보...페어링 재활용 車 소재시
장 공략, <https://www.unicornfactory.co.kr/article/2022082911055219159>(검색일: 2023.4.27.)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 유엔글로벌콤팩트 10대 원칙, <http://unglobalcompact.kr/%EC%9C%A0%EC%97%94%EA%B8%80%EB%A1%9C%EB%B2%8C%EC%BD%A4%ED%8C%A9%ED%8A%B8-%EC%86%8C%EA%B0%9C/10%EB%8C%80-%EC%9B%90%EC%B9%99>(검색일: 2023.4.23.)

이명신의 명신보감(2022.5.23.), 사회적 가치 유사개념 어떻게 다르까: CSV, CSR, ESG, SDGs, 소셜임팩트, 유튜브, <https://www.youtube.com/watch?v=wVo1c8aCrHg>(검색일: 2023.4.24.)

이코노미스트(2021.8.22.), A등급 삼성전자, CCC 기업은 현대제철, <https://economist.co.kr/article/view/ecn202108220008>(검색일: 2023.4.24.)

이코노미리뷰(2022.11.28.), 기아, 해양수산부 ‘갯벌복원 사업’ 민간 단독 참여, <https://www.econovill.com/news/articleView.html?idxno=596359>(검색일: 2023.4.15.)

인천일보(2022.9.27.), CJ제일제당 인천1공장, 반려 해변 정화 플로깅 활동, <https://www.incheon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1162929>(검색일: 2023.4.14.)

조선미디어(2023.3.15.), [키워드 브리핑] “해변 입양하고 돌봅니다”... ‘반려해변’ 참

- 여 기관 100곳 넘어, <https://www.futurechosun.com/archives/73712>(검색일: 2023.4.14.)
- 조선일보(2023.2.24.), '어이 없이 착한 기업 만들고, 4.2조원 통째 기부한 창업자', <https://www.chosun.com/economy/weeklybiz/2022/09/29/QR2ADSYAZJEYDLF3Z2DZAEPM44/>(검색일: 2023.4.20.)
- 중소벤처기업부 보도자료(2021.11.23.), 중소기업 ESG 촉진방안, <https://www.mss.go.kr/site/smba/ex/bbs/View.do?cbIdx=86&bcIdx=1030085&parentSeq=1030085>(검색일: 2023.4.24.)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ESG 통합플랫폼 홈페이지, <https://3t.kosmes.or.kr/esgplatform/main.do#>(검색일: 2023.10.6.)
- 중앙일보(2015.9.2.), 공유가치창출(CSV)이 무슨 뜻이죠, <https://www.joongang.co.kr/article/18571617#home>(검색일: 2023.4.24.)
- 지속가능발전포털 홈페이지, 지속가능발전목표(UN-SDGs), <http://ncsd.go.kr/unsdgs?content=2>(검색일: 2023.4.24.)
- 파타고니아 코리아 홈페이지, <https://www.patagonia.co.kr/actionworks/home>(검색일: 2023.4.20.)
- 포스코 홈페이지, Green & Clean 제철소 만들기 약속 지키고 있습니다, <https://newsroom.posco.com/kr/%ED%8F%AC%EC%8A%A4%EC%BD%94%EC%9D%98-%ED%99%98%EA%B2%BD%ED%88%AC%EC%9E%90%EB%8A%94-%EA%B3%84%ED%9A%8D%EB%8C%80%EB%A1%9C-%EC%A7%84%ED%96%89%EC%A4%91%EC%9E%85%EB%8B%88%EB%8B%A4/>(검색일: 2023.4.15.)
- 포스코 홈페이지, 영일만 친구는 바다가 고향이란다 - 바다숲 조성, <https://newsroom.posco.com/kr/%EC%98%81%EC%9D%BC%EB%A7%8C-%EC%B9%9C%EA%B5%AC%EB%8A%94-%EB%B0%94%EB%8B%A4%EA%B0%80-%EA%B3%A0%ED%96%A5%EC%9D%B4%EB%9E%80%EB%8B%A4-%EB%B0%94%EB%8B%A4%EC%88%B2-%EC%A1%B0%EC%84%B1/>(검색일: 2023.4.16.)
- 핀테크경제신문(2021.6.27.), KB금융, 중장기 탄소중립 추진전략 'KB Net Zero S.T. A.R.' 선언...'국내 금융사 최초', <https://www.fintechtimes.co.kr/news/article.html?no=22285>(검색일: 2023.4.15.)
- 프레스리안(2020.1.10.), 기업이 돈을 벌고 쓰는 '게임의 룰'이 바뀌고 있다, <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273475>(검색일: 2023.4.23.)

하이트진로 보도자료(2022.6.9.), 하이트진로, 제주 표선해변 환경 정화활동 나서, https://m.hitejinro.com/socialmedia/press_view.asp?seq=32021(검색일: 2023.4.14.)

한국경제(2022.3.27.), 올해 주총 ESG 화두는 여성·환경, <https://www.hankyung.com/finance/article/2022032736921>(검색일: 2022.6.20.)

한국수산자원공단 보도자료(2022.12.27.), KB국민은행-에코퍼시아-한국수산자원공단-해양생태기술연구소, 경남 남해군 블루카본 잘피숲 조성, https://www.fira.or.kr/fira/fira_010201_2.jsp?mode=view&article_no=31063&board_wrapper=%2Ffira%2Ffira_010201_2.jsp&pager.offset=0&board_no=7(검색일: 2023.4.15.)

한국수산자원공단 홈페이지, 바다숲 사업 개요, https://www.fira.or.kr/fira/fira_030302_new.jsp(검색일: 2023.8.25.)

한국임업진흥원 보도자료(2022.10.7.), 산림부문 배출권거래제 외부사업 온라인 설명회 개최 - 탄소중립 및 기업 ESG경영 실천 -, https://www.kofpi.or.kr/notice/public_01view.do?bb_seq=10337(검색일: 2023.8.22.)

한국임업진흥원 홈페이지, <https://www.kofpi.or.kr/index.do#javascript>(검색일: 2023.10.9.)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홈페이지, 조직체계, <https://www.keiti.re.kr/site/keiti/01/10104010000002018092810.jsp>(검색일: 2023.8.24.)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2021.4.29.),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상쇄제도 개요, <https://www.koem.or.kr/site/koem/ex/board/List.do?cbIdx=328>(검색일: 2023.10.6.)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 온실가스감축 외부사업, https://www.komsa.or.kr/kor/sub02_0402.do(검색일: 2023.8.22.)

한국해양수산물개발원(2018.4.30.), 2018년 해양수산물 국민인식도 조사 결과, <https://www.kmi.re.kr/web/board/view.do?rbsIdx=297&idx=2>(검색일: 2023.6.20.)

한국해양수산물개발원(2019.4.17.), 2019년 해양수산물 국민인식도 조사 결과, <https://www.kmi.re.kr/web/board/view.do?rbsIdx=297&idx=3>(검색일: 2023.6.20.)

한국해양수산물개발원(2020.6.3.), 2020년 해양수산물 국민인식도 조사 결과, <https://www.kmi.re.kr/web/board/view.do?rbsIdx=297&idx=4>(검색일: 2023.6.20.)

- 한국해양수산개발원(2021.6.7.), 2021년 해양수산 국민인식도 조사 결과, <https://www.kmi.re.kr/web/board/view.do?rbsIdx=297&idx=5>(검색일: 2023.6.20.)
- 한국해양수산개발원(2022.6.24.), 2022년 해양수산 국민인식도 조사 결과, <https://www.kmi.re.kr/web/board/view.do?rbsIdx=297&idx=6>(검색일: 2023.10.1.)
- 현대자동차그룹 홈페이지, 기아, ‘2045년 탄소중립’ 전략 공개, <https://www.hyundai.co.kr/tv/CONT0000000000004825>(검색일: 2023.4.15.)
- 환경미디어(2021.9.16.), 포스코-현대제철, 버려지던 패각을 제철 부원료로 재활용한다, <https://m.ecomedia.co.kr/news/newsviw.php?ncode=1065575115501956>(검색일: 2023.4.18.)
- 환경부(2022.12.27.), 김미경TV와 함께 전달해 드리는 K-택소노미의 모든 것!, 유튜브 브, <https://www.youtube.com/watch?v=wfZRlbcHlnE>(검색일: 2023.4.21.)
- 환경부 보도자료(2015.1.28.), 온실가스 외부감축사업 상쇄제도 본격 시행, <https://www.me.go.kr/home/web/board/read.do?menuId=10525&boardMasterId=1&boardCategoryId=39&boardId=480800>(검색일: 2023.10.6.)
- 환경부 보도자료(2021.12.8.), 녹색소비 확산 위해 소비자·유통·결제사 뭉쳤다, <https://www.me.go.kr/home/web/board/read.do?menuId=10525&boardMasterId=1&boardCategoryId=39&boardId=1493160>(검색일: 2023.8.27.)
- 환경부 보도자료(2022.2.18.), 환경성 평가체계 제시…환경책임투자 활성화 기대, <https://www.me.go.kr/home/web/board/read.do?menuId=10525&boardMasterId=1&boardCategoryId=39&boardId=1509110>(검색일: 2023.8.24.)
- 환경부 보도자료(2022.12.20.), 제15차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COP15) 마무리, <https://me.go.kr/home/web/board/read.do?boardMasterId=1&boardId=1569450&menuId=10525>(검색일: 2023.6.20.)
- 환경부 보도자료(2023.2.7.), 코스닥기업의 ESG 지원한다, <https://www.me.go.kr/home/web/board/read.do?menuId=10525&boardMasterId=1&boardCategoryId=39&boardId=1578750>(검색일: 2023.4.24.)
- 환경부 보도자료(2023.2.20.), 환경부-수출기업, ESG 위해 맞손, https://me.go.kr/search/totalSearch/search_new.jsp(검색일: 2023.4.24.)
- 해양수산부(2021), 수산자원조성사업 시행지침(바다목장, 산란·서식장, 바다숲), <https://www.mof.go.kr/doc/ko/selectDoc.do?menuSeq=427&bbsSeq=2&do>

cSeq=37833(검색일: 2023.10.1.)

해양수산부 보도자료(2021.12.3.), 2022년도 해수부 예산 6조 4,171억원 확정, <https://www.mof.go.kr/doc/ko/selectDoc.do?menuSeq=971&bbsSeq=10&docSeq=43942>(검색일: 2023.8.27.)

해양수산부 보도자료(2022.11.28.), 갯벌의 탄소흡수력을 활용한 블루카본 확대 추진한다, [hhttps://www.mof.go.kr/doc/ko/selectDoc.do?menuSeq=971&bbsSeq=10&docSeq=48014](https://www.mof.go.kr/doc/ko/selectDoc.do?menuSeq=971&bbsSeq=10&docSeq=48014)(검색일: 2023.4.15; 2023.10.1.)

해양수산부 보도자료(2022.12.13.), 해양폐기물 고부가가치 재활용 활성화 기반 마련한다 -22년도 해양폐기물관리위원회 개최, 해양폐기물 재활용 활성화 대책 발표-, <https://www.mof.go.kr/doc/ko/selectDoc.do?docSeq=48189&searchDeptName=&menuSeq=971&searchEndDate=&searchEtc1=&searchEtc2=&searchEtc3=&searchEtc4=&searchEtc5=¤tPageNo=1&searchSelect=title&searchStartDate=&recordCountPerPage=&bbsSeq=10&searchValue=%ED%95%B4%EC%96%91%ED%8F%90%EA%B8%B0%EB%AC%B>C(검색일: 2023.6.20.)

해양수산부 보도자료(2023.1.12.), 버려지던 굴·조개 껍데기 새로운 소득원 된다 -수산부산물 재활용' 첫 발... 해수부, 1차 법정 기본계획 발표-, <https://www.mof.go.kr/doc/ko/selectDoc.do?docSeq=48651&searchDeptName=&menuSeq=971&searchEndDate=&searchEtc1=&searchEtc2=&searchEtc3=&searchEtc4=&searchEtc5=¤tPageNo=1&searchSelect=title&searchStartDate=&recordCountPerPage=&bbsSeq=10&searchValue=%EA%BB%8D%EB%8D%B0%EA%B8%B0>(검색일: 2023.4.22.)

해양수산부 보도자료(2023.4.4.), 해양환경분야 ESG 활성화를 위한 기업간담회 개최, <https://www.mof.go.kr/doc/ko/selectDoc.do?menuSeq=971&bbsSeq=10&docSeq=50559>(검색일: 2023.4.6; 2023.8.29.)

해양수산부 보도자료(2023.4.20.), 해양쓰레기 유입보다 수거 늘어 획기적으로 줄인다, <https://www.mof.go.kr/doc/ko/selectDoc.do?docSeq=50816&searchDeptName=&menuSeq=971&searchEndDate=&searchEtc1=&searchEtc2=&searchEtc3=&searchEtc4=&searchEtc5=¤tPageNo=1&searchSelect=title&searchStartDate=&recordCountPerPage=&bbsSeq=10&searchValue=%ED%95%B4%EC%96%91%EC%93%B0%EB%A0%88%EA%B8%B0>(검색일: 2023.6.20.)

- 해양수산부 홈페이지, <https://www.mof.go.kr/doc/ko/selectDocList.do?menuSeq=971&bbsSeq=10>(검색일: 2023.8.28.)
- 해양수산부 홈페이지, 기관소개, <https://www.mof.go.kr/ko/im/selectImTreeList.do?menuSeq=630>(검색일: 2023.8.27.)
- 해양수산부 홈페이지, 해양수산 ESG 전략 수립 연구, <https://www.mof.go.kr/doc/ko/selectDoc.do?menuSeq=379&bbsSeq=13&docSeq=49600>(검색일: 2023.8.29.)
- 해양환경공단(2020.11.2.),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상쇄제도 개요, <https://www.koem.or.kr/common/board/getPdf.do?bcIdx=29734&cbIdx=328&fileNo=5>(검색일: 2023.10.6.)
- 해양환경정보포털 홈페이지, 포털소개, <https://www.meis.go.kr/portal/portalIntro.do>(검색일: 2023.8.19.)
- 1% for the Planet 홈페이지, <https://www.onepercentfortheplanet.org/>(검색일: 2023.4.20.)
- AND(2021.9.29.), 취준생이 알아야 할 ESG 개념 정리 끝, 유튜브, <https://www.youtube.com/watch?v=ruAOR5Xxl9c>(검색일: 2023.4.23.)
- CEORANKING, http://ceoranking.com/pages/page_234.php?(검색일: 2023.4.8.)
- G.ECONOMY(2022.3.9.), 광주광역시, 기업 ESG 경영 활성화 지원 나서, <http://www.geconomy.co.kr/news/article.html?no=255938>(검색일: 2023.3.31.)
- Healthy Seas 홈페이지, A journey from waste to wear, <https://www.healthyseas.org/about-us/#mission>(검색일: 2023.4.20.)
- HMM 보도자료(2023.4.2.), 반려해변 정화활동 “해양환경보전 앞장”, <https://www.hmm21.com/company/newsDetail.do?seq=1212437&cateCd=C00100100000&page=2>(검색일: 2023.4.14.)
- HMM 홈페이지, HMM, 페로프 재활용으로 환경보호에 앞장, <https://www.hmm21.com/company/newsDetail.do?seq=1212200&cateCd=C001001000000&page=3>(검색일: 2023.4.16.)
- IMPACT ON(2021.1.28.), 블랙록, 래리핑크 회장의 2021년 편지에는 무엇이 담겼나_1편, <https://www.impacton.net/news/articleView.html?idxno=1142>(검색일: 2023.4.23.)

IMPACT ON(2023.1.16.), SEC, 4월 기후 공시 규칙 최종 발표한다, <https://www.impacton.net/news/articleView.html?idxno=5709>(검색일: 2023.4.21.)

KDI 경제정보센터 홈페이지(2021.7.),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기업의 노력, ESG경영, <https://eiec.kdi.re.kr/material/pageoneView.do?idx=1474>(검색일: 2023.4.23.)

KDI 경제정보센터 홈페이지(2022.10.), SDGs는 목표, ESG는 수단, https://eiec.kdi.re.kr/publish/columnView.do?cid=14032&sel_year=2022&sel_month=10(검색일: 2023.4.13.)

LG Careers, LG화학, 해양폐기물로 재활용 플라스틱 만든다, <https://careers.lg.com/channel/any/home/StoryDetail.rpi?companyId=LCH&requestStoryId=602>(검색일: 2023.4.18.)

The New York Times(1970.9.13.), A Friedman doctrine-- The Social Responsibility Of Business Is to Increase Its Profits, <https://www.nytimes.com/1970/09/13/archives/a-friedman-doctrine-the-social-responsibility-of-business-is-to.html>(검색일: 2023.4.23.)

법령 자료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법률 제19117호, 2022.12.27.)

갯벌복원사업 지침(해양수산부훈령 제680호, 2022.12.13.)

대기환경보전법(법률 제19125호, 2022.12.27.)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법률 제19112호, 2022.12.27.)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법률 제18318호, 2021.7.20.)

수산자원관리법(법률 제19775호, 2023.10.24.)

연안관리법(법률 제19117호, 2022.12.27.)

연안관리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1438호, 2021.2.19.)

외부사업의 타당성 평가 및 감축량 인증에 관한 지침(환경부고시 제2023-258호, 해양

- 수산부고시 제2023-160호, 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23-84호,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3-207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23-639호, 2023.11.9.)
- 전라남도 연안 탄소흡수원 관리 및 활용 촉진 조례(전라남도 조례 제5689호, 2023.2.28.)
- 전라북도 연안 탄소흡수원 관리 및 활용 촉진 조례(전라북도 조례 제5269호, 2023.5.8.)
- 항만지역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법률 제19141호, 2022.12.27.)
-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해양수산부령 제641호, 2023.12.26.)
-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법률(법률 제18469호, 2021.9.24.)
- 해양환경관리법(법률 제19013호, 2022.10.18.)
- 환경정책기본법(법률 제19173호, 2023.1.3.)

부록

민간기업의 해양환경 분야 ESG 경영 실태조사

2023070601-0

안녕하십니까?

최근 전 세계적으로 ESG 규제강화, 투자자 및 고객의 ESG 요구 증대, 기업 신용평가에 ESG 반영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ESG 경영에 대한 요구가 증대됨에 따라 ESG 경영은 이제 기업의 선택이 아닌 필수요소로 자리매김하게 되었습니다. 한편, 우리 정부는 2021년을 ESG 경영 확산의 원년으로 삼고, 국가차원에서 기업의 ESG 경영 도입과 이행을 지원하기 위해 각 부처별로 다양한 정책을 수립 및 이행 중입니다.

해양수산부는 2023년 '해양환경분야 ESG 활성화를 위한 기업간담회'를 개최하여 민간기업이 참여할 수 있는 해양환경 분야 관련 사업 현황을 소개하고 수요를 파악하는 자리를 가졌습니다. 또한, 국내 민간기업과 업무협약(MOU) 체결을 통해 해양수산 분야의 지속가능발전과 ESG 활성화를 위한 협력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이에, 해양수산 분야 국제연구기관인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은 ESG경영 관점에서 국내 민간기업의 해양환경 분야에 대한 관심과 참여 확대를 유도하기 위한 정책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민간기업의 해양환경 분야 ESG 활성화 방안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관련하여 본 설문은 해양환경 분야 ESG의 주요 현안 및 국내 민간기업의 정책수요를 진단 및 분석하기 위해 민간기업의 ESG 담당자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바쁘시더라도 본 설문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귀하께서 응답해주시는 의견 및 정보는 민간기업의 해양환경 분야 ESG 활성화를 위한 정책방안 마련에 기초자료로 활용될 것이며, 연구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는 절대로 사용되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응답하신 내용은 법률 제11690호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 수집/이용)에 의거 보호 받을 수 있으며, 동법 제21조(개인정보의 파기)에 의거 조사 종료 후 파기됩니다.

조사는 ㈜리서치앤리서치에서 대행하고 있습니다. 귀중한 시간을 내어 설문조사에 응답해주시는 데에 대한 감사의 뜻으로 1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3년 8월

조사 문의처 : ㈜리서치앤리서치 권한준 연구원 (02-3484-3033, hjkwon@randr.co.kr)

설문 내용 문의처 : 한국해양수산개발원 김지윤 전문연구원 (051-797-4394, jiyoony9887@kmi.re.kr)

SQ1	귀사의 규모	1) 대기업 4) 중소기업	2) 대기업 계열사 5) 기타 (공기업 등)	3) 중견기업
SQ2	귀사는 현재 ESG 경영 전략체계 (예: 비전과 목표, 전략, 실행과제 등)를 수립했습니까?	1) 예 3) 아니오	2) 현재 수립 중	
SQ03	귀사는 현재 ESG 업무 전담조직이 있습니까?	1) 예 3) 아니오(ESG 관련 업무 수행 없음)	2) 비전담 조직에서 겸업 중	
SQ04	귀사는 현재 ESG경영을 위해 예산을 투자하고 있습니까?	1) 예 3) 아니오. 계획 없음	2) 아니오, 계획은 있음	

PART A. ESG 경영 도입 현황

A01. 환경(E), 사회(S), 지배구조(G) 중 귀하께서 생각하시기에 가장 **중요한** 순서대로 응답해 주십시오.

1순위 () 2순위 () 3순위 ()

1) 환경(Environment)

2) 사회(Social)

3) 지배구조(Governance)

A02. 환경(E), 사회(S), 지배구조(G) 중 귀하께서 생각하시기에 **추진이 가장 시급한** 순서대로 응답해 주십시오.

1순위 () 2순위 () 3순위 ()

1) 환경(Environment)

2) 사회(Social)

3) 지배구조(Governance)

A03. 귀사는 앞으로 ESG 경영 전략체계를 수립할 계획이 있습니까?

1) 1년 이내 수립 예정

2) 2년 이내 수립 예정

3) 아직 구체적인 수립계획은 없다

A04. 귀사는 **향후** ESG 업무 전담조직 구성 계획이 있습니까?

1) 1년 이내 수립 예정

2) 2년 이내 수립 예정

3) 아직 구체적인 수립계획은 없다

A05. 환경(E), 사회(S), 지배구조(G) 중 **현재** 귀사에서 **제일 많이 투자하고 있는 분야**를 순서대로 응답해 주십시오.

1순위 () 2순위 () 3순위 ()

1) 환경(Environment)

2) 사회(Social)

3) 지배구조(Governance)

A06. 환경(E), 사회(S), 지배구조(G) 중 **향후 3년 이내** 귀사에서 **우선적으로 투자할 계획이 있는 분야**를 순서대로 응답해 주십시오.

1순위 () 2순위 () 3순위 ()

1) 환경(Environment)

2) 사회(Social)

3) 지배구조(Governance)

A07. 귀사는 **현재** 지속가능경영보고서(또는 ESG보고서)를 발간하고 계십니까?

1) 예

2) 발간해본 적은 있다

3) 발간해본 적은 없지만, 앞으로 계획은 있다

4) 발간해본 적은 없으며, 앞으로도 계획이 없다

A08. 귀사는 **현재** ESG경영 성과를 평가받고 있습니까?

1) 예 **A08-1로 이동**

2) 아니오 **A08-2로 이동**

A08-1. ESG경영 성과를 어떤 방식으로 평가 받으십니까? (복수응답 가능) **응답 후 A09로 이동**

1) 자체 평가 실시

2) 외부 평가기관 통해 실시

A08-2. 귀사는 **향후** ESG경영 성과를 평가 받을 계획이 있습니까?

1) 예

2) 아니오

3) 모르겠음

A09. 귀사는 **현재** 환경분야 ESG를 추진하고 계십니까? (해양환경 포함)

□ 1) 대기 및 수질오염물질 배출량 저감 □ 2) 폐기물 배출량 저감 및 재활용 비율 증가
□ 3)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및 검증 □ 4) 에너지 사용량 절감 및 재생에너지 사용량 증가
□ 5) 원부자재 사용량 관리 및 재생 원부자재 활용 □ 6) 용수 사용량 절감 및 재사용 용수 비율 증가
□ 7) 친환경 인증 제품 및 서비스 생산·판매 □ 8) 기타 ()

PART B. 해양환경 분야 ESG에 대한 인식

※ 다음은 해양환경 분야에 대한 일반적인 인식을 알아보기 위한 질문입니다. 모든 기업이 응답해 주십시오

1) 매우 관심 있다 2) 어느 정도 관심 있다 3) 보통이다
4) 별로 관심 없다 5) 전혀 관심 없다

1) 매우 심각하다 2) 조금 심각하다 3) 보통이다
4) 별로 심각하지 않다 5) 전혀 심각하지 않다

1) 매우 그렇다 2) 그런 편이다 3) 보통이다
4) 그렇지 않은 편이다 5) 그렇지 않다

1) 매우 노력하고 있다 2) 어느 정도 노력하고 있다 3) 보통이다
4) 별로 노력하고 있지 않다 5) 전혀 노력하고 있지 않다

1) 매우 그렇다 **B05-1로 이동** 2) 그런 편이다 **B05-1로 이동**
3) 그렇지 않은 편이다 **B05-2로 이동** 4) 그렇지 않다 **B05-2로 이동**

- 1) 기업의 경영활동에서 발생하는 해양환경 영향을 줄이기 위한 노력으로
- 2) 사회를 구성하는 일원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이행하기 위해
- 3) 해양을 직·간접적으로 이용하는 기업의 지속가능한 경영을 위해
- 4) 환경 관련 국제협약 등에 따른 정부의 규제와 가능성에 대비 해야 하므로
- 5) 기타()

- 1) 기업경영의 본연의 목적인 이익 추구가 우선이므로
- 2) 해양환경 분야는 정부 등 공공영역에서 관리하는 것이 더 적절하므로
- 3) 해양과 직·간접적으로 관련 있는 기업이 참여하는 것으로 충분하므로
- 4) 기업이 활동 영역을 확장하기에는 인력, 시간 등에 한계가 있으므로
- 5) 기타 ()

B06. 귀하께서는 해양환경 분야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현재 민간기업이 전반적으로 어느 정도 기여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1) 매우 기여하고 있다 2) 어느 정도 기여하고 있다 3) 보통이다
4) 별로 기여하고 있지 않다 5) 전혀 기여하고 있지 않다

B07. 다음은 **현재** 민간기업이 추진하고 있는 대표적인 **해양환경 분야 ESG 활동**을 나열한 것입니다. 각 분야별로 **중요도, 시급성**에 대한 귀하의 의견을 아래 기준에 따라 5점 척도로 응답해 주십시오.

기준					
구분 및 설명		척도			
		①	②	③	④
중요도	귀하께서는 아래의 각 분야별 활동이 해양환경 분야 문제를 해결하는 데 얼마나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매우 중요	다소 중요	보통	별로 중요하지 않음
시급성	귀하께서는 해양환경 분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아래의 각 분야별 활동이 얼마나 시급하게 추진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매우 시급	다소 시급	보통	별로 시급하지 않음

분야	설명	척도 (1-5점 기입)	
		중요도	시급성
1. 해변정화 활동	• 해양수산부& 해양환경공단의 반려해변 프로그램 참여 • 조직 내 임직원 플로깅 캠페인 추진 등		
2. 해양환경 관련 시민단체 지원	• 해양쓰레기 정화, 해양보호구역 관리, 해양보호생물 보전 등을 위해 활동하는 국내 해양환경 관련 시민단체 지원		
3. 해양환경 교육 및 홍보	• 어린이 대상 미세플라스틱, 해양쓰레기, 생물다양성 관련 주제로 다양한 체험교육 제공 등		
4. 해양오염 방지	• 해상 오일펜스 설치, 방제교육, 부두별 방제창고 설치 등		
5. 항만대기오염 저감	• 선박저속운항(VSR) 프로그램 참여, 선박 배기가스 저감장치(예: SCR) 설치 등		
6. 해양생태계 및 해양생물다양성 보전	• 선박 수중소음 저감 기술개발 등을 통한 해양보호생물 보호 • 철새 등 멸종위기생물종 보호 • 치어/치패 방류 등 해양보호구역 관리 • 해양 직접 방류 배출수의 생태독성 모니터링 등		
7. 해양생태계 복원	• 맹그로브숲 복원, 바다숲 조성, 절피 이식, 갯벌 복원 등 사업에 참여		
8. 해안복원	• 해변의 해안 침식지나 해안사구 훼손지역 복원 등		
9. 해양폐기를 자원순환 촉진	• 폐어망 등 해양폐기를 수거 지원 및 재활용 소재, 제품 생산 등		
10. 해양플라스틱 쓰레기 발생 저감 기술개발	• 플라스틱 대체소재로서 바이오 기반의 생분해성 플라스틱 등 기술 개발 • 미세플라스틱 발생 저감 가전제품 개발 등		
11. 해양환경 분야 스타트업 육성 및 지원	• 해양쓰레기 자원순환, 해조류 부산물을 이용한 친환경 포장재 생산 스타트업 등 육성 및 지원		

B07-1. 위에 제시된 분야 외에,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해양환경 분야 ESG가 있다면 적어주십시오.

PART C. 해양환경 분야 ESG 추진 실태

다음은 귀하께서 소속되어 있는 민간기업의 해양환경 분야 ESG 추진 현황과 애로사항, 향후 계획 등에 관한 질문입니다.

<주요 해양환경 분야 ESG 활동 및 세부설명>

분야	설명
해변정화 활동	- 해양수산부& 해양환경공단 등의 반려해변 프로그램 참여 - 조직 내 임직원 플로깅 캠페인 추진 등
해양환경 관련 시민단체 지원	해양쓰레기 정화, 해양보호구역 관리, 해양보호생물 보전 등을 위해 활동하는 국내 해양환경 관련 시민단체를 지원
해양환경 교육 및 홍보	어린이 대상 미세플라스틱, 해양쓰레기, 생물다양성 관련 주제로 다양한 체험 교육 제공 등
해양오염 방제	해상 오일펜스 설치, 방제교육, 부도별 방제창고 설치 등
항만대기오염 저감	선박저속운항(VSR) 프로그램 참여, 선박 대기가스 저감장치(예: SCR) 설치 등
해양생태계 및 해양생물다양성 보전	- 선박 수중소음 저감 기술개발 등을 통한 해양보호생물 보호 - 철새 등 멸종위기생물중 보호 - 지어/지배 방류 등 해양보호구역 관리 - 해양 직접 방류 배출수의 생태독성 모니터링 등
해양생태계 복원	맹그로브숲 복원, 바다숲 조성, 잡피 이식, 갯벌 복원 등 사업에 참여
해양복원	해변의 해안 침식이나 해안사구 훼손지역 복원 등
해양폐기물 자원순환 촉진	페어망 등 해양폐기물 수거 지원 및 재활용 소재, 제품 생산 등
해양플라스틱 쓰레기 발생 저감 기술개발	- 플라스틱 대체소재로서 바이오 기반의 생분해성 플라스틱 등 기술개발 - 미세플라스틱 발생 저감 가전제품 개발 등
해양환경 분야 스타트업 육성 및 지원	해양쓰레기 자원순환, 해조류 부산물을 이용한 친환경 포장재 생산 스타트업 등 육성 및 지원

C01. 귀사는 **현재** 해양환경 분야 ESG를 추진하고 계십니까?

1) 예 ☒ **C02로 이동** 2) 아니오 ☒ **C01-1로 이동**

C01-1. 귀사에서 **현재** 해양환경 분야 ESG를 **추진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각 항목별로 5점 척도로 응답해 주십시오.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약간 그렇다	매우 그렇다
	①	②	③	④	⑤
1. 자사의 ESG경영 전략체계(비전, 목표, 전략, 실행과제 등)에 미포함	☐	☐	☐	☐	☐
2. CEO 및 임직원의 관심도가 낮음	☐	☐	☐	☐	☐
3. 자사의 기존 사업영역과 무관함	☐	☐	☐	☐	☐
4. ESG 업무 담당 인력이 부족함	☐	☐	☐	☐	☐
5. 해양환경에 대해 잘 알지 못함(사내 해양환경 관련 전문지식 보유 인력 부족 또는 전무)	☐	☐	☐	☐	☐
6. 해양환경 분야에 참여 가능한 활동에 관한 정보 부족으로 사업 기획에 어려움	☐	☐	☐	☐	☐
7. 해양환경 ESG에 특화된 평가항목이 부재함	☐	☐	☐	☐	☐
8. 현재 추진 중인 육상환경 분야에 집중하고자 함	☐	☐	☐	☐	☐
9. 사업비 규모에 대한 부담이 큼	☐	☐	☐	☐	☐
10. 신뢰할 수 있는 외부의 협력 파트너 발굴에 어려움(예: 서비스컨설팅 기관, 관련 전문가 또는 전문가 등)	☐	☐	☐	☐	☐
11. 정부의 정책적 지원이 미흡함	☐	☐	☐	☐	☐

1) 예 **C01-3로 이동** 2) 아니오 **C01-5로 이동** 3) 모르겠음 **C01-5로 이동**

1순위 () 2순위 () 3순위 ()

- 1순위 () 2순위 () 3순위 ()

- 정답 후 C05로 이동

- 1) 조직 내 ESG 담당 부서 또는 담당자가 직접 정보를 발굴·수집하여 기획
- 2) 외부 전문 또는 관련 민간단체나 기관으로부터 정보를 제공받아 기획
- 3) 기타 ()

C03. 귀사가 **현재** 추진 중인 해양환경 분야 ESG 활동은 무엇입니까? 해당 여부와, 해당 되는 활동에 대해, 협력 기관과 참여기업의 역할 등 추진 체계를 보기에서 골라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해양환경 분야 ESG 활동 및 세부설명>

분야	설명	해당 여부		C03A.(공정)추진체계	
		아니오	예	협력기관	기업 역할
1	해변정화 활동	- 해양수산부& 해양환경공단의 반려해변 프로그램 참여 - 조직 내 임직원 플로깅 캠페인 추진 등	1)	2)	
2	해양환경 관련 시민단체 지원	해양쓰레기 정화, 해양보호구역 관리, 해양보호생물 보전 등을 위해 활동하는 국내 해양환경 관련 시민단체를 지원	1)	2)	
3	해양환경 교육 및 홍보	어린이 대상 미세플라스틱, 해양쓰레기, 생물다양성 관련 주제로 다양한 체험교육 제공 등	1)	2)	
4	해양오염 방제	해상 오일펜스 설치, 방제교육, 부두별 방제창고 설치 등	1)	2)	
5	항만대기오염 저감	선박지속운항(VSR) 프로그램 참여, 선박 배기가스 저감장치(예: SCR) 설치 등	1)	2)	
6	해양생태계 및 해양생물다양성 보전	- 선박 수중소음 저감 기술개발 등을 통한 해양보호생물 보호 - 철새 등 멸종위기생물종 보호 - 치어/치패 방류 등 해양보호구역 관리 - 해양 직접 방류 배출수의 생태독성 모니터링 등	1)	2)	
7	해양생태계 복원	맹그로브숲 복원, 바다숲 조성, 잘피 이식, 갯벌 복원 등 사업에 참여	1)	2)	
8	해안복원	해변의 해안 침식지나 해안사구 훼손지역 복원 등	1)	2)	
9	해양폐기물 자원순환 촉진	페어망 등 해양폐기물 수거 지원 및 재활용 소재, 제품 생산 등	1)	2)	
10	해양플라스틱 쓰레기 발생 저감 기술개발	- 플라스틱 대체소재로서 바이오 기반의 생분해성 플라스틱 등 기술개발 - 미세플라스틱 발생 저감 가전제품 개발 등	1)	2)	
11	해양환경 분야 스타트업 육성 및 지원	해양쓰레기 자원순환, 해조류 부산물을 이용한 친환경 포장재 생산 스타트업 등 육성 및 지원			

C03A 보기	협력 기관 보기	1) 단독 추진 2) 타 민간기업 3) 중앙정부 (환경부 등) 4) 지방자치단체 5) 공공기관 (한국환경공단 등)	6) 연구소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등) 7) 민간단체 (NGO 등) 8) 학계 (대학교 등) 9) 기타 () ※ 단독추진 선택 시 2)~9) 선택 불가
	기업 역할 보기	1) 사업 기획 2) 사업비 투자 3) 기술 및 장비 지원 4) 전문 인력 지원 5) 현장 활동 참여 6) 기타 ()	

C03-1. 위에 제시된 분야 외에, 귀사에서 추진 중인 해양환경 분야 ESG가 있다면 말씀해주시요.

C04. 귀사가 해양환경 분야 ESG를 추진하게 된 배경은 무엇입니까? 각 항목별로 5점 척도로 응답해 주십시오.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약간 그렇다	매우 그렇다
	①	②	③	④	⑤
1. 국정과제 등 정부의 정책방향 고려	☐	☐	☐	☐	☐
2. 자사 경영진의 높은 관심 및 ESG경영 전략체계(비전, 목표, 전략, 실행과제 등)에 포함	☐	☐	☐	☐	☐
3. 자사의 기존 사업영역과 연계 가능	☐	☐	☐	☐	☐
4. 육상의 환경분야 ESG에 집중된 다른 기업들과 차별화	☐	☐	☐	☐	☐
5. 사업비 규모에 대한 적은 부담	☐	☐	☐	☐	☐
6. 정부·공공기관, 타 기업 등에서 협력 제언	☐	☐	☐	☐	☐
7. ESG 컨설팅 등 외부기관에서 사업 기획 및 추진에 도움	☐	☐	☐	☐	☐
8. 탄소배출권 거래제 대비 차원	☐	☐	☐	☐	☐
9. 해양쓰레기 등 해양환경 문제가 전 세계 이슈로 급부상	☐	☐	☐	☐	☐
10. 국제사회의 규제논의 및 민간부문의 역할 강조에 따른 조기 대응(예: 플라스틱 규제, 생물다양성협약 등)	☐	☐	☐	☐	☐
11. 연안지역에 위치한 기업으로서 지역사회 환원	☐	☐	☐	☐	☐
12. 해양·연안 관련 기업(해양공간 또는 자원 등 이용)으로 해양보전 및 관리에 대한 책임의식	☐	☐	☐	☐	☐

C04-1. 위에 제시된 내용 외에 해양환경 분야 ESG를 추진하게 된 배경이 있으시다면 자세히 말씀 부탁드립니다.

C05. 귀사가 해양환경 분야 ESG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직접 경험했거나 또는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애로사항**에 대해 각 항목별로 5점 척도로 평가하여 주십시오.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약간 그렇다	매우 그렇다
	①	②	③	④	⑤
1. 해양환경 분야에 대한 정보 및 전문지식 부족으로 사업 발굴 및 추진에 어려움	☐	☐	☐	☐	☐
2. 시간, 비용 투자 대비 사업성과 미흡	☐	☐	☐	☐	☐
3. 일회성이 아닌 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하게 추진할 수 있는 사업 부족	☐	☐	☐	☐	☐
4. 민간기업이 참여할 수 있는 역할이 다소 제한적	☐	☐	☐	☐	☐
5. 조직 내 현업부서 간 협조 제한적	☐	☐	☐	☐	☐
6. 사내 ESG 업무 담당 인력 부족	☐	☐	☐	☐	☐
7. 사업 추진 과정에서 고려해야 할 이해관계 복잡(예: 어촌계, 어민과의 마찰 등)	☐	☐	☐	☐	☐
8. 정부, 지자체의 정책적 지원 미흡	☐	☐	☐	☐	☐
9. 다수의 민간기업 간의 참여분야 중복으로 홍보효과 미미	☐	☐	☐	☐	☐
10. 신뢰할 수 있는 외부의 협력 파트너 발굴에 어려움(예: 서비스컨설팅 기관, 관련 전문가 또는 전문기관 등)	☐	☐	☐	☐	☐

C05-1. 위에 제시된 내용 외에 해양환경 분야 ESG 추진 시 경험 또는 예상되는 애로사항을 자세히 말씀 부탁드립니다.

C07-3. 귀사는 해양환경 분야 ESG를 신규분야로 확대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가장 큰 이유 순서대로 3가지를 응답해 주십시오.

1순위 () 2순위 () 3순위 ()

1) 경험 상 해양환경 분야에 대한 지식 부족으로 추진에 어려움
2) 해양환경 분야 참여가능 활동에 대한 정보 부족으로 신규분야 기획에 어려움
3) 시간, 비용 투자 대비 사업성과 미흡
4) 일회성이 아닌 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하게 추진할 수 있는 사업 부족
5) 기존 참여 중인 분야에 집중
6) 조직 내 현업부서 간 협조 제한적
7) 사내 ESG 업무 담당 인력 부족
8) ESG 공시 의무화 이전
9) 다수의 민간기업 간의 참여분야 중복으로 홍보효과 미미
10) 정부, 지자체의 정책적 지원 미흡
11) 기타()

C08. 귀사는 해양환경 분야 ESG를 해외에서도 추진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1) 예 2) 아니오

C09. 해양환경 분야와 관련된 귀사의 전반적인 ESG 활동 참여 수준이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1) 매우 높다 2) 다소 높다 3) 보통이다 4) 조금 낮다 5) 매우 낮다

C10. 귀사는 향후 외부 민간단체와 협력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1) 예 2) 아니오 3) 모르겠음

C11. 외부 민간단체와 협력을 한다면, 해당 기관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복수응답 가능)

1) 사업 아이템 발굴 및 기획 2) 관련 기관 또는 전문가 발굴 및 연계
3) 협력 기관과의 소통 4) 사업비 집행 등 행정업무
5) 현장 활동지원 6) 성과 홍보
7) 관련 분야 정보 취합 및 제공 8) 기타()

C12. 외부 민간단체와의 협력이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1) 매우 도움 2) 다소 도움 3) 보통
4) 크게 도움 되지 않음 5) 전혀 도움 되지 않음

PART D. 해양환경 분야 ESG 정책적 지원 수요

다음은 해양환경 분야에서 민간기업의 ESG 활성화 방안을 도출하기 위한 정부의 정책적 지원 수요를 묻는 질문입니다.

D01. 민간기업의 해양환경 분야 ESG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1) 매우 필요 2) 필요 3) 보통
4) 크게 필요하지 않음 5) 전혀 필요하지 않음

D02. 해양환경 분야로 민간기업의 ESG를 활성화 위한 정부의 **현재** 정책적 지원 수준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 1) 매우 부족 2) 부족 3) 보통
4) 충분 5) 매우 충분 6) 모르겠음

D03. 해양환경 분야에서 민간기업의 ESG가 확대 되려면 어떤 점이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각 항목별로 5점 척도로 평가하여 주십시오.

구분	전혀 필요 없다	크게 필요 없다	보통 이다	필요 하다	매우 필요 하다
	①	②	③	④	⑤
1. CEO 및 임직원의 해양환경 분야에 대한 관심 증진	☐	☐	☐	☐	☐
2. 조직 내 부서 간 협력 강화	☐	☐	☐	☐	☐
3. ESG 업무 담당 인력 보강	☐	☐	☐	☐	☐
4. 사내 임직원의 해양환경 분야에 대한 지식 함양	☐	☐	☐	☐	☐
5. ESG 항목과 연계해서 평가 받을 수 있는 방안 마련	☐	☐	☐	☐	☐
6. 사업 기획에 활용할 수 있는 해양환경 관련 정보 제공	☐	☐	☐	☐	☐
7. 민간기업 참여형 사업 절차 마련	☐	☐	☐	☐	☐
8. 사업 추진 과정에서 이해관계자 간 원활한 소통 및 협조 필요(예: 지지제, 어촌계 등)	☐	☐	☐	☐	☐
9. 기존 사업추진 절차 내 참여주체 간 역할 개선(예: 해양폐기물 자원순환 체계 등)	☐	☐	☐	☐	☐
10. 해양환경 분야 ESG 업무 지원 전담조직 부재	☐	☐	☐	☐	☐

D03-1. 위에 제시된 항목 외에, 추가적으로 개선되어야 할 점이 있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D04. 앞으로, 해양환경 분야에서 민간기업의 ESG를 활성화하기 위해 **정부차원에서 어떠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각 항목별로 5점 척도로 평가해 주십시오.

구분	전혀 필요 없다	크게 필요 없다	보통 이다	필요 하다	매우 필요 하다
	①	②	③	④	⑤
1. 민간기업 대상 해양환경 분야에 대한 역량강화 교육 제공	☐	☐	☐	☐	☐
2. 해양환경 분야와 연계 가능한 ESG 평가체계 마련	☐	☐	☐	☐	☐
3. 해양환경 분야 ESG 관련 정보 제공 및 상호교류 등을 위한 온·오프라인 플랫폼 마련(예: 해양수산부 주관 간담회 등)	☐	☐	☐	☐	☐
4. 해양환경 분야 ESG 업무 지원 전담조직 필요	☐	☐	☐	☐	☐
5. 사업별 추진 방법 및 절차 안내서 제공	☐	☐	☐	☐	☐
6. 해양환경 분야 ESG 우수기업 인증 및 홍보 강화	☐	☐	☐	☐	☐
7. 업종별 다자간 MOU 체결을 통한 공동참여 추진 지원	☐	☐	☐	☐	☐
8. 민간기업 참여 활성화를 위해 해양환경 관련 법제도 개선	☐	☐	☐	☐	☐
9. 해양환경 분야 관련 인증제도 도입 및 지원(예: 해양폐기물 재활용 인증)	☐	☐	☐	☐	☐
10. 해양환경 분야 ESG 관련 협업 가능 기관, 단체 등 연계 지원	☐	☐	☐	☐	☐

D04-1. 위에 제시된 항목 외에, 민간기업이 해양환경 분야 ESG를 활성화하기 위해 추가적으로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주십시오.

PART E. 응답자 특성 문항

E01. 귀사는 상장사입니까? 1) 예 2) 아니오

E02. 귀사의 본사나 자사/사업장이 위치한 지역을 모두 선택해주시시오. (복수응답 가능)

- 1) 서울 2) 부산 3) 대구 4) 인천 5) 광주 6) 대전
7) 울산 8) 세종 9) 경기 10) 강원 11) 충북 12) 충남
13) 전북 14) 전남 15) 경북 16) 경남 17) 제주

E03. 귀사는 해양·연안과 관련이 있습니까? (복수응답 가능)

- 1) 연안지역에 입지한 기업 (본사 또는 사업장 중 어느 한 곳이라도 해당될 경우)
2) 해양을 이용하는 기업(예: 해양자원, 해양공간 이용 등)
3) 해당 없음 **E04로 이동**

E03-1. 그렇다면, 귀사는 해양환경과 어느 정도 관련이 있습니까?

- 1) 매우 관련있음 2) 관련된 편 3) 보통이다
4) 관련은 있지만 정도는 낮음 5) 관련은 있지만 정도가 매우 낮음

E04. 귀사의 주력 업종을 1개만 응답해 주십시오.

제조업	비 제조업
☐ 1) 식음료 제조업	☐ 14) 공공자원 서비스업
☐ 2) 의복류 제조업	☐ 15) 건설업
☐ 3) 가구/종이 제조업	☐ 16) 도소매업
☐ 4) 인쇄업	☐ 17) 유통·물류업
☐ 5) 화학(고무,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 18) 음식·숙박업
☐ 6) 의약품 제조업	☐ 19) 미디어·방송·통신업
☐ 7) 비금속제품 제조업	☐ 20) ICT 지식서비스업
☐ 8) 금속제품 제조업	☐ 21) 금융·보험·부동산업
☐ 9) 전기·전자제품 제조업	☐ 22) 연구·엔지니어링 서비스업
☐ 10) 의료·정밀기기 제조업	☐ 23) 사업지원 서비스업
☐ 11) 기계 및 장비 제조업 (운송장비 포함)	☐ 24) 교육·사회복지업
☐ 12) 기타 제조업 ()	☐ 25) 기타 서비스업 ()
☐ 13) 농림어업 및 광업	☐ 26) 공공기관

E05. 귀사의 전체 종사자 규모를 응답해 주십시오. (2022년 12월 말 기준)

- 1) 100인 미만 2) 100~299인 3) 300~499인 4) 500~999인 5) 1000명 이상

E06. 귀사의 자산규모를 응답해 주십시오. (2022년 12월 말 기준)

자산 소 억원

E07. 귀사의 매출규모를 응답해 주십시오. (2022년 기준)

매출 조 억원

E08. 귀사의 정식 명칭은 어떻게 됩니까? ()

E09. 마지막으로 상품권을 받으실 휴대폰 번호를 적어주시면 1만원 상당의 모바일 상품권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담당자 연락처 정보는 조사종료 후 파기됩니다. ()

◆ 설문에 응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기본연구보고서 발간목록

Ⅰ 2023

01	자율운항선박 운항을 위한 해상교통관제 대응방안 연구	박상원
02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무역규범의 해양수산분야 영향 분석 연구	임병호
03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항만의 대응방안 연구	이나영
04	연안재해 정보 활용 개선 방안 연구	김찬웅
05	항만의 생활물류 기능 활성화 방안 연구	최석우
06	마을여장 이용·관리 개선방안 연구	마창모
07	해양생태계 복원정책 개선방안 연구 - 사회·생태복원 중심으로 -	최석문
08	주민행태기반 해양정책 수용성 제고 설계 방안 연구	이슬기
09	항만연관산업 고도화 방안 연구	김세원
10	탄소배출권 거래제가 해운선사에 미치는 영향 분석 연구	조아현
11	물류 연계 효율화를 위한 스마트항만 구축방안 연구 - 항만물류 데이터 공유 플랫폼을 중심으로 -	서정용
12	어업분야 중대재해처벌법 대응방안 연구	고동훈
13	수산물의 디지털 수출 활성화 방안 연구	이상건
14	항만개발사업의 정책영향평가 연구	이수영
15	해운산업의 미래 변화 예측과 국내 대응 전략 연구	이호춘
16	어선현대화 촉진을 위한 금융제도 개선방안 연구	엄선희
17	연안도시의 쇠퇴와 대응방안 연구	강창우
18	해양범죄 실태 진단을 통한 대응체계 개선방안 연구	민영훈
19	민간기업의 해양환경 분야 ESG 활성화 방안 연구	김지윤
20	식량안보를 고려한 수산물 수급관리 방안 연구	허수진
21	지방분권시대의 수산업·어촌분야 대응전략 연구	이호림
22	해운산업 고도화를 위한 선박투자 활성화 방안 연구	김한나
23	글로벌 공급망 리스크 대응 물류망 최적화 방안 연구 : 한국·북미 물류공급망 중심	이성우

2022년

01	선박투자 가치평가 및 위험관리 모형 연구	박성화
02	항만 컨테이너 반출입 예약시스템 가격결정 모형 연구	서정용
03	연안재해 대응을 위한 그린인프라 구축방안 연구	정지호
04	탄소중립이 해양수산업에 미치는 경제적 영향분석 연구	권장한
05	수산물 안전성 관리체계 개선방안 연구	조현주
06	준해양사고 통보제도 개선방안 연구	박상원
07	MZ세대 소비트렌드를 반영한 해양관광 추진방안 연구	최일선
08	연근해 어종별 어획쿼터제도 도입방안 연구	심성현
09	행위자기반 해양공간계획 시뮬레이션 개발 연구	조성진
10	항만분야 탄소중립 관리체계 개선방안 연구	안승현
11	탄소중립 시대 양식산업 대응전략 연구 - 육상 어류양식을 중심으로 -	마창모
12	수산식품산업의 탄소중립 대응방안 연구 - 가공업을 중심으로 -	김지연
13	해양환경보전정책 도입방안 연구	박수진
14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컨테이너 해운산업 대응방안 연구 - 디지털 플랫폼을 중심으로 -	최건우
15	항만분야 공공갈등 관리방안 연구	김세원
16	글로벌 가치사슬 변화와 국제물류 분야 대응방안 연구 - 전기자동차 산업을 중심으로 -	권보배
17	항만개발제도 개선방안 연구	이수영
18	클러스터 혁신을 통한 선박관리업 발전방안 연구	허성례
19	수입수산물 예방적 관리체계 도입방안 연구 - IUU 수산물을 중심으로 -	안지은
20	양식수산물 유통 빅데이터 구축방안 연구	이기영
21	글로벌 혁신성장을 위한 신남방·신북방 정책 연구 - 신남방 지역 ICT산업 가치사슬 변화에 따른 물류 공급사슬 대응방안	최나영환

수시연구보고서 발간목록

Ⅰ 2023년

01	양식어업 비과세 합리화 방안 연구	이정필
02	복합해양레저관광도시 개념정립 및 추진방안에 관한 연구	최일선
03	항만기술산업 육성을 위한 법제도 마련 연구	안승현
04	블루푸드테크 전문기관의 도입 필요성에 대한 연구	이동림
05	지방자치단체의 해양관할구역 설정 요인 연구	이혜영
06	양식장 내 어류 복지 기준 마련을 위한 연구	오서연
07	해양플라스틱 재활용산업 공급사슬 기반 조성 연구	이윤정
08	중소·중견 물류기업의 ESG경영 가이드라인 구축 연구	이재호
09	신항만건설사업의 민간투자 확대를 위한 제도개선 연구	김보경
10	해수욕장 이용객 집계·관리체계 개선방안 연구	이정아
11	유엔 플라스틱 협약의 주요쟁점 분석 및 대응방향 연구	박수진
12	어촌 활력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방안 연구	문지원
13	어선의 친환경에너지 전환방안 연구	고동훈

Ⅰ 2022년

01	항만의 탄소중립 이행·관리 표준안 연구	안용성
02	매립지 소유권 분리 제도화의 이해관계 분석과 관리방안	윤성순
03	글로벌 공급망 리스크별 영향분석 및 대응방안 연구 - 에너지·곡물을 중심으로	조지성
04	대북제재 강화와 코로나 팬데믹 이후 북한 해양수산 이슈와 대응 방안	윤인주
05	남극환경보호의정서 제6부속서의 국내 이행을 위한 법제 정비방안 연구	박예나
06	해양바이오산업 육성을 위한 해양생명자원법 정비 방안 연구	좌미라
07	우리나라 수산종자 관리체계 개선방안 연구	조현주
08	2050 신해양강국 미래비전 수립 연구	김민수

일반연구보고서 발간목록

Ⅰ 2023년

01	해양수산업 조기경보지수 개발 - 컨테이너 해운시장을 중심으로	권장한
02	AIS 기반 글로벌 선박 배기가스 배출량 분석 연구(II) - 우리나라 주요 항만을 중심으로	강무홍
03	우리나라 수산식품 소비 활성화 방안 마련 연구	한기욱
04	비컨테이너 항만물동량 예측모형 고도화 방안 연구(II) - 유류, 철재, 모래, 목재, 양곡을 중심으로	이화섭
05	대기행렬모형을 활용한 선박대기비용 절감 편익 산정 연구	조아현
06	항만개발사업 정책효과 세부항목별 효과산정 방법 연구	이종필
07	해양 지속가능성 평가체계 구축 연구	최희정
08	국내 해운기업의 ESG 경영 확산 방안 연구	황진희
09	해운 경기순환 분석 및 예측 연구	황수진
10	수산물 공급 안정을 위한 수입수산물 전략품목 관리 방안 연구	박혜진
11	항만산업 여성인력 확대방안 연구	이지원
12	선사공동행위의 규제 및 행동 변화에 따른 영향 분석과 정책방안 연구	류희영

Ⅰ 2022년

01	건화물선 시장 비용분석을 통한 해운시장 위험관리지표체계 구축	류희영
02	해상운임 예측모형 고도화 연구(Ⅰ)	황수진
03	IMO 시장기반조치 도입이 국내 해운기업에 미치는 영향	김한나
04	연안지역발전지수(CoDI) 개발 연구	황재희
05	CGE 기반 국제통상환경 변화의 해양수산업 부문 파급효과 분석	임병호
06	글로벌 수산업 부문 이머징 이슈 분석 모델 개발 연구	한기욱
07	양식 수산물 중장기 수급전망모형 구축 연구 - 굴을 중심으로 -	김철현
08	Network DEA를 이용한 물류기업 경쟁력 비교 분석 연구	황선일
09	해양수산 사업체 성과 및 효율성 분석 연구	김주현
10	베이지안 방법을 이용한 양식 명계 단수 추정방안 연구	천성훈
11	수입수산물과 국산 간의 대체관계 분석 연구 - 활·신선냉장품을 중심으로 -	박혜진
12	국내 컨테이너 해운기업의 디지털 전환 활성화 방안 연구	전서연
13	비컨테이너 항만물동량 예측모형 고도화 방안 연구(Ⅰ) - 자동차, 석탄, 고철, 시멘트를 중심으로 -	최석우
14	해양수산 분야 미래 리스크 발굴 및 파급효과 분석 연구(Ⅱ)	김찬호
15	항만개발사업의 정책효과 적용방안 연구	이종필
16	국가 해양전략 기본구상 연구	정현욱
17	선박대기시간 예측모형 개발을 위한 방법론 연구	조아현
18	안전항만 구축을 위한 비용 산정 및 지원체계 마련을 위한 연구	최상균

기본연구 2023-19

민간기업의 해양환경분야 ESG 활성화 방안 연구

인쇄 2024년 1월 29일

발행 2024년 1월 31일

발행인 김 종 덕

발행처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주소 49111 부산시 영도구 해양로 301번길 26(동삼동)

연락처 051-797-4800 (FAX 051-797-4810)

등록 1984년 8월 6일 제313-1984-1호

조판·인쇄 애드원플러스(070-4390-3850)

판매 및 보급: 정부간행물판매센터 Tel: 02-394-0337

정가 15,000원

민간기업의 해양환경분야 ESG 활성화 방안 연구

A Study on Participation of Private Corporates
in Sustainable Marine Environment Management Using ESG